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알제리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알제리

www.ksp.go.kr

기획재정부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Tel. 044-215-7732 www.mosf.go.kr

한국개발연구원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길재길 15 (반곡동, 한국개발연구원)

Tel. 044-550-4114 www.kdi.re.kr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길재길 15(반곡동,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 Tel. 044-550-4224
- cid.kdi.re.kr
- www.ksp.go.kr



ISBN 978-89-8063-817-8
ISBN 978-89-8063-814-7(세트)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KDI 한국개발연구원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알제리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알제리

| | |
|--------------------------------------|--|
| 알제리 사업 기획 및 관리: KDI 국제개발협력센터(CID) | 전홍택(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이태희(국제개발협력센터 실장) 이지원(정책자문실 연구원) |
| 알제리 Vision팀 연구진 | 박명호(한국외국어대학교) 오완근(한국외국어대학교) 채재은(가천대학교) 김종일(동국대학교) |
| 알제리 PPP팀 연구진 | 박현(연구PM, 서울시립대학교) 김혜영(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고유은(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
| 현지 협력기관 | 총리실 전략기획국(Secretary of State to the Prime Minister in charge of Prospective and Statistics) 국책사업관리청(Caisse Nationale d'Equipeement pour le Développement) |

본 보고서는 영문보고서를 축약하여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영문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간행물번호 11-1051000-000470-01

ISBN 978-89-8063-817-8 94320

978-89-8063-814-7 (세트)

Copyright © 기획재정부 2014

Knowledge
Sharing
Program



정부간행물번호

11-1051000-000470-01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알제리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KDI 한국개발연구원

Preface

서문

경제협력국가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은 한국의 개발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협력대상국의 여건에 맞춰 정책연구·자문·연수를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2004년부터 기획재정부(당시 재정경제부)의 지원으로 실시되어 왔다.

2013년에는 36개의 협력대상국을 대상으로 140여 개 주제에 대한 정책자문 및 역량강화사업을 실시하였다. 올해 신규대상국은 협력대상국의 정책수요, 성장잠재력 및 한국과의 전략적 경제파트너십 등을 고려하여 코스타리카, 벨리즈, 중국, 러시아, 헝가리, 이집트와 같은 국가들이 선정되었다. KDI는 KSP 총괄 기관으로서 몽골,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브라질, 코스타리카, 벨리즈, 알제리, 에티오피아,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우즈베키스탄, 헝가리, UAE등 15개국의 정책자문사업을 수행하였고, 그 외 21개국은 경쟁입찰을 통하여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였다.

알제리는 2011년부터 KSP 중점지원사업 국가로 선정되어 3년째 사업이 지속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2013년도 사업은 '알제리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 지원-비전 2030 수립'과 '알제리 민간투자사업(PPP)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방안'이라는 두 개의 대주제로 나누어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한국의 경험을 보다 다각화된 방향에서 접근 및 공유하고, 알제리의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연구하였다.

본 보고서의 발간을 앞두고, KSP에 참여하여 한국 경제발전경험의 공유를 위해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각계의 연구진과, 또 모든 단계에서 협조하여 주신 대상국의 협력기관 및 현지 전문가분들에게 감사を 표한다. 아울러 보고서의 중간 및 완성 단계에서 값진 조언을 해주신 검토자와 자문위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또한 KSP 사업을 위해 헌신적으로 사업을 기획·추진하며 실무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구성원들의 노력에도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사업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견해로서, KDI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4년 8월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김 준 경

Contents

| | |
|----------------------------------|-----|
| 2013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 012 |
|----------------------------------|-----|

1부 비전 2030 수립을 위한 정책자문

| | |
|------------------------------|-----|
| 알제리 KSP 사업의 진행과정 | 066 |
| 알제리 KSP 사업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 071 |
| 총론 | 077 |

| | |
|---------------------------------------|-----|
| 제1장 알제리 5개년계획(2015~19) 수립 지원 | 085 |
| 제1절 서론 | 087 |
| 제2절 알제리의 기존 5개년계획과 당면과제 | 088 |
| 제3절 한국의 5개년 경제개발 경험 | 103 |
| 제4절 알제리 5개년계획(2015~19)과 비전 2030 | 109 |
| 제5절 정책수단 및 실행계획 | 113 |
| 참고문헌 | 122 |

| | |
|------------------------------------|-----|
| 제2장 알제리개발연구원(ADI) 설립 지원방안 연구 | 124 |
| 제1절 서론 | 125 |
| 제2절 싱크탱크의 역할 및 특징 | 127 |
| 제3절 주요국의 싱크탱크 | 131 |
| 제4절 한국의 경험과 KDI | 147 |
| 제5절 알제리에 주는 시사점 | 151 |
| 참고문헌 | 155 |

| | |
|--|-----|
| 제3장 교육분야 | 156 |
| 제1절 서론 | 157 |
| 제2절 알제리의 고용구조와 인적자원의 수준 | 159 |
| 제3절 알제리의 산업인력 수요와 직업교육훈련 및 고등교육 현황 | 165 |
| 제4절 한국 사례 | 176 |
| 제5절 정책권고안 | 186 |
| 제6절 결론 | 191 |
| 참고문헌 | 193 |

Contents

| | |
|--|-----|
| 제4장 2015~19 5개년 투자계획을 위한 알제리 산업정책 방향과 전략 | 195 |
| 제1절 서론 | 196 |
| 제2절 알제리 산업구조와 장기 산업전망 | 197 |
| 제3절 알제리의 산업발전을 위한 전략과 투자 | 199 |
| 제4절 한국의 산업발전 정책과 과정 | 206 |
| 제5절 알제리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 210 |
| 참고문헌 | 213 |

2부 알제리 민간투자사업(PPP)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방안

| | |
|----------------------------------|-----|
| 알제리 KSP PPP 사업의 진행과정 | 216 |
| 알제리 KSP PPP 사업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 220 |
| 총론 | 224 |

| | |
|--------------------------|-----|
| 제1장 알제리의 인프라 개발 | 229 |
| 제1절 경제 동향 및 재정여건 | 230 |
| 제2절 인프라 개발 현황 및 계획 | 237 |
| 제3절 인프라 개발 및 투자 제도 | 241 |
| 제4절 CNED의 역할과 기능 | 245 |
| 참고문헌 | 248 |

| | |
|---|-----|
| 제2장 한국의 PPP제도 현황 | 249 |
| 제1절 한국의 민간투자사업 관련 법률 및 제도 소개 | 250 |
| 제2절 PPP 관련 기관 및 조직 | 269 |
| 제3절 PPP Implementation Guidelines | 273 |
| 제4절 한국의 PPP의 성공요인 | 274 |
| 참고문헌 | 279 |

| | |
|----------------------------------|-----|
| 제3장 알제리 PPP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제언 | 280 |
| 제1절 PPP제도의 이점 | 281 |
| 제2절 PPP제도 도입을 위한 알제리 환경 진단 | 282 |
| 제3절 PPP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제언 | 284 |
| 참고문헌 | 290 |

1부 비전 2030 수립을 위한 정책자문

| | |
|--|-----|
| 〈표 1-1〉 알제리 5개년계획 재정투자계획 | 089 |
| 〈표 1-2〉 자원부국 GDP 대비 투자율 | 096 |
| 〈표 1-3〉 알제리의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비중 | 099 |
| 〈표 1-4〉 자원부국 GDP 대비 제조업 비중 | 100 |
| 〈표 1-5〉 자원부국 전체 수출 대비 자원수출 비중 | 101 |
| 〈표 1-6〉 자원부국 GDP 대비 자원수출 비중 | 101 |
| 〈표 1-7〉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 요약 | 106 |
| 〈표 1-8〉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 성과 | 107 |
| 〈표 1-9〉 알제리 비전 2030의 시나리오별 GDP 증가율 및 1인당 GDP 증가율 전망(2010~30) | 110 |
| 〈표 1-10〉 알제리 비전 2030의 1인당 GDP 전망 및 실측값 비교 | 111 |
| 〈표 1-11〉 1인당 GDP 추이 비교 | 112 |
| 〈표 1-12〉 한국의 5개년계획 성과 | 113 |
| 〈표 1-13〉 액션 플랜: 정책 만들기 | 120 |
| 〈표 1-14〉 액션 플랜: 정책 집행 | 120 |
| 〈표 1-15〉 액션 플랜: 성과 평가 | 121 |
| | |
| 〈표 2-1〉 세계의 싱크탱크 | 129 |
| 〈표 2-2〉 미국 내 싱크탱크 순위 | 131 |
| 〈표 2-3〉 독일 싱크탱크의 개요와 주요 기능 | 139 |
| 〈표 2-4〉 한국의 정부출연연구기관(경제, 인문, 사회 분야) | 148 |
| | |
| 〈표 3-1〉 노동시장 참여 현황(2011년) | 159 |
| 〈표 3-2〉 고용 현황(2011) | 160 |
| 〈표 3-3〉 교육수준별 노동시장 참여율(2011) | 161 |
| 〈표 3-4〉 실업률 현황(2011) | 162 |
| 〈표 3-5〉 대졸자 전공별 실업률 현황(2010년) | 163 |
| 〈표 3-6〉 국가별 인간개발지수(2013) | 164 |

Contents | 표목차

| | |
|-------------------------------------|-----|
| 〈표 3-7〉 산업구조 변화가 있는 경우 2030 산업구조 전망 | 166 |
| 〈표 3-8〉 산업발전 및 고용 관련 투자계획(2010~14) | 167 |
| 〈표 3-9〉 직업교육훈련 자격 유형(2012) | 168 |
| 〈표 3-10〉 직업교육훈련 분야별 훈련생 비율(2012) | 170 |
| 〈표 3-11〉 지역별 훈련생의 기술자격 취득 현황(2012) | 171 |
| 〈표 3-12〉 고등교육기관의 교수당 학생 수 현황 | 174 |
| 〈표 3-13〉 학문계열별 대학생 실업률 현황 | 175 |
| 〈표 3-14〉 대학교육 및 연구 경쟁력(2012~13) | 175 |
| 〈표 3-15〉 한국의 직업기술훈련정책의 변화 | 176 |
| 〈표 3-16〉 한국의 일반계와 실업계 고등학교 현황 | 182 |
| 〈표 3-17〉 교육분야별 고등교육 신입생 분포 비교(2010) | 184 |
| 〈표 3-18〉 연도별 운영 현황 | 185 |
| 〈표 4-1〉 알제리의 산업구조 | 197 |
| 〈표 4-2〉 2030 산업구조 전망 | 198 |
| 〈표 4-3〉 알제리 5개년계획 재정투자계획 | 200 |

2부 알제리 민간투자사업(PPP)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방안

| | |
|------------------------------------|-----|
| 〈표 1-1〉 알제리 최근 실질국내총생산(GDP) 추이 | 230 |
| 〈표 1-2〉 주요 대외거래 지표 | 232 |
| 〈표 1-3〉 주요 국내경제 지표 | 234 |
| 〈표 1-4〉 평균 원유가격 | 235 |
| 〈표 1-5〉 알제리 원유 내수 소비 추이 | 235 |
| 〈표 1-6〉 알제리 인프라시설 현황 | 237 |
| 〈표 1-7〉 2010~14년 계획 주요 사업 내역별 투입예산 | 239 |
| 〈표 1-8〉 기존 및 예정 댐 사업 | 240 |
| 〈표 1-9〉 분야별 재정지출 | 241 |

| | |
|------------------------------------|-----|
| 〈표 1-10〉 재정사업 3단계 평가체계 | 247 |
| 〈표 2-1〉 추진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 251 |
| 〈표 2-2〉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 251 |
| 〈표 2-3〉 사회기반시설 유형(민간투자법 제2조)..... | 256 |
| 〈표 3-1〉 알제리: PPP준비도 자체평가표 | 283 |
| 〈표 3-2〉 자동차 등록대수, 도로·철도 연장 변화..... | 284 |
| 〈표 3-3〉 교통혼잡비용과 물류비용의 변화..... | 285 |
| 〈표 3-4〉 국가 PPP 발전단계 | 286 |

1부 비전 2030 수립을 위한 정책자문

| | |
|--|-----|
| [그림 1-1] PSRE의 투자비중 | 090 |
| [그림 1-2] PSCE의 투자비중 | 090 |
| [그림 1-3] 주요 국가 GDP 비교 | 093 |
| [그림 1-4] 알제리 물가 상승률(1970~2012) | 094 |
| [그림 1-5] 알제리 실업률(2001~2011) | 095 |
| [그림 1-6] 정부부채 비중(2012년) | 097 |
| [그림 1-7] 대외부채 비중 | 097 |
| [그림 1-8] GDP 대비 수출입 비중 | 098 |
| [그림 1-9] 수출입 및 무역수지(2012년) | 098 |
| [그림 1-10]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지출 비중 | 102 |
| [그림 1-11] 기업환경평가 순위 | 103 |
| [그림 1-12] 알제리 비전 2030의 1인당 GDP 전망 및 실측값 비교 | 111 |
| | |
| [그림 2-1] KDI 조직도 | 150 |
| | |
| [그림 3-1] 산업구조의 변화 | 160 |
| [그림 3-2] 실업률 추세 | 162 |
| [그림 3-3] 인간개발지수 변화 추세(1980~2010) | 163 |
| [그림 3-4] 주요국의 교육수준별 등록률 비교(2010) | 165 |
| [그림 3-5] 직업교육훈련 참여자 현황 | 169 |
| [그림 3-6] 직업교육훈련 수준별 이수 현황(2012) | 171 |
| [그림 3-7] 대학생 및 대학원생 수 | 173 |
| [그림 3-8] 전공분야별 대학생 현황 | 174 |
| [그림 3-9] 한국의 총량 전망의 기본체계 | 180 |
| [그림 3-10] 한국의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체계 | 181 |

[그림 3-11] 한국의 직업훈련기관 평가184

[그림 3-12] 2015~19 산업인력양성 계획 관련 정책권고안187

[그림 4-1] 산업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산업군203

2부 알제리 민간투자사업(PPP)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방안

[그림 1-1] 알제리 재정지출234

[그림 1-2] 비석유부문 재정균형236

[그림 1-3] 재정지출236

[그림 1-4] 알제리 철도망 현황(2010년)237

[그림 1-5] 기존 및 예정 인프라사업238

[그림 1-6] 부문별 PIP240

[그림 1-7] 알제리 PPP 사업(BOO 방식) 추진방식244

[그림 1-8] CNED 조직도246

[그림 2-1] 연도별 사업 수 및 총투자비 추이252

[그림 2-2]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구조259

[그림 2-3]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구조259

[그림 2-4] 민간투자사업(BTO) 정부고시사업 추진절차262

[그림 2-5]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정부고시사업 추진절차263

[그림 2-6]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민간제안사업 추진절차264

[그림 2-7] PPP 투자구조268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¹⁾

제1절 사업 추진배경 및 경과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은 1982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도국의 주요 인사를 초청하여 한국의 개발경험을 전수하는 국제개발연찬사업(International Development Exchange Program: IDEP)의 착수와, 1987년 유상원조를 담당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과 1991년 무상원조를 담당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의 설립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²⁾

하지만 사업 간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였고, 협력대상국의 경제·사회 환경이나 정책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더구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에 국한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전략적인 측면에서 경제협력관계가 필요한 국가, 즉 전략적 경험대상국(이하 협력대상국)을 대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상호 간의 국익을 도모하고 공동번영과 상생을 추구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협력대상국의 여건과 정책수요를 반영하고, 국내 기관들의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며, 협력국과의 동반자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공동번영을 도모하면서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개발협력사업이 모색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KDI에서는 2004년부터 기획재정부(당시 재정경제부)의 후원으로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을 추진해 왔다.

1) 본 글의 내용은 2010 경제협력국가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국문보고서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성과와 과제' 및 2011 경제협력국가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국문보고서의 '2011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에 기초하고 있다.

2)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한국은 30여 년 동안 수원국인 동시에 공여국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1963년 미국국제개발청(USAID)의 원조자금으로 개도국 연수생의 초청사업을 시작했고, 1965년부터는 우리 정부 자금으로 개도국 훈련생 초청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67년에는 전문가 파견이 시작되었다. 지식공유, 유상원조, 무상원조 분야에서 각각 전문 조직체계가 갖춰진 것은 1980년대 이후의 일이다.

특히 KSP가 한국의 경제개발경험이라는 고유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협력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되어 학술적으로도 실제 개발경험에 기초하여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을 정립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³⁾ 사회주의권의 몰락 이후 사유화, 자유화, 안정화를 근간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는 그 정책처방을 이행한 국가들의 성과 부진과 2008년에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와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⁴⁾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가 교육·보건 등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에 치중하고 기반시설(infrastructure)이나 무역 및 산업화의 중요성은 간과하고 있으므로, 인간개발과 경제성장 간의 선순환 관계에 초점을 맞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⁵⁾

KSP는 한국의 발전경험을 토대로 협력대상국의 수요와 여건에 맞춰 정책연구·자문·연수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제도 구축(institution building)과 역량 배양(capacity building)을 지원함으로써 협력대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지식집약적 경제협력사업이다. KSP는 한국의 발전경험을 체계화·모듈화하고, 협력대상국과의 지식공유를 통해 정책자문을 수행하며, 개도국을 대상으로 국제기구와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한국의 선진화된 시스템을 협력대상국에 전수하는 시스템 컨설팅 등 네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계화·모듈화 사업은 한국의 발전경험을 사례연구(case study) 형태로 정리하는 사업으로서, 경제개발 5개년계획, 새마을운동 등 대표적인 정책 사례를 ‘체계화’하여 정책의 형성과정과 성과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협력대상국이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제도, 기구, 프로젝트 사례를 ‘모듈화’하여 정책자문에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무역분야를 예로 들자면 수출진흥정책을 체계화하고 수출입은행의 설립을 모듈화하는 것이다. 집필방식은 정책, 제도, 기구, 프로젝트의 논의단계로 거슬러 올라가 도입·설립 배경, 추진 체계·방법, 세부 내용 등에 대해 기술한 후,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국제비교적인 관점에서 시사점을 도출한다. 집필과정에서는 문헌조사 및 연구와 함께 과거 업무에 관여했던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와의 인터뷰가 이뤄진다.

정책자문사업은 한국과 협력대상국의 관련 부처와 기관의 전·현직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들을 매칭(matching)하여 양국을 번갈아 방문하며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⁶⁾ 협력대상국이 중소득국 이하일 경우에는 한국에서 정책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지만 고소

3) 제1세대 개발 패러다임은 정부 주도의 수입대체 공업화를 주창했으나, 제2세대 개발 패러다임은 시장 주도의 자유화 노선을 지지했다. Lindauer and Pritchett(2002)은 실제 개발경험에 기초하여 제3세대 개발 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4) 워싱턴 컨센서스를 수용한 중남미, 아프리카, 동유럽 국가들이 그리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 반면, 한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시장경제의 기반 위에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적절히 활용하여 수출지향 공업화와 인적자원개발을 추진함으로써 고속 동반성장(rapid, shared growth)을 달성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Rodrik(2006), World Bank(1993) 참조.

5) MDG는 1) 절대빈곤과 기아 퇴치, 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3) 양성평등과 여성능력 고양, 4) 유아사망률 감축, 5) 산모건강의 증진,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7)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장, 8)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성장과 인간개발 간의 선순환 관계에 대해서는 Ranis, Stewart, and Ramirez(2000) 참조.

6) 정책자문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부표 1> 참조.

득국일 경우에는 비용을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⁷⁾

한편,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등 개발은행 및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개도국에 대한 정책자문을 수행한다. 지역 또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비교적인 시각을 반영하고 정책자문의 파급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⁸⁾

시스템 컨설팅은 한국의 선진화된 시스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수출입은행의 주도하에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시스템을 선별하여 이를 협력대상국에 컨설팅하고 하드웨어 수출 및 금융지원으로 직접 연계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 새로이 도입되었다.

지식집약적 국제개발협력사업, 더 나아가 KSP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 초 이래 급증하고 있다. 개발을 논의함에 있어 과거에 비해 이념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약화되고 자본 등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지식, 특히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지식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에 성공한 나라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협력대상국과의 관계 강화를 기대하고 있고, 협력대상국도 시혜성 원조나 틀에 박힌 기술지원보다는 자국의 개발문제를 진지하게 함께 고민하며 정책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즉, 협력대상국이 필요로 하는 정책대안을 함께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협력대상국의 국익 창출에 이바지함으로써 공동번영을 추구할 수 있는 장(場)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과거 자국의 개발경험을 일방적으로 전수하거나 천편일률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협력대상국의 현지 여건에 맞춰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협력대상국의 호응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국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협력의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식집약적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진화하는 것이고, 지식집약국에서 지식습득국으로 일방적인 전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유되는 것이며, 국가 간 다양한 조합의 형태로 지식이 흘러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요 사례로서 독일이 멕시코에 성공적으로 전수한 폐기물 관리 경험이 남남협력의 방식으로 에콰도르에 공유된 바 있는데, 이는 나아가 주변 중남미 국가들의 고체폐기물 방지 및 관리 역량 제고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중남미 지역의 지식공유 네트워크인 GIRE SOL 형성에까지 크게 기여하였다.⁹⁾ 또 다른 사례로서 브라질의 농업연구소인 Embrapa는 자국의 사바나 지역 개발경험에 기초하여 아프리카의 건조 지역에 적합한 농업기술을 가나, 모잠비크 등과 공유하고 있다.¹⁰⁾ 중국

7) KSP 정책자문사업의 경우 협력대상국이 중소득국 이하일 경우에도 사업 추진 재원을 협력대상국에 이관하지 않고 한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공여국의 공공 부문(중앙 또는 지방 정부, 정부기관 및 단체 등)이 개발도상국 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자원흐름(resource flows) 중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ODA로 정의한다. 1) 공여목적: 자원흐름의 주목적이 개도국의 경제발전 및 복지증진일 것, 2) 공여조건: 증여율(Grant Element)이 0.25 이상일 것, 3) 공여대상: DAC 수원국 명단에 속해 있는 개도국 및 본 개도국을 주요 수혜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일 것 등이다(※ 증여율 = [차관 액면가액 - 원리금 상환액의 현재(할인율: 10%)] / 차관 액면가액).

8)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되었는데, 국제기구의 문제 접근 방식이 한국과 다를 수 있고, 자문에 대한 기여도 평가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 진행되고 있다.

9) 독일이 1995년 멕시코에 전수한 환경관리 및 고체폐기물 처리기술 경험이 주변국에 공무원 연수 형태로 전수되었으며 이러한 성공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중남미 주변 4개국에 연수사업이 진행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정지원 외(2011) 참조.

10) 브라질의 Embrapa는 자국의 Cerrado 지역을 농지로 전환시킨 경험과 지식을 아프리카와 공유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전 세계에서 잠재적으로 가용하지만 현재 경작되고 있지 않은 토지의 60%에 해당되는 6억 헥타르를 보유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Morris et al.(2009) 참조.

도 자국의 농촌개발경험을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방글라데시의 마이크로 파이낸스¹¹⁾나 중남미의 조건부 현금이전(conditional cash transfer)¹²⁾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식이 파급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자국 스스로 개발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신흥 강국이 다수 포함된 G20이 출범함에 따라 기존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중심의 원조공여국 관점에서 본 개발 논의에서 벗어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¹³⁾ 특히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을 중심으로 개발과 관련된 지식공유와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KSP에 대한 수요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한국은 2010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성장 중심의 개발의제 도입을 주도하고, 서울 G20 개발 컨센서스의 9대 핵심요소(pillar) 중 하나를 지식공유(knowledge sharing)로 설정하여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한 바 있다.¹⁴⁾

〈표 1〉 KSP 국가정책자문사업 추진 실적

| (단위: 억원) | | | | |
|----------|------|---------------------------------|--|------|
| 연도 | 국가 수 | 신규 사업 | 계속·후속 사업 | 예산 |
| 2004 | 2 |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 - | 10 |
| 2005 | 2 | 인도네시아, 터키 | - | 10 |
| 2006 | 4 | 알제리, 캄보디아 | 베트남, 인도네시아 | 8 |
| 2007 | 5 | 쿠웨이트, 아제르바이잔, 가나 |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 15 |
| 2008 | 8 | 오만, 도미니카(공), 우크라이나, 모잠비크 | 베트남, 아제르바이잔, 알제리, 터키 | 25 |
| 2009 | 10 | 리비아, 카자흐스탄 |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도미니카(공),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알제리, 가나 | 50 |
| 2010 | 15 | UAE, 사우디아라비아, 몽골, 페루, DR공고, 라오스 |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가나, 아제르바이잔, 도미니카(공) | 73.5 |

11) 미국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빈곤층에 대한 금융 접근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방안으로서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Grameen Bank)의 마이크로 파이낸스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그라민은행의 설립자인 유누스는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통해 빈곤 감축에 기여한 공로로 2006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Yunus(2003) 참조.

12) 뉴욕의 Opportunity New York City Family Rewards Program은 조건부 현금이전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Fiszbein et al.(2009) 참조.

13) 원조 중심의 G8과 성장 중심의 G20 개발의제의 차이에 대해서는 Kharas(2010) 참조. 1990년만 해도 전 세계 빈곤인구의 93%가 저소득국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원조 중심의 빈곤 감축 논의가 진행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중국·인도 등 후발개도국이 중소득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2007~08년에는 전 세계 빈곤인구의 72%가 중소득국에 거주하게 되었고, 이들 나라에서는 원조보다는 지식공유, 무역, 투자 중심의 논의를 선호하고 있다. Sumner(2010) 참조.

14) 서울 컨센서스의 9대 핵심요소는 기반시설(infrastructure), 인적자원개발, 무역, 민간투자와 고용창출, 복원력 있는 성장(growth with resilience), 국내 자원 동원, 식량안보, 금융소외계층 포용, 지식공유이다. G20 개발의제의 개념과 세부 내용은 Winters, Lim, Hanmer, and Augustin(2010) 참조.

〈표 1〉의 계속

| (단위: 억원) | | | | |
|----------|------|--|---|-----|
| 연도 | 국가 수 | 신규 사업 | 계속·후속 사업 | 예산 |
| 2011 | 26 | 가봉, 남아공, 미얀마, 브라질, 볼리비아, 스리랑카,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온두라스, 적도기니, 탄자니아, 파나마, 필리핀 |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페루, 가나, 도미니카(공), 라오스, 알제리, 카자흐스탄, UAE, 사우디아라비아 | 100 |
| 2012 | 33 | 루마니아, 멕시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콜롬비아 |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알제리, 우즈베키스탄, 몽골, 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 터키, 베트남, 브라질, 가나, 에콰도르, 페루, 리비아, 미얀마, 도미니카(공), 라오스, 에티오피아, 온두라스, 카자흐스탄, 탄자니아, 파나마, 필리핀, 남아공, 가봉, 적도기니, 스리랑카 | 170 |
| 2013 | 36 | 코스타리카, 중국, 이집트, 벨리즈, 러시아, 헝가리 | 스리랑카, 몽골, 미얀마, 인도네시아, 알제리, 에티오피아, 브라질, 온두라스,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쿠웨이트, DR 콩고, 볼리비아, 가봉, 라오스,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가나, 멕시코,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루마니아, 카자흐스탄, 터키, 도미니카(공), 이집트, 탄자니아, UAE | 168 |

주: 중점지원사업은 밑줄로 표시함.

상술해 온 것처럼, KSP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총 39개국 460여 개 세부 주제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0년부터는 KSP의 정책자문사업 협력대상국 수가 15개국에서 26개국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2013년에는 36개국을 대상으로 140여 개 주제에 대한 정책자문사업 및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는데, KDI가 총괄 기관으로서 15개국을 직접 담당하고, 그 외 21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정책자문사업은 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였다. 2013년 사업 입찰을 통해 선정된 외부기관이 수행 중인 사업의 협력대상국 및 사업수행기관은 다음 〈표 2〉와 같다. 특히, 금년부터 도입된 정책자문관파견제도도 협력대상국의 요청에 따라 주제 관련 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지의 수요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자문을 수행하는 것으로, 올해는 가봉 및 베트남에서 진행되었다.

〈표 2〉 2013년 KSP 정책자문사업 외부 사업수행기관

| 협력대상국 | 사업수행기관 |
|---------|---|
| 스리랑카 | (사)국제경제연구원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
| 라오스 |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
| 온두라스 | (주)한국IT컨설팅 중소기업연구원 |
| 멕시코 | 한반도발전연구원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
| 도미니카공화국 | (사)미래와세계 |
| 카자흐스탄 |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신용보증기금 |
| 페루 | 산업연구원 |
| 에콰도르 | 산업연구원 |
| 가봉 | 산업연구원 |
| 방글라데시 | (사)국제경제연구소 한국채권연구소(주)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 볼리비아 | 한국행정연구원 |
| 가나 | 삼정KPMG 경제연구원(주) 신용보증기금 |
| 루마니아 | 한국전문가컨설팅그룹(유) |
| 인도네시아 | 삼정KPMG 경제연구원(주) 글로벌개발연구원(주) |
| 베트남 | 한국자산관리공사 |
| DR콩고 |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
| 러시아 | 국민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 |
| 콜롬비아 | (사)글로벌경영전략연구원 |
| 미얀마 |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 금융감독원 |
| | 국토연구원 |
| 터키 |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
| 이집트 | (사)한반도발전연구원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 탄자니아 | 예금보험공사 |

KSP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한국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정책자문을 제공하여 협력대상국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관계를 심화하는 데에 이바지하여 새로운 국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공동번영을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경우 20세기 중반 제국주의의 지배에서 벗어나 비교적 최근, 단기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성과에 기초하여 정책자문을 함으로써 협력대상국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¹⁵⁾ 산업혁명과 정치발전이 100여 년 전에 이루어진 선진국이나 실제 성과를 이룬 정책경험이 없이 자문을 제공하는 컨설팅회사와는 신뢰도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KSP는 기존의 ODA 사업과는 달리 OECD 및 G20 회원국, 자원부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식집약적 양자 간 경제협력사업이다.¹⁶⁾ 상기 사업의 결과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인적자원 및 사회·보건 분야 개발은 KOICA와, 기반시설의 건설은 EDCF와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지원하는 것이 개발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된다.

제2절 사업 목적과 특성

KSP는 국내외 민·관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협력대상국의 경제·사회 환경과 정책수요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자문 및 연수를 수행하여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협력대상국 경제정책의 개발, 집행 및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지원하고 사업의 결과를 유·무상 원조사업 등과 연계함으로써 협력대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둘째, 정부의 대외정책, 기업의 세계화 전략 그리고 국내 기관의 국제협력사업과 연계시켜서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제고한다. 셋째,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관계를 심화함으로써 새로운 국익 창출의 기회를 마련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공동번영에 기여한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개발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KSP처럼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사업'으로 실제 경험에 기초한 맞춤형 정책연구·자문·연수를 통해 제도 구축과 역량 배양을 체계적으로 추구하는 사업은 드물다. 대다수의 국가나 국제기구에서 추진하는 지식집약적 개발협력사업은 크게 전문가 파견, 초청 연수, 정책대화로 나뉜다. 전문가 파견을 통해 일정 기간 개도국 현지에서 실태 조사를 실시한 후 권고안을 도출하여 현지 정부에 자문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사업을 종료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정책 권고안에 대한 현지 정부의 주인의식(ownership)을 함양하고 권고안을 실제로 이행할 역량을 배양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개도국의 사절단을 선진국으로 초청하여 산업시찰과 유관 기관 방문을 실시하는 경우 개도국의 정책 담당자와 전문가의 인식을 전환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이들이 자국으로 귀국하여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 한 제도 구축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미미하다. 양자 또는 다자간 정책대화의 경우 정책담당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네트워크 구축을 원활하게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

15) 한국의 발전경험에 대해서는 SaKong and Koh(2010) 참조.

16) ODA 통계 작성을 목적으로 OECD-DAC의 정의에 따라, KSP의 일부 사업을 ODA에 계상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다. 그러나 KSP는 ODA 대상국 이외 협력대상국과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여율이라는 측면에서도 앞서 언급한 일부 국가에 대해 비용분담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KSP 전체를 놓고 볼 때 '원조'라고 정의하는 것보다는 '경제협력'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는 여전히 중장기적 과제로 남는다는 한계가 있다.¹⁷⁾ 즉, 세 방법 모두 일회성 사업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반면, KSP의 경우 ‘제도 구축’과 ‘역량 배양’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한 후 한국과 협력대상국의 정책담당자와 전문가가 매칭되어 수차례 양국을 오가며 실태를 파악하고, 상호 발표 및 의견 교환을 통해 자문 보고서를 공동 집필하기 때문에 정책 권고안이 실제로 이행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KSP가 유·무상 원조사업과 연계될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또한 KSP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협력대상국의 요청에 따라 기획·구성된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문 주제가 중소기업정책이라면 이에 관련된 정책지식과 법·제도를 공유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 클러스터를, 에너지 효율 제고라면 에너지관리공단을, 혁신정책이라면 한국과학기술원(KIST)과 대덕 연구개발특구(이노폴리스) 등을 사절단이 방문하도록 함으로써 사절단 스스로 자국의 제도 구축과 역량 배양의 중요성을 느끼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한국과 협력대상국에서 해당 주제와 관련된 부처 및 기관의 정책담당자와 전문가들이 KSP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KSP 사업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협력대상국의 개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 개발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현지 여건에 맞춰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중심의 자문사업’이라는 점이다. 이를 위해 과거에 정책을 입안했던 고위 정책담당자와 이를 자문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 그리고 공공 및 민간 기관의 전문가들이 사업에 참여한다. 둘째, KSP 사업은 협력대상국의 개발전략, 고위 정책담당자의 주요 관심사 등 협력대상국의 정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요 중심의 맞춤형 사업’이다. 자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협력대상국의 고위 정책담당자와 현지 전문가들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수요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지식의 공유가 이뤄지도록 한다. 셋째, 분야별 연구, 자문, 연수 등을 통해 협력대상국의 정책 수립 및 이행 능력을 제고하는 ‘역량 배양 사업’이다. 특히 협력대상국의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정책권고안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부처 및 기관을 방문하게 함으로써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고 중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넷째, 협력대상국의 정책과제에 대한 권고안을 도출한 후 다양한 협력수단을 동원하여 이의 실현을 모색하는 ‘종합적인 개발협력사업’이다. 단순히 정책의 기본방향이나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대안을 권고하고 여타 개발협력사업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자 한다. 다섯째, 대상국의 요청에 따른 계속사업을 적극 수용하고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며, ODA 대상국 외에 대외정책상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를 협력대상국으로 포함하는 ‘유연한 사업’이다.

이와 같은 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KSP는 크게 다섯 가지의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진행된다. 첫째, 협력대상국의 경제사회개발계획 또는 빈곤감축전략문서(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PRSP)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고위 인사 및 전문가의 현지조사를 통해 수요 중심의 맞춤형 사업(demand-oriented customized project)을 기획한다. 둘째, 협력대상국의 관련 정책과 여타 개발협력사업과의 연관성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법(integrated approach)을 따른다. 셋째, 대상국의 정치·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기획, 집행,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종합적 프로그램

17) OECD처럼 일정한 목표에 동의하는 기구의 경우 회원국들 간 동료 검토(peer review)나 상호 평가(mutual assessment)를 실시한 후 그 결과물을 제도개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comprehensive program)을 구성한다. 넷째, 정부 및 민간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한다. 마지막으로 민·관·학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활용하고, 사업 결과가 현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노력을 기울이며, 연구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고위급 채널을 포함한 개도국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처럼 KSP는 정책자문을 중심으로 한 지식집약적 개발협력사업으로서, 단순한 정책 권고를 넘어 협력대상국의 정책 수립과 법·제도 구축 및 기관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협력대상국의 개발 역량 배양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KSP 실시과정에서 발굴된 사업을 여타 개발협력사업과 연계하여 정책자문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경우 2009년과 2010년에 공항 및 항만 현대화 전략을 정책자문하였고, ‘베트남 2020 경제사회발전전략’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되었다. 또한 2004년 KSP 사업으로 수출 금융정책과 베트남 수출입은행 설립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와 자문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06년 5월 ‘베트남개발은행(Vietnam Development Bank)’이 설립되었다.

또한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우 2009년 KSP 자문주제였던 수출진흥 기반시설과 전력체계 개선이 EDCF를 통해 도미니카공화국의 통합세관업무시스템 구축 지원으로 연계된 사례가 있다. 2013년 미얀마 KSP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미얀마개발연구원(Myanmar Development Institute: MDI) 설립을 위한 정책자문은 KOICA 무상협력의 자금 지원 하에 MDI 설립으로 연계될 예정이다.

이처럼 KSP는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인 경제협력의 기회를 제공함에 따라 협력대상국과의 공동번영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단순히 정책 권고안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EDCF 차관이나 KOICA 무상협력 및 기술협력 등 여타 국제개발협력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협력대상국의 개발과 관련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것을 추구한다. 다만, 협력대상국 정부와 신뢰가 미처 쌓이기 전에 상업성이 짙은 경험사업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KSP의 효과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3절 사업 추진체계와 주체 및 역할

기획재정부는 KSP 사업의 주무부처로 사업 운용·관리 및 감독을 수행하며, 사업 총괄집행 기관인 KDI는 국가정책자문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 총괄 및 사업 관련 집행업무 전반, 예산 집행 보고 및 사후 결과 보고서 제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기획재정부와 KDI는 대외정책과의 부합성, 경제협력의 잠재력, 현지의 협력도 등을 고려하여 협력대상국을 선정하고 사업 진행을 감독한다. 그 외에 한국수출입은행, KDI 국제정책대학원은 국제기구와의 공동사업, KSP 모듈화 사업, 시스템 컨설팅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KDI는 2004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국가정책자문사업의 총괄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KDI 국제정책대학원과 수출입은행이 2011년부터 KSP 모듈화 사업, 국제기구 공동사업을

각각 수주하여 진행 중에 있다. 2013년부터 새로이 도입된 시스템 컨설팅 사업 역시 수출입은행이 시행하고 있다.

정책자문사업의 경우 총괄기관인 KDI 국제개발협력센터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협의하여 KSP 연구·자문·연수 사업을 기획하고 세부 지침 등을 마련한다. 또한 정책자문사업 중 상당 부분은 직접 담당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입찰 등을 통해 외주 기관을 선정한다. KDI와 외주 기관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별 각 1명의 기획·조정 책임자(Program Manager: 원내 PM)와 사업관리자(Program Officer: PO)를 배정하여 정책자문팀을 조직·운영한다. 기획·조정 책임자(원내 PM)는 사업수행기관을 대표하여 국별 정책자문 주제 확정, 정책자문팀 선정, 세부 연구·자문·연수 프로그램 조정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사업관리자는 한국과 협력대상국의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와 긴밀히 협의하여 정책자문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한다.

국별 정책자문팀은 기획조정자와 사업관리자 외에 연구책임자(Project Manager: PM)를 포함한 연구진, 정책 입안 또는 자문 경험이 있는 고위 인사(수석 고문), 현지 전문가(Local Consultant)로 구성된다. PM을 포함한 연구진은 정책자문의 세부주제 수에 맞춰 통상 3~6인으로 구성된다. 현지 전문가도 기본적으로 세부주제 수에 맞춰 선정된다.

연구책임자(PM)는 본인이 맡은 세부주제에 관한 연구·자문을 수행하면서 연구진의 업무를 조정·관리하고, 협력대상국의 정책담당자와 사업내용을 조율하고 최종적으로 정책권고안을 설명하는 역할을 맡는다. PM은 연구·자문 사업을 이끌며 협력대상국의 고위 정책담당자와 정책대화가 가능하도록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 그리고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사가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KDI 등 사업수행기관은 국별 정책자문팀을 구성함에 있어 1) 전문성, 2) 성실성, 3) 대내외 위상 등을 고려하여 PM을 선정한다. PM의 자격요건은 개발협력, 국제협력, 대상국 또는 자문주제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급 학위 소지자로서, 15년 이상 연구, 자문 또는 업무 경험이 있고 연구·자문에 필요한 영어 또는 기타 언어를 구사하며 국제적인 활동 경험, 책임감, 추진력 등을 갖춘 인사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3〉 KSP 사업 추진체계

| 연도 | 사업요소 | 사업 수주 및 추진 주체 |
|-------------|--------------------------------------|--|
| 2004 | 정책자문(베트남, 우즈베키스탄) | KDI (※ IDEP에서 담당) |
| 2005 | 정책자문(터키, 인도네시아) | KDI 국제정책대학원 (※ KDI의 조직 개편으로 IDEP를 대학원으로 이관) |
| 2006 | 정책자문(알제리, 캄보디아) | KDI 국제정책대학원 |
| | 자문·연수(베트남, 인도네시아) | 수출입은행, 인도네시아는 KDI 국제정책대학원, 기재부, 한국거래소 자체 예산 사용 |
| 2007 | 경제발전경험 체계화 정책자문(쿠웨이트, 아제르바이잔, 가나) |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일괄 수주 후 KDI로 이관 |
| | 타당성 조사(우즈베키스탄) | KIEP |
| | 자문·연수(베트남) |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
| 2008 | 경제발전경험 체계화 정책자문(아프리카 지역 외) | KDI |
| | 정책자문(아프리카 지역) | KDS |
| | 자문·연수(베트남) |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
| 2009 | 경제발전경험 체계화 정책자문(아프리카 지역 외) | KDI (※ 국제개발협력센터 출범) |
| | 정책자문(아프리카 지역) | KDS |
| 2010 ~11 | 경제발전경험 모듈화 정책자문 | KDI에서 일괄 수주 후 정책자문사업 일부에 대해 외주 입찰 실시 |
| 2011 ~12 | 경제발전경험 모듈화 | KDI 국제정책대학원 (※ 교재 개발 등 고려) |
| | 정책자문 | KDI에서 수주 후 일부 외주 입찰 실시 |
| | 국제기구와의 공동 컨설팅 | 수출입은행 (※ 국제기구 파견 등 고려) |
| 2013 | 경제발전경험 모듈화 | KDI 국제정책대학원 (※ 교재 개발 등 고려) |
| | 정책자문 | KDI에서 수주 후 일부 외주 입찰 실시 |
| | 국제기구와의 공동 컨설팅 | 수출입은행 (※ 국제기구 파견 등 고려) |
| | 시스템 컨설팅 | 수출입은행 |

연구진은 국별 사업과 관련된 세부실태조사, 정책자문보고서 작성, 자문활동 등을 맡고, 세미나와 워크숍 등에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한다. 기본적으로 연구진은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연구·자문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연구진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연구·자문을 이끄는 PM의 의견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되 기획재정부와 KDI가 의견을 조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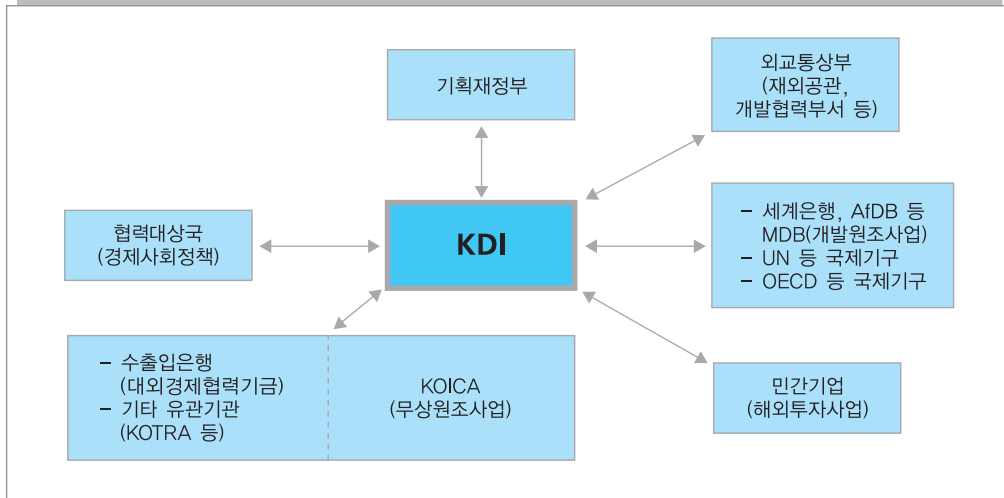
KSP 정책자문사업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절차에 입각하여 고위 인사를 수석 고문으로 영입하여 정책자문 내용의 신뢰성과 협력대상국 고위 정책담당자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석 고문은 전직 1급 이상 행정관료, 전직 대사, 전·현직 기관장, 국제기구 국장급 이상 인사로서 그 역할은 크게 세 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첫째, 수석 고문이 국별 정책자문팀의 PM을 겸임하는 경우 수석 고문은 일반적인 PM과 마찬가지로 세부주제에 관한 연구·자문을 수행하면서 연구진의 업무를 조정·관리하고, 협력대상국의 정책담당자와 사업내용을 조율하고 최종적으로 정책권고안을 설명하는 역할을 맡는다. 둘째, 수석 고문이 PM은 아니지만 적극적인 고문 역할을 맡는 경우 수석 고문은 KSP 사업기간 중 고위급 정책대화에 참여하고 연구진에 주기적으로 사업 관련 조언을 하며 최종 단계에서 수석고문 활동자문보고서를 제출한다. 셋째, 정책자문팀의 협력대상국 현지 방문 시 수석 고문이 사절단의 단장 역할을 수행하며 기초연설 등의 발표자료를 준비한다. KDI 등 사업수행기관이 국별 정책자문팀을 구성함에 있어 수석 고문은 PM과 마찬가지로 1) 전문성, 2) 성실성, 3) 대내외 위상 등을 고려한다. 사업총괄기관이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석 고문을 기획재정부에 추천하면, 기획재정부는 이를 검토한 후 사업총괄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한다.

한편, 현지 전문가는 현지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자문보고서의 공저자로 집필에 참여하기도 한다. KSP가 한국의 개발경험을 일방적으로 전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협력대상국의 현지 여건에 맞춰 정책자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지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KSP 사업 초기에는 예산 제약으로 인해 현지 전문가의 참여가 제한적이었으나, 2008년부터는 현지 전문가의 참여가 본격화되었고 2009년에 들어서는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다. 예를 들어 국가 기술 및 국가 혁신모델 개발을 주제로 한 2008년 터키 KSP 사업에는 터키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한국의 연구진과 보고서를 공동 집필하였고, 2009년 베트남 중점지원사업의 경우에도 다수의 베트남 전문가들이 공동 집필에 참여하였다. 현지 전문가의 참여 범위는 자문 주제와 현지 전문가의 역량 및 협력 의지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관 기관들과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수출입은행 및 KOTRA와 협력하여 국별 현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현지 사무소를 통해 현지 정보 및 활동의 지원을 확보한다. 세계은행, IMF 등 국제기구의 현지 사무소와의 교류를 통해 KSP 사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취득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지도를 제고함으로써 관련 인사의 참여를 유도한다. 해외공관과 KOICA의 현지 사무소를 통해 현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기술협력사업과의 중복 및 연계 여부를 검토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그 밖에 국내 민간기관(기업, 단체, NGO)이 실시하거나 계획 중인 사업과의 연계를 검토하고, 해외에 진출한 민간기업(지사, 상사 등)과도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그림 1] KSP 정책자문사업의 협력 체계도: KDI가 사업수행기관일 경우



제4절 사업 내용과 유형 및 진행단계

가. 사업 내용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연구(Policy Research)’에서는 협력대상국의 종합적인 경제 현황과 정책과제 분석 및 연구와 사례조사, 정책권고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보고회 등을 수행한다. 둘째, ‘정책자문(Policy Consultation)’에서는 사업 결과의 적극적인 활용 및 정책입안 가능성의 제고, 한국의 개발경험에 대한 현지 수요 충족 등을 위하여 고위인사 및 관계기관 책임자들과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 대안을 개발한다. 셋째, ‘정책 실무자들의 역량 배양(Capacity Building)’에서는 사업 결과의 활용도, 인적네트워크, 한국에 대한 이해도 등을 제고하기 위해 협력대상국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연구 결과 논의 및 여타 한국의 개발경험 강의, 관련 부처 및 기관 방문 등의 연수를 실시한다. 넷째, ‘사업 결과 전파(Dissemination)’에서는 협력대상국, 국제기구 및 국내 관련 기관의 민·관 인사를 대상으로 정책 자문 결과를 공유하는 전파세미나를 협력대상국과 국내에서 개최한다.

나. 사업 유형

KSP 정책자문사업을 투입 예산 규모 및 전략적 중요성을 기준으로 분류할 때에는 중점지원 사업과 일반지원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점지원사업은 협력대상국의 경제정책 전반에 걸친 포괄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구상되어 2009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베트남 KSP는 2009년에 ‘한국과 함께하는 경제발전’이라는 주제로 중점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2009년 3월 베트남 KSP 사업을 10대 국가브랜드 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였다.

중점지원사업은 '선택과 집중'에 의거하여 사업의 성과 및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국가를 선별하여 이루어지며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컨설팅을 실시한다. 따라서 일반지원사업의 경우 2~3개의 세부과제를 대상으로 3~4명의 연구진이 정책자문을 수행하는 반면, 중점지원사업은 4~5개 정책분야에 대하여 5~7명의 연구진이 포괄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중점지원사업에서는 협력대상국의 고위정책결정자를 대상으로 한국에서 실시하는 정책수요세미나가 사업단계에 추가되어 정책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사업성과 제고를 도모한다.

결산은 해마다 실시하지만, 중점지원사업의 수행기간은 2+1년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 1차연도에는 정책 연구 및 자문을 진행하고, 2차연도에는 1차연도에 제시한 권고안을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의 도입 및 기관 설립, 정책담당자의 역량 배양, 추가 연구·자문에 주력한다. 1차연도에 다루지 않은 새로운 주제에 대한 연구·자문도 가능하다. 사업 3차연도에는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후속 사업이나 KOICA, EDCF 등 연계사업의 추진 여부를 검토한다.

중점지원사업을 통한 포괄적 컨설팅은 협력대상국의 여러 경제정책 분야를 다룬다는 점에서 그 잠재적 영향력이 크지만, 수행기간 동안 정권 또는 정책담당자가 바뀔 경우 지속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문 분야가 다방면으로 분산되어 초점이 결여될 수 있으며, 다수의 관련 부처 및 기관 간의 조율 비용이 상당히 소요될 수 있다. 협력대상국의 정책분야별 수요가 명확하고 중장기 경제발전계획과 연계 가능하며 현지 관련 부처 및 기관 간의 조율 역량이 상당히 있지 않은 한,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성과가 제한적일 우려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협력대상국의 정책수요가 불분명한 분야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정책자문보다는 협력대상국의 실제 수요를 확인하여 주제를 선정하고, 조율 비용 대비 편익을 고려하여 정책자문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중점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지 총괄 협력기관의 전문성과 조율능력이 중요하며, 중점지원사업의 주목적은 현지 총괄 협력기관의 역량 배양보다는 협력대상국에 대한 정책자문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

다. 사업 진행단계

KSP 정책자문사업은 사업 예산이 편성되기 전 해에 실시되는 협력대상 후보국 선정 작업과 함께 시작된다. KDI에서는 2008년부터 협력대상 후보국의 (1) 발전잠재력, 정부의 사업역량, 동반관계 등을 반영하는 정량적 변수로 구성된 국별·연도별 지수인 KSP index¹⁸⁾와 (2) 정책수요와 협력의지 및 관심도, 사업의 연속성, 대외전략상의 중요성 등 정성적 평가를 함께 고려하여 서면수요조사 대상국을 체계적으로 선정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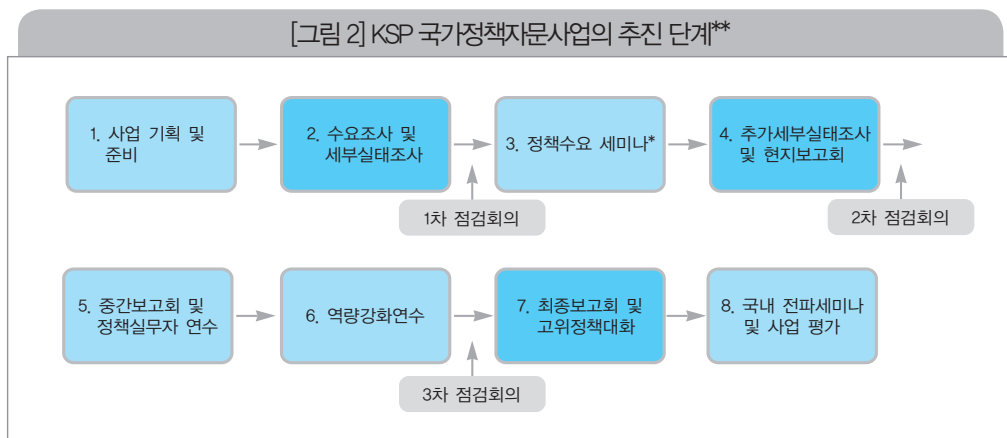
이와 같이 협력대상 후보국을 2배수로 선정한 후 외교 공관의 협조를 받아 약 1개월간 서면수요조사를 실시한다. 후보국의 정부 부처가 제출한 서면수요조사서상에 KSP에 대한 수요 및 정책 우선순위가 포함되며, 내용의 충실성과 해당국의 전략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협력대상국을 선정한다. 이때 주제 선정에 있어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를 강요하기보다는 협력대상국이 제시

18) KSP index는 후보국 선정기준을 정하여 각 기준별로 개별 지표를 구하고, 일정한 분류체계에 맞추어 각 개별 지표에 대한 표준화된 점수와 순위를 가중치로 합산한 국별·연도별 지수로, 지역별로 협력대상후보국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전략적 기준에 해당한다.

한 주제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KSP 주제 조율 작업과는 별도로 협력대상국에 대한 배경지식 확보를 위한 문헌조사도 이뤄진다.

이처럼 협력대상 후보국 선정, 서면수요조사, 협력대상국 선정, 사전수요조사(주제의 조율·구체화 및 문헌조사) 단계가 완료되면 국별 정책자문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총괄기관은 중점지원사업처럼 중요도가 높거나 정형화되기 어려운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나머지 사업은 경쟁입찰 등을 통해 외부에 위탁한다.

KSP 사업은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8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수요세미나는 중점지원사업에 해당하는 협력대상국의 수요에 따라 필요시 실시한다.



주: * 중점지원사업의 경우 협력대상국의 수요에 따라 '정책수요세미나'를 추가 실시함.

** 단계는 국내, 단계는 협력대상국에서 실시함.

[그림 3]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 진행 단계

| 단 계 | 진 행 절 차 | |
|--------------------------------------|--|--|
| KSP 중기운용계획 수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P 중기운용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방향 및 비전·운용 방향 정립, 지역별·국가별 추진전략 수립 등 | |
| 사업 준비 (전년도 2/4분기 부터 기획재정부·KDI 추진) | 협력후보대상국 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선정 체계화지표(KSP Index)를 통한 정량적 평가와 한국과의 경제협력 수요, 정치·외교적 고려, KSP를 통한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정성적 평가를 동시에 실시하여 협력후보대상국을 선정 ● KSP 추진협의회에서 후보대상국의 적절성 등에 대해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협력후보대상국 선정(약 2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P 추진협의회 의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
| | 국별 현황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를 통해 국가 일반사항, 정치·경제동향, 경제정책 등 협력대상후보국 현황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국가·타 부처 지원국가 등을 제외하고 정상외교·후속사업 필요 국가를 추가하여 수요조사 대상 국가를 선정 |
| | 서면 수요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 공관의 협조를 받아 후보대상국 경제 및 국제협력 담당 부처를 통해 KSP에 대한 수요 및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 ● 협력후보대상국 정부는 서면수요조사서 제출 시 사업요청서한을 동시에 제출하기도 함. |
| | 최종 협력대상국 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수요조사서를 기초로 한국의 발전경험 공유를 통해 대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상국을 국내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선정 후 해당 대사관에 통보 |
| | 용역 계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총괄기관 선정 ● 사업총괄기관은 선정된 즉시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준비 착수 |
| | 사전협의 (필요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수요조사서(차년도 사업)를 바탕으로 잠재 협력대상기관과 정책 우선순위, 협력방안 등 논의 |
| | 연구주제 및 연구진 선정, 계약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별 서면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잠정적인 연구 주제 및 한국 측 정책자문팀(PM, 수석고문, 연구진, 소관부처) 등 선정/계약 ● 협력대상국 현지 방안을 앞두고 질의서 송부, 현지 전문가 추천 요청, 한국 측 전문가 간담회 등 실시 |

[그림 3]의 계속

| 단 계 | 진 행 절 차 |
|--------------------------------|---|
| 수요 조사 및 세부실태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대상국 고위인사 면담 등을 통하여 연구주제 확정, 연구주제 관련 현지상황 조사, 공동연구를 위한 현지전문가 인터뷰 및 선정 |
| MOU 체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목적, 주요 내용, 역할 분담 등을 명시하는 양국 간 MOU 체결 |
| TOR 체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된 현지 전문가와의 공동연구를 위해 해당 연구주제 내 역할 분담 등을 명시하고 있는 TOR¹⁾ 체결 |
| 1차 점검회의 (추가세부실태조사 이후 실시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실태조사 이후 연구진 선정, 주제 선정, 협력기관 선정, 연구의 방향 등이 적절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점검회의 실시 |
| 정책수요세미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대상국의 정책결정자와 현지전문가가 한국을 방문하여, 자문주제별로 협력대상국의 현황과 한국의 경험을 비교적 관점에서 논의 |
| 추가 세부실태조사 및 현지보고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진이 현지를 방문하여 진행해온 연구내용을 발표하여 현지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고, 추후 발전방향 등을 논의하며, 추가로 필요한 현지 조사 실시 |
| 중간보고서 제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어진 기한까지 진행 현황, 중간 연구결과 및 사후 계획 등을 포함한 국문 중간보고서 제출 |
| 2차 점검회의 및 중간보고회 발표자료 제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점검회의용으로 중간보고회용 발표자료 제출(필요시 중간보고서 최신본 제출) ● 중간보고회 실시 2주 전, 중간보고회 계획 및 구성, 전체 일정 및 보고회 시 발표할 내용 등을 발표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 |
| 중간보고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대상국의 관계자를 국내로 초청하여 연구 중간결과 및 정책 권고안을 발표하고 토론 |
| 정책실무자연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대상국 공무원이 주제 관련 주요 정부부처·연구소·기업 등을 방문하여 관련 주제의 구체화된 실물 경험을 공유 |
| 역량강화연수 ²⁾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공무원, 연구원 또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책제안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노하우, 운영방안 등을 교육 또는 훈련 |

사업 수행

[그림 3]의 계속

| 단 계 | | 진 행 절 차 |
|----------------------|-----------------------|--|
| 사업 | 최종보고서 초안 (금차최종보고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차 점검회의용으로 국·영문 최종보고서 초안(계약서상 금차최종보고서) 제출 |
| | 수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차 점검회의용으로 국·영문 최종보고서 초안 및 최종보고회용 발표자료 제출 필요시 2차 점검회의 후속조치 비교표 제출 최종보고회 실시 2주 전, 최종보고회 계획 및 구성, 전체 일정 및 2차 점검회의 후속 조치 사항, 최종 연구 및 자문내용 등을 발표하고 전문가의견 수렴 |
| | 고위정책대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의 수석고문을 단장으로 한 사절단이 협력대상국을 방문하여, 현지 고위 인사(정책 결정자, 장·차관급)를 접견하여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정책자문 |
| | 최종보고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에서 정책담당자, 연구소, 기업체 등 관련 인사를 초청하여 연구 결과 및 정책권고안을 공유하고 전파, 현지 의견 수렴 후 보고서에 반영 |
| 사업 마무리 및 평가 | 최종보고서 제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수행기관은 주어진 기한까지 최종보고회 논의 내용 등을 반영한 최종보고서 및 사업종료보고서를 사업총괄기관을 통해 기획재정부 제출 필요시 3차 점검회의 후속조치 비교표 제출 수석고문 활동보고서 제출 |
| | 최종보고서 검토, 출판 및 배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고서의 질적 관리를 위해 주제별 전문가를 사업총괄기관에서 섭외하여 익명의 검토 과정을 실시, 필요시 저자는 보고서 수정·보완 국·영문 보고서는 각각 전문가의 교정 및 에디팅을 거치고 저자가 검토(필요시 현지어 번역) 최종 확정된 보고서를 출판사에 의뢰하여 출판 협력대상국에 최종보고서 및 정책권고서를 송부 |
| | 국내전파세미나 (결과 공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수행 결과를 국내외 관련 기관 전문가, 정부, 학계, 연구소, 언론 등과 공유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세미나를 실시 PM 혹은 연구진은 국별 사업 결과와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토론 |
| | 사업비 정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감사기관을 지정하여 계약, 자료 제출 주어진 기한까지 해당 사업 관련 비용 집행을 마무리하여 정산 자료 구비 시 착오가 없도록 협조 |
| | 사업 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료평가 및 영향평가 등을 수행하여 성과를 명확히 파악하고, 향후 개선사항 등을 환류 |

주: 1) 중점지원사업의 경우 협력대상국의 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역량강화연수'를 추가 실시함.
 2) 현지전문가 보고서의 경우 TOR에 명시된 계약기간 및 분량에 맞춰 현지전문가가 제출(통상 2회(중간 및 최종) 제출, 현지전문가의 최종보고서는 중간보고회 이전 제출이 이상적), 기간 및 분량, 중간보고서의 제출일은 사업 운영에 따라 조정 가능함.

- 정지원 · 권율 · 정지선 · 박수경 · 이주영,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현황과 우리의 추진방안』, 연구보고서 11-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 Fiszbein, Ariel, Norbert Rüdiger Schady, and Francisco H. G. Ferreira, *Conditional Cash Transfers: Reducing Present and Future Poverty*, Washington, D.C.: World Bank, 2009.
- Kharas, Homi, “Bringing Development into the G20: Overarching Themes,” in Colin I. Bradford and Wonhyuk Lim (eds.), *Toward the Consolidation of the G20: Form Crisis Committee to Global Steering Committee*, Seoul: KDI and Brookings, 2010, pp.214~225. (http://cid.kdi.re.kr/cid_eng/public/report_view.jsp?pageNo=1&pub_no=11568)
- Lindauer, David L. and Lant Pritchett, “What’s the Big Idea? The Third Generation of Policies for Economic Growth,” *Economia*, Fall 2002, pp.1~28.
- Morris, Michael, Hans P. Binswanger-Mkhize, and Derek R. Byerlee, *Awakening Africa’s Sleeping Giant*, Washington, D.C.: World Bank, 2009.
- Ranis, Gustav, Frances Stewart, and Alejandro Ramirez, “Economic Growth and Human Development,” *World Development*, Vol. 28, No. 2, 2000, pp.197~219.
- Rodrik, Dani, “Goodbye Washington Consensus, Hello Washington Confusion? A Review of the World Bank’s Economic Growth in the 1990s: Learning from a Decade of Reform,”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4(4), 2006, pp.973~987.
- Sakong I. and Y. Koh (eds), *The Korean Economy : Six Decades of Growth and Development*, 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10.
- Sumner, Andy, “Global Poverty and the New Bottom Billion: What if Three-Quarters of the World’s Poor Live in Middle-Income Countries?” Brighton, UK: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2010.
- Winters, L. Alan, Wonhyuk Lim, Lucia Hanmer, and Sidney Augustin, “Economic Growth in Low Income Countries: How the G20 Can Help to Raise and Sustain It,” Seoul: KDI, 2010. (http://cid.kdi.re.kr/cid_eng/public/report_view.jsp?pageNo=1&pub_no=11569)
- World Bank, *The East Asian Miracle: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 Yunus, Muhammad, *Banker to the Poor: Micro-Lending and the Battle Against World Poverty*, New York: Public Affairs, 2003.

〈부표 1〉 2004~13년 KSP 국가정책자문사업 연구주제 및 연구진

| 중점지원사업 | |
|--------|--|
| 2013 | <p>스리랑카의 지속적 개발을 위한 정책들</p> <p>박성훈(PM, 고려대)</p> <p>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산업정책: 식품가공산업을 중심으로 송유철(동덕여대)</p> <p>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송백훈(성신여대) 유진수(숙명여대)</p> <p>직업훈련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 강인수(숙명여대)</p> <p>수출지향적 FDI 유치 확대 방안 박성훈(고려대)</p> <p>기술창업 촉진 방안 이호생(명지대)</p> |
| | <p>몽골의 주택, 물류 및 신용보증 부문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p> <p>이시욱(PM, 명지대)</p> <p>몽골 주택 프로그램의 자금조달을 위한 전략 수립 손재영(건국대) 이시욱(명지대)</p> <p>몽골의 물류관리 역량강화 박민영, 김용진(이상 인하대)</p> <p>몽골 신용보증기금 제도 개선 방안 이종구(신용보증기금)</p> |
| | <p>미얀마 경제개발을 위한 정책분석 능력 강화</p> <p>조동철(PM, 한국개발연구원)</p> <p>미얀마개발연구원(MDI) 설립 조동철(한국개발연구원)</p> <p>미얀마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정책: 한국의 경험과 정책제언 송민규, 김동환, 박해식 (이상 금융연구원)</p> <p>미얀마 농촌개발 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의 경험과 정책제언 김태종(KDI 국제정책대학원)</p> <p>미얀마 농촌지역 지도자 양성 방안: 미얀마 새마을운동 교재개발 한도현(한국학중앙연구원)</p> |
| | <p>미얀마 양곤 남서부 지역개발 예비계획 수립</p> <p>왕광익(PM, 국토연구원)</p> <p>국가계획체계 및 도시개발현황 검토 왕광익, 문정호, 조진철, 박은새 (이상 국토연구원)</p> <p>미얀마 양곤 남서부권 지역발전전략 수립 왕광익, 정진규, 유선철, 노경식 (이상 국토연구원)</p> <p>미얀마 양곤 남서부권 지역발전을 위한 제언 왕광익, 유재운, 김승중, 김정화 (이상 국토연구원)</p> |

〈부표 1〉의 계속

| | | 인도네시아 행정개혁 및 장기발전전략을 위한 정책자문 | | |
|------|-------------------|--|-----------------------------------|-------------------|
| | | 권오규(PM, 前 경제부총리, KAIST) | | |
| 2013 | 인도네시아 (중점, 계속) | 인도네시아 행정개혁의 평가와 전략적 방향: 공무원 인사개혁의 실현을 중심으로 | 이창길(세종대) | |
| | | 조직 구조 개선, 법적 기반, 개발 시스템 관리, 보안 강화,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 효과적인 국고 딜링 룸 (Treasury Dealing Room) 설립 | 강경훈(동국대) | |
| | | 인도네시아 국가중장기개발계획(MP3EI) 달성을 위한 PPP 제도 및 역량 배양 | 최진욱(고려대) 이정엽(신용보증기금) | |
| | | 자산부채 종합관리(ALM)를 통한 국고관리와 부채관리 간 효율적 조정 | 배영수(서울시립대) | |
| | | 인도네시아 SPAN 구현 후 정보보안관리 | 곽진근(더존) | |
| | | 인도네시아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한 거시건전성 감독 개선 방안 | 임형준(금융연구원) | |
| | | 인도네시아 보편적 의료보장(UHC) 달성을 위한 건강보험제도 발전방향 | 김태현(연세대) | |
| | | [연수사업] 통합금융감독 시스템(특히 대기업에 대한 은행 감독) | 삼정KPMG&글로벌개발연구원 | |
| | | [연수사업] 중소기업 인적자원 개발 마스터플랜: 관리 개발, 기술 지원, 훈련 센터 설립 | | |
| | | [연수사업] PCR(Public Registry Data) 데이터 품질 향상(공공 CB와 민간 CB 간 정보 공유) | | |
| | | 알제리의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지원-비전 2030 수립을 위한 정책자문 | | |
| | | 전홍택(PM, 한국개발연구원) | | |
| 2013 | 알제리 (중점, 계속) | 비전 | 알제리 5개년계획(2015~2019년) 수립 지원 | 박명호, 오완근(이상 한국외대) |
| | | | 5개년 계획수립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ADI 설립 방안 | |
| | | | 5개년계획: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 채재은(가천대) |
| | | | 5개년계획: 산업 분야 | 김종일(동국대) |
| | PPP | 알제리 민간투자사업(PPP)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방안 | 박현(서울시립대) 김혜영, 고유은(이상 한국개발연구원) | |

〈부표 1〉의 계속

| | | | |
|--|------------------------|--|---------------------------|
| 2013 | 에티오피아 (중점, 계속) | 중소득 국가로의 경제성장 및 전환 | |
| | | 이태희(PM, 한국개발연구원) | |
| | | 에티오피아의 농산물 수출촉진 방안 | 어명근(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 | 기업가정신의 고취와 확산: 창업(start-up) 촉진을 중심으로 | 오성연, 백정희 (이상 중소기업진흥공단) |
| | | 전자정부 실현을 위한 준비도 평가 및 로드맵 수립 | 한필순(한국IT컨설팅) |
| | 에티오피아 신발·피혁 분야의 역량강화 | 김원주(한국신발·피혁연구원) | |
| | 브라질 (중점, 계속) | 브라질의 농업혁신을 위한 소규모 농가 육성 방안 | |
| | | 김정호(PM, 농촌경제연구원) | |
| | | 소농의 조직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 | 김정호(농촌경제연구원) |
| | | 시설재배와 자동화를 통한 시설농업분야 생산성 제고방안 | 김완순(서울시립대) |
| | | 수확 후 관리를 통한 소농 농산물시장의 차별화 방안 | 김종기(중앙대) |
| | 한-브라질 농산물 교역 확대를 위한 전략 | 임정빈(서울대) | |
| | 온두라스 (중점, 계속) | 온두라스 중소기업 및 전자정부 경쟁력 강화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자문 | |
| | | 김산희(PM, ㈜한국IT컨설팅) | |
| | | 중소기업 통합시장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 이준호(중소기업연구원) |
| | | 통합시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접근성 강화 | |
| | | 농촌지역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및 경쟁력 강화: 농업협동조합 금융기관의 설립을 중심으로 | 심우일(중소기업연구원) |
| | | 전자정부 보안 운영시스템 개발 방안 | 채규혁(㈜한국IT컨설팅) |
| | GIDC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 | 김산희(㈜한국IT컨설팅) | |
| | 사우디아라비아 (중점, 계속)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경제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자문 | |
| 김용성(PM, 한국개발연구원) | | | |
| 사우디아라비아 개발정책연구센터(SDRC) 설립방안에 대한 2단계 제언 | | 김용성(한국개발연구원) | |
| 사우디아라비아 민간투자제도(PPP) 개선방안 | | 이호준(한국개발연구원) | |
|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위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 | 이진(이화여대) 이항용(한양대) | |
| 사우디아라비아 양식어업 관측시스템(AMOS) 도입 방안 | | 홍현표(해양수산개발원) | |
|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대중교통시스템 활성화 방안: 한국의 경험과 정책제언 | | 이상건(국토연구원) | |
| 사우디아라비아 국가교통 DB 구축방안 | | | |

〈부표 1〉의 계속

| | | | |
|-----------------------------|---------------------------------|---|------------------------------|
| 2013 | 우즈 베키스탄 (중점, 계속) | 우즈베키스탄의 농업 및 산업기술 혁신 전략 | |
| | | 이태희(PM, 한국개발연구원) | |
| | | 우즈베키스탄 농산물 가공산업 클러스터 설립을 위한 시범단지 연구 | 이광석(성균관대) |
| | | 우즈베키스탄 농·식품 시범클러스터 설립을 위한 생산 및 유통 연구 | 김경량(강원대) |
| | | 기술혁신파크 조성 정책을 구축 | 장승관(한국산업기술대) |
| | 산학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중소기업부문 경쟁력 향상 전략 | 최용세(한국산업기술대) | |
| | 일반지원사업 | | |
| | 베트남 (일반, 계속) | 베트남 2011~20 경제사회 발전전략 제고 및 이행 지원 | |
| | | 남상우(PM, KDI 국제정책대학원) | |
| | | 글로벌 가치사슬: 한국의 경험과 베트남에 대한 시사점 | 김용택(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 | 베트남의 장기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연구 | 정태용(KDI 국제정책대학원) |
| | | 베트남 공공주택 연구 | 조만(KDI 국제정책대학원) 황유순(LH공사) |
| | | 베트남 환경보호법 개정 지원 | 전재경(한국법제연구원) |
| | | 베트남 DATC의 국영기업 부실채권 정리 및 구조조정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 | |
| | | 장성수(PM, 한국자산관리공사) | |
| | | 베트남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 현황 | 박정환, 임재욱 (이상 한국자산관리공사) |
| | | DATC 운영체계 현황 | 임재욱(한국자산관리공사) |
| | | DATC 운영체계 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 장성수, 신기현 (이상 한국자산관리공사) |
| | | DATC 역량 강화를 위한 로드맵 | 신기현, 김상민 (이상 한국자산관리공사) |
| | | 코스타리카 (일반, 신규) | 코스타리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정책 |
| 정성철(PM,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 | | |
| 코스타리카의 기술혁신체제 평가: 기회와 도전 | 정성철(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 | |
|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기 혁신 정책 과제 | 김지홍(KDI 국제정책대학원) | | |
| 기술혁신 체제의 구조적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 신태영(과학기술정책연구원) | | |
| 기술혁신 활성화를 위한 부문간 협력 촉진방안 | 박재민(건국대) | | |

〈부표 1〉의 계속

| | | | |
|------|------------------|--|---------------------------|
| 2013 | 가봉 (일반, 계속) | 가봉 산업 다각화 세부 실행계획 수립 | |
| | | 장윤종(PM, 산업연구원) | |
| | | 가봉의 산업발전전략 평가와 보완방향 | 장윤종(산업연구원) |
| | | 가봉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중소기업 진흥기관 설립 방안 | 김계현(산업연구원) |
| | | 가봉 ICT Park 및 기금, e-business 활성화 전략 | 우석균(산업연구원) |
| | | 가봉의 농업협동조합과 영농 기초교육 발전 방안 | 신현탁(한남대) |
| | | 경제분야 Think Tank 설립 | 김수동(산업연구원) |
| | | 가봉 에너지 자원의 다양화 | 전용준((유)이지엠 C&T) |
| | | 리브르빌 관광개발 방안 | 최봉현(산업연구원) |
| 2013 | 쿠웨이트 (일반, 신규) | 다각화되고 지속가능한 쿠웨이트 경제를 위한 재정관리 및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 | |
| | | 이명현(PM, 인천대) | |
| | | 재정개혁과 지속가능한 성장: 한국의 재정개혁이 쿠웨이트에 주는 시사점 | 류덕현(중앙대) |
| | | 쿠웨이트 개발계획 집행체계 개선방안 | 이명현(인천대) |
| | | 쿠웨이트 공무원 선발방식에 관한 소고 | 김상현(서울대) |
| | | 공공부문 개혁을 통한 개발계획 이행 촉진 | 김진영(건국대) |
| 2013 | 라오스 (일반, 계속) | 라오스 재정·금융·산업 부문 제도개선을 위한 제언 | |
| | | 박인원(PM, 고려대) | |
| | |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 홍필기(서울디지털대) 이영수(한국항공대) |
| | | 은행 조기경보체계 구축방안 | 이충열, 이선호(이상 고려대) |
| | | 정부채권시장 발전방안 | 이영수(한국항공대) 홍필기(서울디지털대) |
| |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세입배분방안 | 노형규(한국방송통신대) 박인원(고려대) |
| | | 산업통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 이충열, 진서훈(이상 고려대) |

〈부표 1〉의 계속

| | | | |
|--------------------------|--|-------------------------------------|------------------------------|
| 2013 | 캄보디아 (일반, 계속) | 캄보디아의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 |
| | | 강문수(PM, KDI 국제정책대학원) | |
| | | 캄보디아 경제 개관 | 강문수(KDI 국제정책대학원) |
| | | 캄보디아 기술인력 부족 및 수급불일치 문제 분석과 정책제언 | 정혁(KDI 국제정책대학원) |
| | | 한국의 FDI와 캄보디아의 외국인 직접투자 | 김지홍(KDI 국제정책대학원) |
| | | 캄보디아 산업발전 및 다변화를 위한 거시경제정책 | 박원암(홍익대) |
| | | 금융시스템을 통한 산업발전자금 조달 방안 | 최장봉(중앙대) |
| | | 장기 경제성장을 위한 과학, 기술 및 혁신의 진흥 | 이원영(前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
| | 캄보디아의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및 대한민국의 경험에 기초한 정책제언 | 김종윤, 석순용 (이상 특허법인 신세기) | |
| | 방글라데시 (일반, 계속) | 방글라데시의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 | |
| | | 강인수(PM, 국제경제연구소) | |
| | | 방글라데시의 거시경제 분석 및 예측 역량 강화 | 모영규, 신석하(이상 숙명여대) |
| | | 대외경제협력청(ERD)의 외채관리 능력 제고 | 강인수(국제경제연구소) 이태호(한국채권연구원) |
| | 중국 (일반, 신규) | 공정거래 관련 정책 경험 공유 | |
| | | 신광식(PM, 연세대) | |
| | | IT산업에서 지적재산권 남용 방지를 위한 반독점법 집행역량 강화 | 이황(고려대) |
| | | 행정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역량 강화 | 윤미경(가톨릭대) |
| | | 경쟁정책에 있어서 경제분석 | 이재형(한국개발연구원) |
| | DR공고 (일반, 계속) | 조세행정과 시스템개혁 | |
| | | 전승훈(PM,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
| | | 경제개발지원을 위한 조세제도와 조세행정의 개혁 | 박용만(건국대) |
| | | DR공고의 관세행정의 선진화 방안 | 박진규(한국개발전략연구소) |
| | | 비조세 징수행정의 개혁 | 김진영((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 |
| | | DR공고의 조세행정 정보화 방안 | 류승열(SK C&C) |
| | 가나 (일반, 계속) | 전략적 기획과 역량 강화 | |
| | | 공동성(PM, 성균관대) | |
| | | 민관협력(PPP)을 통한 국가정책 시행을 위한 역량 강화 | 최진욱(고려대) 고아름(삼성KPMG) |
| | |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설립 지원 | 최현철, 이태현(이상 신용보증기금) |
| 보급종 버 생산과 보급을 위한 클러스터 구상 | | 이기환(경북대) 강환우(삼성KPMG경제연구원) | |
| | 중앙지역 관광 활성화 | 김시범(안동대) 이광열(삼성KPMG경제연구원) | |

〈부표 1〉의 계속

| | | | |
|-------------------|---|---|---------------|
| 2013 | 이집트 (일반, 신규) | 이집트 원자력 발전 및 ICT 분야의 역량강화 | |
| | | 김영봉(PM, 한반도발전연구원) | |
| | | [연수사업] 원자력발전 인력 양성 계획 | 한반도발전연구원&건국대 |
| | | [연수사업] ICT 분야의 혁신 및 기업가정신 함양 | |
| | | [연수사업] ICT 산업의 기술 클러스터 육성 | |
| | | [연수사업] ICT 산업단지 | |
| | | [연수사업] 기술역량강화 프로그램 | |
| | | [연수사업] ICT 인력채용 | |
| | | [연수사업] IT 프로그램 육성 | |
| | [연수사업] IT 분야 해외투자유치 | | |
| | [연수사업] 해외시장 육성 및 브랜드화 | | |
| | 멕시코 (일반, 계속) | 멕시코 4개 주(州) 경제역량 강화 | |
| | | 김영봉(PM, 한반도발전연구원) | |
| | | 께레타로주 자동차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CETAI의 발전방안 수립 | 전만수(경상대) |
| | | 치와와주 금속부품산업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디자인센터 및 제조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방안 수립 | 김수진(경상대) |
| | | 멕시코주 TESCO의 산학연계 교육시스템의 개선 및 확대 | 임장희(한반도발전연구원) |
| | 이달고주 알티블라노 신(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정책자문 | 박영철(성결대) | |
| | 벨리즈 (일반, 신규) | 벨리즈 국가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 |
| | | 김정욱(PM, 한국개발연구원) | |
| 한국의 국가교통계획 수립 사례 | | 김정욱(한국개발연구원) | |
| 교통현황 및 대안 선정 | | 김설주(태조엔지니어링) | |
| 교통수요 추정 | | 손의영(서울시립대) | |
| 대안 평가 및 국가교통계획 수립 | | 손의영(서울시립대) 김설주(태조엔지니어링) | |
| 자원조달 방안 | | 김정욱(한국개발연구원) | |
| 볼리비아 (일반, 계속) | 볼리비아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핵심과제 | | |
| | 권오성(PM, 한국행정연구원) | | |
| | 볼리비아 하이드로카본 직접세(IDH) 조세수입 관련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 주동현(한양대) 오윤경(한국행정연구원) | |
| | 볼리비아의 예산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개발 | 권오성, 김영록(이상 한국행정연구원) 신지호(건국대) | |
| 통합적 재정관리시스템 구축 | 최호진, 박상철(이상 한국행정연구원) 강인재(재정공학연구소) | | |
| 에콰도르 (일반, 계속) | 에콰도르의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 | | |
| | 김기환(PM, 산업연구원) | | |
| | 기술 이전 관점에서의 산업 및 가치사슬 확립 | 오영석(산업연구원) | |
| | 에콰도르 석유화학 산업화 전략 수립 | 남장근(산업연구원) | |
| | 산업화 과정을 위한 노동 지역 계획 수립 | 김선배(산업연구원) | |
| 민관 경영 모델 확립 | 김용열(홍익대) | | |

〈부표 1〉의 계속

| | | | |
|--------------------------------|--|---|--------------------------|
| 2013 | 콜롬비아 (일반, 계속) | 콜롬비아 경쟁력 강화 및 사회안정화 정책자문 | |
| | | 김원호(PM, 한국외대) | |
| | | 콜롬비아 공공임대주택 정책 | 채천석(글로벌경영전략연구원) |
| | | 콜롬비아의 수출진흥정책 개선방안과 對韓수출 및 한국투자유치 확대 방안 | 김원호(한국외대) |
| | |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한국의 경험이 Bancoldex 및 콜롬비아 정부에 주는 시사점 | 조병선(송실대) |
| | 페루 (일반, 계속) | 페루의 지식경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 | |
| | | 하병기(PM, 산업연구원) | |
| | | 페루의 중장기 경제전망 모델 수립 지원 | 하병기, 송병준, 신윤성 (이상 산업연구원) |
| | | 바이오테크놀로지 R&D 계획 수립 | 신윤성(산업연구원) |
| | | 전략기획을 위한 페루 지식관리시스템의 개발 | 이상현, 방헌지(이상 산업연구원) |
| | | 페루의 선진화된 산업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제언: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 지민웅(산업연구원) |
| | 러시아 (일반, 신규) | 러시아 연해주 주정부의 투자유치기관에 대한 교육, 능력개발 평가시스템 구축/러시아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 | |
| 강윤희(PM, 국민대) | | | |
| 러시아 연해주 투자유치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시스템 개편 | | 김상원, 박재신(이상 국민대) | |
| 러시아 연해주 투자유치청의 역량 강화 | | 최공필(한국금융연구원) 이상준(국민대) | |
| | 러시아 연해주 2013~17 사회경제발전 프로그램의 검토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 류혜정(법무법인 지평) 조진철(국토연구원) | |
| 루마니아 (일반, 계속) | 루마니아의 과학기술 혁신 시스템 구축 | | |
| | 임덕순(PM,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 |
| | 루마니아 민간 R&D 진흥 방안 | 송치웅, 임덕순 (이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
| | 전략 산업에서의 기술혁신 | 안기돈, 오덕성(이상 충남대) | |
| | 과학기술단지과 다국적기업을 연계한 산업 클러스터 진흥 | 강병주(한남대) 오덕성(충남대) | |
| 카자흐스탄 (일반, 계속) | 카자흐 혁신산업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정책 방안 | | |
| | 이영세(PM, 한국개발전략연구소), Salamat Onalbekov(카자흐스탄 경제예산기획부) | | |
| | OECD 규범에 맞는 카자흐스탄 외국인투자의 투자정책 활성화 방안 | 이영세(한국개발전략연구소) | |
| | 카자흐스탄의 민간투자사업(PPP) 활성화 방안 | 곽성철, 오영권(이상 신용보증기금) Kairat Seitov(카자흐스탄 경제예산기획부) | |
| | 지역거점의 중점산업 개발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 배성일(한국개발전략연구소) Ardak Dossanov(카자흐스탄 지역개발부) | |

〈부표 1〉의 계속

| | | | |
|-------------------------|---|---|--|
| 2013 | 헝가리 (일반, 신규) | 중부유럽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헝가리 경제발전계획 수립 | |
| | | 손욱(PM, KDI 국제정책대학원) | |
| | | 경제위기관리 방식 개선 | 손욱(KDI 국제정책대학원) |
| | |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 강성진(고려대) |
| | | 한국의 경험에 기초한 경제특구 형성 | Sherzod Shadikhodjaev (KDI 국제정책대학원) |
| |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 R&D 역량 강화 | 백지선(KDI 국제정책대학원) | |
| | 터키 (일반, 계속) | 터키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한-터키 FTA 활성화 및 녹색성장 추진 전략 자문 | |
| | | 이병화(PM,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
| | |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정책권고 | 이병화(한국개발전략연구소) 정인교(인하대) |
| | 도미니카 공화국 (일반, 계속) | 도미니카공화국 산업의 수출역량 강화 | |
| | | 이선인(PM, 미래와세계) | |
| | | 수출금융기구 설립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 한재준(인하대) |
| | | 도미니카공화국 식품연구소 설립을 통한 도미니카 품질시스템 지원 | 박현진(고려대) |
| | | 무역센터의 개발 및 출범 | 이홍식(고려대) |
| | 아랍에미 레이트 (일반, 계속) | 아랍에미레이트 경제개발전략과정 연수 | |
| | | 이태희(PM, 한국개발연구원) | |
| | | [연수사업] 한국의 경제개발경험 |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
| | | [연수사업] 경제 연구와 개발: KDI의 역할 | |
| | | [연수사업] 한국의 경제계획과 정책조정 | |
| | | [연수사업] 중소기업 육성정책 | |
| [연수사업] 한국의 인적자원개발과 직업교육 | | | |
| [연수사업] 수출과 투자활동 | | | |
| [연수사업] 산업의 다각화 전략 | | | |
| 탄자니아 (일반, 계속) | 탄자니아 독립 예금보험기구 설립 및 예금보험제도 운영에 대한 정책실무자 연수 | | |
| | 이태희(PM, 한국개발연구원) | | |
| | [연수사업] 예금보험기구의 조직 운영 및 예산 수립, 인사 관리 | 예금보험공사 | |
| | [연수사업] 부실은행 정리 | | |
| | [연수사업]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IT 시스템 운영 및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 | |
| | [연수사업] 부보금융회사 임점 검사 실무 | | |
| | [연수사업] 부보금융회사 상시 감시 | | |
| [연수사업] 대국민 홍보 | | | |

〈부표 1〉의 계속

| 중점지원사업 | | | | | | | | | | | | | | | | | |
|---------------------|--|--|--------------------------|------------------------------|--------------------------|--------------------------------------|--|-----------------------|----------------------|---------------------------|----------------|----------------------------------|---------------------------|----------------------------------|---------------------------|---|--------------------------|
| 2012 | <p>중점지원사업</p> <p>캄보디아의 기술인력, 산업단지 그리고 농산물 가공산업 R&D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p> <p>강문수(PM, 前 금융통화위원, KDI 국제정책대학원)</p> <table border="1"> <tr> <td>캄보디아 경제 개관</td> <td>강문수(KDI 국제정책대학원)</td> </tr> <tr> <td>캄보디아의 산업기술 배양</td> <td>정인수(KDI 국제정책대학원)</td> </tr> <tr> <td>캄보디아의 노동수요 예측을 통한 기술인력 수요 평가</td> <td>정혁(KDI 국제정책대학원)</td> </tr> <tr> <td>캄보디아 산업단지/클러스터 개발전략</td> <td>최창용(KDI 국제정책대학원)</td> </tr> <tr> <td>캄보디아 전기산업단지 조성 관련 연구</td> <td>박병일(한국전기산업진흥회)</td> </tr> <tr> <td>캄보디아 농산물가공산업 연구개발체계 설립</td> <td>장재봉(영남대)</td> </tr> <tr> <td>[연수사업] 수출역량 강화</td> <td>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td> </tr> <tr> <td>[연수사업] 중소기업정책</td> <td>중소기업진흥공단</td> </tr> </table> | 캄보디아 경제 개관 | 강문수(KDI 국제정책대학원) | 캄보디아의 산업기술 배양 | 정인수(KDI 국제정책대학원) | 캄보디아의 노동수요 예측을 통한 기술인력 수요 평가 | 정혁(KDI 국제정책대학원) | 캄보디아 산업단지/클러스터 개발전략 | 최창용(KDI 국제정책대학원) | 캄보디아 전기산업단지 조성 관련 연구 | 박병일(한국전기산업진흥회) | 캄보디아 농산물가공산업 연구개발체계 설립 | 장재봉(영남대) | [연수사업] 수출역량 강화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연수사업] 중소기업정책 | 중소기업진흥공단 |
| | 캄보디아 경제 개관 | 강문수(KDI 국제정책대학원) | | | | | | | | | | | | | | | |
| | 캄보디아의 산업기술 배양 | 정인수(KDI 국제정책대학원) | | | | | | | | | | | | | | | |
| | 캄보디아의 노동수요 예측을 통한 기술인력 수요 평가 | 정혁(KDI 국제정책대학원) | | | | | | | | | | | | | | | |
| | 캄보디아 산업단지/클러스터 개발전략 | 최창용(KDI 국제정책대학원) | | | | | | | | | | | | | | | |
| | 캄보디아 전기산업단지 조성 관련 연구 | 박병일(한국전기산업진흥회) | | | | | | | | | | | | | | | |
| | 캄보디아 농산물가공산업 연구개발체계 설립 | 장재봉(영남대) | | | | | | | | | | | | | | | |
| | [연수사업] 수출역량 강화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 | | | | | | | | | | | | | |
| | [연수사업] 중소기업정책 | 중소기업진흥공단 | | | | | | | | | | | | | | | |
| 인도네시아* (중점, 계속) | <p>중점지원사업</p> <p>인도네시아의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p> <p>권오규(PM, 前 경제부총리, KAIST 금융대학원)</p> <table border="1"> <tr> <td>인도네시아 재정성과관리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의 경험과 정책제언</td> <td>박노옥(조세연구원)</td> </tr> <tr> <td>발달된 조달시스템을 통한 국가예산지출의 효율성 제고</td> <td>김대인(이화여대)</td> </tr> <tr> <td>예산 및 국고 완전 전산화(SPAN) 및 이행기의 주요 과제</td> <td>윤정원, 서운석, Gregory Pokorny (이상 한국정보화진흥원)</td> </tr> <tr> <td>인도네시아 민관협력(PPP)사업 활성화</td> <td>김정욱, 서원아(이상 한국개발연구원)</td> </tr> <tr> <td>인도네시아 통합금융감독정보시스템 구축방안 제시</td> <td>김종용(주)낙스넷)</td> </tr> <tr> <td>신용평가 등록 데이터의 품질 개선방안</td> <td>이육재, 전성준 (이상 코리아크레딧뷰로)</td> </tr> <tr> <td>하천유역 통합수자원 관리를 위한 규제체계의 비교 연구</td> <td>고익환(주)유신) 최동진(국토환경연구소)</td> </tr> <tr> <td>인도네시아 중소기업의 HRD 시스템 개혁방안: 한국의 경험과 정책제언</td> <td>강순희(경기대) 이규용(한국노동연구원)</td> </tr> </table> | 인도네시아 재정성과관리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의 경험과 정책제언 | 박노옥(조세연구원) | 발달된 조달시스템을 통한 국가예산지출의 효율성 제고 | 김대인(이화여대) | 예산 및 국고 완전 전산화(SPAN) 및 이행기의 주요 과제 | 윤정원, 서운석, Gregory Pokorny (이상 한국정보화진흥원) | 인도네시아 민관협력(PPP)사업 활성화 | 김정욱, 서원아(이상 한국개발연구원) | 인도네시아 통합금융감독정보시스템 구축방안 제시 | 김종용(주)낙스넷) | 신용평가 등록 데이터의 품질 개선방안 | 이육재, 전성준 (이상 코리아크레딧뷰로) | 하천유역 통합수자원 관리를 위한 규제체계의 비교 연구 | 고익환(주)유신) 최동진(국토환경연구소) |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의 HRD 시스템 개혁방안: 한국의 경험과 정책제언 | 강순희(경기대) 이규용(한국노동연구원) |
| | 인도네시아 재정성과관리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의 경험과 정책제언 | 박노옥(조세연구원) | | | | | | | | | | | | | | | |
| | 발달된 조달시스템을 통한 국가예산지출의 효율성 제고 | 김대인(이화여대) | | | | | | | | | | | | | | | |
| | 예산 및 국고 완전 전산화(SPAN) 및 이행기의 주요 과제 | 윤정원, 서운석, Gregory Pokorny (이상 한국정보화진흥원) | | | | | | | | | | | | | | | |
| | 인도네시아 민관협력(PPP)사업 활성화 | 김정욱, 서원아(이상 한국개발연구원) | | | | | | | | | | | | | | | |
| | 인도네시아 통합금융감독정보시스템 구축방안 제시 | 김종용(주)낙스넷) | | | | | | | | | | | | | | | |
| | 신용평가 등록 데이터의 품질 개선방안 | 이육재, 전성준 (이상 코리아크레딧뷰로) | | | | | | | | | | | | | | | |
| | 하천유역 통합수자원 관리를 위한 규제체계의 비교 연구 | 고익환(주)유신) 최동진(국토환경연구소) | | | | | | | | | | | | | | | |
| |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의 HRD 시스템 개혁방안: 한국의 경험과 정책제언 | 강순희(경기대) 이규용(한국노동연구원) | | | | | | | | | | | | | | | |
| 우즈베키스탄* (중점, 계속) | <p>중점지원사업</p> <p>우즈베키스탄의 산업혁신전략</p> <p>정선양(PM, 건국대학교 밀러 MOT 스쿨 원장)</p> <table border="1"> <tr> <td>재생에너지 분야 개발을 위한 제도 구축</td> <td>강태구, 임도연 (이상 에너지관리공단)</td> </tr> <tr> <td>우즈베키스탄 에너지효율 향상 전략</td> <td>김회철, 전영재 (이상 에너지관리공단)</td> </tr> <tr> <td>태양에너지 개발, 표준화 및 보급활성화 방안</td> <td>심창호, 백길남 (이상 에너지관리공단)</td> </tr> <tr> <td>우즈베키스탄 농업 및 유통분야 육성</td> <td>김경량(강원대)</td> </tr> <tr> <td>우즈베키스탄의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td> <td>이광석(성균관대)</td> </tr> <tr> <td>우즈베키스탄 국가혁신체제 내의 과학기술정보 확산 방안</td> <td>정선양(건국대)</td> </tr> </table> | 재생에너지 분야 개발을 위한 제도 구축 | 강태구, 임도연 (이상 에너지관리공단) | 우즈베키스탄 에너지효율 향상 전략 | 김회철, 전영재 (이상 에너지관리공단) | 태양에너지 개발, 표준화 및 보급활성화 방안 | 심창호, 백길남 (이상 에너지관리공단) | 우즈베키스탄 농업 및 유통분야 육성 | 김경량(강원대) | 우즈베키스탄의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 이광석(성균관대) | 우즈베키스탄 국가혁신체제 내의 과학기술정보 확산 방안 | 정선양(건국대) | | | | |
| | 재생에너지 분야 개발을 위한 제도 구축 | 강태구, 임도연 (이상 에너지관리공단) | | | | | | | | | | | | | | | |
| | 우즈베키스탄 에너지효율 향상 전략 | 김회철, 전영재 (이상 에너지관리공단) | | | | | | | | | | | | | | | |
| | 태양에너지 개발, 표준화 및 보급활성화 방안 | 심창호, 백길남 (이상 에너지관리공단) | | | | | | | | | | | | | | | |
| | 우즈베키스탄 농업 및 유통분야 육성 | 김경량(강원대) | | | | | | | | | | | | | | | |
| | 우즈베키스탄의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 이광석(성균관대) | | | | | | | | | | | | | | | |
| | 우즈베키스탄 국가혁신체제 내의 과학기술정보 확산 방안 | 정선양(건국대) | | | | | | | | | | | | | | | |

〈부표 1〉의 계속

| | | | |
|---|--|---|----------------------------|
| 2012 | 사우디아라비아 */** (중점, 계속) | 사우디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과제 (Ⅱ) | |
| | | 김동석(PM, 한국개발연구원) | |
| | | 사우디아라비아 경제발전을 지원할 싱크탱크 설립 | 김동석(한국개발연구원) |
| | | 국토 및 지역 발전정책 | 문정호(국토연구원) |
| | | 사우디아라비아의 자국민 노동생산성 제고 및 노동시장 효율화 | 김응진(AI Yamamah University) |
| | | 사우디 직업훈련을 위한 이러닝 솔루션 및 KEM 모델 | 최완식(총남대) |
| | 몽골* (중점, 계속) | 몽골의 지속가능 성장기조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 무역, 거시 및 공공 정책 부문 | |
| | | 이시욱(PM, 명지대) | |
| | | 몽골 수출촉진 지원체계의 정비 | 이시욱(명지대) |
| | | 몽골 개발금융의 효율적 사용과 위험관리를 위한 제도 연구 | 우석진(명지대) |
| | | 몽골 예금보험법의 실현 | 윤홍규(예금보험공사) |
| | | 몽골경제의 외환위기에 대한 조기경보모형 개발 | 이항용(한양대) |
| | | 몽골의 공공조달 부문 역량 강화를 위한 조달공무원 교육제도 개선방안 | 강승현(목포대) |
| | | 몽골의 민간투자사업과 위험관리 | 최석준(서울시립대) |
| | 알제리*/** (중점, 계속) | 알제리의 국가비전 2030 수립 | |
| | | 전홍택(PM, 한국개발연구원) | |
| | | 알제리 국가비전 2030 수립 지원 | 박명호, 오완근(이상 한국외대) |
| | |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 알제리 산업전망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방향 | 김종일(동국대) |
| | | 알제리 교육발전계획 수립: 직업교육훈련과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 채재은(가천대) |
| | | 보건개발계획 2030 | 권순만(서울대) |
| 알제리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와 제도의 강화 방안: 정부의 역할과 집행능력의 향상을 중심으로 | | 박현주(KDI 국제정책대학원) | |
| 알제리 국토개발구상 | | 이현주, 최민아(이상 토지주택연구원) 김형태(한국개발연구원) | |
| 가나 (중점, 계속) | 국가발전과 정부역량강화 | | |
| | 공동성(PM, 성균관대) | | |
| | 가나 중소기업의 활성화 방안 | 김흥기, 김중운(이상 한남대) | |
| | 가나 민관협력(PPP) 국가정책 시행을 위한 역량 강화 | 최진욱(고려대) 이광열(삼정KPMG) | |
| | 신용보증기금제도의 도입 | 박용평, 황인국 (이상 신용보증기금) | |
| | 정책 개발 및 시행 과정에서의 혁신 및 기술, 행동지향적 접근법에 기반한 리더십 배양 훈련 | 윤지용(경희대) | |

〈부표 1〉의 계속

| | | | |
|----------------------------|---------------------|--|--|
| 2012 | 스리랑카* (중점, 계속) | 스리랑카의 수출 및 외국인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 |
| | | 유진수(PM, 국제경제연구소, 숙명여대) | |
| | | 산업정책 프레임워크: 한국 사례로부터의 교훈 | 신혁승(숙명여대) |
| | |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무역부문 전략산업의 육성 | 이시욱(명지대) |
| | | 스리랑카의 중소기업 수출촉진전략 | 유진수(국제경제연구소, 숙명여대) |
| | | 스리랑카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정책 | 박성훈(고려대) |
| | | 수요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직업기술교육 육성방안 | 송유철(국제경제연구소, 동덕여대), 이호생(국제경제연구소, 명지대) |
| | 에콰도르(*) (중점, 계속) | 에콰도르의 산업구조 고도화 | |
| | | 한홍렬(PM, 한양대) | |
| | | 석유화학산업의 육성방안 | 유재원(건국대) 한홍렬(한양대) |
| | | 에콰도르 생명공학산업 육성방안 | 송유철(동덕여대) 이호생(명지대) |
| | | 에콰도르의 기술혁신 촉진방안: 산학연 협력 및 기술혁신 유인제도를 중심으로 | 이호생(명지대) 송유철(동덕여대) |
| | |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인적자원개발정책 | 강인수(숙명여대) Fausto Perez(MCCTH) |
| | |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자원조달방안 | 한홍렬(한양대) 유재원(건국대) |
| | 페루 (중점, 계속) | 중소기업 지원과 R&BD의 제도화를 통한 페루 남부회랑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
| | | 이재훈(PM,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
| | | 알파카 산업 육성방안 | 김문겸(송실대) |
| | | 커피산업 지원 및 R&BD 제고방안 | 이재훈(한국개발전략연구소) |
| | | 자동차 부품 재제조산업 육성 | 이재천(계명대) |
| | | 농공단지형 협동화 클러스터의 설치 및 중소기업 육성 전략 | 오성연((주)피엔제이컨설팅) |
| | | 산업정보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알파카 및 커피 산업에의 적용 | 이희진(연세대) 장승관(한국산업기술대) |
| | | 마스터플랜사업 | |
| | 리비아 (마스터플랜, 신규) | 리비아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 및 고용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 |
| | | 전승훈(PM,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
| | | 리비아의 비전 및 발전전략 | 백용기(상명대) |
| | | 중점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발전정책 | 한충민(한양대) |
| | |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개발정책 | 손찬준(한국개발전략연구소) |
| | | 리비아 국가재정 최적화 방안 | 류덕현(중앙대) |
| 전자정부 중장기 로드맵 - 한국의 경험과 시사점 | | 황주성(서울과기대) | |
| 인적자원 개발 및 고용정보시스템 구축 | | 어수봉(한국기술교육대) 강순희(경기대) | |

〈부표 1〉의 계속

| 일반지원사업 | |
|---------------------------|---|
| 아랍 에미레이트** (일반, 계속) | 아부다비의 주요 ICT 및 전자정부 정책과제 오광석(PM, 한국정보화진흥원) |
| |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활성화 오광석(한국정보화진흥원) |
| | 온라인 시민참여 연구 오광석, 박원재 (이상 한국정보화진흥원) |
| | 아부다비 ICT 협력과 정책적 시사점 이태희(한국개발연구원) |
| 가봉 (일반, 계속) | 가봉 경제의 다각화 송재호(PM, 제주대) |
| | 관광 진흥을 위한 관광거버넌스 체계 구축: '가봉 방문의 해' 사업을 중심으로 송재호(제주대) |
| | 가봉의 식량자급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와 농업 인 력 육성 및 농촌지도사업체계 구축방안 오현석(지역아카데미) |
| | 가봉의 중소기업 육성과 중소기업 육성기구의 설립 오성연(주)피앤제이컨설팅) |
| | 가봉 경제의혁신을 위한 IT Park 조성방안 전홍민(한국개발전략연구소) |
| 도미니카 공화국 (일반, 계속) | 도미니카공화국의 수출산업 육성 지원 장영훈(PM, 한국수출입은행) |
| | 도미니카공화국 농식품 혁신기술센터 설립방안 박현진(고려대) |
| | 도미니카공화국 국립혁신과학기술대학 설립방안 김원준(KAIST) |
| | 도미니카공화국 콘텐츠 산업 육성방안 최세경(성균관대) |
| 라오스 (일반, 계속) | 라오스 네덜란드병 현상과 국가자원 운영방안 수립 및 금융분야 능력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 박인원(PM, 고려대) |
| | 라오스 경제개관 박인원(고려대) |
| | 라오스의 산업화 과정에서의 네덜란드병 현상과 국제경쟁력 박인원(고려대) |
| | 라오스의 산업화 전략과 국가자원 운영방안 홍필기(서울디지털대) 이영수(한국항공대학교) |
| | 라오스 금융제도 및 금융시장의 현황 이충열(고려대) 정기현(고려대) |
| | 금융서비스 자유화 이충열(고려대) |
| | 자본계정 자유화 Shinji Takagi(日 오사카대) |
| 멕시코**/(*) (일반, 신규) | 멕시코 이달고주 기계부품산업개발과 기술인력개발 및 산학연계 강화 정책자문 임장희(PM, 한반도발전연구원) |
| | Hidalgo 주 기계부품산업의 진흥 전만수(경상대) 이강락(KR컨설팅) |
| | Hidalgo 주 기술인력개발 및 산학연계 증진 조은상(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영수(모라비안 프라트룸 컨설팅) |

〈부표 1〉의 계속

| | | | |
|-------------------|---|--|---|
| 2012 | 미얀마 (일반, 계속) | 미얀마 개발 전략 | |
| | | 구본진(PM, 前 기재부 차관보) | |
| | | 미얀마 금융통합방안 | 최공필(한국금융연구원) 이장우(부산대) 배근호(동의대) |
| | | 미얀마 관세행정 발전을 위한 세관 자동화 | 김종호, 방동원, 차승현 (이상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연합) |
| | 방글라데시 (*) (일반, 신규) | 방글라데시 정책분야 자문: 기존 공항 개선 및 신공항 개발, 외채관리능력 개발 | |
| | | 유재선(PM, 인천국제공항공사) | |
| | | HSA 기존 공항 개선 및 BSMIA 신공항 개발 | 서재택(포스코엔지니어링) 고종필(포스코엔지니어링) |
| | | 방글라데시 재무부 대외경제협력청의 외채관리역량강화 | 이태호(숙명여대/한국채권연구원) 허은지(한국채권연구원) |
| | 베트남 (일반, 계속) | 베트남 중·장기 사회경제발전정책 제고 및 이행 지원 | |
| | | 남상우(PM, KDI 국제정책대학원) | |
| | | 베트남 공공투자 효율성 제고 | 김형태(한국개발연구원) |
| | | 신도시개발 재원조달 메커니즘의 모색 | 홍성웅(영남대) |
| | | KIST 모델의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소 설립방안 | 이정협(과학기술정책연구원) |
| | | 베트남의 노동수요 전망(2012~2020)과 고용정보 서비스 구축 | 정인수(KDI 국제정책대학원) |
| | | 비시장경제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중복 부과 문제 분석 및 시사점 연구 | 안덕근(서울대) |
| | 브라질 (일반, 계속) | 브라질 수출가공특구(EPZ) 개발 및 운영방안: 한국의 경제특구 개발경험과 시사점 | |
| | | 곽노성(PM, 동국대) | |
| | | 브라질 일반 및 수출가공특구 EPZ 현황 및 모델 | 윤택동(한국외대) |
| | | 한국의 경제특구 변천 및 성과 | 곽노성(동국대) |
| | | 한국의 산업육성정책과 브라질 EPZ 발전방안 | 박재곤(산업연구원) |
| | 브라질 수출가공특구 내 중소기업 육성방안 | 정남기(동아대) | |
| 에티오피아 (일반, 계속) | 에티오피아의 핵심 정책분야 지원: 전자정부 도입전략, 신발/피혁산업 발전 및 육성 부문 | | |
| | 한필순(PM, (주)한국IT감리컨설팅) | | |
| | 에티오피아 전자정부 및 IT기술 도입전략 수립 | 한필순((주)한국IT감리컨설팅) | |
| | 에티오피아 신발/피혁 R&D 기능 강화를 통한 산업육성방안 수립 | 김원주(한국신발피혁연구소) | |

〈부표 1〉의 계속

| | | | |
|---------------------------|--|--|--------------------------|
| 2012 | 오만** (일반, 신규) | 오만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공공재정시스템 개선방안 | |
| | | 이명현(PM, 인천대) | |
| | | 재정성과 관리방안 | 이명현(인천대) 류덕현(중앙대) |
| | | 예산제도와 예산과정에 관한 연구 | 류덕현(중앙대) |
| | | 정부수입의 기획 및 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 송호신(이화여대) |
| | 온두라스 (일반, 계속) | 온두라스의 핵심 정책분야 지원: ICT 마스터플랜 시행에 대한 타당성 조사/연구 부문 | |
| | | 김산희(PM, 한국IT감리컨설팅) | |
| | | 상호운용성 기반의 정부대표 포탈 방안 | 김산희(PM, 한국IT감리컨설팅) |
| | | 전자조달을 위한 정책방향 | 한용호(삼성SDS) |
| | | 싱글윈도우를 위한 정책방향 | 임종원(삼성SDS) 김용문(삼성SDS) |
| | 적도기니 (일반, 계속) | 적도기니의 핵심 정책분야 지원: 농업, 수산업, 관광, 금융 | |
| | | 허장(PM,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 | | 적도기니 농업분야 | 허장(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 | 적도기니 수산분야 | 홍현표(한국해양수산개발원) |
| | | 적도기니 관광분야 | 장병권(호원대) |
| | | 적도기니 금융분야 | 남재현(국민대) |
| | 카자흐스탄 (일반, 계속) | 카자흐스탄 중소기업 육성 활성화와 혁신산업개발계획 수립 준비 | |
| | | 곽성철(PM, 신용보증기금) | |
| | | 카자흐스탄의 창업 활성화(혁신형 창업 중심) 혁신형 창업 활성화 정책 | 곽성철, 이종구(이상 신용보증기금) |
| | | 카자흐스탄 산업기반 신용보증제도 도입 제언 | 양희웅(신용보증기금) |
| 지속적인 기업육성을 위한 혁신산업개발계획 수립 | | 전승훈, 김혜진 (이상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
| 콜롬비아 (일반, 계속) | 콜롬비아의 지역 발전 및 과학기술단지 개발을 위한 정책과제 | | |
| | 임덕순(PM, 국제이노폴리스연구소) | | |
| | 콜롬비아 지역경제개발 전략과 정책 | 우제량(前 외교통상부 연구위원) | |
| | 각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개발 전략과 정책 | 김원호(한국외국어대) | |
| | 지역경제 인적자원 개발 전략과 정책: 한국의 새마을 지도자 교육 사례 | 김원호(한국외국어대) | |
| | 콜롬비아 과학기술전략과 정책 | 김정흠(과학기술연합대학원) | |
| | 콜롬비아 과학기술단지 구축방안 | 임덕순(국제이노폴리스연구소) 최봉문(목원대), 이경찬(원광대) | |

〈부표 1〉의 계속

| | | | |
|-----------------|--|---|------------------------|
| 2012 | 탄자니아 (일반, 계속) | 탄자니아 예금보험제도의 현대화를 위한 독립 예금보험기구의 설립 및 역량강화 지원 | |
| | | 김경호(PM, 예금보험공사) | |
| | | 탄자니아 거시경제 및 금융산업 현황 | 오승곤(예금보험공사) |
| | | 예금보험기구의 지배구조와 역할 | 오승곤(예금보험공사) |
| | | DIB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추진 방안 | 김택동, 정진훈(이상 예금보험공사) |
| | | 탄자니아 예금보험위원회 업무 체계 정비 | |
| | 효과적인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IT 시스템 구축 | | |
| | 터키 (일반, 신규) | 터키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생산성, 청정생산, 혁신클러스터 분야의 한국의 경험 공유 | |
| | | 김동수(PM, 산업연구원) | |
| | |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한국과 터키의 전략적 정책 비교 | 김영수(산업연구원) 김진웅(동아대) |
| | | 집적경제를 위한 혁신클러스터 정책: 한국의 지역 산업정책 경험 공유 | 김동수, 김영수(이상 산업연구원) |
| | | 터키 청정생산센터 설립 및 운영 방안 | 김진호(한국생산기술연구원) |
| | 파나마 (일반, 계속) | 파나마의 핵심 정책분야 지원: 공공투자계획과 분야별 발전전략과의 연계, 정부의 업무 중복성 제거를 위한 분야별 코디네이션 | |
| | | 이원희(PM, 한경대) | |
| | | 파나마의 국가 개황 | 곽재성(경희대) |
| | | 파나마 경제의 특징 | 이원희(한경대) |
| | | 파나마의 국가 및 부처별 계획 수립의 특징 | 금재덕(서울시립대) |
| | | 한국의 경험 | 이원희(한경대) |
| | | 계획 간 연계성 확보와 부처 간 조율 기능 강화 방안 | 우윤석(숭실대) |
| | | 결론 및 정책제언 | 이원희(한경대) |
| 필리핀 (일반, 계속) | 필리핀의 핵심 정책분야 지원: 재정 및 금융 정책 개혁, 오로라 경제자유구역 개발 | | |
| | 박진규(PM,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 |
| | 지속가능한 포괄적 경제성장을 위한 금융정책 방향 | 박진규(한국개발전략연구소) | |
| | 지속가능한 포괄적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 박화수(국제개발협력연구원) | |
| | 오로라경제자유구역 개발전략 및 운영 방안 | 박인철(한밭대) 임덕순(국제이노폴리스 연구소) | |

〈부표 1〉의 계속

| | | | |
|------|---|--|--|
| 2012 | 루마니아 (일반, 신규) | 루마니아의 경제위기 후 인적자원관리 | |
| | | 윤정열(PM, 이화여대) | |
| | | 루마니아 청년 및 장기실업자 고용 증대를 위한 노동 시장 유연성 증대 정책 | 윤정열(이화여대) |
| | | 루마니아 실업을 감소를 위한 고용 및 훈련 정책방안 | 최민식(이화여대) |
| | | 루마니아 청년층 및 고학력 노동력 유출현상에 대한 연구 | 강창희(중앙대) |
| | 파키스탄(*) (일반, 신규) | 파키스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4개 핵심 분야 정책자문 | |
| | | 이경구(PM,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
| | | 도심 소규모 업체에 대한 공간 창출 | 최장호(한국유통연구소) 엄부영(중소기업연구원) |
| | | 산업부의 모니터링 및 평가 셀 강화 | 이창길(세종대) |
| | | 파키스탄 섬유산업에 대한 에너지 효율성 제고 | 조수복(주)국제산업부설연구소) |
| | | 고등교육의 질과 접근성 향상 | 반상진(전북대) |
| | 남아공 (일반, 계속)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공공부문 인프라시설 투자활동에 대한 프로젝트 선정 및 효율성 등의 질적 향상 | |
| | | 왕세종(PM, 건설산업연구원) | |
| | | 남아공의 공공투자사업 자본예산시스템 개선방안: 사업평가제도를 중심으로 | 정건호, 김영대(이상 공공투자연구소) 박용석(한국건설산업연구원) |
| | | 공공부문 인프라 프로그램을 이용한 고용 창출 | 왕세종, 박용석 (이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 |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경험을 참고한 남아공 신재생에너지산업화 방안 | 이철용(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이승우(한국건설산업연구원) | |
| 2011 | 중점지원사업 | | |
| | 베트남의 2011~20 경제사회발전전략과 한국의 발전경험 | | |
| | 남상우(PM, KDI 국제정책대학원) | | |
| | 베트남의 세입 분석 및 전망 | 남상우(KDI 국제정책대학원) Pham Van Ha (베트남 국가금융연구 소) | |
| | 베트남과 한국의 국영기업 평가시스템: 비교연구 | 이원희(한경대) Ngyuen Thai Lan Huong, To Hai Long, Ngyuen Phuong Lan (이상 DSI) | |
| | 베트남의 장기 거시경제 예측모델 구축 지원 | 김종일(동국대) | |
| | 베트남의 공항 현대화 전략: 한국의 경험 공유 | 이영혁(항공대) | |
| | 베트남의 항만 현대화 전략: 한국의 경험 공유 | 김범중, 전형모(이상 한국해양수산 개발원) | |

〈부표 1〉의 계속

| | | | |
|----------------------------|-------------------------------|--|-----------------------|
| 2011 | 캄보디아 | 캄보디아의 중소기업, 산업 및 수출 부문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 |
| | | 강문수(PM, 前 금융통화위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 |
| | | 중소기업 전담은행을 통한 중소기업금융 지원방안 | 최재령(IBK 경제연구소) |
| | | 중소기업의 역량 배양 | 오성연((주)피앤제이) |
| | | 캄보디아 전자산업 육성전략 | 정진하(정보통신정책연구원) |
| | | 캄보디아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 장재봉(영남대) |
| | 캄보디아의 수출 다변화 방안: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 니윤수(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
|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의 핵심 정책분야 지원: 공공 재정, 신용인프라, 수자원 관리 | |
| | | 권오규(PM, 前 경제부총리, KAIST 금융대학원) | |
| | | 인도네시아 국고관리 및 예산집행 시스템 개혁방안 - 한국의 경험과 정책 제언 | 강경훈(동국대) |
| | | 인도네시아 정부의 회계 및 결산 제도에 관한 KSP | 배득중(연세대학교) |
| | | 인도네시아 재정정보시스템 분석 및 정보전략기획 | 최용락(숭실대) |
| | | PCR 시스템 기반의 신용평가 인프라 개선방안 | 이욱재, 전성준(이상 코리아크레딧뷰로) |
| | 수자원 계획과 재원조달에 관한 지식 교류 | 고익환((주)유신) 최동진(국토환경연구소) | |
| | 우즈베키스탄 | 우즈베키스탄 국가혁신시스템의 강화전략 | |
| | | 정선양(PM, 건국대) | |
| | | 우즈베키스탄의 과학기술정책 | 정선양(건국대) |
| | | 과학기술인력 양성정책 | 김왕동(과학기술정책대학원) |
| | | 우즈베키스탄의 기술이전·사업화 및 기술혁신활동 촉진방안 | 이종일(남서울대) |
| | | 우즈베키스탄 지역혁신시스템의 구축방안 연구 | 임덕순(CEWIT KOREA) |
| 수출지향적 중소기업의 육성 | 김정흠(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 | |
| 몽골 | 몽골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거시경제정책 | | |
| | 조동철(PM, KDI 국제정책대학원) | | |
| | 자본유출입 급변동하에서의 거시경제 정책조합 | 조동철(KDI 국제정책대학원) | |
| | 자본유입과 외환정책 | 이항용(한양대) | |
| | 예산절차 개선을 통한 재정개혁 | 이명현(인천대) | |
| | 몽골의 부실자산 정리체제 구축방안 | 신인석(중앙대) | |
| 수익형(BTO) 도로 민간투자사업 재무모델 개발 | 김강수, 고유은(이상 한국개발연구원) | | |

〈부표 1〉의 계속

| | | | | |
|---------------------------|---|--|---------------------------------|--|
| 2011 | 페루 | 지역특화사업을 통한 페루 남부경제회랑지역 중소기업 발전 방안: 커피, 알파카, 자동차, 부품산업을 중심으로 | | |
| | | 이재훈(PM,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 |
| | |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례: 알파카 산업 | 김문경(송실대) | |
| | |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례: 커피 산업 | 김선우(중소기업연구원) | |
| | |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례: 자동차 부품 산업 | 김주미(중소기업연구원) 김창대(동서대) | |
| | 지역특화전략 개발 계획: 중소기업을 위한 협동화사업 및 농공단지 개발 사업 | | 오성연(피앤제이) | |
| | 가나 | 가나 국가 차원의 행정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 역량강화 과제 | | |
| | | 공동성(PM, 성균관대) | | |
| | | 가나 공화국의 경제·사회에 대한 이해 | 이광열 (삼정KPMG 경제연구원) | |
| | | 대한민국의 정부업무 평가 | 공동성(성균관대) | |
| | | 가나 M & E의 현황 및 도전과제 | 윤지웅(경희대) | |
| | 가나 M & E 발전방향 | | 공동성, 윤지웅, 박영호 (이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 | 일반지원사업 | | | |
| | 도미니카 공화국 |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신용 역량강화 및 수출산업 육성 경험전수 사업 | | |
| | | [연수사업] | 정계룡, 김영석, 이기수 (이상 한국수출입은행) | |
| | 라오스 | 라오스 민자 인프라 사업 촉진을 위한 정책제언 | | |
| | | 반기료(PM, 피닉스 자산운용) 송경순(PM, 한국전문가컨설팅그룹) | | |
| | | 라오스의 인프라와 경제개발 | 장형수(한양대) | |
| | | 라오스 인프라 개발을 위한 민자 유치 제도 | 반기료(피닉스자산운용) 송경순(한국전문가컨설팅그룹) | |
| | | 한국 및 주요 주변국의 민자 인프라 촉진제도 비교 및 시사점 | 반기료(피닉스자산운용) 안우진(법무법인 울촌) | |
| 라오스 민자 인프라 사업 촉진을 위한 정책제언 | | 반기료(피닉스자산운용) 송경순(한국전문가컨설팅그룹) | | |
| 카자흐스탄 | 카자흐스탄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신용보증 및 신용평가 시스템 구축 | | | |
| | 권의중(PM, 신용보증기금) | | | |
| | 카자흐스탄 산업구조와 중소기업 현황 | 유명호(한국개발전략연구소) | | |
| | 한국 신용보증제도의 발전과정과 성과 | 박용평(신용보증기금) | | |
| | 카자흐스탄 신용보증제도 현황 및 분석 | 이종구(신용보증기금) | | |
| 신용보증제도 및 신용평가시스템 운용 제언 | | 권의중(신용보증기금) | | |

〈부표 1〉의 계속

| | | | |
|----------------------------|----------------------|---------------------------------------|-----------------------------|
| 2011 | 브라질 | 브라질 수출가공지역 개발정책과 실제: 한국 사례와 지식전수의 시사점 | |
| | | 최대원(PM, 한국외대 브라질 연구센터 소장) | |
| | |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및 수출증진 정책과 대브라질 정책 제언 | 권기수(대외경제정책연구원) 마재신(이화여대) |
| | | 브라질의 EPZ 개발 정책 | 이미징, 최대원(이상 한국외대) |
| | | 한국의 수출가공구 개발과 브라질에 대한 시사점 | 마재신(이화여대) |
| | 가봉 | 가봉 경제의 다각화: 한국의 시사점 | |
| | | 강정모(PM, 경희대) | |
| | | 가봉 산업 다각화 및 중소기업 육성방안 | 강정모(경희대) |
| | | 식량자급 및 농업생산 다각화를 위한 가봉 농업의 성장전략 | 오현석(지역아카데미) |
| | | 가봉 관광산업 발전방안 | 송재호(제주대) |
| | 남아공 | 남아공 통합인프라 및 지역개발 정책제언 | |
| | | 강창환(PM, 아랍아프리카센터) | |
| | | 남아공의 통합인프라계획 및 인간거주분야 정책 | 김창환(아랍아프리카센터) |
| | | 농촌발전을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 | 윤호섭(한국개발전략연구소) |
| | | 인프라(에너지/수자원과 위생) | 홍준희(가천대) |
| | | 인프라(ICT) | 배준석(한국개발전략연구소) |
| | 미얀마 | 미얀마의 경제개발을 위한 우선과제 | |
| | | 조동호(PM, 이화여대) | |
| | | 미얀마의 인적자본 개발을 위한 공공부문 역량 강화 | 조동호(이화여대) |
| | | 농업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한 미얀마 농촌개발계획 | 김경량(강원대) |
| 경제발전전략으로서 미얀마의 바람직한 경제특구정책 | | 최용석(경희대) | |
| 볼리비아 | 볼리비아 중기 재정안정화 방안 | | |
| | 조성익(PM, 시장경제연구원) | | |
| | 중기 재정안정화 방안 | 류덕현(중앙대) | |
| | 공기업 합리화 방안 | 정연호(시장경제연구원) | |
| | 탄력적인 예산을 위한 산업 발전 정책 | 이재훈(시장경제연구원) | |

〈부표 1〉의 계속

| | | | |
|------|---------------------------|--|--|
| 2011 | 스리랑카 | 스리랑카의 성장과 금융, 산업 및 수출을 위한 정책 제언 | |
| | | 송유철(PM, 동덕여대) | |
| | | 스리랑카의 수출진흥정책 | 한홍렬(한양대) 이시욱(명지대) |
| | | 스리랑카의 외국인직접투자 촉진 전략 | 강문성(고려대) |
| | | 스리랑카의 중소기업정책 | 유진수(국제경제연구소, 숙명여대) |
| | 스리랑카의 직업훈련정책 | 송유철(국제경제연구소, 동덕여자대) 이호생(국제경제연구소, 명지대) | |
| | 에콰도르 | 전략산업의 수출촉진정책 수립 및 역량강화 | |
| | | 한홍렬(PM, 한양대) | |
| | | 글로벌 시장수요 및 에콰도르 산업 잠재력에 기반한 전략산업의 선정 | 한홍렬(한양대) 이시욱(명지대) |
| | | 에콰도르 수출촉진정책의 현황 및 평가 | 이호생(국제경제연구소, 명지대) 송유철(국제경제연구소, 동덕여자대) |
| | | 전략산업의 수출촉진을 위한 정책제안 | 한홍렬(국제경제연구소, 한양대) 강인수(국제경제연구소, 숙명여대) |
| | 에티오피아 | 에티오피아 소규모 기업의 육성방안 및 아디스아바바 교통시스템 개선 | |
| | | 장형수(PM, 한양대학교) | |
| | | 에티오피아 소규모 기업의 육성방안 | 원용걸(서울시립대) |
| | | 아디스아바바 교통시설 개선 | 박동주(서울시립대) |
| | 온두라스 | ICT 마스터플랜 | |
| | | 장승관(PM, 한국산업기술대) | |
| | | 온두라스 현황 분석과 한국 ICT 발전경험 시사점 | 장승관(한국산업기술대) 외 전 연구진 |
| | | 온두라스 ICT발전방안 수립 | 윤창원(한국산업기술대) 외 전 연구진 |
| | | 정책참고 | 윤원창(한전KDN) |
| 적도기니 | Horizon 2020의 적도기니 국가경제개발 | | |
| | 송재호(PM, 제주대) | | |
| | 적도기니 관광산업 개발 | 송재호(제주대) | |
| | 적도기니 농업 개발 | 오현석(지역아카데미) | |
| | 적도기니 수산업 개발 | 이주(국립수산과학원) | |
| | 적도기니 금융 개발 | 전흥민(한국개발전략연구소) | |

〈부표 1〉의 계속

| | | | |
|---------------------------|--|---|-------------------------------------|
| 2011 | 탄자니아 | 탄자니아 예금보험제도의 현대화를 위한 독립 예금보험기구의 설립 및 역량강화 지원 | |
| | | 김경호(PM, 예금보험공사) | |
| | | 탄자니아 거시경제 및 금융산업 현황 | 오승곤(예금보험공사) |
| | | 금융위기 이후 세계의 예금보험제도 변화 추이 | 오승곤(예금보험공사) |
| | | 탄자니아 예금보험제도 현황 및 문제점 | 오승곤, 김택동(이상 예금보험공사) |
| | | 탄자니아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 |
| | 탄자니아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로드맵 수립 | 김경호, 김택동(이상 예금보험공사) | |
| | 필리핀 | 필리핀의 국가재정정보 시스템 강화 전략 | |
| | | 최용락(PM, 송실대) | |
| | | 필리핀의 재정관리제도의 개혁 | 배득중(연세대) |
| | | 한국과 필리핀의 발생주의 회계시스템 | 강인재(한국정부회계학회) |
| | | 국가재정관리정보시스템 분석 | 최용락(송실대) 하회신(한국정부회계학회, 메타빌드) |
| | 알제리 |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지원 | |
| | | 전홍택(PM, 한국개발연구원) | |
| | | 세계 속의 알제리 | 전홍택(한국개발연구원) 박명호, 오완근(이상 한국외국어대) |
| | | 알제리의 현황과 과제 | |
| | | 알제리 비전과 한국의 역할 | |
| | | 한국 및 주요 선진국의 비전 연구 | |
| | 정책과제별 주요 전략 | | |
| | 아랍 에미리트 | 아부다비 주요 ICT 정책과제 자문 | |
| | | 오광석(PM, 한국정보화진흥원) | |
| 한국의 e-Literacy 발전 경험과 시사점 | | 오광석, 박원재 (이상 한국정보화진흥원) | |
| 한국의 국가 GIS경험과 양국 협력 방안 | | 정문섭(국토연구원) | |
| 한국의 그린 ICT 발전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 | | 신재식(정보통신산업진흥원) | |
| | 한국의 정보보호 역량개발 경험과 시사점 | 김정덕(중앙대) 김영준(한국인터넷진흥원) | |
| 사우디 아라비아 | 사우디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 | | |
| | 서중해(PM, 한국개발연구원) | | |
| | 한국의 지식경제 전환 과정과 교훈 | 서중해(한국개발연구원) | |
| | 국가 경제발전에 있어서 과학기술단지의 비전 및 역할: 한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 임덕순(국제이노폴리스연구소) | |
| | 한-사우디 기술협력과 중소기업 육성방안 | 이상목(한국생산기술연구원) | |
| | 사우디아라비아 공교육 및 평생교육 향상: 한국의 EBS모델 적용 | 정현숙(한국교육방송공사) | |

〈부표 1〉의 계속

| 파나마의 농산품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 | | | |
|---------------------------------------|---|---------------------------------|--------------|
| 2011 | 우제량(PM, 시장경제연구원) | | |
| | 파나마 | 파나마 농산품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 | 임정빈(서울대) |
| | | 수출 물류 | 김성훈(충남대) |
| | | 수출 농산물 식물 검역 | 정연호(시장경제연구원) |
| | | 제도 및 프로그램 | 김성훈(충남대) |
| | 파나마 정부를 위한 정책 건의 | 우제량(시장경제연구원) | |
| 중점지원사업 | | | |
| 우즈베키스탄: 혁신기반 및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 | | |
| 이덕훈(PM, 서강대) | | | |
| 혁신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 | 한국의 국가혁신체제와 우즈베키스탄에의 시사점 | 정선양(섹터 PM, 건국대) | |
| | 민간부문의 혁신활동 증진기제: 한국의 기술이전 경험 및 우즈베키스탄에 주는 시사점 | 이종일(남서울대) | |
| |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과 산학연 연계 활성화 | 임덕순(경기개발연구원) | |
| 수출진흥 및 산업개발 전략 | 수출촉진정책과 수출금융: 한국의 경험이 주는 교훈 | 박정수(섹터 PM, 서강대) 허정옥(한국수출입은행) | |
| | 수출 중심 산업의 인적자원 개발정책 | 허정(서강대) | |
| | 전자통관시스템의 도입: 나보이 경제특구를 Pilot Program으로 | 김중호(국가세관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 |
| 거시경제 안정 및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 통화정책 운용체계: 한국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 조동철(섹터 PM, KDI 국제정책대학원) | |
| | 중기 재정운영계획에 대한 한국의 경험 | 김홍균(서강대) | |
| | 우즈베키스탄 경제전망 및 통계역량 개선 | 이항용(한양대) | |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중기 개발계획을 위한 핵심과제 | | | |
| 권오규(총괄 PM, 前 경제부총리, 카이스트 금융전문대) | | | |
| 금융자본 시장 | 인도네시아의 외환시장 안정성과 민간외채 관리 개선 | 박대근(한양대) | |
| | 회계 및 감사 시스템 발전방안 및 회계 인적자원 개발 | 김진태(삼정 KPMG) | |
| | 소비자 금융 선진화를 위한 개인신용평가 인프라 구축방안 | 전성준(코리아크레딧뷰로) | |
| | 중소기업 신용정보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 류중현(한국기업데이터(주)) | |
| 에너지 관리 및 환경적 지속 가능성 | 인도네시아의 에너지절약 정책 방향 | 강승진(섹터 PM, 한국산업기술대) | |
| |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정책 | 김수덕(아주대) | |
| | 인도네시아의 물관리정책 방안 | 최동진(국토환경연구소) 고익환(K-water) | |
| 무역 · 투자 | 인도네시아의 FDI 촉진전략 | 최병일(이화여대) | |
| | 싱글윈도우를 통한 인도네시아 무역 활성화 | 김중호(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 |
| | 인도네시아 SME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 | 송정석(중앙대) | |

〈부표 1〉의 계속

| | | | |
|---------------------|---|----------------------------|-----------------------------------|
| 2010 | 캄보디아: 캄보디아의 성장과 금융, 산업 및 무역 부문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 | |
| | 강문수(PM, 前 금융통화위원, 한국개발연구원) | | |
| | 거시성장 | 캄보디아 경제성장의 평가 및 중장기 성장전망 | 한진희(한국개발연구원) |
| | | 성장궤도상의 주요 과제: 구조전환과 정부의 역할 | 김종일(동국대) |
| | 금융 | 중소기업과 정미업 육성을 위한 대출 활성화 | 손욱(KDI 국제정책대학원) |
| | | 캄보디아 신용보증제도 도입 방안 | 진용주, 김효의(이상 신용보증기금) |
| | | 캄보디아 소액보험의 발전방안 | 유경원(상명대/보험연구원) |
| | 산업기술 개발 | 공장 설립 인허가제도 | 최영락(고려대) |
| | | 캄보디아의 표준화 및 적합성평가 체계 향상 | 류경미(기술표준원) |
| | 무역 | 캄보디아 수출 현황과 향후 진흥 전략 분석 | 차문중(섹터 PM, 한국개발연구원) |
| | | 수출 진흥절차의 역량 배양 | 나윤수(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 | 베트남: 베트남의 2011~20 경제사회발전전략과 한국의 발전 경험 | | |
| | 남상우(PM, KDI 국제정책대학원) | | |
| | 개발전략 및 국가의 역할 |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경제구조조정 전략 | 김종일(동국대) |
| | | 베트남의 공공부문의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전략 | 김동욱(서울대) |
| | | 베트남 공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 남일총(섹터 PM, KDI 국제정책대학원) |
| | 거시경제 운영 및 금융정책 | 베트남 금융시장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 김명직(한양대) 이항용(한양대) |
| | | 베트남 중소기업금융 활성화 방안 | 김동환(금융연구원) |
| | | 베트남의 협동조합 법률체계 개선방안 | 김준경(KDI 국제정책대학원) |
| | 기업효율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 강화 | 기업 혁신역량 강화 | 서중해(섹터 PM, 한국개발연구원) |
| 베트남 기업의 경쟁력과 HRD 전략 | | 진미석(한국직업능력개발원) | |
| 특별 경제구역 발전을 위한 재평가 | | 정형곤(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 정규 및 계속 사업 | | | |
| 아랍 에미리트 | 한국의 8대 ICT 발전경험과 아부다비의 3대 ICT 정책과제 | | |
| | 이태희(PM, 한국개발연구원) | | |
| | | 한국정보통신산업의 변천 | 박성욱(정보통신정책연구원) |
| | | 한국정보통신기술산업의 혁신과 기업가 정신 | 지경용(한국전자통신연구원) |
| | | 한국의 정보통신기술 법·제도 | 권헌영(광운대) 오광석, 고윤석(이상 한국정보화진흥원) |
| | | 한국의 정보통신기술 인적자원 개발 | 고상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
| | | 유관산업의 경제성장과 정보통신기술의 역할 | 김창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
| | | 디지털 사회 | 고윤석(한국정보화진흥원) |
| | | 한국의 녹색 정보통신기술 | 이효은(정보통신산업진흥원) |
| | | 한국의 정보보호활동 | 윤재석(한국인터넷진흥원) |
| | | 아부다비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지원 | 윤재석(한국인터넷진흥원) |
| | | 에미리트 무선 브로드밴드 구축지원 | 김창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
| | | 아부다비 정보통신기술 R&D 센터 구축지원 | 지경용(한국전자통신연구원) |

〈부표 1〉의 계속

| | | | |
|---------------------------|--|-------------------------------------|-------------------------------|
| 2010 | 사우디아라비아 (정규) | 사우디 정부의 경제 우선분야 개발을 위한 정책자문 | |
| | | 이형구(PM, 前 노동부 장관) | |
| | | 경제개발계획 집행의 효율성 제고 | 이형구(前 노동부 장관) 김동석(한국개발연구원) |
| | |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등교육 개선방안 | 김창환(한국교육개발원) 차문중(한국개발연구원) |
| | |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자력 추진을 위한 기반요소 조사 연구 | 하재주(한국원자력연구원) |
| | | 한국의 스마트그리드 정책 이니셔티브 | 김창섭(경원대) |
| | 몽골 (정규) |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개발전략과 예금보험제도 | |
| | | 김강수(PM, 한국개발연구원) | |
| | | 몽골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운용 절차적 개선방안 | 김형태(한국개발연구원) |
| | |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및 절차적 개선방안 | 김강수, 고유은(이상 한국개발연구원) |
| | | 몽골에서의 부분예금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 | 이재연(금융연구원) 오승곤(예금보험공사) |
| | 쿠웨이트 (계속) | 5개년개발계획의 성공적 실행을 위한 정책자문 | |
| | | 임영재(PM, 한국개발연구원) | |
| | | 5개년 개발계획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SCPD 시스템 개혁 | 임영재(한국개발연구원) |
| | | 거시예측모형 개발 자문 | 백용기(상명대) |
| | | 교육시스템 개혁 및 정책제언 | 정기오(한국교원대) |
| | | 전략기획 국가기구의 개혁을 위한 정책제언 | 박헌주(KDI 국제정책대학원) |
| | 가나 (계속) | 외주 사업 | |
| | | 가나의 국가재정운용 혁신방안-국가예산회계시스템을 중심으로 | |
| | | 박용만(건국대) | |
| 예산·회계 제도의 의의 및 관리의 중요성 | | 박용만(건국대) | |
| 예산·회계 시스템 | | 최용락(숭실대) 임동진(대원 C&S) | |
| 가나의 예산·회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제언 | | 박용만(건국대) 최용락(숭실대) 임동진(대원 C&S) | |
| | 예산·회계 제도 | 박용만(건국대) | |
| 아제르바이잔 (계속) | 아제르바이잔 원조조정 역량강화를 위한 디지털정보체제 구축 및 기업가 정신제고 | | |
| | 송경순(PM, 한국전문가컨설팅그룹) | | |
| | 원조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정보체제 구축 | 남기찬(한국전문가컨설팅그룹) | |
| | 기업가정신 제고 및 e-러닝 | 백낙기(한국산업기술대) | |

〈부표 1〉의 계속

| | | | | |
|---|-------------------------------|--|--------------------------------------|--|
| 2010 | 카자흐스탄 (계속) | 카자흐스탄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중심의 기업발전 전략 | | |
| | | 전승훈(PM,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 |
| | | 카자흐스탄의 기업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제 | 신상협(경희대) | |
| | | 카자흐스탄의 기업발전을 위한 혁신 전략 | 정연승(한국개발전략연구소) | |
| | | 카자흐스탄의 종합적 기업발전을 위한 전략 로드맵 | 전승훈(PM, 한국개발전략연구소) 이은경(한국개발전략연구소) | |
| | 라오스 (정규) | 라오스의 위기시 거시경제 안정화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역량 강화 | | |
| | | 장형수(PM, 한양대) | | |
| | | 라오스경제의 구조와 특징: 거시경제에 대한 시사점 | 장형수(한양대) | |
| | | 라오스의 위기 시 거시경제 안정화정책 수행경험 | 장형수(한양대) | |
| | | 한국의 거시경제 안정화정책 내용이 라오스에 주는 시사점 | 윤대희(경원대, 법무법인 율촌) 방만기(연세대) | |
| | | 라오스의 거시경제정책 수행 매커니즘과 국가경제연구 구소의 역할 | 장형수(한양대) | |
| | | 한국의 국책연구기관들의 위기관리 역할에 대한 평가 및 라오스에 주는 시사점 | 원용걸(서울시립대) | |
| | | 교훈과 정책 권고 | 장형수(한양대) | |
| | DR콩고 (정규) | 혁신적인 국가개발체제 및 신발전전략수립 방안 | | |
| | | 정재호(PM, S&R 경영경제연구원) | | |
| | | DR 콩고의 혁신적 국가개발계획 수립 전략 | 정재호(S&R 경제연구원) | |
| | | 국가 전략기획기관 설립·운영 방안 모색 | 이경규(한국개발전략연구소) | |
| | | 인프라 개발전략 | 손의영(서울시립대) | |
| | 페루 (정규) | CEPLAN과 통합정보시스템 | | |
| | | 이재훈 (PM, 시장경제연구원) | | |
| CEPLAN, 국가전략기획시스템(SINAPLAN) 그리고 통합정보시스템(IIS) | | 주재훈(동국대) 이재훈(시장경제연구원) | | |
| | IIS의 개념적 모델의 개선 | 추현우(프런티어 솔루션스) 이재훈(시장경제연구원) | | |
| 도미니카공 화국 (계속) |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진흥을 위한 수출신용기구 설립 지원 | | | |
| | [연수사업] | 김영석, 이기수(이상 한국수출입은행) | | |

〈부표 1〉의 계속

| 중점지원사업 | | | |
|-------------------------------------|-------------------------------------|---|--------------------------------------|
| 베트남의 2011~20 경제·사회 발전전략 수립에 대한 정책자문 | | | |
| 남상우(PM, KDI 국제정책대학원) | | | |
| 2009 | 개발전략과 성장잠재력 | 장기 성장동력 확보 및 성장 경로상의 주요 과제 | 한진희(한국개발연구원) |
| | 금융정책 | 베트남 조기경보모형 개발 | 김명직(한양대), 이항용(한양대) |
| | | 베트남의 자본자유화 정책 | 신인석(중앙대) |
| | | 자립적 협동조합금융기관 발전방안: 베트남의 인민신용기금을 중심으로 | 김준경(KDI 국제정책대학원) |
| | | 신용보증기금 기능 강화 및 수출금융 지원 | 신인석(중앙대) |
| | 국도이용 전략 | 공간계획체계 | 김현식(국토연구원) |
| | | 도시개발정책 | 박은관(국토연구원) |
| | | 토지이용정책 | 서순탁(서울시립대) |
| | 산업기술 개발전략 | 포사이트 가이드라인: 한국의 과학기술 포사이트의 모범사례 | 신태영(과학기술정책연구원) |
| | | R&D와 기술이전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 서중해(한국개발연구원) |
| | | 베트남의 산업기술능력 제고를 위한 산학연 협력 및 혁신클러스터 육성정책 | 임덕순(경기개발연구원) |
| | 기업정책 | 베트남 공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 남일총(KDI 국제정책대학원) 김우찬(KDI 국제정책대학원) |
| 베트남 국영기업의 기술인력 개발 | | 최영락(고려대) | |
|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의 관계 강화 | | 김현중(중소기업연구원) | |
| 정규 및 계속 사업 | | | |
| 우즈베키스탄 (정규) | 나보이 자유산업경제구역(FIEZ) 설립 정책자문 | | |
| | 정형곤(PM,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
| | 나보이 FIEZ 업종 유치전략 연구 | 이시욱(한국개발연구원) | |
| | 투자 유치전략 및 투자유치 시스템 구축 | 박두규(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
| | 나보이 자유산업경제구역(FIEZ)의 성공을 위한 운영체제와 정책 | 정형곤(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 나보이 FIEZ의 법적 분석 | Sherzod Shadikhodjaev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
| 인도네시아 (정규) | 인도네시아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과제 | | |
| | 권오규(PM, 한국과학기술원) | | |
| | 인도네시아 경쟁정책역량의 발전방안: 한국경험의 교훈 | 신광식(김앤장) | |
| | 인도네시아 금융감독 강화방안 | 송준혁(한국개발연구원) | |
| | 인도네시아 자산동화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구축 방안 | 김필규(자본시장연구원) | |
| 중기재정계획과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수립 | 박노욱(한국조세연구원) | | |

〈부표 1〉의 계속

| | | | |
|-------------------|-------------------------------------|----------------------------------|---|
| 2009 | 캄보디아 (정규) | 마이크로파이낸스와 민간투자사업 개발 | |
| | | 캄보디아의 마이크로파이낸스와 민간투자사업 | 강문수(PM, 한국개발연구원) |
| | | 캄보디아 마이크로파이낸스 부문의 안정적 자금흐름 확보 | 박창균(중앙대) |
| | | 농촌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역할 | 연태훈(한국개발연구원) |
| | | 캄보디아의 PPP 사업을 위한 법적·절차적 개선방안 | 김강수(한국개발연구원) |
| | 캄보디아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개선방안 | 허석균(한국개발연구원) | |
| | 카자 흐스탄 (정규) | 카자흐스탄의 산업혁신개발계획 | |
| | | 임원혁(PM, 한국개발연구원) | |
| | | 카자흐스탄의 경제 및 개발전략 개관 | 임원혁(한국개발연구원) |
| | | 국제비교를 통해 본 카자흐스탄 경제현황과 성장전략 | 김종일(동국대) |
| | | 카자흐스탄 건축자재산업 및 농기계산업의 육성전략 | 송병준(산업연구원) |
| | | 카자흐스탄 상용차산업 육성 방안 | 장하원(고려대) 박준경(前 한국개발연구원) 모세준(하나대투증권) |
| | | 카자흐스탄 농업발전 | 윤호섭(연세대) |
| | 산업별 분석 Ⅲ: 농업 | | |
| | 도미니카 공화국 (계속) | 도미니카공화국의 수출기반시설과 전력체계 개선 | |
| | | 임원혁(PM, 한국개발연구원) | |
| | |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인프라 개발을 위한 EDCF 국가지원전략 | 최성규(한국수출입은행) |
| | | 도미니카공화국의 전력체계 개선 | 임원혁(한국개발연구원) 유갑준(수에즈 에너지) 박종신(위덕대) |
| | | 배전부문의 문제점과 해법 | 박종신(한국전력공사) |
| | EDCF와 연계된 수출기반시설과 확충 | 최성규(한국수출입은행) | |
| 우크 라이나 (계속) | 우크라이나 에너지효율 향상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전략 | | |
| | 박희천(인하대) | | |
| | 우크라이나 에너지효율 향상 전략 | 박희천(인하대) | |
| | 우크라이나 석탄산업의 개선 전략 | 김재호(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
| | 우크라이나 풍력 RD&D 전략 개발 | 김현구(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
| 우크라이나 바이오연료 개발 전략 | 오유관(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 |

〈부표 1〉의 계속

| | | | |
|------|--|---|---|
| 2009 | 가나 (정규) | 가나의 예산과 국가발전계획의 연계방안 -한국의 경험과 가나에의 정책적 시사점 | |
| | | 가나의 국가발전계획과 예산 | 박화수(한국개발전략연구소) 김진영(건국대) |
| | | 가나의 재정정책 | 박용만(건국대) |
| | | 한국의 경제개발계획과 예산편성에 관한 경험 | 이원희(한경대) |
| | | 가나와 한국의 재정운영의 비교 | 박화수(한국개발전략연구소) 김진영(건국대) |
| | | 예산과 국가발전계획과의 연계를 위한 정책권고 | 연구진 공동 |
| | 알제리 (계속) | 알제리의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알제리 개발은행의 역량 제고 방안 | |
| | | 알제리의 경제상황과 FNI-BAD 추진배경 | 한재준(인하대) |
| | | 한국산업은행 사례 | 강석인(한영회계법인) |
| | | FNI-BAD 역량 제고 방안 | 한재준(인하대) 유명호(한국개발전략연구소) 박용수(산업은행) |
| | | 정책제언 | 연구진 공동 |
| | 리비아 (정규) | 리비아의 공공부문 개혁과 고용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중심의 직업교육 훈련 시스템 구축방안 | |
| | | 리비아의 기술 수요 예측 | 전홍민(한국개발전략연구소) |
| | | 중소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정책 | 장자순(국무총리실) |
| | | 직업교육훈련 체계 및 운영 | 엄준철(한국폴리텍) |
| 2008 | 도미니카 공화국 (정규) | 수출진흥 및 수출역량 배양 | |
| | | 임원혁(PM, 한국개발연구원) | |
| | | 도미니카 공화국의 전략적 입지 재설정 | 임원혁(한국개발연구원) 김종일(동국대) |
| | | 도미니카 공화국의 경제성장 패턴 | 임원혁(한국개발연구원) 김종일(동국대) |
| | | 산업·무역 구조 분석 | 임원혁(한국개발연구원) 김종일(동국대) |
| | | 교육 및 직업훈련 | 이병훈(중앙대) |
| | 도미니카 공화국의 수출금융 현황 및 중장기 활성화 대책: 도미니카 공화국 수출 펀드 조성 및 수출입은행 설립 제언 | 최성규(한국수출입은행) | |

〈부표 1〉의 계속

| | | | |
|-----------------------|------------------------------------|------------------------------------|------------------------------|
| 2008 | 오만 (정규) | 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 |
| | | 이재훈(PM, 시장경제연구원) | |
| | | 오만 경제의 현황과 미래 | 이태희(한국개발연구원) 이재훈(시장경제연구원) |
| | | 전략산업, 제도, 그리고 오만의 국가발전전략 | 최성호(경기대) 이재훈(시장경제연구원) |
| | | 기술이전 및 정착 | 박천홍(한국기계연구원) 이재훈(시장경제연구원) |
| | | 기술이전과 정착화 방안 | 박천홍(한국기계연구원) |
| | 우크 라이나 (정규) | 중장기 경제개발전략 | |
| | | 조동호(PM, 이화여대) | |
| | | 우크라이나의 중기 경제개발전략에 대한 검토와 제언 | 조동호(이화여대) |
| | |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방안 -한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 허석균(한국개발연구원) |
| | |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 | 함준호(연세대) |
| | | WTO 가입국가로서 우크라이나의 수출진흥정책 | 최용석(경희대) |
| | 아제르 바이잔 (후속) | WTO체제 수용과 이행을 위한 후속 이슈 | |
| | | 성극제(PM, 경희대) | |
| | | 서비스협상 이슈와 협상기법 | 성극제(경희대) |
| | | WTO 체제하의 수입 정책 및 관세체계의 발전 | 안덕근(서울대) |
| | | 아제르바이잔의 WTO 가입 관련 농업부문 협상 전략 | 임정빈(서울대) |
| | | 아제르바이잔의 수출구조 분석 및 관련 시사점 | 이시욱(한국개발연구원) |
| | 터키 (후속) | 국가기술 및 혁신능력 개발 모델 | |
| | | 서중해(PM, 한국개발연구원) | |
| 한국 혁신시스템의 변화와 발전전략 | | 서중해(한국개발연구원) | |
| 산학협력 강화방안 | | 양준모(연세대) | |
| 기술, 기업가 정신, 그리고 인큐베이터 | | 강병수(충남대) | |
| | 클러스터 접근을 통한 산업고도화 전략 | 임채성(건국대) | |
| 모잠비크 (정규) | 모잠비크의 농업생산성 혁신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 | |
| | 모잠비크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접근전략 | 김석동(공주대) | |
| | 농업기술의 혁신과 그 전파방안 | 김석동(공주대) | |
| | 농업생산성 혁신을 위한 농지이용의 효율화 방안 | 김정부(친환경농업연구원) | |
| | 농업생산 및 분배의 지원을 위한 농산물 유통의 개선 | 윤호섭(연세대) | |
| | 농업금융 접근성 강화 방안 | 김진우(한국개발전략연구소) | |

〈부표 1〉의 계속

| | | | |
|----------------|----------------------------------|---|---|
| 2008 | 알제리 (정규) | 알제리 전자결제시스템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카드 거래를 중심으로 | |
| | | 알제리 전자결제시스템의 현황 및 주요 이슈 | 이장혁(고려대) |
| | | 전자결제와 경제발전 | 이장혁(고려대) |
| | | 국내외 전자결제시스템 사례 분석 | 나준모(BC카드) 전홍민(한국개발전략연구소) 정대성(금융결제원) |
| | | 알제리 전자결제시스템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 연구진 공동 |
| | 베트남 (계속) | 수출금융 관련 운영지원 및 신용보증제도 자문 | |
| | | 수출신용기구 운영지원/수출보험제도 도입 자문 | 손승호(한국수출입은행) |
| 국내 개발금융 운영지원 | | 손승호(한국수출입은행) | |
| | 신용보증제도 구축자문 | 박찬기(신용보증기금) | |
| 2007 | 쿠웨이트 (정규) | 국가발전계획 수립 및 집행자문 | |
| | | 임영재(PM, 한국개발연구원) | |
| | | 전략적 대응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 및 SWOT 분석 | 임영재(한국개발연구원) |
| | | 이해관계자 관리 및 실행전략 구상 | 우천식(한국개발연구원) |
| | | 노동시장 개혁 | 박현주(KDI 국제정책대학원) |
| | | 교육 및 인적자원 제도의 개혁 | 이종훈(명지대) |
| | | 재정 및 예산제도 개혁 | 현진권(아주대) |
| | 쿠웨이트 5개년 국가발전계획을 위한 정책제언 | | |
| 가나 (정규) |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발전기반 구축 | | |
| | 전승훈(PM,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 |
| |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 접근 | 전승훈(한국개발전략연구소) | |
| | 가나의 법·규제 환경 개선 | 이재훈(시장경제연구원) | |
| | 중소기업의 자본과 기술 접근성 향상 | 송치승(중소기업연구원) 박재필(군산대) | |
| | 가나의 인력개발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 | 강기원(서원대) | |
| 아제르바이잔 (정규) | WTO 가입전략 | | |
| | 성극제(PM, 경희대) | | |
| | WTO 가입협상의 서비스분야 이슈 | 성극제(경희대) | |
| | WTO 체제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위 분석 | 안덕근(서울대) | |
| | WTO 가입과 무역구제제도의 운영 | 이재민(한양대) | |
| | 수출진흥을 통한 산업다각화 방안 | 이시욱(한국개발연구원) | |

〈부표 1〉의 계속

| | | | |
|-----------------------|------------------------------|---|---|
| 2007 | 우즈베키스탄 (계속) | 우즈베키스탄 경제특구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 |
| | | 한국의 경제특구 경험과 시사점 | 이상철(성공회대) |
| | | 우즈베키스탄 주요 특구 후보지 평가 | 이정협(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복영(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 | 경제특구 설립을 위한 제도적 마련 | 정형곤(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 | 특구정책과 국제규범과의 조화 | Sherzod Shadikhodjaev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 | 우즈베키스탄 경제환경과 경제성장 전망 | Akhmedov, Sadikov, Said Akhmedov, Talipova (CSER) |
| | 경제특구 설립을 위한 우즈베키스탄의 환경 | Akhmedov, Sadikov, Said Akhmedov, Talipova (CSER) | |
| 베트남 (계속) | 베트남 개발은행 운영 자문 및 신용보증기금 설립방안 | | |
| | 베트남 개발은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실무지식 전수 | 손승호(한국수출입은행) | |
| | 베트남 신용보증기금 설립방안 제시 | 박찬기(신용보증기금) | |
| 2006 | 캄보디아 (정규) | 캄보디아 재정적자 보전 및 생명보험 도입방안 | |
| | | | 유일호(PM, KDI 국제정책대학원) |
| | | 캄보디아 재정수지 예측 2007~2011 | 유일호(KDI 국제정책대학원) |
| | | 정부채 발행을 중심으로 한 정부 재정적자 보전 방안 | 박종태((주)메인스트림 대표) 김성호((주)메인스트림 부장) |
| | | 생명보험업 도입에 따른 정책 및 구조 | 김석영(보험개발원) |
| | 알제리 (정규) | 알제리 소비자 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신용카드 시장을 중심으로 | |
| | | | 박창균(PM, 중앙대) |
| | | 신용카드시장 활성화의 필요성 | 박창균(중앙대) 나준모(BC카드) |
| | | 알제리 신용카드 결제망 구축방안 | 나준모(BC카드) |
| | | 알제리 개인 신용정보 시스템 구축 방안 | 신인석(중앙대) |
| 알제리 신용카드업의 감독 및 규제 방안 | | 강동수(한국개발연구원) | |
| | 신용카드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 허석균(한국개발연구원) 이장혁(고려대) | |
| 베트남 (계속) | 베트남 수출신용기구 설립 및 운영지원 | | |
| | [연수사업] | 손승호(한국수출입은행) | |
| 인도네시아 (계속) | 인도네시아 채권시장 개발관리 자문 및 연수 | | |
| | [연수사업] | 기재부, KDI 국제정책대학원, 한국거래소 | |

〈부표 1〉의 계속

| | | | |
|-------------------------------------|----------------|---|--|
| 2005 | 터키 (정규) | 한국의 경험을 통해서 본 터키 경제의 발전전략 | |
| | | 좌승희(PM, 서울대) | |
| | | 민간부문 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 좌승희(서울대) 윤용(Chulalongkorn University) |
| | | 기술개발과 혁신시스템 | 이원영(서울대) |
| | | 산업화와 인적자원개발: 한국의 경험 | 김관영(한양대) |
| | |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행정개혁 과제 | 박진(KDI 국제정책대학원) |
| | | 재정운용시스템의 개혁 | 고영선(한국개발연구원) |
| | 인도네시아 (정규) | 인도네시아 주요 경제기관의 개혁 | |
| | | 양수길(PM, 국가경영전략연구원) | |
| | | 인도네시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지원 | 오창석(국제금융센터) |
| | | 인도네시아 채권시장 개발 방안 연구 | 박종태((주)메인스트림) |
| | | 인도네시아 국세, 관세, 예산공무원 교육제도 개선방안 | 유일호(KDI 국제정책대학원) |
| 한국의 수출 및 외국인투자 촉진 경험과 인도네시아를 위한 시사점 | | 김도훈(산업연구원) | |
| 인도네시아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 연구 | 이재민(한국수출입은행) | | |
| 2004 | 베트남 (정규) | 베트남의 개방경제체제하에서의 주요 정책과제 | |
| | | 송희연(PM, 인천대) | |
| | | 베트남 공기업 개혁과제 | 강신일(한성대) |
| | | 세계무역체제로의 통합: WTO 가입을 위한 베트남의 준비 현황 및 현안 과제안 | 이재민(한양대) |
| | | 베트남의 인적자원개발 전략 | 이종훈(명지대) |
| | | 베트남의 거시경제 안정화 | 백응기(상명대) |
| | | 베트남의 외자조달방안-FDI 중심으로 | 손승호(한국수출입은행) |
| | | 수출지원금융정책 및 베트남 수출입 은행 설립방안 | 안응호(한국수출입은행) |
| | 우즈베키스탄 (정규) | 우즈베키스탄의 제조업 육성 및 수출촉진방안 | |
| | | 이영기(PM, KDI 국제정책대학원) | |
| | | 우즈베키스탄의 개발모델과 한국의 개발경험 | 김도훈(산업연구원) |
| | | 우즈베키스탄의 산업개발과 수출진흥 정책의 모색 | 고일동(한국개발연구원) |
| | | 우즈베키스탄 산업화 과정에서의 거시금융정책: 한국 경험의 교훈 | 박원암(홍익대) |
| 한국의 사례로 분석한 우즈베키스탄의 재정 개혁 | | 유일호(KDI 국제정책대학원) | |
| 산업정책과 무역자유화정책의 조화전략 | 안덕근(서울대) | | |

주: 1) * 국별연수 및 정책 자문관 파견 포함, ** 비용분담국가, (*) 사전협의의 실시국가 등을 각각 의미함.
2) 사업대상국 아래의 ()안의 내용은 지원형태 및 연속성을 의미함.

비전 2030 수립을 위한 정책자문

- 알제리 KSP 사업의 진행과정
- 알제리 KSP 사업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 총론

제1장 5개년계획(2015~19) 수립 지원

제2장 알제리개발연구원(ADI) 설립 지원 방안연구

제3장 교육분야

제4장 2015~19 5개년 투자계획을 위한 알제리 산업정책 방향과 전략

알제리 KSP Vision 사업의 진행과정

이 지 원 (한국개발연구원)

1. 추진배경

알제리는 아프리카, 중동, 유럽을 연결하는 요충지로 북서아프리카의 경제대국이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두 번째로 큰 영토와 3,4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잠재력이 큰 국가이며,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철광석, 인광석 등이 풍부한 자원부국이다. 우리나라는 알제리와 1990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지속적으로 정치적·경제적 우호협력 기반을 강화해 왔으며, 특히 2006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의 알제리 국민방문을 계기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선언' 서명을 통해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 관계 경장을 공식화하였다. 정상회담을 통해 알제리의 부테플리카 (Abdelaziz Bouteflika)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국 경제개발 경험의 전수를 강하게 희망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알제리 경제개발 및 산업활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양국 정상은 상호 간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한국의 압축적 경제성장 경험을 알제리에 전수하는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완수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한국이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새로운 협력모델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12년 9월 4일에 실시되었던 알제리 정부조직 개편으로 새로 부임한 Bachir Messaitfa 장관은 최종보고회 및 정책실무자 연수를 통해 KSP 사업의 중요성을 이해하였으며 향후 알제리와의 KSP가 지속되기를 희망하였고, 알제리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획전략부는 총리실 직속 청으로 바뀌었으며 Messaitfa 장관은 총리실 이름으로 2013년 1월 10일까지 서면수요조사서 제출을 약속하고 실제로 제출을 마쳤다.

알제리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11년도 이래로 알제리가

KSP 중점지원사업 국가로 선정되어 현재 2013년도까지 3년간 사업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2006년 처음으로 KSP 사업을 시작한 이래 네 번째로 진행하게 된 사업이다. 2013년도 알제리와의 KSP 사업은 ‘알제리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 지원-비전 2030 수립’이라는 대주제 아래 ① 알제리 5개년계획(2015~19) 수립 지원, ② 알제리개발연구원(ADI) 설립 지원방안, ③ 교육분야, ④ 2015~19 5개년 투자계획을 위한 알제리 산업정책 방향과 전략 등 총 4개의 세부 주제로 확정하고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 진행과정

가. 수요조사서 접수 및 연구과제 선정

새로 부임한 Bachir Messaitfa 총리실 전략기획청 장관은 향후 알제리와의 KSP가 지속되기를 희망한 가운데, CNED는 2013년 12월까지 사업 완료를 강하게 요청하여 5개년 개발계획 및 ADI 설립 지원사업과 진행일정이 서로 상이한바, 부득이하게 두 팀으로 나뉘어 진행하게 되었다. 알제리 사절단 Vision 팀에서는 주제를 5개년 개발계획 수립 및 ADI 설립 지원으로 연구방향을 설정하였으며, 협력부처는 총리실 전략기획청으로 지정하였다.

〈표 1〉 2013 알제리 KSP 수요조사 및 주제 선정

| 사업명 | | (알제리) 2013년 경제협력국가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 | |
|-------------|------------------------|--|---|--|
| 총괄PM | | 전홍택(VISION 팀-SEPS) 박 현(PPP 팀-CNED) | 사업관리자 전홍택 | |
| I. 후보 주제 | 수요조사서 수신 여부 및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조사서 수신 여부 - Secretaire d'etat Prospective et des Statistiques(SEPS)와 Caisse National d'équipement pour le développemen(CNED) of Ministry of Finance에서 각각 공관을 통해 2013년 KSP를 위한 서면수요조사서를 제출함. □ 수요조사서 내용 | | |
| | | 2013 알제리 KSP(서면수요조사서) | | |
| | | No. | 요청 주제 | 제안 부처 |
| | 1 | Leadership and Promotion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the Field of Financing Projects, Economic and Social Infrastructure | Ministry of Finance, CNED (재무부 국가개발기금) | Mr. Telidji Mohamed Salim, Directeur des Methodes |
| | 2 | Creation of an Algeria Development Institute Transformation of Vision 2030 Project into 5-Year Economic Plan | Secretary of State to the Prime Minister in charge of Prospective and Statistics(총리실 전략기획국) | Mr. Mustapha Hammouda Principal Private Secretary |

〈표 1〉의 계속

| | 추가 수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sion 팀 ○SEPS는 2012 알제리 KSP 국가비전 2030의 내용을 실질적인 단기 Action plan으로 재해석 후 제시 요청 -1년이라는 단기간의 사업기간 동안 2012 알제리 KSP 국가비전 2030에 담긴 모든 분야별 단기 Action plan 제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2012 KSP를 진행하며 국가 싱크탱크의 필요성을 파악하였고, Algeria Development Institute(ADI) 설립을 위한 방안 모색 요청 | | | | | | | |
|-----------------|---|--|-------|----------|----------------------|------------------------------|------------------------------------|------------------------------------|-------------------|
| | 우리측 제안 주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측에서 제안한 주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자문 분야</th> <th>제안 주제</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Vision 팀</td> <td>I. 5개년계획의 의의와 각국의 경험</td> </tr> <tr> <td>II. 알제리 5개년계획(2015~19) 수립 지원</td> </tr> <tr> <td>III. 5개년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ADI 설립방안</td> </tr> <tr> <td>IV. 5개년계획: 직업교육훈련</td> </tr> <tr> <td>V. 5개년계획: 산업분야</td> </tr> </tbody> </table> | 자문 분야 | 제안 주제 | Vision 팀 | I. 5개년계획의 의의와 각국의 경험 | II. 알제리 5개년계획(2015~19) 수립 지원 | III. 5개년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ADI 설립방안 | IV. 5개년계획: 직업교육훈련 |
| 자문 분야 | 제안 주제 | | | | | | | | |
| Vision 팀 | I. 5개년계획의 의의와 각국의 경험 | | | | | | | | |
| | II. 알제리 5개년계획(2015~19) 수립 지원 | | | | | | | | |
| | III. 5개년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ADI 설립방안 | | | | | | | | |
| | IV. 5개년계획: 직업교육훈련 | | | | | | | | |
| | V. 5개년계획: 산업분야 | | | | | | | | |
| II. 최종 주제 선정 과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4월 22일(월)~24일(수) 동안 진행된 세부실태조사와 2013년 6월 통해 우리 측과 대상국의 제안 주제 조정 과정(구체화, 수정, 제외, 통합)을 주제별로 상세히 기술 □ 사업 최종 주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자문 분야</th> <th>제안 주제</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Vision 팀</td> <td>I. 5개년계획의 의의와 각국의 경험</td> </tr> <tr> <td>II. 알제리 5개년계획(2015~19) 수립 지원</td> </tr> <tr> <td>III. 5개년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ADI 설립방안</td> </tr> <tr> <td>IV. 5개년계획: 직업교육훈련</td> </tr> <tr> <td>V. 5개년계획: 산업분야</td> </tr> </tbody> </table> | 자문 분야 | 제안 주제 | Vision 팀 | I. 5개년계획의 의의와 각국의 경험 | II. 알제리 5개년계획(2015~19) 수립 지원 | III. 5개년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ADI 설립방안 | IV. 5개년계획: 직업교육훈련 | V. 5개년계획: 산업분야 |
| 자문 분야 | 제안 주제 | | | | | | | | |
| Vision 팀 | I. 5개년계획의 의의와 각국의 경험 | | | | | | | | |
| | II. 알제리 5개년계획(2015~19) 수립 지원 | | | | | | | | |
| | III. 5개년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ADI 설립방안 | | | | | | | | |
| | IV. 5개년계획: 직업교육훈련 | | | | | | | | |
| | V. 5개년계획: 산업분야 | | | | | | | | |

나. 연구진 선정

2013년도 알제리 KSP는 2012년부터 김세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총 연구 책임을 맡아 한국·알제리 정부의 긴밀한 연구협력 및 최고위급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알제리의 수요를 바탕으로 주제를 확정된 후, 한국 내 관련 부처의 협조를 얻어 주제에 관한 정통한 지식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정책 추진 과정에 참여하였던 한국의 학자, 민간 실무경험자로 전문가 팀을 〈표 2〉와 같이 구성하였다.

〈표 2〉 알제리 KSP 국내연구진 및 자문과제

| 자문과제 | 성명 | 소속·직책 |
|--|-----|-----------------|
| 총괄PM | 전홍택 |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
| ① 알제리 5개년계획(2015~19) 수립 지원 | 오완근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 박명호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② 알제리개발연구원(ADI) 설립 지원방안 | 박명호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 오완근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③ 교육분야 | 채재은 | 가천대학교 교수 |
| ④ 2015~19 5개년 투자계획을 위한 알제리 산업정책 방향과 전략 | 김종일 | 동국대학교 교수 |

다. 수요조사 및 세부실태조사(4월 21일~25일)

박명호 교수를 단장으로 하여 고위정책결정자 및 실무자 면담을 통해 서면수요조사서에 명시된 주제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정책적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알제리 정부의 구체적 수요를 협의한 결과, ① 2030 비전 시나리오의 5개년 개발계획에 반영하는 과제, ② 비전과 개발계획 수립을 지원할 정책연구소의 설립으로 협의하였으며, 이에 따른 자료수집을 통해 연구방향을 결정하였다.

라. 추가세부실태조사(6월 22일~27일)

연구주제를 확정하고 연구진 팀을 구성한 후, 알제리 정부의 구체적 수요를 파악하고 정책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4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 김세원 수석고문을 단장으로 한 11인의 한국 사절단은 알제리 전략기획국, 중앙은행, 고등교육부, 직업교육훈련부, 재무부 등을 방문하여 고위정책결정자·세부실태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진들은 주제 관련 부처 정책담당자를 면담하여 향후 연구방향을 결정하였다.

마. 중간보고서 및 정책실무자연수(9월 1일~7일)

9월 3일에는 전략기획국 나이마(Naima Belhaneche) 자문관을 대표로한 12명의 알제리 사절단을 한국에 초청하여 9월 3일, 6일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였다. 알제리 연구진들은 중간연구 결과를 성공적으로 발표하였으며, 알제리 사절단은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9월 4일~6일 동안에는 정책실무자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나이마 자문관을 대표로 한 6명의 알제리 사절단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성장체험관, 화폐금융박물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하여 알제리의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 지원-비전 2030 수립을 위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할 수가 있었다.

바. 정책역량강화연수(9월 4일~6일)

9월 4일~6일 동안에 Goubi Mohamed Lahbib 알제리은행 국장을 대표로 한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시경제모델 운용 및 통계능력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연수’를 성공리에 마쳤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김용건 연구위원, 백웅기 상명대학교 교수, 김경수 성균관대학교 교수, 박양수 한국은행 부장, 모영규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신석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실제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등의 역량강화연수를 통해 알제리 사절단은 한국의 실제 사례를 공유할 수 있었다.

사. 고위정책대화 및 최종보고회(2월 8일~13일)

2월 8일~13일 동안에 Farid Tiaha 재무부 차관을 대표로 한 10명의 고위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알제리 현지에서 최종보고서의 초안을 전달하는 고위정책대화 및 최종보고회가 실시되었다. 고위정책대화를 통해 도출할 수 있었던 내용에 대해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추후 사업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최종보고회에서는 2013 알제리 KSP 협력기관인 재무부가 알제리의 비전 2030을 위한 한국의 경험 공유를 목적으로 최종 연구 결과를 논의하고 공유하였다.

알제리 KSP Vision 사업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전 홍택 (한국개발연구원)

1. 시사점

알제리가 성장의 혜택이 다수 국민에게 공유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제리 경제가 당면한 과제를 살펴보고 그로부터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가. 알제리 5개년계획(2015~19) 수립 지원

알제리 국민소득 수준은 2012년을 기준으로 1인당 GDP가 7,400달러로, 한국 및 OECD 평균의 약 1/4 수준이다. 알제리는 2000년 이후 성공적으로 거시경제를 안정화시킨 국가로 평가받는다. 1990년대에는 30%에 가까운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였으나, 1990년대 후반 이후 거시안정화정책에 힘입어 5% 이내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고유가에 의한 정부수입 증대를 바탕으로 거시안정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2012년에는 8.9%로 다소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였으나 2013년 10월 다시 4.5%로 대폭 하락하였다.

실업률을 보면 알제리는 2000년 이후 경제활동인구의 완만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 등으로 인해 2000년 30%에 육박하였던 실업률이 2011년에는 10%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으며, 특히 2013년에는 9.8%를 기록하여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 자릿수의 낮은 실업률을 달성하였다.

2000년대 알제리에서 창출된 대부분 일자리는 정부부문에서 창출된 일자리였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만으로는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층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공급할 수 없으므로 청년실업은 알제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 15~24세 청년실업률은 2000년에는 47.8%로 경제활동참여인구 2명 중 1명이 실업인 상황이었으나, 지난 10여 년 동안 크게 개선되어 22.4%까지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알제리는 자원부국이며 자원부국의 공통된 특징인 자원의존형 경제라는 점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한국 그리고 자원부국 중 산업다변화에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는 칠레, 말레이시아, 노르웨이와 비교하면, 알제리는 비교 국가에 비해 동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2009년 현재 동 비율이 5.6%로 가장 낮은 뿐만 아니라 1985년 이래 동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당면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어느 나라이건 제조업의 발달 없이 자연자원부문만으로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한 경우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원의존도를 측정하는 또 하나의 지표로서 전체 수출 대비 자원수출 비중을 살펴볼 수 있다. 알제리는 1974년 이래 동 비중이 항상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2012년에는 97.4%에 이르고 있다. 동 수치는 자원부국인 칠레, 말레이시아, 노르웨이는 물론 여타 OPEC 국가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치이다.

투자율은 2000년대 들어 20% 수준을 상회하였으며, 2009년에는 38.3%에 달하였다. 그렇지만 높은 수준의 투자율에도 불구하고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음(-)을 보여 이에 상응하는 성장을 이루지 못하였다.

알제리의 연구개발투자 비중은 GDP 대비 0.1%로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 수준인 2.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1% 내외로 나타난 주변 마그레브 국가들뿐 아니라 0.3% 수준인 OPEC 국가들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리고 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2014년 'Ease of doing business' 순위는 153위로 주변 마그레브 국가 중에서도 리비아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하여 알제리의 사업환경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알제리 경제의 당면과제는 제조업, 특히 민간기업의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의 다변화와 투자의 효율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효과적 정책 수립과 정책 집행역량 강화라고 할 수 있다.

나. 알제리개발연구원(ADI) 설립방안

전 세계적으로 싱크탱크는 일종의 지식산업으로 변창하고 있다. 비록 전 세계를 모두 포괄하는 싱크탱크 관련 정보는 아직 부족하지만 McGann(2010)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싱크탱크는 2010년 현재 6,300개가량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그중 가장 많은 숫자는 북미(30%), 유럽(28%) 및 아시아(19%)에 집중되어 있다.

싱크탱크가 활성화되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싱크탱크가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북미, 유럽 및 아시아는 이미 지식산업이 자생력을 지닌 지역이므로 싱크탱크

산업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반면, 아프리카 및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는 아직 싱크탱크의 생태계가 잘 만들어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아프리카 및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지식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

싱크탱크가 유지되려면 사회적으로 아이디어를 존중하는 풍토가 갖춰져야 한다. 이와 함께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가 집단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싱크탱크가 발전하지 못한 국가에서는 아이디어에 대한 수요 및 공급 환경이 모두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이디어, 특히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아이디어는 일종의 공공재의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만일 이런 재화가 사회적 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는 일종의 시장실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공정책 아이디어 시장에서는 정부의 개입을 통한 아이디어 시장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정부가 직접 공공연구기관 설립을 통해 정책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양성하는 것이다. 또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을 대학이나 민간 싱크탱크가 육성할 수 있는 인센티브체계를 구축하는 작업 역시 중요하다. 알제리의 경우 싱크탱크가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선 정부가 직접 공공연구기관 설립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다. 5개년계획(2015~19) 수립을 위한 교육정책 방향과 전략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알제리가 당면한 첫 번째 문제는 직업교육훈련이 학교교육과 분리되어 학교 밖의 훈련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 사회적 위상이 낮다는 점이다.

두 번째 문제는 청년실업률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2011년 현재 전체 실업률이 10% 수준으로 10년 전에 비해 많이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은 22.4% 수준으로 ‘전체 노동력의 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세 번째 문제는 공업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조업 관련 직업교육훈련 비율(8.2%)은 낮은 반면, 행정 및 경영 기술(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technic)이 19.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호텔관광(15.0%), 공공업무 영역(10.6%)이라는 점이다.

네 번째 문제는 직업교육훈련의 양적 확대에 부응하는 질적 발전이 수반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이에 더하여 각 단계별 졸업시험은 있지만, 직종별 국가 수준의 자격검정제도가 없어서 직업교육훈련의 질에 대한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직업교육훈련의 정책방향은 직업교육훈련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직종별 자격검정제도를 도입하여 직업교육훈련의 질을 제고하는 동시에 경제발전계획과 직업교육훈련정책을 연계하여 경제발전이 따라 적절한 직업교육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고등교육과 관련하여 알제리가 당면하고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첫째, 높은 청년층 인구 비율로 인하여 계속 급증하고 있는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다. 대학생 수가 1990년대 말부터 급증하여 2009/10학년도에는 100만명 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높은 청년층 인구 비율을 고려할 때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고등교육의 사회적 적합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이슈이다. 2000년대 이후 산업발전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과학·이공, 자연, 의학 계열 학생 수는 줄어든 반면에, 인문·사회계열의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999/2000학년도와 2010/11학년도 사이에 인문·사회계열 학생 비율은 52.8%에서 65.0%로 증가한 반면에, 과학·이공계열 학생은 28.8%에서 21.4%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실업률에도 영향을 미쳐서 인문·사회계열 출신의 실업률이 과학·이공계열 출신의 실업률 보다 높은 편이다.

셋째, 산학협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알제리 정부에서는 공립대학들이 산업인력 양성과 R&D 활동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고등교육 개혁의 핵심 과제로 설정해 왔으나, 여전히 그 성과는 미미한 편이다.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2~13」에 의하면, 알제리 대학들과 산업체들이 R&D 면에서 협력하는 정도가 144개국 중 최하위일 정도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주요 이슈 중의 하나이다.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2~13」에 의하면, 144개국 중 알제리의 국가경쟁력은 110위이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은 108위이다. 특히 고등교육 경쟁력 지표 중 3개 지표(총등록률, 과학자 및 공학도의 활용 가능성, 인구 100만명당 PCT 특허 수)를 제외하고, 기타 지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고등교육정책의 방향은 고등교육의 공급을 확대해 나가되,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학문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유인수단을 강구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라. 5개년계획(2014~19) 수립을 위한 산업정책 방향과 전략

전반적으로 알제리의 5개년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교통이나 수자원 등 기초 인프라 건설과 공공 일자리 창출, 지역개발, 주거시설 개선 등 사회개발 등에 우선적으로 재원이 배분되고 있다. 2010~14년 5개년 투자계획에서 보면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6.9%(전체 2,860억달러 투자액 중 198억달러)인데, 이 중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한 투자 132억달러를 제외하면 중소기업 육성과 이에 대한 금융지원이 60억달러 정도이며, 그 외 발전소 건설, 석유화학산업 육성, 공기업 현대화에 264억달러를 할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전체 투자액에서 산업발전을 위한 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으며, 이 중에서도 많은 부분이 공기업부문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

이에 더하여 투자계획 대비 집행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유가의 상승으로 재정수입이 증가하고 투자재원은 확보되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사업 수립과

집행 역량이 미흡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투자계획이 세부의 다양한 예산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각 계획 간의 유기성이 없이 투자계획이 열거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렇게 산업부문에 대한 투자가 매우 낮은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첫째는 정책재원을 투자할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금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유망한 기업이나 산업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공기업은 비효율성의 문제가 있으며 유망한 민간기업에 대한 신뢰가 없다. 둘째는 정책재원을 배분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정책조직이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거나 조직 간 유기적인 협조가 미흡할 수 있다. 알제리의 산업정책은 산업투자부가 주관하고 있지만, 주요 산업에 대한 지원은 산업부나 국가투자위원회(CNI) 등 정책부처의 종합적인 산업정책과정을 통한 것보다는 각 산업별 주요 공기업에 대한 개별적인 재무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알제리의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민간기업을 육성하고 공기업을 개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정책조직의 개편이 요구되며, 이와 함께 이러한 정책조직이 체계적이고 일관적으로 산업발전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정치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2. 기대효과

2013년 KSP 정책자문사업은 2012년 사업에서 제시한 비전 2030의 연장선상에서 알제리 정부가 경제발전 5개년계획(2015~19)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경제발전을 위해 많은 나라들이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여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따라서 한국이 5개년계획을 수립·집행한 추진체계, 정치적 리더십과 실천의지, 그리고 정책의 성과를 추적하고 평가하는 제도 구축 등의 경험은 알제리 정부의 5개년계획 수립, 집행 및 평가의 토대 설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알제리 정부는 경제·사회 정책 수립을 지원할 정책연구기관 설립을 원하고 있다. KDI가 출범할 당시 한국에서는 공공정책연구기관이 자생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으므로 한국정부가 직접 KDI를 설립하였으며, 설립 초기 20여 년간 KDI는 5개년계획을 위한 거시계량모형과 부문계획모형 구축을 통해 정부 정책수립을 지원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연구진이 정부기관에 파견되어 해당 부처의 정책수립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KDI의 경험은 알제리 정부가 알제리개발연구원을 설립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셋째, 5개년계획 직업교육훈련 및 고등교육부문 정책의 목표는 결국 알제리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양성체제의 구축이다. 한국의 경우 제2차 경제개발계획부터 산업발전계획과 인력양성계획을 밀접히 연계하여 경제성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부문에 대한 선택과 집중 투자, 그리고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에 기반한 재정지원을 전략으로 선택한 한국의 경험은 알제리가 산업경쟁력 강화와 연계되는 인력양성체제를 구축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넷째, 5개년계획 산업정책부문의 목표는 산업다변화이며 이를 위해 산업부문의 민간기업 육성과 국영기업 개혁 그리고 기업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의 경우 산업정책에서 국영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의 기업가정신과 시장유인 활용, 산업연관효과를 감안한 산업단지 조성,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추진체계 및 정책 집행역량 등의 경험은 알제리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과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총론

전 홍택 (한국개발연구원)

우리나라는 알제리와 1990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지속적으로 정치적·경제적 우호협력 기반을 강화해 왔으며, 특히 2006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의 알제리 국민방문을 계기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선언' 서명을 통해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 관계가 격상되었다. 정상회담을 통해 알제리의 부테플리카(Abdelaziz Bouteflika)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국 경제개발 경험의 전수를 강하게 희망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알제리 경제개발 및 산업활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양국 정상은 상호 간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에 합의한 바 있다.

알제리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11년도 이래로 알제리가 KSP 중점지원사업 국가로 선정되어 현재 2013년도까지 3년간 사업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2006년 처음으로 KSP 사업을 시작한 이래 네 번째로 진행하게 된 사업이다.

알제리 정부(전략기획부)는 2012년 6월 독립 50주년을 기념하여 국가비전 2030을 수립하기로 하고 이를 마련함에 있어 한국의 개발경험에서 교훈을 얻기를 희망하였으며, 한국정부는 KSP 사업을 통해 이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도 알제리와의 KSP 사업은 '알제리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 지원-비전 2030 수립'이라는 대주제 아래 ① 비전 2030, ②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③ 교육분야 개혁, ④ 보건분야 개혁, ⑤ 지배구조 개선, ⑥ 국토개발 등 총 6개의 세부 주제로 확정하고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3년 알제리와의 KSP 사업 주제는 2012년 주제의 연장선 위에서 ① 5개년계획(2015~19) 수립 지원, ② 5개년계획(2015~19) 수립을 위한 ADI 설립방안, ③ 5개년계획(2015~19) 수립을 위한 교육정책 방향과 전략, ④ 5개년계획(2015~19) 수립을 위한 산업정책 방향과 전략 등 총 네 가지로 결정되었다.

1. 알제리 5개년계획(2015~19) 수립 지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뒤쳐진 경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제개발계획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개발계획의 목표를 성취하지 못한 반면 한국은 압축성장(compressed growth)에 성공하였는데,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성공적인 경제개발계획 추진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경험에 기초하여 알제리 5개년 개발계획(2015~19)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다.

먼저 알제리의 기존 5개년계획을 살펴본 결과, (i) 기존 알제리 5개년계획은 종합적인 장기 개발계획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투자계획이라 할 수 있으며, (ii) 유가상승으로 투자재원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부족 등으로 투자계획의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iii) 사전적인 비용-편익 분석에 기초하여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수의 사업에서 자원낭비가 발생하였으며, 사후평가도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에 대한 효과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iv) 알제리의 기존 5개년 투자계획은 공공사업, 지역개발, 주거시설 개선 등에 재원이 우선적으로 배분되어 사회개발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v) 전체 투자액에서 산업발전에 투입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산업발전의 투자도 주로 공기업에 배분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공공성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경제 전체의 효율성 제고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알제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알제리 경제 현황을 살펴보면 거시안정성은 소득수준, 인구, 인플레이션, 투자율, 정부부채, 대외부채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성과를 보인 반면에 실업, 특히 청년실업은 아직 높은 수준이다. 알제리 총인구 및 경제활동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경제성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이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GDP 대비 제조업 비중, 전체 수출 대비 자원수출 비중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알제리는 자원부문에 대한 의존성이 지나치게 높아 이의 시정이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알제리의 연구개발 및 사업 환경도 열악한 상황이어서 개선이 요구된다.

알제리 5개년계획(2015~19)이 일종의 투자계획이 아닌 경제·사회 개발계획의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점에서는 한국의 1차 및 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관계되며, 알제리의 소득수준 측면에서는 한국의 5차 및 6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관련된다. 한국의 개발계획 경험이 알제리에 주는 시사점을 기관, 정책, 제도, 인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관 측면에서 선도부처인 경제기획원의 설립을 들 수 있다. 경제기획원은 독립적으로 국가발전계획을 작성하였고 예산편성권과 성과평가 기능을 보유하고 이를 연계하여 계획을 집행하였다. 또한 정책연구기관인 KDI를 설립하여 활용하였으며 KIST를 설립하여 연구개발 및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정책 측면에서는 성장지향적 경제개발을 추진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국은 자원빈국이며 소규모 개방경제여서 성장을 위해 수출지향적 공업화를 선택하여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데 성공하였다. 또한 1980년대에 들어 정부는 대외개방을 추진하였고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셋째, 제도 측면에서는 사전평가제도에 기초하여 정부지출이 이루어졌으며, 사후평가제도도 시행되었다. 또한 공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공기업평가제를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넷째, 인적 측면에서는 정치적 리더십과 핵심 경제관료의 우수성을 들 수 있다. 먼저 최고통치자의 경제성장에 대한 명확한 의지가 경제개발계획 초창기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예를 들어 1965년 1월부터 1979년 말까지 총 146회가 개최된 월간 경제동향보고회의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참석하였다. 다음으로 엘리트 경제관료는 치열한 공무원시험을 통하여 선발된 상위권 대학 출신의 우수한 인재들이었다. 이들은 선진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KDI 연구진들과 함께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경제기획원이 주도적으로 개발계획을 만들었지만 이후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시켜 나아갔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알제리의 5개년계획이 성공하려면 정책 수립, 집행 및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 수립은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하는 좋은 정책 만들기가 관건이다. 정책의 효율적 집행은 정치적 리더십과 실천의지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2. 알제리개발연구원(ADI) 설립방안

2012년 알제리 KSP 정책자문보고서(제5장 알제리 중장기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와 제도 강화방안)에서 알제리 정부와 시민들을 효과적으로 연결해 주는 가교의 역할을 할 전문연구기관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KDI가, 정부가 장기 개발계획 입안, 정책 조정, 개혁의 실행과정의 평가와 심사 그리고 국민 계도 캠페인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원 역할을 수행한 경험을 소개하였다. 알제리 정부는 한국 연구진의 이와 같은 정책제안을 수용하여 한국의 KDI를 모델로 하는 정책연구기관(가칭 ADI) 설립방안을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싱크탱크는 경제, 사회, 군사, 외교 정책 등 관련 분야를 연구하고 특정 입장을 옹호하는 정책연구기관을 지칭한다. 싱크탱크는 각국의 특성에 따라 달리 운영된다. 미국에서는 민간 주도로 운영되는 반면,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에서는 정부 지원에 주로 의존한다.

한편, 각국의 싱크탱크는 한 나라의 정책 수립·형성 방식에 따라 그 역할과 기능이 상이하다. 우선 미국은 주요 정책이 의회를 중심으로 수립된다. 그러므로 미국의 싱크탱크는 행정부보다는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이들이 권력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본은 관료집단이 정책 수립과 집행을 모두 주도하므로 싱크탱크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독일의 싱크탱크는 공공재원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독립성을 지닌다. 특히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정책지식을 생산하는 연구협회는 많은 연구기관들로 구성된다. 한편, 중앙집권적 시스템을 운영하는 프랑스에는 전통적인 의미의 싱크탱크는 존재하지 않는다. 프랑스는 정부조직 안에 수많은 공공연구소를 운영하므로 독립적인 조직인 싱크탱크에 대한 별도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의 싱크탱크는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그 역할과 미션이 각기 다르다. 그런데 이들 주요 국가의 경험은 알제리가 원하는 정책연구기관에는 잘 부합되지 않는다. 미국의 민간 중심이면서 정치 주창적인 싱크탱크는 알제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다. 일본식 관료의존형 싱크탱크는 알제리에는 적용 가능할 수 있지만 공무원 중심의 싱크탱크 운영은 현재 알제리 정부가 지향하는 모형은 아니다. 그리고 독일형 독립성을 지닌 싱크탱크나 프랑스식으로 정부조직 내에 존재하는 싱크탱크 역시 알제리의 문제의식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고도성장과정에서 5개년계획을 포함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미션을 갖는 한국 싱크탱크의 경험이 알제리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한국에는 많은 정부출연연구기관(government-sponsored research institute)이 존재한다. 이들 연구기관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국가 예산에서 직접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런 독특한 운영은 과거 한국의 개발경험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정부 주도형 성장모형을 채택했던 한국은 정책 수립, 집행 및 평가를 모두 정부가 직접 담당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기능 역시 정부로 집중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민간부문의 역할이 증대되었던 1980년대 이후에는 민간부문의 싱크탱크의 역할이 같이 커졌지만 경제개발 초기에는 정부, 학계를 망라하여 정책 수립을 지원할 전문인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정책 수립 아이디어를 지원받았다.

한국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은 1966년 KIST, 1971년 KDI가 설립된 이후 과학기술 및 경제 분야에서 정책 수립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받는다. 이들 연구기관은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하였고, 정부 공무원들이 지니지 못했던 전문지식을 활용해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공무원 집단과 연구기관 간의 협력, 보완 및 경쟁의 기본 틀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지만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공무원 집단의 전문지식수준 향상, 대학 및 민간 연구기관의 신장, 그리고 경제활동에서 정부의 역할 변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위상은 변하고 있다.

1970년대 KDI 설립 이후 정부는 개별 부처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개별 부처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기관을 자신의 산하에 제각기 설립하였다. 그 결과 경제·사회 정부부처의 산하에 23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만들어졌다. 출연연구기관 중 KDI는 전체 연구기관을 대표하는 종합연구원 성격을 지니지만, 나머지 연구원은 모두 특정 분야의 전문 연구원 성격을 지닌다.

한편,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개편작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이루어졌다. 당시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 요구가 거세지면서 연구기관의 관리·운영 체제에도 일대 전환이 가해졌다. 1999년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입법을 통해 새로운 형식의 연구회 제도를 도입하였다. 당시 정부 각 부처 산하에서 활동하던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을 유사한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하나의 연구회 구조 안에서 묶었다. 이런 연구회 제도의 도입 목적은 1)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보장하고, 2) 정부부처와 출연연구기관의 연결고리를 정리하여 연구기관이 부처의 간섭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3) 학제 간 연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유기적 협력연구를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다시 말하면 연구회 시스템을 통해 연구자원의 유기적 활용을 통한 시너지를 유도하고, 정부부처에 대해서는 예측적 개념을 없애며, 시장원리가 지배하는 연구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경험이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기관은 연구인력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 1970년대 한국에는 경제분야에 우수한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DI는 우수 인력을 초빙하기 위해 당시로서는 최고 대우를 해주었다. 그 결과 KDI는 설립 초부터 가장 우수한 경제학자로 구성된 연구기관으로 출범하였다. 물론 과연 관료 중심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던 한국정부 내에서 싱크탱크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는 다른 문제이다. KDI의 연구인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정부정책 수립을 지원하였다. 한편으로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책자문을 수행하였다. 그중에서도 5개년계획 수립과 관련된 거시계량모형과 부문계획모형 수립을 통해 정부정책을 지원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연구진이 정부기관에 파견되어 해당 부처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였다.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되어 특정 정책 수립을 지원하거나 경제부처 장관의 자문관으로 파견되었다. 이런 KDI의 경험은 알제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3. 5개년계획(2015~19) 수립을 위한 교육정책 방향과 전략

본 연구는 2012년에 이루어진 「알제리의 국가비전 2030 수립 연구(한국개발연구원, 2012)」를 토대로 알제리의 직업교육훈련과 고등교육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되, 2010~14년 알제리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후속 계획인 「Algeria Five Year Plan 2015~19」의 교육부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과 고등교육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알제리가 당면한 첫 번째 이슈는 직업교육훈련이 학교교육과 분리되어 학교 밖의 훈련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 직업훈련기관의 사회적 위상이 낮다는 점이다. 현재는 중도탈락생이나 중등학교 졸업시험을 합격하지 못한 학생들이 직업훈련기관에 진학함에 따라 학생들의 훈련 동기나 능력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이 양성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직업훈련기관의 사회적 위상이 떨어지고,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위한 훈련기관이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두 번째 이슈는 청소년 인구의 증가에 대응하여 직업교육훈련 기회를 빠른 속도로 확대하는 것이다. 2011년 현재 전체 실업률이 10% 수준으로 10년 전에 비해 많이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은 22.4% 수준으로 ‘전체 노동력의 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청년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공기업 중심의 경직적인 노동시장구조뿐만 아니라 인력 수요와 공급간에 상당한 수준의 불일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슈는 알제리가 앞으로 공업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조업 관련 직업교육훈련 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2012년 현재 직업교육훈련 유형 중 행정 및 경영 기술(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technic)이 19.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호텔관광(15.0%), 공공업무 영역(10.6%)이다. 반면에, 제조업 인력을 양성하는 기계 엔지니어링과 스틸 분야(mechanical engineering and steel)는 1%, 전기·전자 분야(electrical-electronics)는 7.2%에 불과하다.

네 번째 이슈는 직업교육훈련의 양적 확대에 부응하는 질적 발전이 수반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직업교육훈련 수준이 5단계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단계와 3단계에 전체 훈련생의 55%가 집중되어 있고, 가장 높은 단계인 5단계의 비율은 27.17%에 불과하다. 이에 더하여 각 단계별 졸업시험은 있지만, 직종별 국가 수준의 자격검정제도가 없어서 직업교육훈련의 질에 대한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고등교육과 관련하여 알제리가 당면하고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첫째 높은 청년층 인구 비율로 인하여 계속 급증하고 있는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다. 대학생 수가 1990년대 말부터 급증하여 2009/10학년도에는 100만명대에 이르고 있다. 대학원생은 1962/63학년도와 2010/11학년도 사이에 156명에서 60,617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높은 청년층 인구 비율을 고려할 때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고등교육의 사회적 적합성(social appropriateness)을 높이는 것이 주요 이슈이다. 2000년대 이후 산업발전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과학·이공, 자연, 의학 계열 학생 수는 줄어든 반면에, 인문·사회계열의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999/2000학년도와 2010/11학년도 사이에 인문·사회계열 학생 비율은 52.8%에서 65.0%로 증가한 반면에, 과학·이공계열 학생은 28.8%에서 21.4%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실업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문·사회계열 출신의 실업률이 과학·이공계열 출신의 실업률보다 높은 편이다. 이러한 결과는 알제리의 산업발전 및 고용 증가, 그리고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학문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산학협력을 활성화하는 것도 주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알제리 정부에서는 공립대학들이 산업인력 양성과 R&D 활동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고등교육 개혁의 핵심 과제로 설정해 왔으나, 여전히 그 성과는 미미한 편이다.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2~2013」에 의하면, 알제리 대학들과 산업체들이 R&D 면에서 협력하는 정도가 144개국 중 144위일 정도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주요 이슈 중의 하나이다.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2~2013」에 의하면, 144개국 중 알제리의 국가경쟁력은 110위이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은 108위이다. 특히 고등교육 경쟁력 지표 중 3개 지표(총등록률, 과학자 및 공학도의 활용 가능성, 인구 100만명당 PCT 특허 수)를 제외하고, 기타 지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교육 및 연구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한편, 한국정부는 경제발전과 긴밀히 연계하여 산업인력양성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경제발전계획이 주기적으로 수립되던 1970~80년대에는 산업발전계획과 인력양성계획이 밀접히 연계되어 추진되었다. 1990년대 이후 정부 주도에서 시민사회 주도로 사회발전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경제계획과 인력양성계획 간의 연계는 다소 느슨해졌지만, 여전히 경제발전에 필요한 산업인력 공급은 인력양성정책의 핵심 전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알제리 정부가 「2015~19 경제발전계획」에 맞추어 직업교육훈련과 고등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한국의 주요 정책은 1) 산업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2) 직업교육의 질 제고 및 전략적 확대, 3) 고등교육기관과 산업체 간의 협력 강화의 세 가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 5개년계획(2014~19) 수립을 위한 산업정책 방향과 전략

2012년 알제리 KSP 자문보고서에 제시된 알제리 비전 2030은 알제리가 고성장 시나리오를 실현시켜 2030년 1인당 소득 15,000달러(2010년 가격 기준) 수준의 고소득국가가 되는 것이며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비석유부문, 특히 제조업의 생산이 연평균 11.3~12.3% 정도 성장해야 할 것이다. 알제리 정부도 비석유부문 성장을 통한 산업구조 다각화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제조업의 고속성장을 위해서는 동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알제리의 「2010~14 5개년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교통이나 수자원 등 기초 인프라 건설과 공공 일자리 창출, 지역개발, 주거시설 개선 등 사회개발 등에 우선적으로 재원이 배분되고 있다. 반면,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6.9%(전체 2,860억달러 투자액 중 198억달러)에 불과하다. 알제리의 5개년 투자계획은 경제개발에 모든 재원을 집중한 한국에 비하여 사회개발적 성격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연평균 성장률 11.3~12.3%를 달성하기 위한 알제리 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산업분야 전략과 정책방향 수립에 있어서 한국의 산업정책 수립과 집행의 경험 중 알제리 상황에서 참고할 만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중화학공업육성정책은 전형적인 국가 주도형 선별적 산업지원정책으로 한국의 산업고도화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지만, 정부에 의한 과도한 자원배분에 대한 개입은 금융시장의 왜곡과 함께 1970년대 말 거시경제적 불안정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지적된다. 하지만 한국은 브라질이나 알제리와 같이 국가 주도형 산업고도화정책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와는 달리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렇다면 한국의 국가 주도형 산업정책이 다른 나라의 국가 주도형 산업정책과 차별되는 점은 무엇인가?

첫째, 브라질이나 알제리가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하여 국영기업에 대한 투자에 집중한 반면, 한국은 국가가 선정한 산업에 참여할 민간기업을 선정하여 정책자원의 배분은 정부가 결정하였지만 생산과 기업활동은 민간기업이 이윤동기에 따라 자기 판단에 따라 수행하였다.

둘째, 한국정부는 중화학공업육성정책 초기부터 이 산업이 요구하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내수시장으로는 부족하며 궁극적으로 수출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른 국가와는 달리 중화학공업 육성에 있어서도 수출지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셋째,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한국정부는 산업연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 지역의 산업단지를 특화하여 클러스터효과를 시현하고자 하였다. 특히 최종제품 생산에서 시작하여 중간재와 원료로 확대되는 후방연관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넷째, 한국의 중화학공업화정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데에는 정책의지를 실제 집행으로 실현하는 한국정부의 정책적 역량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국영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의 기업가정신과 시장유인의 활용, 산업연관효과를 활용한 산업단지 조성과 정부의 정책 집행역량 등은 전형적인 개입주의적 산업정책의 폐해는 최소화하면서 정책목표를 달성한 핵심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알제리 산업발전정책 수립 시 핵심 이슈는 민간부문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며, 국영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국영기업의 개혁 및 기업환경의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2015~19년 5개년계획기간 중 전략적으로 육성 가능한 분야의 선정과 투자전략 수립을 위한 정부 관련 조직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일 것이다.

제1장 알제리 5개년계획(2015~19) 수립 지원

박 명 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오 완 근 (한국외국어대학교)

< 요약 >

‘KSP Algeria-Korea 2012’에서는 알제리 독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알제리의 2010~30년 장기 비전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어서 ‘KSP Algeria-Korea 2013’에서는 알제리 5개년 개발계획(2015~19)에 대한 수립 지원을 요청하여 본 연구가 이루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뒤쳐진 경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제개발계획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개발계획의 목표를 성취하지 못한 반면 한국은 압축성장(compressed growth)에 성공하였는데,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성공적인 경제개발계획 추진으로 알려져 있다. 본 장의 목적은 이러한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경험에 기초하여 알제리 5개년 개발계획(2015~19)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다.

먼저 알제리의 기존 5개년계획을 살펴본 결과, (i) 기존 알제리 5개년계획은 종합적인 장기 개발계획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투자계획이라 할 수 있으며, (ii) 유가상승으로 투자재원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부족 등으로 투자계획의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iii) 사전적인 비용-편익 분석에 기초하여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수의 사업에서 재원낭비가 발생하였으며, 사후평가도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에 대한 효과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iv) 알제리의 기존 5개년 투자계획은 공공사업, 지역개발, 주거시설 개선 등에 재원이 우선적으로 배분되어 사회개발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v) 전체 투자액에서 산업발전에 투입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산업발전에의 투자도 주로 공기업에 배분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공공성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경제 전체의 효율성 제고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알제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알제리 경제 현황을 한국 외에 알제리와 같은 자원부국이면서 산업다변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노르웨이, 칠레, 말레이시아와 비교 검토하였다. 거시안정성은 소득수준, 인구, 인플레이션, 투자율, 정부부채, 대외부채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성과를 보인 반면에 실업, 특히 청년실업은 아직 높은 수준이다. 알제리 총인구 및 경제활동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경제성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이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다변화를 GDP 대비 제조업 비중, 전체 수출 대비 자원수출 비중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알제리는 자원의존성이 지나치게 높아 이의 시정이 시급한 과제임이 드러났다. 또한 알제리의 연구개발 및 사업 환경도 열악한 상황이어서 개선이 요구된다.

알제리 5개년계획(2015~19)이 일종의 투자계획이 아닌 경제·사회 개발계획의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점에서는 한국의 1차 및 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관계되며, 알제리의 소득수준 측면에서는 한국의 5차 및 6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관련된다. 한국의 개발계획 경험이 알제리에 주는 시사점을 기관, 정책, 제도, 인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관 측면에서 선도부처인 경제기획원의 설립을 들 수 있다. 경제기획원은 독립적으로 국가발전계획을 작성하였고 예산편성권과 성과평가 기능을 보유하고 이를 연계하여 계획을 집행하였다. 또한 정책연구기관인 KDI를 설립하여 활용하였으며 KIST를 설립하여 연구개발 및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정책 측면에서는 성장지향적 경제개발을 추진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국은 자원빈국이며 소규모 개방경제여서 성장을 위해 수출지향적 공업화를 선택하여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데 성공하였다. 또한 1980년대에 들어 정부는 대외개방을 추진하였고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셋째, 제도 측면에서는 사전평가제도에 기초하여 정부지출이 이루어졌으며, 사후평가제도도 시행되었다. 또한 공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공기업평가제를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넷째, 인적 측면에서는 정치적 리더십과 핵심 경제관료의 우수성을 들 수 있다. 먼저 최고통치자의 경제성장에 대한 명확한 의지가 경제개발계획 초창기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예를 들어 1965년 1월부터 1979년 말까지 총 146회가 개최된 월간 경제동향보고회의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참석하였다. 다음으로 엘리트 경제관료는 치열한 공무원시험을 통하여 선발된 상위권 대학 출신의 우수한 인재들로서 이들은 선진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KDI 연구진들과 함께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경제기획원이 주도적으로 개발계획을 만들었지만 이후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시켜 나아갔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050년 OECD 평균 및 2030년 MENA 1위 국가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된 알제리 비전 2030은 연평균 7% 성장을 제시하고 있다. 알제리의 핵심 과제는 -3.7%인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비전 2030 결과와 5개년계획(2015~19)을 연계시킨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알제리 2013년 1인당 GDP는 7,728.1달러로 비전 2030의 시나리오에서 투자율 BAU 가정에 TFP가 가장 낮은 -3.7% 증가시의 수준을 약간 상회하고 있다. 2013년 현재 수준으로 TFP 증가율 -3.7% 시나리오를 따를 경우 알제리 1인당 GDP는 매년 약 1.6%씩 증가하여 2015년 7,616.1달러, 2019년 8,382.3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고성장 시나리오인 TFP 증가율 2.0%의 1인당 GDP 수준은 2015년 10,478.4달러, 2019년 14,053.4달러 수준이 된다.

알제리의 5개년계획이 성공하려면 정책 수립, 집행 및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 수립은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하는 좋은 정책 만들기가 관건이다. 정책의 효율적 집행은 정치적 리더십과 실천의지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먼저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1)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정책 수립, 2) 거버넌스와 제도: 우수한 정부구성원, 3) 국가승인통계제도: 근거에 기초한(evidence-based) 정책 수립, 4) 알제리개발연구원(Algerian Development Institute: ADI)의 설립, 5) 산업정책 수립: 산업다변화 및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을 제시하였다. 정책 집행 측면에서는 1) 정책조정기구: 공공과 민간 간의 조정, 2) 정치적 리더십, 3) Non-hydrocarbon 수출 촉진, 4) 알제리과학기술연구원(Algeri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IST) 설립, 5) 과학기술연구특구(Science and Technology Park), 6)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로 성과 평가 측면에서는 1) 공공기관 성과 평가, 2) 모니터링 및 Follow-up, 5개년계획 중간 리뷰, 3)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품질진단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장에서는 이들을 실현하기 위한 5개년계획기간 중에 취할 분야별·연도별 액션 플랜(Action plan)을 제안하였다.

제1절 서론

‘KSP Algeria-Korea 2012’에서는 알제리 독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알제리의 2010~30년 장기 비전 연구(이하 비전 2030)를 수행하였다(한국개발연구원[2013]). 이어서 ‘KSP Algeria-Korea 2013’에서는 알제리 5개년 개발계획(2015~19)에 대한 수립 지원을 요청하여 본 연구가 이루어졌다. 5개년계획의 수립과 집행 또는 한 나라의 개발을 일으키는 일은 어떤 특정한 부문만의 변화로는 부족하고 경제사회 전 부문에 걸친 통합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제1장 알제리 5개년계획 수립 지원, 제2장 ADI 설립지원방안 연구, 제3장 알제리 산업정책 방향과 전략, 제4장 5개년계획: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알제리 5개년계획(2015~19)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들 각 내용들이 서로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전략화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일반적으로 경제개발계획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가의 정부가 뒤쳐진 경제여건을 개선하기 적극적으로 도입되었다. 당시에는 주로 공기업 및 국영은행이 설립되었고, 무역제한조치 등이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들은 실패하였다. 그 결과 개도국은 개발계획의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였다(Weil [2013]).

World Bank(2008)에 따르면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빠르고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한 13개국 중의 하나이다. 한국이 압축성장(compressed growth)에 성공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성공적인 경제개발계획 추진이다. 한국정부는 민간에서 참여하기를 주저하던 새로운 산업영역인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 같은 중화학공업을 육성하였다. 그리고 중화학공업육성정책은 정부관료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졌다. 한국과 개발계획에 실패한 국가들 간의 차이는 정책 수립 자체보다는 정책집행과정에 있다. 한국정부가 설립한 공기업은 자율적이고, 이익을 추구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공기업은 민영화되었다. 또한 한국정부는 유치산업을 무작정

보호하지 않고 시장의 여건에 따라 제약조건을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한국정부는 보호받는 산업분야에서 국내시장을 유지하려면 수출비중을 꾸준히 늘리도록 강제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요구에 따라 정부의 보호를 받던 산업은 짧은 시간 안에 세수준에 비견할 만한 생산성에 접근하였다(Romer[1992]). 이와 같이 한국의 성공사례는 경제계획이 효율적이고 정직한 관료조직에 의해 주도적으로 추진될 때 가장 잘 집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Westphal [1990]).

본 장의 목적은 이러한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경험에 기초하여 알제리 5개년 개발계획(2015~19)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다. 본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2절에서는 알제리의 기존 5개년계획과 당면과제에 대해 살펴보고, 제3절에서는 한국의 5개년계획 경험을 통해서 알제리에 대한 시사점을 소개한다. 제4절에서는 비전 2030에 대해 살펴보고 비전 2030 결과를 5개년계획(2015~19)과 연계시킨다. 제5절에서는 정책수단 및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구조개혁을 위한 정책방향 수립에 주는 시사점을 알아본다.

제2절 알제리의 기존 5개년계획과 당면과제

가. 알제리의 과거 5개년계획 경험

알제리는 독립 이후 중앙집권적인 형태에서 시장경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발전해 왔다. 먼저 196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의 기간(1964~86)은 독립 이후 사회주의를 지향하면서 강력한 공공부문에 의존하는 중앙집권적 경제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계획 및 토지개발부에서 국가개발계획 관련 중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특히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가개발계획을 실행하며 실행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 시기 소련식 중화학공업 육성과 농업 집산화 정책방향을 수립하였으나 다양한 이유로 작동을 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1980년대 중후반부터 1990년대 후반(1986~98)까지는 분권화 경제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안정화와 구조적인 조정에 따른 시스템 및 프로그램들의 개혁을 시도하였다. 동 기간의 경제개혁은 국가의 지원을 축소하고 기업들에 경영자치권을 부여함으로써 상장기업들이 금융기관들을 통하여 투자를 유치하도록 하였다.

알제리의 5개년계획은 1999년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정운영의 방향을 전환시켰다. 1990년대 후반 내전이 종료되고 알제리 정부는 경제복구와 경제개발을 위하여 5개년 단위 재정투자계획을 수립하였다. 2001년 이후 알제리 정부는 3개의 다년 계획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성장과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였다. 3개의 프로그램은 PSRE(Le Programme de Soutien a la Relance Economique 2001~04), PSCE(Le Programme de Soutien a la Croissance Economique 2005~09), 그리고 PIP(Le Programme d'Investissement Public, 2010~14)이다. 이 기간 동안 개발계획의 구조가 그 내용 면이나 형식 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며, 도로 등 교통인프라,

공공사업, 수자원 관리, 주택 건설의 4대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었다. 이들 부문에 대한 투자액이 전체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4년 33%, 2006~9년 53%, 2010~14년에는 55%로 계속 증가하였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공공사업(9% → 14% → 15%)과 주거(8% → 13% → 17%)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표 1-1 참조).

〈표 1-1〉 알제리 5개년계획 재정투자계획

(단위: 10억 디나르)

| 분야 | 2001~04 | | 2005~09 | | 2010~14 |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교통 | 55 | 10% | 700 | 17% | 2,800 | 13% |
| 공공사업 | 45 | 9% | 600 | 14% | 3,100 | 15% |
| 수자원 | 31 | 6% | 393 | 9% | 2,000 | 9% |
| 주거 | 44 | 8% | 555 | 13% | 3,700 | 17% |
| 합 계 | 175 | 33% | 2,248 | 53% | 11,600 | 55% |
| 총예산 | 525 | 100% | 4,203 | 100% | 21,214 | 100% |

주: 총예산은 5개년계획 재정투자계획 총예산임.
자료: Algeria(2013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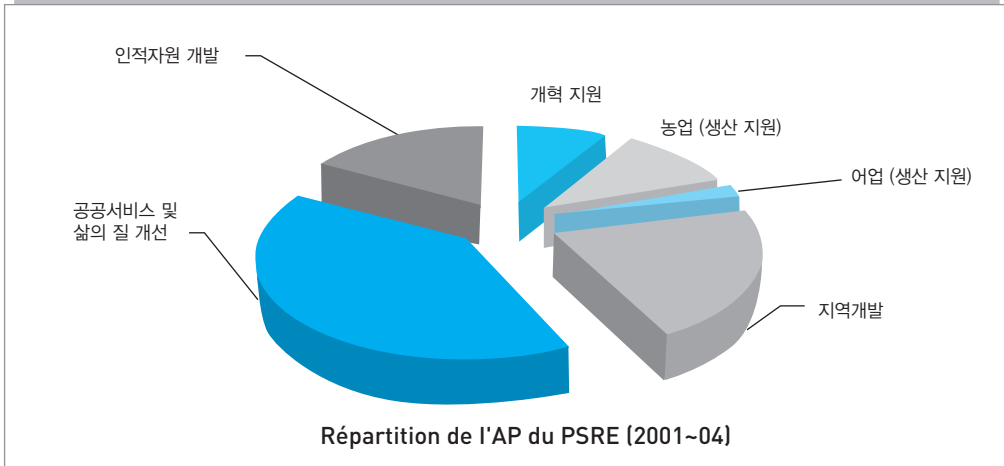
그러면 알제리 개발계획 프로그램을 살펴보자.¹⁾

1) PSRE(2001~04)

PSRE는 정부투자지출을 근거로 특정 프로그램을 수립한 알제리의 첫 국가계획이다. 이 기간에 모두 525억 디나르(약 7억달러)가 투입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경제복구를 최우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프로그램의 핵심은 삶의 질 개선, 빈곤퇴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간 불균등 시정이다. 주요 부문에 대한 투자비중을 살펴보면 공공사업 및 생활 개선(40%), 지역개발(22%), 인적자원개발(17%), 농업(11%), 어업(2%), 경제개혁 지원(8%)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부문별 투자비중은 경제개혁이나 인적자원개발 같은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분야나 산업 지원보다는 단기적으로 시급하고 효과가 나타나는 공공사업 및 생활 개선을 우선시하였음을 시사해 준다.

1) 이 부분은 Algeria(2013b)에 기초하여 작성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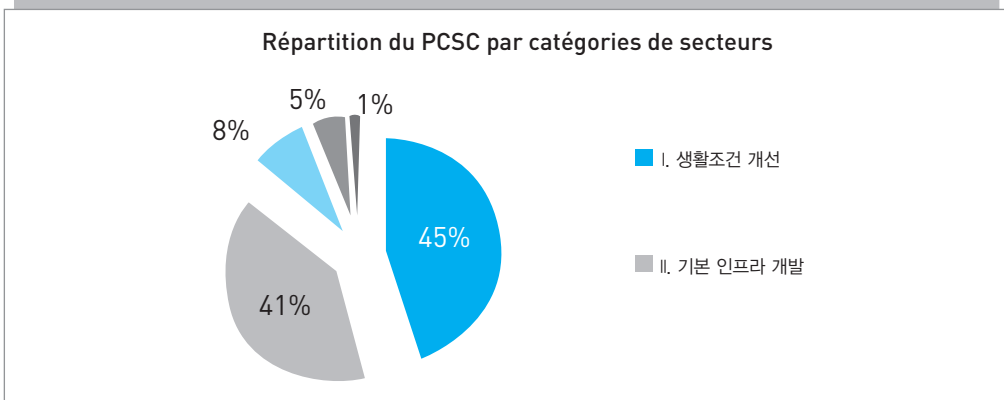
[그림 1-1] PSRE의 투자비중



2) PSCE(2005~09)

동 프로그램은 앞서의 PSRE(2001~04) 프로그램의 연속성 상에서 물가안정과 기초인프라 건설을 통한 경제성장을 정책목표로 수행되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생활의 질 개선, 인프라 건설, 경제개발 지원, 전기 및 교통 현대화, 통신망 구축 등이 5대 사업으로 투자계획이 구성되어, 이전 계획에 비하여 경제개발이 주된 사업대상으로 자리 잡았다. 총투자액 4,203억 디나르의 부문별 투자비중을 보면 생활조건 개선에 45%, 기초인프라 개발에 41%를 차지해 PSRE 프로그램보다 더 많은 기초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2] PSCE의 투자비중



2) 투자계획이 엄밀한 분석을 토대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많은 경우 실제 사업비용이 배정된 예산의 두배를 넘었다고 한다. 그 원인은 초기 사업계획 수립 시 비용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했던 점과 함께 정부와 참여 기업의 집행능력 결여에 기인하였다고 평가된다(Algeria[2013a] 참조).

PSEG(2005~09)는 기초적인 사회기반시설들과 전기 및 가스 연결 네트워크 등을 확장시켰고, 교통 개선을 포함한 공공서비스의 개선을 이루었다. 그리고 주요 사회지표의 하나인 주거환경의 개선과 지방에서의 일자리 창출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반면, 부문별 전략적인 내용의 구체성이 결여되었고, 집행 역시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보건, 교통 등 주요 인프라 투자 부문에서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보완이 요망된다.

3) PIP(2010~14)

알제리 정부는 2010년 5월 24일에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경제의 자원의존성을 탈피하고 알제리 경제구조를 다변화시키기 위하여 5년간(2010~14) 2,860억달러를 투자하는 공공투자계획을 승인하였다. 동 5개년 투자계획은 인근 국가의 정치적 소요를 반영하여 높은 실업률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주거 개선 등 국민의 직접적인 만족도 제고를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원배분의 측면에서 보면, 우선순위는 경제 및 행정 인프라 구축, 농업, 주거, 교육, 문화 인프라, 생산활동 순으로 이루어졌다. 철도, 도로 및 수도 프로젝트의 완성 등 기존 프로그램에 130억달러를 사용하고, 신규 프로그램에는 156억달러를 투자하게 된다.

Mahraz(2013)에 따르면 2010~14년 5개년 투자계획 중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 비중은 전체 2,860억달러 투자액 중 6.9%인 198억달러이며,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한 투자 132억달러, 중소기업 육성과 이에 대한 금융지원이 60억달러 정도, 그 외 발전소 건설, 석유화학산업 육성, 공기업 현대화에 264억달러를 할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전체 투자액에서 산업발전을 위하여 할당된 투자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다. 그리고 알제리 산업에서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투자의 대부분은 공기업에 투입되었다.

나. 기존 알제리 5개년계획의 평가

이상에서 살펴본 기존의 알제리 개발계획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기존 알제리 5개년계획은 종합적인 개발계획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투자계획이라 할 수 있다. 투자계획이 세부의 다양한 예산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각 계획 간의 유기적인 연관성이 부족하고 투자계획이 단순히 나열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사전적인 비용-편익 분석에 기초하여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수의 사업에서 자원낭비가 발생하였다.²⁾ 또한 사전평가 외에 투자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평가도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에 대한 효과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유가상승으로 투자재원은 확보되었지만 그에 걸맞은 사업 수립 및 집행 역량 미흡으로 투자계획의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국가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종합적인 장기 전략하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사전 및 사후 평가제도가 결여되어 있고 이를 담당하는 조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한다. 이에 따라 사업집행에 있어서도 행정적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3) 이하의 내용 일부는 2012년도 알제리 보고서를 참조하여 최신자료로 업데이트하여 작성하였음.

셋째, 알제리의 5개년 투자계획은 공공사업, 지역개발, 주거시설 개선 등 사회개발 등에 우선적으로 재원이 배분되고 있어 사회개발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공공사업 수행의 정치적·경제적 이유에도 불구하고 이는 높은 실업률에 대처하기 위한 단기 처방에 불과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사업으로서 장기 전략에 기초한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주택건설사업도 국민의 생활의 질 향상과 단기적 경기부양효과는 클 수 있으나 국가적인 장기 과제로서는 미흡한 사업이다. 이 점은 경제개발에 자원을 집중하였던 한국과 대비되는 점이기도 하다.

넷째, 전체 투자액에서 산업발전에 투입되는 비중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산업발전에의 투자도 많은 부분이 공기업에 배분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알제리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해당되는 것으로, 공공부문이 공공성 면에서는 우월하지만 효율성 면에서는 민간부문에 뒤지므로 공공부문의 투자 비중 확대는 경제 전체의 효율성 제고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다. 알제리 당면과제³⁾

알제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알제리 경제 현황을 살펴본다. 알제리의 당면과제는 크게 거시안정성, 인구구조, 산업다변화, 사업환경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거시안정성은 소득수준, 인구, 인플레이션, 실업, 투자율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산업다변화는 GDP 대비 제조업 비중, 전체 수출 대비 자원수출 비중을 통해 살펴보았고, 사업환경은 연구개발, Doing business 등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비교대상 국가는 한국 외에 알제리와 같은 자원부국이며 산업다변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노르웨이, 칠레, 말레이시아를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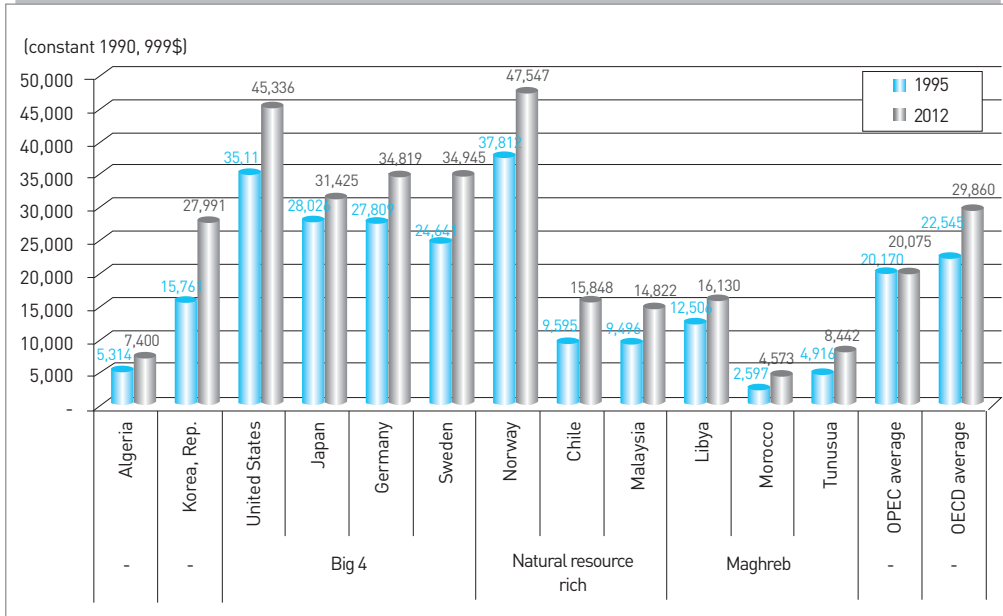
1) 거시안정성

먼저 알제리의 소득수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회원국, 산유국으로 구성된 OPEC(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회원국과 비교 분석할 수 있다.

알제리 국민소득수준은 2012년을 기준으로 1인당 GDP가 7,400달러로, 한국 및 OECD 평균의 약 1/4 수준이다. 자원부국으로 분류할 수 있는 칠레나 말레이시아와 비교해 보면 이들 국가는 알제리보다 약 두 배가량 높은 1인당 GDP를 보이고 있다. 또한 주변의 마그레브 국가들의 경우 모로코는 알제리보다 낮은 4,573달러, 튀니지는 알제리보다 약간 높으나 비슷한 8,442달러, 리비아는 두 배가량 높은 16,130달러로 나타났다. 그리고 알제리가 속한 OPEC 국가들의 평균 1인당 GDP 수준은 20,075달러로, 역시 알제리에 비해 월등히 높은 소득수준을 보였다.

4) Official Portal of National News Agency of Malaysia(2013. 12.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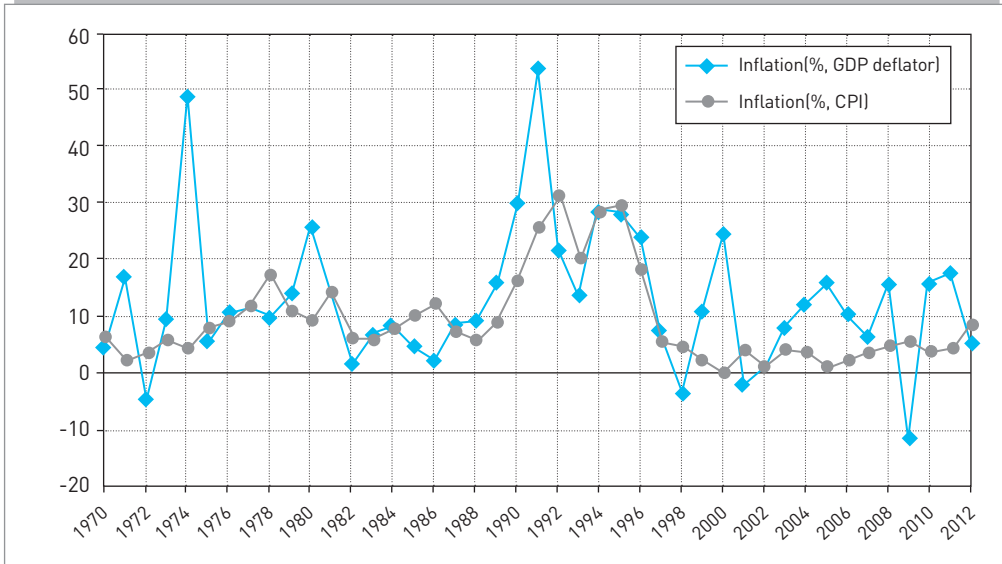
[그림 1-3] 주요 국가 GDP 비교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GDP per capita, PPP(constant 2005 international \$)'.

알제리는 2000년 이후 성공적으로 거시경제를 안정화시킨 국가로 평가받는다(IMF[2010], pp.8~9). IMF 역시 알제리의 물가안정을 통한 거시안정성을 알제리 경제의 중요한 실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1990년대에는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30%에 가까운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였으나, 1990년대 후반 이후 거시안정화 정책에 힘입어 5%이내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고유가로 인해 물가상승 유인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거시 안정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한 결과라 할 수 있다. 2012년에는 8.9%로 다소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였으나 2013년 10월 다시 4.5%로 대폭 하락하였다.⁴⁾

[그림 1-4] 알제리 물가 상승률(197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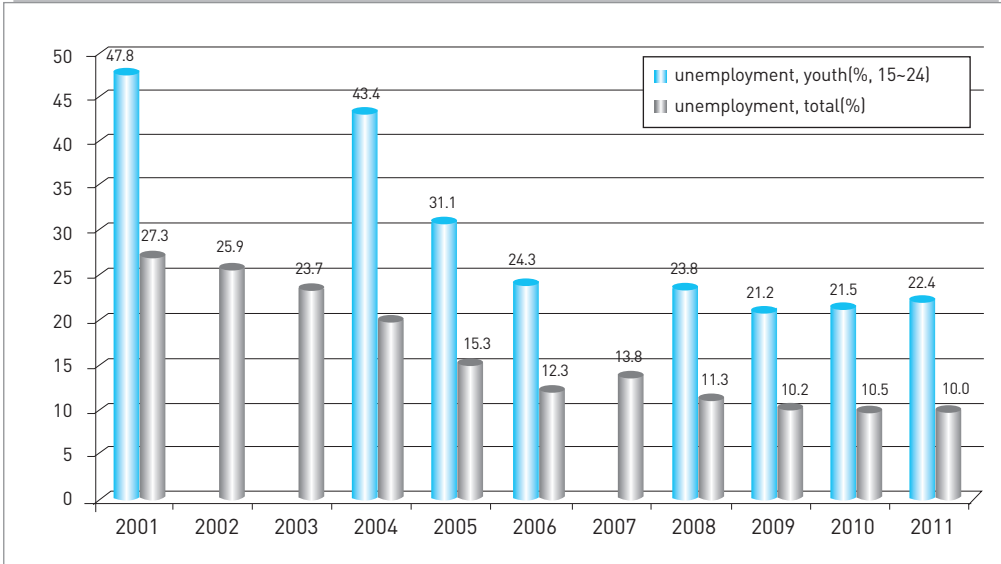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Inflation"

다음으로 실업률을 보면 알제리는 2000년 이후 경제활동 인구의 완만한 증가,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 등으로 인해 실업률을 줄이는 데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 2000년에는 30%에 육박하였던 실업률을 2011년에는 10% 수준으로 크게 낮추었다. 특히 2013년에는 9.8%를 기록, 10년 만에 처음으로 10%보다 낮은 실업률을 달성하였다.

2000년대 알제리에서 창출된 대부분의 일자리는 정부부문에서 창출된 일자리였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만으로는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층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공급할 수 없으므로 청년실업은 알제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 15~24세 청년실업률은 2000년에는 47.8%로 경제활동참여인구 2명 중 1명이 실업인 상황이었으나, 지난 10여 년 동안 크게 개선되어 22.4%까지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림 1-5] 알제리 실업률(2001~2011)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Unemployment rate'.

알제리의 투자율 추세는 1970년대 후반에 39.1%까지 올랐다가 이후 199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7%까지 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 투자율은 점차 회복되어 2000년대 중반에는 30%대를 유지하다가 2009년에는 다시 크게 증가하여 38.3%의 투자율을 기록하였다. 동 수치는 한국이나 여타 비교 자원부국인 칠레, 말레이시아, 노르웨이와 비교해서도 매우 높은 수치이다.

높은 투자율은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 성장을 달성한 많은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 중 하나이다. 높은 투자율이 없이는 고속성장이 어렵고, 투자는 현재 수요임과 동시에 미래의 생산능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알제리의 높은 투자율은 성장을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표 1-2〉 자원부국 GDP 대비 투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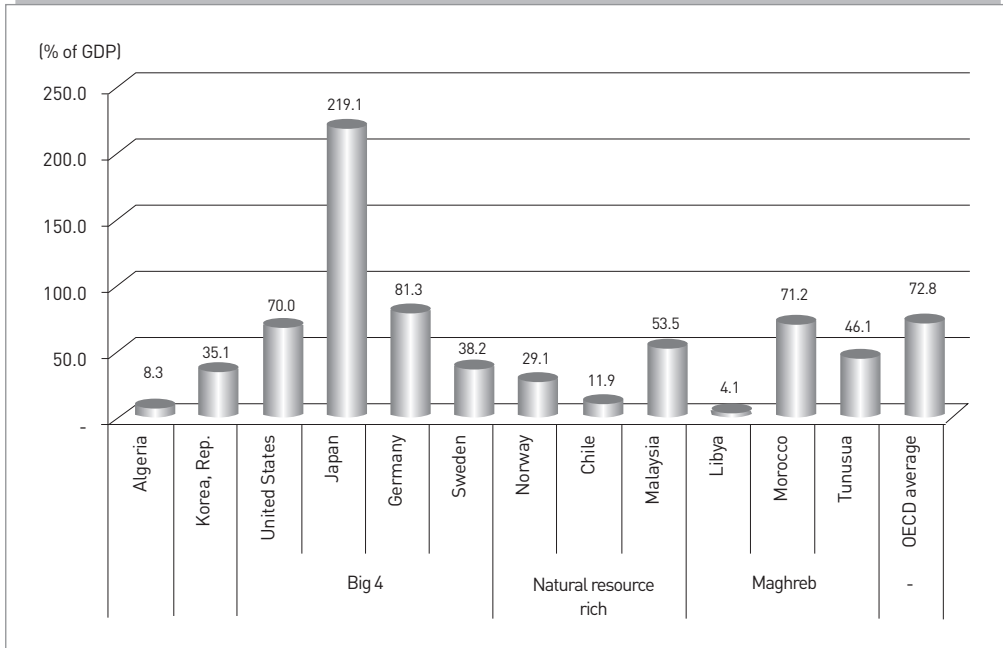
| (단위: %) | | | | | |
|---------|-------|--------|------|-------|------|
| 연도 | 알제리 | 한국 | 칠레 | 말레이시아 | 노르웨이 |
| 1960 | - | 11.4 | 16.4 | 12.3 | 29.4 |
| 1965 | - | 15.4 | 17.2 | 16.4 | 28.7 |
| 1970 | 34.2 | 25.6 | 17.8 | 18.2 | 27.0 |
| 1975 | 39.1 | 26.9 | 21.5 | 25.6 | 33.8 |
| 1980 | 33.8 | 32.2 | 16.6 | 29.9 | 26.8 |
| 1985 | 32.4 | 28.8 | 16.8 | 28.7 | 24.4 |
| 1990 | 27.0 | 37.1 | 23.7 | 33.0 | 20.9 |
| 1995 | 29.1 | 37.3 | 25.1 | 43.6 | 19.8 |
| 2000 | 20.7 | 30.0 | 20.2 | 25.3 | 18.4 |
| 2005 | 22.3 | 28.9 | 21.2 | 22.3 | 19.2 |
| 2010 | 38.3* | 28.3 | 21.3 | 22.3 | 18.9 |
| 2012 | - | 27.5** | 24.2 | 25.6 | 20.6 |

주: *는 2009년 수치, **는 2011년 수치임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of GDP)' 자료.

알제리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은 2012년 기준 8.3%로 선진국뿐 아니라 주변 마그레브 국가들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정부부채 비중은 72.8%, 한국은 35.1% 수준이며 마그레브 국가들 가운데는 리비아가 4.1%로 가장 낮고, 모로코와 튀니지는 각각 71.2%, 46.1%의 정부부채 비중을 보이고 있다. 대외부채 비중 역시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 2000년대 중반 이후 5% 이내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1년 기준 3.3%를 기록하는 등 매우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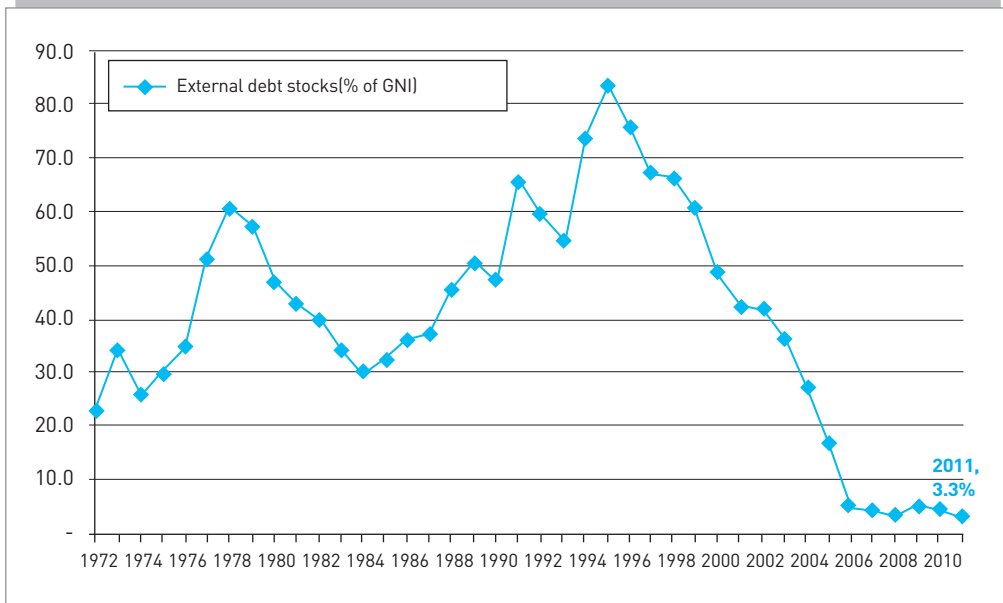
알제리의 무역규모는 절대 규모로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그리 크지 않은 수준이나, GDP 대비 규모는 약 65%로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변 마그레브 국가들 중에서는 절대규모는 가장 크지만 GDP 대비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2012년을 기준으로 알제리의 경상수지는 약 12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1-6] 정부부채 비중(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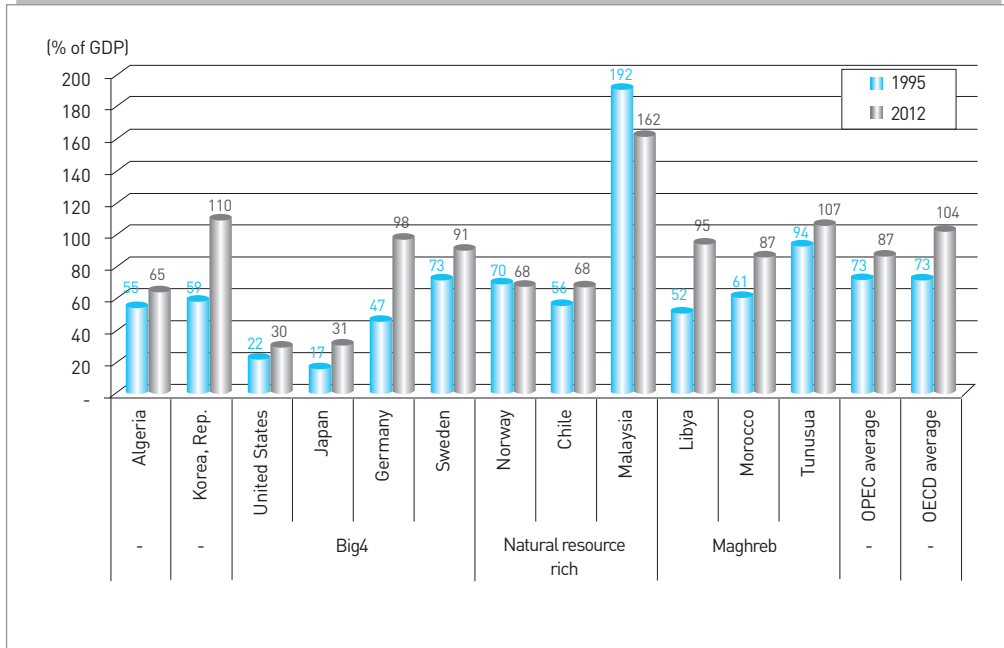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s, CIA Factbook 자료.

[그림 1-7] 대외부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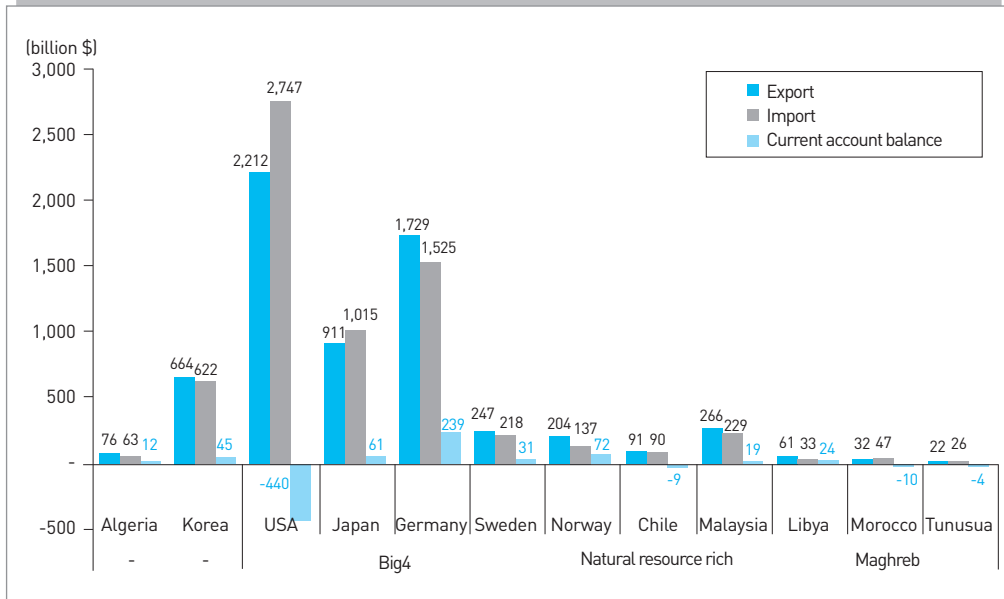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자료.

[그림 1-8] GDP 대비 수출입 비중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자료.

[그림 1-9] 수출입 및 무역수지(2012년)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자료.

2) 인구구조

알제리의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현재 인구수는 3,687.4만명, 15~64세 인구수는 2,526.3만명이며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경제활동인구 비중은 68.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들은 계속 증가하여 2019년에는 각각 3,920.5만명, 2,697.5만명, 68.8%에 이르고, 2030년에는 각각 4,347.5만명, 3,072.4만명, 70.7%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알제리의 경제활동인구 수 및 비중 추이는 알제리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전망을 시사하고 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인당 GDP=GDP/총인구', '근로자 1인당 GDP=GDP/근로자 수' 로 표시할 수 있다. 위의 두 식을 결합하면 '1인당 GDP=근로자 1인당 GDP×(근로자 수/총인구)'가 되고, 동 식을 로그를 취한 후 시간 t로 미분하면 '1인당 GDP, 증가율=근로자 1인당 GDP 증가율+총인구 중 근로연령 비율(근로자 수/총인구)의 증가율' 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활동인구수의 증가 및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가 자체는 동시에 왜 알제리의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지를 시사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표 1-3〉 알제리의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비중

| (단위: 천명, %) | | | |
|-------------|--------|-----------|-----------|
| 연도 | 총 인구 | 15~64세 인구 | 15~64세 비중 |
| 1990 | 25,299 | 13,481 | 53.3 |
| 1995 | 28,292 | 16,004 | 56.6 |
| 2000 | 30,534 | 18,822 | 61.6 |
| 2005 | 32,888 | 21,636 | 65.8 |
| 2010 | 35,468 | 24,246 | 68.4 |
| 2013 | 36,874 | 25,263 | 68.5 |
| 2015 | 37,954 | 26,065 | 68.7 |
| 2016 | 38,344 | 26,348 | 68.7 |
| 2017 | 38,761 | 26,651 | 68.8 |
| 2018 | 39,205 | 26,975 | 68.8 |
| 2019 | 39,678 | 27,319 | 68.9 |
| 2020 | 40,180 | 27,684 | 68.9 |
| 2025 | 42,043 | 29,414 | 70.0 |
| 2030 | 43,475 | 30,724 | 70.7 |

3) 산업다변화

알제리는 자원부국이며 자원부국의 공통된 특징인 자원의존형 경제라는 점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한국 외에도 자원부국 중 산업다변화에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는 칠레, 말레이시아, 노르웨이와 비교하면, 알제리는 5개국 중에서 동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2010년 현재 동 비율이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1985년 이래 동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당면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어느 나라이건 자연자원부문보다 제조업부문의 생산성 증가율이 높아 경제에서 제조업 비중이 너무 낮으면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1-4〉 자원부국 GDP 대비 제조업 비중

| (단위: %) | | | | | |
|---------|------|------|------|-------|------|
| 연도 | 알제리 | 한국 | 칠레 | 말레이시아 | 노르웨이 |
| 1965 | 13.3 | 14.3 | 24.0 | 9.5 | - |
| 1970 | 17.2 | 17.8 | 25.9 | 12.4 | 21.0 |
| 1975 | 9.7 | 21.6 | 20.4 | 17.6 | 21.0 |
| 1980 | 10.6 | 24.4 | 21.5 | 21.6 | 15.6 |
| 1985 | 13.7 | 27.3 | 16.2 | 19.3 | 13.5 |
| 1990 | 11.4 | 27.3 | 19.6 | 24.2 | 12.3 |
| 1995 | 11.5 | 27.6 | 18.1 | 26.4 | 13.2 |
| 2000 | 7.5 | 28.3 | 16.9 | 30.9 | 10.6 |
| 2005 | 5.9 | 27.5 | 14.7 | 27.5 | 9.7 |
| 2010 | 5.6* | 30.3 | 11.7 | 24.6 | 9.1 |

주: *는 2009년 자료임.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Manufacturing, value added(% of GDP)'.

또한 자원의존도를 측정하는 또 하나의 지표로서 전체 수출 대비 자원수출 비중을 살펴볼 수 있다. 알제리는 1974년 이래 동 비중이 항상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2012년에는 97.4%에 이르고 있다. 동 수치는 자원부국인 칠레, 말레이시아, 노르웨이가 아니라도 여타 OPEC 국가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치이다.

〈표 1-5〉 자원부국 전체 수출 대비 자원수출 비중

| (단위: %) | | | | | |
|---------|------|------|------|-------|------|
| 연도 | 알제리 | 한국 | 칠레 | 말레이시아 | 노르웨이 |
| 1962 | — | 42.4 | 23.3 | — | 18.5 |
| 1966 | 63.3 | 19.3 | 18.2 | 64.1 | 13.6 |
| 1970 | 73.2 | 13.0 | 13.3 | 61.1 | 10.9 |
| 1975 | 93.6 | 5.0 | 18.1 | 45.9 | 20.7 |
| 1980 | 98.8 | 2.1 | 23.2 | 57.1 | 53.2 |
| 1985 | 97.8 | 4.1 | 26.0 | 50.8 | 56.9 |
| 1990 | 96.6 | 2.5 | 20.2 | 32.7 | 51.3 |
| 1995 | 95.0 | 3.4 | 29.2 | 13.5 | 49.7 |
| 2000 | 97.4 | 6.5 | 27.9 | 12.4 | 65.1 |
| 2005 | 98.4 | 6.5 | 35.7 | 16.0 | 68.7 |
| 2010 | 97.5 | 8.1 | 31.4 | 18.8 | 65.0 |
| 2012 | 97.4 | 11.7 | 32.3 | 23.3 | 71.4 |

주: 자원 수출은 각종 원료 및 매장자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국제무역분류(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SITC)의 2. Crude materials, inedible, except fuels와 3. Mineral fuels, lubricants and related materials를 말함.
 자료: UN COMTRADE 자료를 토대로 계산.

자원의존성을 측정하는 세 번째 변수로서 GDP 대비 자원수출 비중을 검토할 수 있다. 2006년에 45.9%를 기록하고 2008년에도 45%를 초과하였지만 이후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2012년에 33.65%를 기록, 경제가 지나치게 천연자원에 의존하고 있어 구조적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표 1-6〉 자원부국 GDP 대비 자원수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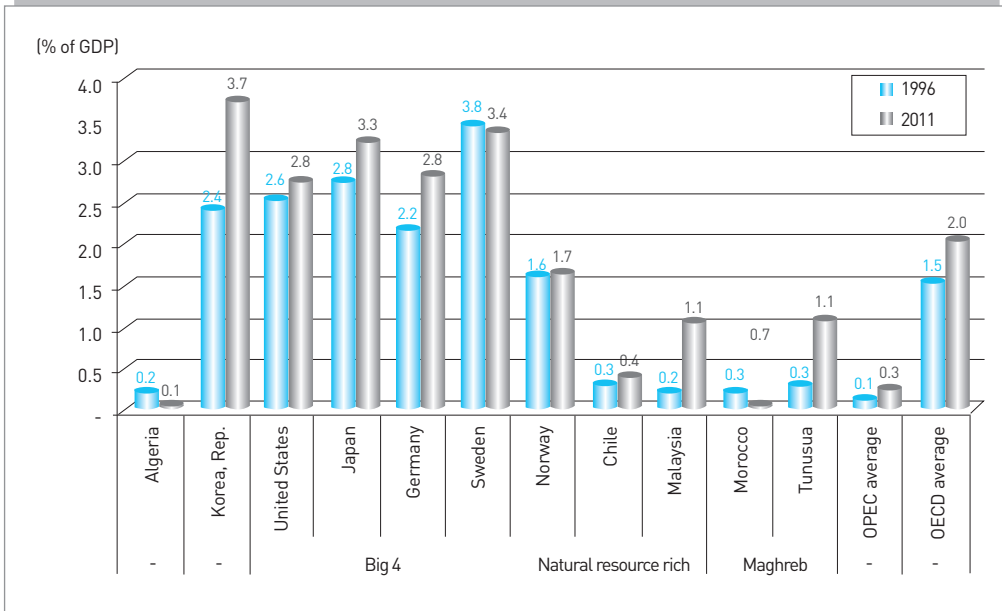
| (단위: %) | | | | | |
|---------|-------|------|-------|-------|-------|
| 연도 | 알제리 | 한국 | 칠레 | 말레이시아 | 노르웨이 |
| 1962 | — | 0.87 | 2.26 | — | 2.97 |
| 1966 | 12.94 | 1.27 | 2.27 | 23.72 | 2.72 |
| 1970 | 15.19 | 1.22 | 1.83 | 24.11 | 4.67 |
| 1975 | 25.82 | 1.19 | 4.14 | 17.85 | 10.62 |
| 1980 | 36.45 | 0.57 | 3.86 | 29.64 | 15.27 |
| 1985 | 17.14 | 1.28 | 5.80 | 25.00 | 17.60 |
| 1990 | 17.15 | 0.62 | 5.32 | 21.88 | 14.84 |
| 1995 | 21.28 | 0.82 | 6.36 | 11.19 | 13.93 |
| 2000 | 39.18 | 2.09 | 6.31 | 12.94 | 23.17 |
| 2005 | 44.24 | 2.17 | 11.93 | 15.80 | 23.45 |
| 2010 | 34.38 | 3.69 | 10.09 | 15.14 | 20.14 |
| 2012 | 33.65 | 5.66 | 9.22 | 17.40 | 22.94 |

주: 자원 수출은 각종 원료 및 매장자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국제무역분류(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SITC)의 2. Crude materials, inedible, except fuels와 3. Mineral fuels, lubricants and related materials를 말함.
 자료: UN COMTRADE 및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자료를 토대로 계산.

4) 사업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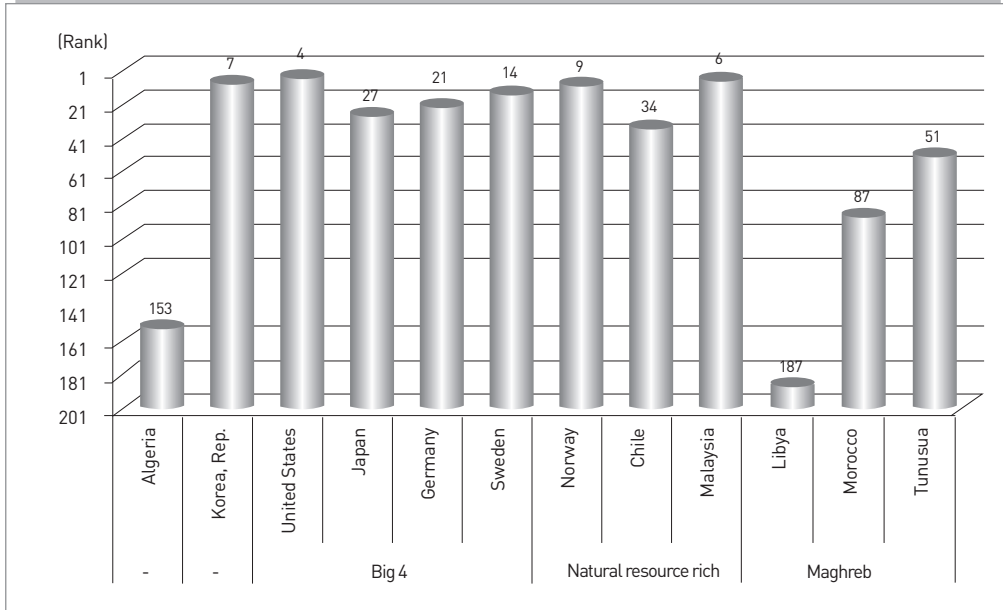
알제리의 연구개발투자 비중은 GDP 대비 0.1%로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 수준인 2.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일 뿐 아니라, 1% 내외로 나타난 주변 마그레브 국가들뿐 아니라 0.3% 수준인 OPEC 국가들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리고 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2014년 기업환경평가 (Ease of Doing Business) 순위는 153위로, 주변 마그레브 국가 중에서도 리비아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결과적으로 알제리의 사업환경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0]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지출 비중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 of GDP)'.

[그림 1-11] 기업환경평가 순위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4.

제3절 한국의 5개년 경제개발 경험

가. 한국의 5개년 개발 경험⁵⁾

한국은 일본에 35년간(1910~45년) 점령당하여 수탈을 당하였고, 1950~53년 동안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1962~97년 기간 동안 7회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룬 결과⁶⁾ 압축성장(compressed growth)을 경험하였다.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 주도로 시작하였지만 점차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는 형태로 변모했다는 데 있다. 이는 경제개발계획을 실패한 다른 개발도상국과 뚜렷하게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공공부문 위주로 정책을 지속한 많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민간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공공부문 때문에 산업정책이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살펴본다.⁷⁾ 5개년 경제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제1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1962~67)이다. 1961년 5월 16일 쿠데타에 성공한 박정희가

5)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대한 내용은 한국개발연구원(2013d; 2013e)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6) 보다 정확히계는 7번의 중기 개발계획이 있었으며, 1~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이후 사회발전분야를 포함한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으로 확대·개편되었고, 1992년에 시작한 7차 중기 개발계획으로는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을 전면 수정한 신경제 5개년계획이 시행되었음.

7) 5개년 개발계획별 주요 정책방향과 성과는 <표 1-7, 1-8>에 제시한다.

이끄는 신군부는 국가안보에 가장 큰 관심을 쏟았으며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산업화를 통한 경제적 기반 마련이 필수라고 인식하였다. 신군부는 경제발전 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Economic Planning Board: EPB)을 1961년 7월에 설립하였다. 동 기관은 정치권력자의 명확한 의지에 기초하여 한국의 산업화정책을 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 구체화시키고 계획 집행을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경제기획원은 부흥부의 개발기획국, 재무부의 예산국, 내부부의 통계국 등 핵심 기능을 타 부처로부터 가져왔다.

1차 경제개발 시기의 다른 특징으로 1964년 5월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장기영 씨가 부임함과 함께 경제개발전략을 수입대체 산업화에서 수출 주도 산업화로 변경한 것을 들 수 있다. 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소규모의 내수시장을 가졌던 한국은 전후 복구와 더불어 비교적 용이하게 비내구성 소비재 부문에 대한 수입대체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해외원조가 감소하면서 악화된 경상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화 획득이 긴급한 현안이었다. 따라서 경제개발계획의 초점을 수출 중심적 노동집약적 산업에 집중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수출 진흥을 위해 1962년 수출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외환, 세금, 금융, 기술도입, 해외시장 진출 등 가용한 대부분의 정책수단을 사용하였다. 핵심적인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면 우선 외환의 측면에서는 당시 원화의 과대평가로 수출잠재력이 억제되고 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세번에 걸친 원화 평가절하를 실시하는 등 환율개혁을 실시하였다. 금융의 측면에서는 금리현실화를 통해 여수신 금리를 대폭 상향 조정하였다. 그러나 금리인상은 이후 금융부문의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는 단초가 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상업차관, 외국인직접투자 등 수출산업화에 필요한 확충을 위한 노력도 함께 병행하였으며, 미국, 일본 등으로부터의 기술 도입에도 힘썼다.

또한 정부는 한국수출진흥공사(KOTRA)를 설립하여 수출업자들의 해외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월간 수출진흥확대회의를 개최하였다. 1965년 1월 이래의 월간 수출진흥확대회의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총 152번의 회의 중 147번의 회의에 참석했는데 이는 수출드라이브정책을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전략과 계획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엔진으로 여기고 있다는 최고 통수권자의 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동 회의에서 대통령, 정부, 민간기업 간에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 결과 한국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시행하는 동안 거의 매 기간 높은 수출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보였다.

1차 개발계획 시기에 또 하나 주목할 특징은 1966년 KIST(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의 설립이다. 이는 과학기술을 진흥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매년 20~30명가량의 우수한 과학기술자를 초빙하였으며 한국의 과학기술역량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1차 및 2차 경제개발계획은 경제기획원이 주도하는 자원관리계획이었다.⁸⁾ 동 기간 국가투자사업계획은 국가 차원의 부문별 자원균형(material balancing)을 강조하고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사업들을 경제 전반에 연계하였다.

8) 김광석·김준경(1995).

제3차 경제개발계획(1972~76)은 기존의 자본관리계획에서 정책계획으로 변경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경제개발계획의 성격 및 기능의 변화는 자본관리계획에서는 민간투자사업까지도 포괄하고 있었으나 실제 민간투자사업들은 구심점 없이 실행되고 있음을 인식한 데 기인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부정책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민간기업들의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계획이 추구하는 주요 정책과 정책방향들을 공표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방향을 변경하였다.

제4차 경제개발계획(1977~81)에서는 경제기획원 안에 심사분석국을 설치하여 모니터링과 Follow-up 심사 업무를 담당토록 하였다. Follow-up 심사평가 결과가 예산과 연계됨으로써 평가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써 경제기획원은 기획, 예산, 심사평가의 세 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하여 선도부처로서의 위상과 권한을 확보하여 경제개발계획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었다. 동시에 계획 수립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목표설정에 보다 많은 국민들의 생각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제5차 5개년 개발계획(1982~86)부터는 명칭을 ‘경제개발계획’에서 ‘경제사회발전계획’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명칭 변경은 계획의 성격이 변경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이전의 성장 위주의 경제개발에서 성장 외에도 성장과정에서 발생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한다는 것이다. 또한 5차 계획부터 개발계획이 유도계획(indicative plan)으로 전환되었다는 것도 특기할 만하다.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87~91)은 명시적으로 그간의 5개년계획 성과를 평가하고 한국의 경제규모 및 대외의존도의 증가와 대내외 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를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기본목표를 ‘능률과 형평을 토대로 한 경제선진화와 국민복지의 증진’으로 설정하였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경제사회의 제도 및 질서의 선진화, 산업구조의 개편과 기술입국의 실현,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선정하였다.

신경제 5개년계획(1993~97)은 1986~88년 3저 호황 이후에 경제활력이 하락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지시와 통제가 아닌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창의력의 발휘로부터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찾으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신경제 5개년계획을 통해서 국민의 참여와 창의가 유발될 수 있도록 재정, 금융, 행정 등 각 분야의 제도를 개혁하고 각 경제주체의 직업정신과 경제윤리를 정립하는 의식개혁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하였다.

〈표 1-7〉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 요약

| 기간 | 주요 정책방향 | 알제리의 시사 |
|-------------------|--|--|
| 1차 1962 ~6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 석탄 등 에너지공급원 확보 - 농업생산력 증대에 의한 농가소득 상승과 국민경제 구조적 불균형 시정 - 기간산업 확충과 사회간접자본 충족 - 유휴자원 활용, 고용 증가와 국토 보전 및 개발 - 수출 증대를 주축으로 국제수지 개선 - 기술진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부처 EPB 설립(1962) - 고용 증가 - 수출 주도 공업화 - 기술진흥 -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Follow-up 시행 - KIST 설립(1966) |
| 2차 1967 ~7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 자급자족과 산림녹화, 수산개발에 주력 - 화학, 철강, 기계공업을 건설하여 공업고도화 기틀 마련 및 공업생산 배가 - 7억달러 수출 달성 및 수입대체 촉진으로 획기적인 국제수지 개선 기반 - 고용 증대 및 가족계획 추진으로 인구팽창 억제 - 국민소득 획기적 증가 및 영농 다각화로 농가소득 향상에 주력 - 과학 및 경영기술 진흥, 인적자원 배양으로 기술수준과 생산성 제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DI 설립(1971) - 인적자원 배양 - 생산성 향상 - 인적자원 개발 |
| 3차 1972 ~7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 증산으로 주곡 자급, 농어민 소득의 적극적 증대, 경지정리 및 기계화 촉진 - 농어촌 보건 및 문화 시설 충실화, 농어촌 전화 및 농어촌 도로망 확충 - 무역수출 목표연도 35억달러 달성 등 국제수지 개선 - 중화학공업 건설로 공업의 고도화 - 과학기술 급속 향상, 교육시설 확충으로 인력을 개발하여 고용 최대한 증대 - 전력, 교통, 보관, 하역, 통신 등 사회기초시설의 균형 잡힌 발전 - 4대강 유역 개발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 개발, 수출공업단지 등 개발단지 조성으로 지역개발 촉진, 공업과 인구를 적정히 분산 - 주택과 위생시설 및 사회보장 확충, 근로환경 개선으로 국민 복지 및 생활 향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계획 - 인적자원 개발 - 개발단지 조성 - 국민 복지 및 생활 향상 |
| 4차 1977 ~8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력성장구조의 실현 (1) 투자재원의 자력조달 (2) 국제수지의 균형 (3) 산업구조의 고도화 - 사회개발의 촉진 - 기술의 혁신과 능률의 향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혁신 - 선도부처에서 계획, 예산, 성과평가 등 3대 기능 보유 - 사회개발 - 기술혁신 |
| 5차 1982 ~8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안정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물가를 10% 이내에서 안정, 계획기간 전반까지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을 대폭 정비 - 7~8%의 지속적 성장 달성을 위해 투자효율 극대화 및 저축 증대 - 경쟁을 촉진하여 시장기능 활성화 - 수출 주도 전략을 지속, 대외개방정책 적극화 - 국내의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비교우위산업 육성 - 국토 균형개발, 환경보전 - 국민 기본수요 충족, 사회개발 적극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도계획 - 물가안정 - 투자효율 극대화 - 시장기능 활성화 - 수출 주도 - 대외개방 - 비교우위산업 육성 - 국토균형발전 - 사회개발 |

〈표 1-7〉의 계속

| | 기간 | 주요 정책방향 | 알제리의 시사 |
|-----|-------------|--|---|
| 6차 | 1987 ~9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적정 성장의 지속 - 물가안정기조의 견지 - 국제수지 흑자기조의 정착과 외채부담 완화 - 산업구조조정 촉진과 기술입국의 실현 - 지역 간 균형발전과 농어촌 종합개발 - 국민복지 증진과 형평 제고 - 시장경제질서의 창달과 정부기능의 재정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 확대 - 지역균형발전 - 국민복지 증진 - 시장경제질서 창달 |
| 신경제 | 1993 ~9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력 및 재정효율성 강화를 위한 개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도입을 통한 조세부담률 확대 2) 재정조달구조 개선 3) 금융소득종합과세 도입 및 상속세, 증여세 개혁 - 금융개혁 추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리 자율화 및 정책금융 축소 2) 각종 여신규제 축소 또는 폐지 3) 외환시장 및 자본시장 국제화 촉진 4) 금융실명제 시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효율화 - 금융개혁 - 외환시장 및 자본시장 국제화 추진 |

자료: National Archives Korea(<http://www.archives.go.kr>); 한국개발연구원(2013e)을 참조함.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기존 계획과 실제 성과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전반적인 경제의 성장 및 구조 변화 경로를 설정하고 유도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된다. 단편적으로 경제성장률의 경우 오일쇼크가 있었던 3~4차 5개년계획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간에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표 1-8〉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 성과

| 구분 | 기간 | GDP성장률 | | 물가성장률 | 경상계정 |
|-----|---------|--------|-----|-------|------|
| | | 목표 | 달성 | | |
| 1st | 1962~66 | 7.0 | 7.8 | 16.3 | - |
| 2nd | 1967~71 | 7.0 | 9.6 | 12.7 | - |
| 3rd | 1972~76 | 8.6 | 8.0 | 16.0 | -5.2 |
| 4th | 1977~81 | 9.2 | 6.2 | 18.6 | -4.7 |
| 5th | 1982~86 | 7.6 | 8.7 | 3.6 | -0.6 |
| 6th | 1987~91 | 8.2 | 9.4 | 6.8 | 2.7 |
| 7th | 1993~97 | 7.0 | 7.1 | 5.0 | -1.6 |

자료: 한국개발연구원(2013e); World Bank, WDI.

그렇지만 한국의 5개년 개발계획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정부가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인적자원 개발에 노력한 결과 높은 성장이 가능하였지만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은 별다른 효과가 없었거나 자원배분을 왜곡하여 오히려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 도 있다.⁹⁾ 예를 들어 한국의 관료들은 1970년대에 중화학공업을 육성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금융시장 개입을 통한 강압적인 신용배분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Borensztein and Lee(1999)는 정부개입이 금융시장의 외부성이나 정보의 비대칭과 같은 시장실패를 보정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정부실패 비용이 더 컸다고 주장하였다.

나. 한국 경험의 시사점¹⁰⁾

알제리 5개년계획(2015~19)이 일종의 투자계획이 아닌 경제·사회 개발계획의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점에서는 한국의 1차 및 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관계되며, 알제리의 소득수준 측면에서는 한국의 5차 및 6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관련된다.

한국의 개발계획 경험이 알제리에 주는 시사점을 기관, 정책, 제도, 인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관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선도부처인 경제기획원의 설립을 들 수 있다. 경제기획원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으로 국가발전계획을 작성하였고 예산편성권과 성과평가 기능을 보유하고 이를 연계하여 계획을 집행하였다. 또한 정책연구기관인 KDI를 설립하고 이를 활용하였다. KDI는 정책연구 외에도 정부와 국민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외에 KIST를 설립하여 연구개발 및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KOTRA를 설립하여 기업들에 수출 관련 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수출진흥을 뒷받침하였다.

둘째, 정책 측면에서는 성장지향적 경제개발을 추진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사회개발 성격의 5개년계획을 수행한 알제리와 대별되는 점이다. 한국은 자원빈국이며 소규모 개방경제여서 성장을 위해 수출진흥정책을 취했다. 공업화정책은 크게 수입대체 공업화와 수출지향적 공업화로 대별될 수 있다. 수출지향적 공업화를 선택했던 동아시아 경제는 성장한 반면, 수입대체 공업화를 추구했던 남미 국가는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데 실패했던 경험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1980년대에 들어 정부는 그동안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지양하고 대외개방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공기업이 민간부문에 비해 비효율적임을 인식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셋째, 제도 측면에서는 비용-편익 분석을 포함한 예비타당성제도와 같은 사전평가에 기초하여 정부지출이 이루어졌으며, 계획의 사전평가 및 사후평가 제도가 시행되었다. 또한 공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공기업평가제를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넷째, 인적 측면에서는 정치적 리더십과 핵심 경제관료의 우수성을 들 수 있다. 먼저 최고통치자의 경제성장에 대한 명확한 의지가 경제개발계획 초창기에 매우 긍정적으로

9) 고영선(2010); World Bank(1993).

10) 알제리 5개년계획(2015~19)에의 구체적인 사항은 제5절 정책수단 및 실행계획에 제시한다.

작용하였다. 예를 들어 1965년 1월부터 1979년 말까지 총 146회가 개최된 월간 경제동향 보고회의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참석했으며 1965년 1월 이래의 월간 수출진흥확대회의에도 자주 참석함으로써 경제기획원이 실질적으로 경제개발계획을 주도하는 데 힘을 실어 주었고 수출드라이브정책이 경제개발전략의 핵심임을 각인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다음으로 관료의 우수성을 들 수 있는데, 엘리트 경제관료는 치열한 공무원시험을 통하여 선발된 상위권 대학 출신의 우수한 인재들이었다. 이들은 선진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KDI 연구진들과 함께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그 외에도 개발계획의 성격 변화를 들 수 있는데, 초창기에는 경제기획원이 주도적으로 개발계획을 만들었지만 이후 정책기획으로 나아갔으며 이후 유도계획으로 발전시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시켜 나아갔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는 경제발전이 기술적 조건 혹은 요소부존자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회의 신뢰와 구성원들의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감, 또 구성원들 간의 협력관계 등이 사회·경제의 발전동학(dynamics)의 중요한 요인인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제4절 알제리 5개년계획(2015~19)과 비전 2030

가. 알제리 비전 2030

알제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2013d)에서는 구체적인 장기 시나리오를 제시하기 위해 우선 1991~2007년 기간 알제리 성장회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알제리의 GDP 성장은 6%를 상회하는 높은 자본성장률에 크게 기인하며, 노동 역시 2000년대 들어 연평균 5%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며 GDP 성장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의 경우 1990년대와 2000년대 모두 연평균 증가율이 -3.7%로 자본과 노동의 높은 증가율이 GDP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비전 2030에서는 이러한 알제리 성장회계분석 결과와 그간의 노동공급 증가 시나리오 및 투자를 자료에 기초하여 자본스톡 증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나리오별 알제리 GDP 증가율 및 1인당 GDP 증가율을 전망하였다. GDP 증가율 및 1인당 GDP 증가율 전망을 위해서 노동 증가율은 UN의 인구전망에 알제리의 2030년 고용률 목표치를 반영하였다. 2010년 OECD 국가들의 평균 고용률은 55.3%로 알제리가 2050년까지 이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알제리 2030 고용률 목표는 46.9%가 된다.

그러면 2030년 알제리의 취업률을 46.9%로 가정한 실업률 시나리오를 살펴보자. 2010년 OECD 평균 노동시장참가율 60.4%를 2050년 알제리 노동참가율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2030년 알제리 노동참가율은 51.8%가 된다. 이에 따라 알제리의 실업률은 2010년 10.9%에서 2030에는 9.5%로 낮아지게 된다.¹¹⁾ 한편, 노동소득분배율의 2030년 목표¹²⁾도 설정하였다.

투자 증가율 시나리오에 기초하여 자본 증가 시나리오를 작성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투자율은 High, BAU, Low의 세수준을 가정했는데 이는 투자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2005~09)의 투자율 26%, 중간 시기(2000~09)의 투자율 23.5%, 그리고 가장 낮은 시기(2000~07)의 투자율 21.8%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시나리오에 기초한 비전 2030의 시나리오별 GDP 증가율 및 1인당 GDP 증가율 전망은 다음과 같다.

〈표 1-9〉 알제리 비전 2030의 시나리오별 GDP 증가율 및 1인당 GDP 증가율 전망(2010~30)

(단위: %, 1990 Int. GK\$)

| | I/GDP I/GDP | TFP growth scenarios | | | | | |
|-----------------------------|----------------|----------------------|-----|-----|------|------|------|
| | | 2.0 | 1.0 | 0.0 | -1.0 | -2.0 | -3.7 |
| GDP growth | High | 9.1 | 8.1 | 7.1 | 6.1 | 5.1 | 3.3 |
| | BAU | 8.4 | 7.4 | 6.4 | 5.4 | 4.4 | 2.6 |
| | Low | 7.9 | 6.9 | 5.9 | 4.9 | 3.9 | 2.1 |
| GDP per capita growth | High | 8.1 | 7.1 | 6.1 | 5.1 | 4.1 | 2.3 |
| | BAU | 7.3 | 6.3 | 5.3 | 4.3 | 3.3 | 1.6 |
| | Low | 6.9 | 5.9 | 4.9 | 3.9 | 2.9 | 1.1 |

주: I/GDP: High=26.0%, BAU=23.5%, Low=21.8%.
자료: 한국개발연구원(2013d).

나. 비전 2030과 알제리 5개년계획(201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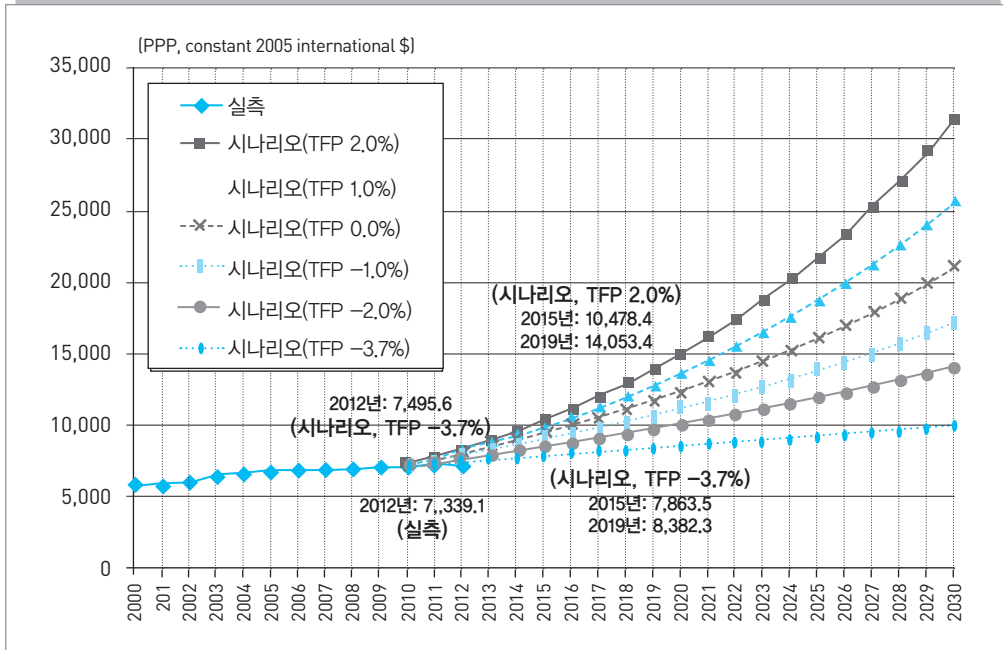
알제리의 구체적인 5개년계획 목표 수립을 위해서는 먼저 비전 2030에서 제시한 2015~19 1인당 GDP 목표치와 2010년 이후 실제 1인당 GDP 증가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알제리 2013년 1인당 GDP는 7,728.1달러로 비전 2030의 시나리오에서 투자율 BAU 가정하에 TFP가 가장 낮은 -3.7% 증가 시의 수준을 약간 상회하고 있다. 2013년 현재 수준으로 TFP 증가율 -3.7% 시나리오를 따를 경우 알제리 1인당 GDP는 매년 약 1.6%씩 증가하여 2015년 7,616.1달러, 2019년 8,382.3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고성장 시나리오인 TFP 증가율 2.0%의 1인당 GDP 수준은 2015년 10,478.4달러, 2019년 14,053.4달러 수준이 된다.

1) 실업률=1-(취업률/노동참가율)

2) 2010년 OECD 국가들 중 알제리의 2030년 고용률 목표와 가장 유사한 국가는 터키이며, 알제리의 2030년 노동소득분배율 목표는 2010년 터키 노동소득분배율 수준인 0.4를 달성하는 것으로 설정함.

[그림 1-12] 알제리 비전 2030의 1인당 GDP 전망 및 실측값 비교



주: 투자를 시나리오는 2000~09년 평균 수준인 BAU를 적용한 경우임.
 자료: World Bank, WD, 'GDP per capita, PPP(constant 2005 international \$)' 및 한국개발연구원(2013d) 자료로 계산.

<표 1-10> 알제리 비전 2030의 1인당 GDP 전망 및 실측값 비교

| Year | 실측 | TFP 증가율 시나리오(%) | | | | | |
|------|---------|-----------------|----------|----------|----------|---------|---------|
| | | 2.0 | 1.0 | 0.0 | -1.0 | -2.0 | -3.7 |
| 2010 | 7,260.0 | - | - | - | - | - | - |
| 2011 | 7,296.4 | 7,812.8 | 7,735.1 | 7,658.1 | 7,581.9 | 7,506.4 | 7,376.8 |
| 2012 | 7,339.1 | 8,407.7 | 8,241.2 | 8,078.0 | 7,918.1 | 7,761.3 | 7,495.6 |
| 2013 | 7,728.1 | 9,047.9 | 8,780.5 | 8,521.0 | 8,269.2 | 8,024.8 | 7,616.3 |
| 2014 | - | 9,736.9 | 9,355.1 | 8,988.3 | 8,635.9 | 8,297.3 | 7,738.9 |
| 2015 | - | 10,478.4 | 9,967.3 | 9,481.2 | 9,018.8 | 8,579.0 | 7,863.5 |
| 2016 | - | 11,276.3 | 10,619.6 | 10,001.2 | 9,418.7 | 8,870.2 | 7,990.1 |
| 2017 | - | 12,134.9 | 11,314.5 | 10,549.6 | 9,836.4 | 9,171.4 | 8,118.8 |
| 2018 | - | 13,059.0 | 12,055.0 | 11,128.1 | 10,272.6 | 9,482.8 | 8,249.5 |
| 2019 | - | 14,053.4 | 12,843.8 | 11,738.4 | 10,728.1 | 9,804.7 | 8,382.3 |

주: 1) 투자를 시나리오는 2005~09년 평균 수준인 BAU를 적용한 경우임.
 2) 2013년 실측치는 IMF에서 발표한 2013년 5.3% 성장률을 적용한 것임.
 자료: World Bank, WDI, 'GDP per capita, PPP(constant 2005 international \$)' 및 한국개발연구원(2013d) 자료로 계산.

비전 2030의 시나리오에서 설정한 투자율 시나리오와 최근 알제리 수준을 비교해 보면 투자율은 26.0%의 High 시나리오¹³⁾를 상회하고 있다. 고용률의 경우에는 2011년 37.8%로 오히려 2010년보다 감소하여 시나리오에서 가정¹⁴⁾한 2011년 수치인 39.0%에 못 미치고 있다.

한편, World Bank 자료에 의하면 2012년 현재 알제리의 1인당 GDP 수준은 7,339달러이며, 알제리 비전 2030에 의하면 2015년 알제리 1인당 GDP는 약 8천~1만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표 1-11〉 1인당 GDP 추이 비교

(단위: 1990 Int. GK\$)

| 연도 | 알제리 | 한국 | 칠레 | 말레이시아 | 노르웨이 |
|------|---------|----------|----------|----------|----------|
| 1980 | 6,141.4 | 5,543.6 | 5,639.2 | 5,063.4 | 26,205.4 |
| 1985 | 6,621.8 | 7,547.4 | 5,439.9 | 5,699.1 | 30,377.4 |
| 1990 | 5,988.7 | 11,382.6 | 6,913.6 | 6,873.7 | 32,362.7 |
| 1995 | 5,429.4 | 15,761.3 | 9,595.4 | 9,496.2 | 37,811.6 |
| 2000 | 5,854.1 | 18,730.4 | 10,990.3 | 10,619.0 | 43,975.9 |
| 2005 | 6,942.2 | 22,783.3 | 12,773.4 | 12,130.6 | 47,626.3 |
| 2010 | 7,260.0 | 26,774.0 | 14,443.4 | 13,766.5 | 46,773.9 |
| 2012 | 7,339.1 | 27,990.8 | 15,847.6 | 14,774.6 | 47,546.6 |

자료: World Bank, WDI, 'GDP per capita, PPP(constant 2005 international \$)'.

한국의 경우 1984년 1인당 GDP가 7,136.6달러로 알제리의 2012년 현재 수준과 유사하다. 그리고 비전 2030의 2015년 알제리 수준에 해당하는 시기는 제5차~제6차 5개년계획이 시행되던 시기(1982~91)였다. 제5차 5개년계획(1982~86)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개발계획을 경제사회발전계획으로 변경한 점이다. 이는 성장우선정책과 더불어 사회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알제리 비전 2030에서 제시한 내포적 성장(inclusive growth)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또한 5차 계획은 경제기획원 대신 주무부처별로 정책협의회를 운영하여 계획내용을 조정하고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본격적으로 유도계획(indicative plan)의 성격을 띠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즉, 계획지침 작성부터 부문계획 작성 등 여러 단계에서 각계 전문가와 협의를 거치는 등 민간인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여 국민적 합의에 입각한 계획을 작성코자 하였다.

제5차 5개년계획에서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사회발전을 반영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정부가 목표로 삼았던 자율화 및 사회발전 분야의 성과는 미미하였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13) 알제리 2005~09년 평균 수준을 High 시나리오로 가정함.

14) 알제리가 2050년에 2010년 OECD 평균 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한 수치임.

제6차 5개년계획(1987~91)은 과거 5개년계획 성과 평가를 토대로 ‘능률과 형평을 토대로 한 경제선진화와 국민복지의 증진’을 기본목표로 설정하였다. 6차 계획은 다양한 목표들 간에 상충관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조화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실제 집행에서 목표와 목표, 목표와 정책, 정책과 정책 간의 조화와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표 1-12〉 한국의 5개년계획 성과

| | 시작연도 / 종료연도 | 연평균 GDP 증가율 (annual %) | 1인당 GDP (PPP, constant 2005, \$) | 실업률 (%) | 투자율 (% of GDP) | 물가상승률 (CPI, %) |
|-----|-------------------|------------------------------|--|------------|-------------------|-------------------|
| 제5차 | 1982 | 8.3 | 6,123.3 | 4.4 | 28.6 | 7.2 |
| | 1986 | 8.3 | 8,272.2 | 3.8 | 28.4 | 2.8 |
| 제6차 | 1987 | 9.6 | 9,104.3 | 3.1 | 29.4 | 3.0 |
| | 1991 | 9.6 | 12,337.0 | 2.4 | 38.9 | 9.3 |

제5절 정책수단 및 실행계획

알제리의 5개년계획이 성공하려면 정책 수립, 집행 및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 수립은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하는 좋은 정책 만들기가 관건이다. 정책의 효율적 집행은 정치적 리더십과 실천의지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가. 좋은 정책 만들기

1)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정책 수립¹⁵⁾

알제리의 경우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비전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원부국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천연자원 수입의 세대 간 배분이다(한국개발연구원[2013d]). 특히 알제리는 젊은 인구의 구성비가 높다는 점에서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알제리에서는 도시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도시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어 지역 간 형평성의 제고 역시 중요하다.

지속적인 성장은 이러한 사회 갈등요소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수단이 병행될 때 비로소

15) 한국개발연구원(2013d)을 참고하여 작성함.

가능하다. 따라서 알제리의 경우도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 거버넌스와 제도: 우수한 정부구성원¹⁶⁾

지속적인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제도, 투명한 법치, 유능하고 헌신적인 관료조직, 그리고 정치적 안정 등이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제도의 질적 수준이 중요하며 좋은 거버넌스가 이러한 제도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¹⁷⁾ 그러나 알제리의 경우 객관적인 지표들로 파악해 볼 때 이러한 좋은 거버넌스 구조와 제도적 기반이 많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World Values Survey(2002년)에 의하면 알제리 사회의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World Economic Forum에 의하면 알제리 제도의 질적 수준은 148개 국가 중에서 135위¹⁸⁾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가 경제·사회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역량 있고 혁신적인 인재들이 정부구성원으로 채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알제리 정부는 한국의 행정고시제도를 참고하여 유사한 시스템을 통해 선도부처 혹은 경제개발과 관련된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할 간부급 엘리트 공무원들은 별도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알제리 정부는 실제로 이와 유사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알제리 국립행정학교(the National School of Administration)는 2005년 개혁을 통해 프랑스의 ENA와 같은 엘리트 관료를 육성하는 전문적 행정대학원으로 거듭난 바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엘리트 관료 육성제도의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한국개발연구원[2013d]).

3) 국가승인통계제도: 근거에 기초한(evidence-based) 정책 수립

OECD는 근거에 기초한(evidence-based)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효율적인 국가 운영과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단할 수 있는 통계적 기반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의 미래 비전을 설정하고 향후 환경 변화를 예측함에 있어 통계의¹⁸⁾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정책 수립에 있어 필요한 통계적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통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국가승인통계 제도를 운영하여 통계생산기관이 생산하는 통계에 대해 유사·중복성, 적정성 등을 판단하여 승인하고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013년 12월 현재 한국의 국가승인통계는 389개 기관에서 작성하는 923종의 통계가 있다.¹⁹⁾ 또한 통계청에서는 이들 통계에 대하여 신뢰도 제고, 통계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통계조정과 통계 품질 진단 등의 관리·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상시적인 통계 수요조사를 통해 국민적 수요를 반영하고 통계에 기반한

16) 한국개발연구원(2013d)을 참고하여 작성함.

17) Brady and Spence(2010).

18) World Economic Forum(2013.)

19)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정책결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러한 국가승인통계제도의 특징은 하향식 통계 작성에서 벗어난 상향식 통계 수요의 반영 및 관리로 정책 결정에 필요한 보다 많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다. 한국의 경우 국가승인통계 신청 및 승인은 먼저 국가 통계 주관기관인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통계에 대해 시행하고 그 후 중앙부처에서 발표하는 통계, 기타 기관에서 발표하는 통계 순으로 국가승인통계 심사를 진행하였다.

4) 알제리개발연구원(Algerian Development Institute: ADI)의 설립²⁰⁾

알제리 경제의 미래 비전을 담은 중장기 전략 및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정책방안의 수립을 위해서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다양한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설립되어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중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은 경제 전반에 관한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5개년계획 수립 및 정책 입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1년에 설립되었다. KDI는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과정에서 비전 및 목표 설정, 현황 진단, 정책대안 제시 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알제리 정부도 이러한 연구기관의 설립 필요성을 절감하고 알제리개발연구원(이하 ADI) 설립방안 연구를 의뢰하였다. 한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ADI는 관료들의 관점과는 또 다른 입장에서 정책분석과 새로운 정책대안 제시 등으로 알제리의 경제발전 청사진을 그려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단기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책 이슈에 대해서도 시의적절한 의견 제시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국민적 합의를 유도할 수 있다.

KDI는 거시계량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운용하여 국가의 장단기 경제를 전망해 왔다. ADI 역시 알제리 거시계량모형을 구축하여 5개년계획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단기 경제전망도 수행하여 정부 및 기업의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

5) 산업정책 수립: 산업다변화 및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경제개발 초기에는 노동집약형 산업을 육성하여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현재 알제리의 임금은 소득수준 대비 상대적으로 높다. 그리고 중국의 저임금에 기초한 노동집약형 산업의 수출로 인해 노동집약형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단순 노동집약형 산업보다는 기술이 뒷받침된 Non-hydrocarbon 산업 육성 및 이에 기초한 일자리를 창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산업다변화를 통한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이 관건이다.²¹⁾

21)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4장을 참조.

나. 정책 집행

1) 정책조정기구: 공공과 민간 간의 조정²²⁾

알제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산업구조 다변화를 비롯한 높은 강도의 구조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구조개혁은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 리더십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정부조직, 경제·사회 발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한국개발연구원[2013d]). 한국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 경제기획원(Economic Planning Board) 설립 그리고 5개년계획을 통해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 알제리의 경우에도 국가 차원의 구조개혁과 국가비전 수립, 정책목표 설정 등을 위해 부처 간 연계 및 정책조정을 중추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선도부처의 설립이 필요하다. 산업다변화 등의 구조개혁 수행을 위해서는 부문별 계획 수립과 예산배분을 둘러싼 부처 간 혹은 민간 대 민간, 민간 대 공공의 대립을 장기적인 계획과 목표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조율할 수 있는 역량과 권한을 지닌 기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2) 정치적 리더십

성공한 개도국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 국가의 경제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리더십이다. 한국의 경제개발이 성공한 요인 역시 박정희 정부 특유의 정치적 리더십을 꼽을 수 있다. 박정희 정부 정치적 리더십의 가장 큰 특징은 철저한 성과지향(result-driven)과 성공경험을 보유한 인재를 적극 활용하였다는 점(pick the winner)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1년 경제기획원을 설립하여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독립적으로 경제개발계획을 수립·집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예산편성권을 부여하였고, 성과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경제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이 주재하는 월간 경제동향보고회의에 1965년 1월부터 1979년 말까지 총 146회 중 145회 참석하였고, 1965년 1월 이래의 월간 수출진흥확대회의에는 152번의 회의중 147번의 회의에 참석함으로써 5개년 경제개발계획에 국가의 역량을 결집시켰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1966년)과 KDI(1971년)를 설립하고 강력한 지원과 수월성을 강조하여 동 기관들이 개발계획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비석유 부문 (Non-hydrocarbon) 수출 촉진

알제리는 자원의존형 경제에서 산업다변화가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즉, 비석유 부문의 성장이 필수적인데, 이 중 서비스업은 비교역재로서 생산성이 낮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제조업 육성이라 할 수 있다. 제조업 육성 관련하여 수입대체 공업화와 수출지향적 공업화를 생각할 수 있다. 수입대체 공업화를 추진한 남미는 실패한 반면에 수출지향적 공업화를 추진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성장을 지속해 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비석유 부문의 수출지향적 공업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2) 한국개발연구원(2013d)을 참고하여 작성함.

한국은 자원빈국이면서 소규모 개방경제여서 수출지향적 공업화를 지향하였으며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시행하는 동안 거의 매 기간 높은 수출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보였다. 당시 한국의 수출진흥정책에서 가장 특징적인 수단 중 하나는 수출진흥확대회의의 운영이다. 수출진흥확대회의는 수출지향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고 성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평가하기 위해 1965년 2월에 도입되었다. 이후 거의 매월 개최되어 1979년까지 개최된 152회의 회의 가운데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147회 참석하였다.

수출진흥확대회의는 수출 목표를 매월 점검하고 연간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를 결정하는 회의였다. 연간 수출 목표는 부처별, 해외공관별, 업종별, 기업별 등으로 할당되었다. 그리고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는 목표치의 달성도가 매월 점검되었다. 이러한 정기적인 평가시스템이 바로 높은 수출 목표를 꾸준히 달성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이라 볼 수 있다(최상오[2010]).

4) 알제리과학기술연구원(Algeri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IST) 설립

한국은 경제발전 초기 KDI의 설립보다도 이전인 1966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설립하였다. 이는 이미 1962년 제1차 과학기술진흥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 육성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자 했던 박정희의 과학기술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KDI와 유사하게 KIST의 경우도 해외에서 활동하던 우수한 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연구진에 매우 높은 보상이 제공되었다. 이러한 노력에 의해 연간 20~30명가량의 과학기술자를 초빙하였고, 이는 곧 한국의 당시 과학기술 연구개발수준을 단시간에 높임으로써 과학기술역량 강화에 큰 기여를 하였다.²³⁾ KIST는 한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정부출연연구소로 KIST 설립 경험과 성공적 운영은 이후 다양한 전문분야별 정부출연연구소 설립의 계기가 되었다. KIST는 과학기술 불모지였던 당시 한국에서 선진 과학기술을 학계와 민간에 보급하여, 경제성장과정에서 빠른 산업화의 촉매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고도의 과학기술수준을 요구하는 중화학공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알제리 역시 천연자원 위주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산업다변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수준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알제리과학기술연구원의 설립이 필요하다.

5) 과학기술 연구특구(Science and Technology Park)

한국은 1960년대 후반 과학기술처와 KIST를 중심으로 초기 국가 과학기술체계를 형성하였고 이는 1970년대 대덕연구단지(Daedeuk Innopolis)를 건설하며 확장되었다. 당시 과학기술처는 연구개발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연구단지의 형성을 구상하였다. 대덕연구단지에 앞서 1971년 4월 서울 홍릉에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한국개발원, 한국과학원, 국방과학연구소, 원자력연구소를 묶어 여러 연구기관을 묶어 서울연구개발단지를 발족시켰다. 서울연구개발단지가 구성되자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대형 전자계산기를 비롯하여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소장의 과학기술정보자료 등 연구시설의 공동활용률이 크게 늘어났다.²⁴⁾

24) 한국개발연구원(2013a), p.79.

과학기술연구특구의 조성은 연구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뿐 아니라 산·학·연 연구개발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성과물의 상용화를 보다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지역 혁신 클러스터의 조성으로 지역 간 균형개발 등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정책적 이점을 지니고 있다.

6)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알제리는 투자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알제리 투자의 대부분은 공공투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은 그에 비례해 높지 않았다. 이는 투자, 특히 공공투자의 효율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투자의 효율성이 낮은 원인 중 하나는 공공투자의 집행이 비용-편익 분석과 같은 사전평가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 금액 이상의 정부지출은 반드시 사전적으로 평가를 받아 통과해야만 정부 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예비타당성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전 사업평가에 기초해 대형 공공투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정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다.²⁵⁾

한국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사범위는 총사업비용이 500억원 이상인 신규 국책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지자체와 민간투자사업, 즉 Public Private Partnership 사업 중 국고 3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 역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는다. 최초에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제도인 예비타당성조사가 주로 인프라 사업을 대상으로 한 반면, 법 제정 후에는 인프라건설 이외에도 연구개발사업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R&D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분야는 KDI 소속 공공투자관리센터(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PIMAC)에서 수행하고 있다.

다. 성과평가

1) 공공기관 성과평가

정책에 대한 평가는 시행한 정책이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한국은 1960년대 초에 정책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한 이래 반세기 동안 눈부신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는데, 바로 정책평가제도가 이러한 경제성장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 한국의 고속성장의 배경으로는 흔히 좋은 정책 수립과 더불어 정책 집행의 효과성을 논한다. 그러나 공정한 성과평가와 그 피드백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수한 정책 수립과 효과적 집행은 가능할 수 없었다.

한국의 공공기관 평가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금관리, 정부지원연구기관 그리고 지방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각 유형별로 평가총괄기관이 있고, 이 총괄기관에서 평가를 실시한 후에 정부평가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공공기관 평가의 최고 평가기관은 정부평가위원회이지만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주무부처가 평가총괄기관으로서 역할을

24) 한국개발연구원(2013a), p.79.

25) 한국개발연구원(2013b), p.36.

수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2) 모니터링 및 Follow-up, 5개년계획 중간 리뷰

한국에서는 1961년에 정책평가제도로 심사평가제도가 최초로 도입되었다. 심사평가제도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과정을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²⁶⁾ 집행기관과 평가기관이 달라야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국무총리실이 심사평가를 담당하였다. 심사평가제도에 의해 당시 모든 중앙정부 부처 및 기관들은 매년 기본운영계획을 마련하여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조정실’에 제출해야 하고 승인을 얻게 되어 있었다. 또한 각 부처와 기관들은 승인된 계획을 집행한 후 자체적인 모니터링과 기획조정실의 모니터링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기획조정실이 예산편성과정을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 부처 및 기관들에 대한 조율이나 조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경제기획원 산하에 심사분석국이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서 경제기획원은 기획, 예산 그리고 성과평가의 세 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하게 되었다(한국개발연구원[2013c]). 또한 5개년계획 중간 리뷰도 이루어졌다.

3)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품질진단

국가승인통계제도는 통계의 상향식 작성을 통해 통계에 근거한 정책수립에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그러나 다양한 주체들에 의한 국가통계 작성은 자칫 통계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켜 통계의 정책 활용도를 오히려 저해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고자 한국에서는 국가승인통계의 품질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통계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기 및 수시, 자체 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핵심 통계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 통계품질진단은 통계가 작성되고 공표되기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품질관리기반,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세부 작성절차별 체계, 수집자료의 정확성, 통계자료 서비스 등의 부문으로 나누어 진단하고 통계의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하여 품질 개선방향 등을 제시한다. 그리고 진단을 통해 도출된 개선과제에 대해 개선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한다.

한국의 경우 통계청에서 통계품질진단 과정을 주관하며 필요시 해당 통계 전문가와 함께 수행한다. 먼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통계에 대해 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후에 중앙부처에서 발표하는 통계, 기타 기관에서 발표하는 통계의 순서로 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였다.

26) 한국개발연구원(2013c).

라. 액션 플랜(Action plan)

〈표 1-13〉 액션 플랜: 정책 만들기

|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정책 수립 | (2015~19) 계획 전국 공청회 | 민관 정책간담회 실시 | 민관 정책간담회 실시 | (2020~24) 계획 민관 정책간담회 | (2020~24) 계획 전국 및 지역 공청회 |
| 거버넌스와 제도 | 선도부처 설립 | 예산-평가 연계 | 예산-평가 연계 | (2020~24) 계획-예산-평가 연계 | (2020~24) 계획-예산-평가 연계 |
| 국가승인통계제도: 근거에 기초한 (evidence-based) 정책 수립 | 국가승인통계 지정 요건 공표, 통계청 통계 국가승인 | 중앙정부 통계 국가승인 | 기타 기관 통계 국가승인 | 확대 지속 | 확대 지속 |
| ADI | ADI 설립 | 거시계량모형 개발 | 거시계량모형 검증 | (2020~24) 계획 활용 | (2020~24) 계획 활용 |
| R&D 분야 개선 | R&D 통계 작성 | R&D 포털시스템 | R&D 포털시스템 | 민간 R&D 지원 | 민간 R&D 지원 |

〈표 1-14〉 액션 플랜: 정책 집행

|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정책조정기구 | 선도부처 설립 | 중간 리뷰 | 중간 리뷰 | (2020~24) 5개년계획 준비 | (2020~24) 5개년계획 발표 |
| 정치적 리더십 | 월별 미팅 참석 | 월별 미팅 참석 | 월별 미팅 참석 | 월별 미팅 참석 | 월별 미팅 참석 |
| 수출진흥 | 월별(분기별) 미팅 (정부+민간) | 미팅(정부+민간), 포상 | 수출진흥기관 설립 | | |
| AIST | 부지 선정, 건설 | 설립 | | | |
| 과학기술단지 | 부지 선정, 건설 | 건설 | 설립 | | |
| 예비타당성 조사 PIMAC (SOC, R&D) | 예비타당성 조사기관 설립 | 중앙정부 지출 | SOC 분야 표준지침 작성 | - 지방정부 지출 - 표준지침 작성 | 정부+민간 지출 |

〈표 1-15〉 액션 플랜: 성과 평가

|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공기업 성과평가 시스템 | 공기업 평가기준 발표 | 소수 공기업 대상 평가, 평가기준 개정 | 평가대상 공기업 확대 및 평가, 평가기준 개정 | 평가대상 공기업 확대 및 평가 | 평가 결과 대외 공표 및 포상 |
| Follow-up evaluation | | 평가 | 평가 | 평가 | 평가 |
| 5개년계획 중간평가 | | 준비 | 5개년계획 중간평가 | | |
| 국가승인통계 품질진단 | | 품질진단기준 발표 | ONS 통계 품질진단 | 중앙정부 통계 품질진단 | 기타 기관 통계 품질진단 |

- 강광하 · 이영훈 · 최상오, 『한국 고도성장기의 정책결정체계: 경제기획원과 정책추진기구』,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8.
- 고영선, 『한국경제의 발전과정』, 『한국경제 60년사』, 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0.
- 김광석 · 김준경, 『경제발전의 종합평가』, 차동세 · 김광석 편, 『한국경제 반세기: 역사적 평가와 21세기 비전』, 한국개발연구원, 1995.
- 최상오, 『한국의 수출지향 공업화와 정부의 역할, 1965~79』, 『경영사학』, 제25집 제4호(통권 56호), 2010.
- 한국개발연구원,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 경제발전 초기 과학기술 도입과 내재화 방안』, 2013a.
- _____,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2013b.
- _____,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정부성과평가 체계와 운영경험』, 2013c.
- _____, 『알제리 국가비전 2030 수립 지원』, 2013d.
- _____, 『2012 경제협력국가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리비아』, 2013e.
- Algeria, “5th Year Plan Development”, presented in KSP Algeria–Korea for 2013, September 2013a.
- Algeria, “L’experience Algerienne en Planification: A Travers les Programmes de Developpement,” a material presented at KSP dialogue meeting, 2013b.
- Borensztein, E. and JW Lee, “Credit Allocation and Financial Crisis in Korea”, 1999.
- Brady, David and Michael Spence (eds.), “Leadership and Growth,”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Commission on Growth and Development, 2010.
- Mahraz, Fatah, “Algeria Five–Year Plan, 2010–2–14,” manuscript, 2013.
- Johnson, Calmers, MITI and Japanese Miracle,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2); “Political Institu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in Frederic Deyo ed.),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Asian Industrialis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 Romer, Paul, “Two Strategies for Economic Development: Using Ideas and Producing Ideas,” Proceedings of the World Bank Annual Conference on the Development Economics, Supplement to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 1992.
- Weil, David N., Economic Growth (3rd ed.), Pearson Addison Wesley, 2013.
- Westphal, Larry E., “Industry Policy in an Export–Propelled Economy: Lessons from South Korea’s Experienc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 Vol. 4, 1990, pp.41~59.
- World Bank, The East Asian Miracle: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 _____. "The Growth Report: Strategies for Sustained Growth and Inclusive Development," Commission on Growth and Development, 2008.
- _____. World Development Indicator.
-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3–2014. "1st pillar: Institutions", 2013.
- CIA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 2013. 8. 24. 접속).
- National Archives Korea (<http://www.archives.go.kr/>, 2013. 8. 24 접속).
- National Office of Statistics, Algeria (<http://www.ons.dz>, 2013. 8. 24 접속).
- Statistics Korea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2013. 8. 24 접속).
- OECD Stats (<http://stats.oecd.org/>, 2013. 8. 24 접속).
- Official Portal of National News Agency of Malaysia
(<http://www.bernama.com.my/bernama/v7/wn/newsworld.php?id=1004375>, 2013. 12 .31 접속).
- UN COMTRADE (<http://comtrade.un.org>, 2013. 8. 24 접속).
-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4
(<http://www.doingbusiness.org/reports/global-reports/doing-business-2014>, 2014. 1. 6 접속).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worldbank.org/>, 2013. 8. 24 접속).

제2장 알제리개발연구원(ADI) 설립 지원방안 연구

박 명 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오 완 근 (한국외국어대학교)

< 요약 >

알제리 정부는 한국의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상응하는 알제리개발연구원(Algerian Development Institute: ADI) 설립방안 연구를 의뢰하면서 다음 네가지 사항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 1) 일국 내에서의 싱크탱크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특히 알제리에서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싱크탱크를 필요로 하는지 검토
- 2) 세계 주요국에는 어떤 형태의 싱크탱크가 있고 이들은 주로 어떤 미션(mission)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연구
- 3) 한국 KDI의 설립배경, 예산 및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의 경험을 설명해 주고 알제리에 주는 시사점 도출
- 4) 알제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어떤 형태의 싱크탱크가 바람직한지 제안하고 ADI의 미션, 지배구조, 그리고 설립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

싱크탱크는 경제, 사회, 군사, 외교 정책 등 관련 분야를 연구하고 특정 입장을 옹호하는 정책연구기관을 지칭한다. 싱크탱크는 각국의 특성에 따라 달리 운영된다. 미국에서는 민간 주도로 운영되는 반면,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에서는 정부지원에 주로 의존한다.

한편, 각국의 싱크탱크는 한 나라의 정책 수립·형성 방식에 따라 그 역할과 기능이 상이하다. 우선 미국은 주요 정책이 의회를 중심으로 수립된다. 그러므로 미국의 싱크탱크는 행정부보다는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이들이 권력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본은 관료집단이 정책 수립과 집행을 모두 주도하므로 싱크탱크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독일의 싱크탱크는 공공재원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독립성을 지닌다. 특히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정책지식을 생산하는 연구협회는 많은 연구기관들로 구성된다. 한편, 중앙집권적 시스템을 운영하는 프랑스에는 전통적인 의미의 싱크탱크는 존재하지 않는다. 프랑스는 정부조직 안에 수많은 공공연구소를 운영하므로 독립적인 조직인 싱크탱크에 대한 별도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의 싱크탱크는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그 역할과 미션이 각기 다르다. 그런데 이들 주요 국가의 경험은 알제리가 원하는 정책연구기관에는 잘 부합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고도성장과정에서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미션을 갖는 한국 싱크탱크의 경험이 알제리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알제리의 ADI 설립방안 관련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ADI는 학술연구를 지향하는 독립 연구기관이 아닌 정책연구기관이어야 한다. ADI는 알제리 정부를 위한 중장기 비전 및 5개년계획 등 중장기 정책연구과제와 더불어 연차 운영계획과 같은 단기 정책과제 연구를 주도해야 한다. 한편, 알제리는 산업다변화 및 경제 전반의 효율성 제고와 같은 경제문제뿐만 아니라 주택, 교육, 보건 등 사회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그러므로 ADI는 설립 초기부터 경제문제와 사회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 감각을 잘 유지해야 한다. 경제 및 사회 문제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에서 ADI의 위상이 중요하다. ADI는 특정 정부의 산하기관이 아닌 특정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연구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ADI의 조직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연구조직의 구성이다. ADI의 주요 미션이 중장기 비전, 5개년계획 수립 지원과 더불어 inclusive growth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ADI의 연구부는 1) 거시정책 및 모형 개발, 2) 산업정책, 3) 사회정책, 4) 국토개발, 5) 글로벌 정책연구를 담당할 5개 부서로 나누는 방안이 바람직할 수 있다. 해외 유사 연구기관 사례를 감안할 때 ADI는 설립 초기 박사급 연구인력 채용 목표를 30명으로 정하고 박사급 연구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원 및 연구행정원 40명, 행정직원 30명을 포함하여 전체 인원 100명 정도로 연구원을 시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ADI 설립을 위해서는 설립준비위원회와 설립추진실무반의 운영을 검토할 수 있다. 설립준비위원회는 연구원의 비전, 설립목적, 업무분야 등을 논의하는 동시에 ADI 설립과정을 감독하고, 설립추진실무반은 설립준비위원회를 지원하여 설립과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제1절 서론

알제리는 2000년대 이후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과를 기록하였다. 고유가 덕분에 크게 증가한 재정수입을 바탕으로 견조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재정수지 및 대외부채는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 특히 2007년 이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급격히 증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제리가 물가, 외환관리, 재정 측면에서 건전성을 유지한 점은

매우 긍정적인 성과로 인정받았다.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실업률을 획기적으로 낮추었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한 결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알제리의 거시경제적 안정성 및 일자리 창출은 석유 수출호조에 따른 재정지원 덕분에 가능하였다. 그러므로 알제리의 거시안정성은 석유 의존성이라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한편, 알제리는 2000년대 이후 정부의 적극 개입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사회적 안정을 이루었지만 그 개입과정의 효율성, 효과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국가의 효율성수준을 가장 잘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이 알제리에서는 마이너스 값으로 나타났다. 이는 알제리의 총체적 효율성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준다(한국개발연구원[2013])

2012년 한국-알제리 간 KSP 사업에서 제시한 비전 목표를 달성하려면 알제리는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개혁과제의 내용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안정기반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경제효율성의 향상을 통해 지속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 전반의 효율성 향상은 특정한 분야만의 개혁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경제 및 사회 분야 전반에 걸친 총체적 개혁을 필요로 한다. 알제리가 현재 수준의 노동과 자본 투입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서 총요소생산성이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다면 7% 이상의 성장률이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알제리가 총체적 효율성 향상이라는 개혁목표를 달성한다면 선진국으로의 진입이라는 장기 목표는 달성 가능하다(한국개발연구원[2013]).

알제리 경제의 전반적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 주도 시장경제 확립이 필수적이다. 시장경제의 정착은 알제리의 가계 및 기업이 보다 시장친화적으로 행동할 때 가능하다. 알제리의 총체적 효율성 증대는 알제리 국민의 시장경제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알제리 국민들이 알제리 현실을 시장경제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시장경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는 알제리 경제의 개혁노력은 결실을 맺기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 5개년계획을 포함한 국가의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 정부, 학계, 재계, 언론, 노동조합, 사회단체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국민계층을 참여시켜 이들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해당사자의 적극적 지지 및 참여 없이는 알제리 경제의 도약이 어렵다는 점에서도 정책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집단의 참여는 중요하다. 국민들에게 유용한 경제정보를 제공하고, 주요 정부정책의 수립을 지원하면서 정부와 국민 간 소통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알제리도 한국의 KDI와 같은 싱크탱크를 필요로 한다.

알제리 정부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싱크탱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한국정부에 정책연구기관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를 요청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알제리 정부는 한국의 KDI에 상응하는 알제리개발연구원(Algerian Development Institute: ADI) 설립방안 연구를 의뢰하면서 다음 네가지 사항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 1) 일국 내에서의 싱크탱크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특히 알제리에서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싱크탱크를 필요로 하는지 검토
- 2) 세계 주요국에는 어떤 형태의 싱크탱크가 있고 이들은 주로 어떤 미션(mission)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연구

- 3) 한국 KDI의 설립배경, 예산 및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의 경험을 설명해 주고 알제리에 주는 시사점 도출
- 4) 알제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어떤 형태의 싱크탱크가 바람직한지 제안하고 ADI의 미션, 지배구조, 그리고 설립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

알제리 정부의 요청을 반영해 알제리개발연구원 설립방안 지원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우선 제2절에서는 싱크탱크의 역할 및 특징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싱크탱크는 무엇을 하는 기관이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싱크탱크는 어떤 특징을 지녔는지 알아보았다. 제3절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에서 싱크탱크는 각각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국의 대표적인 연구기관 사례를 한 개 기관씩 살펴보았다. 제4절에서는 KDI를 중심으로 한국의 싱크탱크 경험을 살펴보았다. KDI가 만들어진 배경, 지배구조, 정부와의 관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는 해외 싱크탱크의 사례 분석 및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알제리 정부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제2절 싱크탱크의 역할 및 특징

“The ideas of economists and political philosophers, both when they are right and when they are wrong, are more powerful than is commonly understood. Indeed, the world is ruled by little else. Practical men, who believe themselves to be quite exempt from any intellectual influences, are usually the slaves of some defunct economist. Madmen in authority, who hear voices in the air, are distilling their frenzy from some academic scribbler of a few years back... [S]oon or late, it is ideas, not vested interests, which are dangerous for good or evil.” (J. M. Keynes, General Theory, pp.383~384)

1. 싱크탱크의 역할과 특성

싱크탱크는 경제, 사회, 군사, 외교 정책 등 관련 분야를 연구하고 특정 입장을 옹호하는 정책연구기관을 지칭한다(McGann[2010]). 그리고 대부분 정책연구기관은 비영리기관이다. 그러나 싱크탱크는 각국의 특성에 따라 달리 운영된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민간 주도로 운영되는 반면, 한국, 일본, 프랑스에서는 정부지원에 의존한다. 싱크탱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싱크탱크는 특정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싱크탱크는 일반적으로 정부정책 수립 및 집행에 깊이 관여한다. 앞서 케인스의 지적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인은 물론 정책담당자 모두에게 기득권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 아이디어이다. 결국 정책 역시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라는 점에서 아이디어를 만드는 집단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디어를 만드는 산실이 바로 대학과 싱크탱크 등의 연구기관이다. 그러므로 공공정책은 싱크탱크를 포함한 학계로부터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²⁷⁾

그러면 싱크탱크라는 아이디어는 어디서 왔는지 알아보자. 최초의 싱크탱크는 영국의 Thomas Clarkson이 1782년 설립한 Society for the Abolition of The African Slave Trade라고 한다(Goodman[2005]). Goodman에 따르면 Thomas Clarkson은 사실에 입각한 조사와 도덕적 주장을 결합하여 노예제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싱크탱크의 효시에 해당하는 단체를 수립하였다고 한다. Reed(2005)에서는 “Powered by an evangelical zeal, Clarkson’s committee would become what might be described as the world’s first think tank, (...) Noble ideas and unassailable facts would be its weapons.”라고 지적하였다.

싱크탱크의 효시는 오래 되었지만 싱크탱크는 20세기 이후 활성화되었다. 20세기 이후 미국의 Manhattan Project, RAND Corporation, Brookings Institution, the Urban Institute 등이 대표적인 싱크탱크로 자리를 잡았다. 싱크탱크의 전도사로는 2차대전 참전 이후 사업가로 성공한 후 싱크탱크의 중요성을 널리 확산시킨 Antony Fisher가 있다. 그는 하이에크의 가르침에 따라 자유주의 사상을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Fisher는 처음에는 런던에서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를 설립하였고, 이는 대처 수상의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하였다. 런던에서의 성공을 토대로 그는 캐나다에서 Fraser Institute를 만들었고, 페루에서는 Institute for Liberty and Democracy를, 그리고 미국에서는 Manhattan Institute 및 National Center for Policy Analysis를 설립하였다. 이후에도 자유주의 사상을 전파하는 싱크탱크 30여 개를 전 세계에 만드는 것을 후원하였다(Goodman[2005]).

싱크탱크가 만든 아이디어는 사회의 변화를 주도한다. 아이디어는 싱크탱크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아이디어는 강연, 세미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전파되다가 마지막으로 정치인과 정당이 이런 아이디어를 사중으로써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계속 되풀이된다. 이와 같이 싱크탱크는 세상의 변화를 주도함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에게 별다른 주목을 못 받고 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된다. 한편으로는 Goodman(2005)의 지적과 같이 싱크탱크가 제시한 아이디어가 정치인에 의해 정책으로 채택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Clarkson가 노예제의 문제점을 보여준 후 26년이 지나서 노예제 반대 입법이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프리드먼의 자유주의 사상에 입각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방안 역시 30여 년이 지나 정책적으로 채택되었다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 아이디어는 국민들 각자가 자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누가 처음에 그런 생각을 만들었는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회과학적 사고방식은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성향이 있으므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누가 최근에 다시 일깨워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아이디어의 중요성은 이미 케인스의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오래전부터 인식되었다. 그러나 정책 아이디어를 상품화하는 일은 비교적 최근 현상이다. 싱크탱크는 자신의 정책 아이디어를 알리기 위해 초기에는 자신이 발표하는 논문의 제목을 크거나 진하게 하고 요약 내용을 만드는 정도였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싱크탱크는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자신의

27) 학계가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친 사례는 수없이 많다. 칠레의 사회보장 민영화정책은 미국 시카고 대학의 밀턴 프리드먼 교수의 가르침에 따라 이루어졌고, 영국 대처 수상의 민영화정책 역시 하이에크 교수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 레이건 대통령의 공급경제학 역시 Mundell 및 Laffer의 경제학으로부터 나왔다.

아이디어를 전파시키고 있다. 싱크탱크의 아이디어 알리기 활동은 기업의 자사 상품 마케팅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싱크탱크의 행위는 점점 기업과 유사해지리라 전망된다. 이런 점에서 싱크탱크 종사자는 일종의 지식 기업가(intellectual entrepreneur)라고 할 수 있다. 캐나다의 Fraser Institute가 병원에서의 기다리는 시간을 측정해서 의료보험제도를 개선시킨 사례는 싱크탱크가 지식 기업으로 활동하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하겠다.

싱크탱크와 대학은 모두 지식을 연마하는 곳이지만 근본적인 차이를 지닌다. 대학은 교수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를 연구하는 곳인 반면, 싱크탱크는 경제적·사회적·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기관이다. 그러므로 대학은 대학 사회에서 인정받는 학문적 권위에 따라 평가받는 반면, 싱크탱크는 목표지향적(goal-oriented)이므로 얼마나 실질 세계의 문제를 잘 해결했는지에 따라 평가받는다.

싱크탱크의 정책 참여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정부의 개입을 지지하는 싱크탱크의 경우, 한 사회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점을 발굴하고 정부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지 제시한다. 반면, 정부의 역할 증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지닌 싱크탱크의 경우 정부정책이 어떤 문제점을 보였는지 조사 분석한 후 그 문제점을 가능하면 민간부문을 활용해 해소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제시한다.

2. 싱크탱크의 환경 조성 and 운영

전 세계적으로 싱크탱크는 일종의 지식산업으로 변창하고 있다. 비록 전 세계를 모두 포괄하는 싱크탱크 관련 정보는 아직 부족하지만 McGann(2010)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싱크탱크는 2010년 현재 6,300개가량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그중 가장 많은 숫자는 북미, 유럽 및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 세계의 싱크탱크

| (단위: 개, %) | | |
|------------|-------|-----|
| 지역 | 숫자 | 비중 |
| 아프리카 | 503 | 8 |
| 아시아 | 1,183 | 19 |
| 유럽 | 1,750 | 28 |
| 남미 | 645 | 10 |
| 중동, 북아프리카 | 273 | 4 |
| 북미 | 1,912 | 30 |
| 오세아니아 | 39 | 1 |
| 총 계 | 6,305 | 100 |

자료: McGann(2010).

싱크탱크가 앞으로 보다 더 활성화되고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여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싱크탱크가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북미, 유럽 및 아시아는 이미 지식산업이 자생력을 지닌 지역이므로 싱크탱크 산업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반면,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은 아직 싱크탱크의 생태계가 잘 만들어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에서의 지식생태계의 조성이 중요하다. 싱크탱크가 생존하려면 사회적으로 아이디어를 존중하는 풍토를 갖추어야 한다. 이와 함께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가 집단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싱크탱크가 발전하지 못한 국가에서는 아이디어에 대한 수요, 공급이 모두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이디어, 특히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아이디어는 일종의 공공재 또는 merit goods의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만일 이런 재화가 사회적 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는 명백한 시장실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공정책 아이디어 시장에는 정부의 개입을 통한 아이디어 시장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공공정책 아이디어를 싱크탱크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는 정부가 직접 공공연구기관 설립을 통해 정책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을 대학이나 민간 싱크탱크가 육성할 수 있는 인센티브체계를 구축하는 작업 역시 중요하다.

싱크탱크는 앞으로도 자신이 속한 사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싱크탱크 역시 상호 경쟁을 통해 자신의 정책 아이디어를 일반 시민들에게 설득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싱크탱크는 정책을 만들 때 SMART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즉, 구체적(specific)이고, 측정 가능하고(measurable), 실행 가능하고(achievable), 적절하며(relevant), 시의성 있는(timely)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면 싱크탱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보자. 인터넷이 등장하기 이전에 만들어진 싱크탱크는 대체로 하나의 지붕 모델(one roof model)을 따른다. 이는 다양한 집단의 전문가가 하나의 지붕 아래 모여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논의함으로써 상호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만일 전문가들끼리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면 소통비용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인터넷이 소통비용을 낮춤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싱크탱크가 등장하였다. 과거와 달리 벽이 없는 싱크탱크가 가능해졌다. 일례로 NCPA의 경우 조세 전문가는 보스턴, 의료 전문가는 클리블랜드, 사회보장분야는 텍사스, 유럽 연구는 워싱턴, 그리고 행정조직은 달라스에 위치해 있다. 이와 같이 벽이 없는 싱크탱크를 운영하는 경우 하나의 지붕 아래 모여 있던 시절과는 달리 고정자산이 덜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싱크탱크는 과거에 비해 축소된 예산으로 싱크탱크를 운영하고 있다. 벽이 없는 싱크탱크는 전임 인력의 고용을 줄이고 다른 기관에 속한 전문인력을 계약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 벽이 없는 싱크탱크는 비용 절감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싱크탱크의 정체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제3절 주요국의 싱크탱크

1. 미국

가. 싱크탱크의 특징과 역할²⁸⁾

미국의 싱크탱크는 Weaver(1989), McGann(2007) 등에서 지적하였듯이 다음의 세가지 특징을 지닌다. 싱크탱크는 1) 정책 연구와 분석을 하고, 2) 법적으로 독립적인 조직이며, 3) 비영리기관이다. McGann(2010)에 의하면 미국에는 대략 1,800여 개의 싱크탱크가 있으며 그중 90% 이상이 1950년대 이후에 설립되었다고 한다. 특히 1970년대 이후에 설립된 싱크탱크는 여러 분야를 포괄하기보다는 특정 이슈에 집중하여 전문화하는 특징을 지녔다. 미국의 싱크탱크에 영향력 등을 고려해 순위를 부여하였는데, 최근 조사 결과에서는 브루킹스연구소가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냈고 랜드연구소는 4위를 보였다.

〈표 2-2〉 미국 내 싱크탱크 순위

| 순위 | 이름 |
|----|--|
| 1 |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
| 2 | 국제평화를 위한 카네기 기금(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 3 | 외교관계평의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 4 |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 |
| 5 | 헤리티지연구소(Heritage Foundation) |
| 6 | 전략 및 국제문제 연구센터(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
| 7 | 카토연구소(Cato Institute) |
| 8 | 월슨연구소(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
| 9 |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
| 10 | 후버연구소(Hoover Institution) |

자료: McGann(2010), p.29.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미국에서 싱크탱크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배경은 다음과 같다. 미국에서는 정보에 관한 정부의 낮은 독점적 지위, 정책문제들의 복잡성과 기술적 특성, 정부와 정부관료들에 대한 신뢰 감소, 세계화와 정부 및 비정부 주체들의 증가, 시기적절하고 간단명료한 정보 및 적시에 적절한 형태의 분석에 대한 필요성 증대로 싱크탱크가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또한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와도 달리 엘리트 간의 교류를 제도화시켰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싱크탱크는 “각자 지지하는 정당이 권력을 얻도록 노력하는 다양한 지식인들로 구성되어

28) 미국의 싱크탱크 관련 내용은 신기욱(2010)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활동한다(Wallace[2004], pp.284~285).” 미국은 유럽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정당의 정책적 역량은 부족한 반면, 의원이나 대통령 후보자 개인의 역량은 더욱 중요하다. 그러므로 미국의 정당들은 부설 연구소를 운영하기보다는 싱크탱크라는 정당 외부적인 자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그 결과 싱크탱크는 미국 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자문 역할을 하게 되었다(홍일표[2008], p.421).

그러면 미국 싱크탱크의 발전과정을 살펴보자. 미국의 싱크탱크는 세단계를 통해 발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세대 싱크탱크는 브루킹스연구소와 같이 대부분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진보적 시기에 세워졌다. 이 시기에는 사회과학 연구가 사회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컸다. 그러므로 당시 만들어진 싱크탱크들은 당면한 사회문제들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2차대전 이후 국가사회 발전에서 과학자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민간이나 대학 기반의 연구 및 개발 센터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2세대 싱크탱크가 만들어졌다. 이런 과정 속에서 설립된 랜드연구소(RAND) 등은 주로 정부기관과 계약을 맺고 전문지식들을 직접적으로 현실정책에 적용하는 역할을 수행했다(Abelson[2006], Rich[2004]). 1970년대 이후 새롭게 등장한 “3세대 싱크탱크는 정책연구와 정치적 주창(advocacy) 사이의 간극을 메우고자 하였다.” 특히 이때부터는 비영리 기관에 대한 세금감면제도 덕분에 정책 기업가들이 새로운 싱크탱크를 만드는 것을 활성화시켰다.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 등의 싱크탱크들은 특정한 사회적 가치들에 근거한 입장들을 옹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다(신기욱[2010], P.14).” 이러한 주창적 역할을 수행하는 싱크탱크는 앞선 1, 2세대를 대표하는 학문적 모델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이와 같이 제3세대 싱크탱크들은 활발한 연구와 분석 이외에도 그들의 이념적 믿음을 전파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한편, 미국의 싱크탱크는 최근 당파적 이해에 따라 정치화되고 양극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브루킹스연구소와 랜드연구소 같은 1, 2세대 싱크탱크는 객관적이고 학계 수준에 근접한 연구 결과를 지향하였다. 반면, 헤리티지재단이나 케이트연구소(Cato)와 같은 3세대 싱크탱크들은 이념적 지향성을 지닌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이념적 성향이 비슷한 재단과 기업들의 지지를 얻으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에 설립된 3세대 싱크탱크들이 주창적 성향을 지닌 배경에는 역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는 당시 민주당 정부가 ‘위대한 사회’ 정책과 더불어 급격한 사회 변화를 주도하면서 기업과 근본주의적 기독교인 집단은 이에 대항하는 정치적인 조직을 형성하였다. 그러면서 어빙 크리스톨(Irving Kristol)과 다니얼 벨(Daniel Bell)과 같은 지식인들이 주도한 신보수주의 운동이 결합하면서 보수주의 학자들은 헤리티지재단과 케이트연구소와 같은 싱크탱크를 설립하였다. 그 결과 과학적이고 정밀한 연구 분석을 목표로 하던 1, 2세대 싱크탱크와는 달리, 3세대 싱크탱크는 특정한 정치적 이념을 퍼뜨리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헤리티지재단은 “우리의 임무는 자유로운 기업, 제한적 정부, 개인의 자유, 전통적 미국의 가치, 그리고 강력한 나라의 방위라는 원칙들에 근거하여 보수주의적 공공정책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²⁹⁾라고 공공연하게 선언한다. 이와 같이 싱크탱크들이 이념적인 존재로서 스스로의 위치를 재설정하면서, 싱크탱크는 정치적으로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다(Ricci[1993]; Abelson[2006]).

29) Heritage Foundation Homepage(<http://www.heritage.org/about>) 참조.

미국의 싱크탱크에는 대표와 임원진이 있고, 이사회와 고문진이 이를 뒷받침한다. 연구진은 대체로 선임연구원을 중심으로 연구원, 연구조교 등으로 구성된다.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이사회는 주요 의사결정과 더불어 재원 마련을 책임진다. 연구원의 지위와 관련하여 후버연구소는 선임연구원의 경우 종신직으로 운영하지만 대부분의 싱크탱크는 연구원을 계약직으로 운영한다. 한편, 연구과제 선정은 연구소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선임연구원 등 연구진에 의해 결정된다. 랜드연구소처럼 정부의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주제가 외부에서 정해지지만, 후버연구소는 주요 과제를 연구소 내부에서 선정한다. 또한 “헤리티지재단이나 미국진보연구소처럼 뚜렷한 이념적 지향을 추구하는 연구소의 경우 주제 설정 등에 어느 정도의 제한이 있다(신기욱[2010], P.26).”

대부분의 싱크탱크는 연구진들이 자신의 전문영역에 맞는 연구를 선택하여 정치권 등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비의 경우 랜드연구소는 정부지원금을 내부 연구원들 간의 공개경쟁을 통해 배분하지만, 대부분의 싱크탱크들은 외부에서 재원을 마련해 연구비 및 인건비를 충당한다.

연구 결과는 통상적으로 정책보고서로 출간하지만 브루킹스연구소나 후버연구소처럼 자체 출판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단행본으로 내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헤리티지재단이나 미국진보연구소처럼 짧은 정책 메모 중심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신기욱[2010], P.144). 랜드연구소와 같이 정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연구 결과는 기밀로 처리되어 비공개되기도 한다. 보고서, 정책 메모 등은 정부 관료, 의회 관계자, 언론 등에 배포되며 공개 세미나를 열기도 한다. 대부분의 싱크탱크는 소속 연구원들이 “언론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이를 담당하는 미디어 관련 전담 부서를 따로 두기도 한다. 헤리티지재단이나 미국진보연구소처럼 이념적인 성격이 강한 싱크탱크일수록 미디어 활용을 권장하며 “랜드연구소처럼 정부 관련 프로젝트를 중장기로 하는 경우는 연구 결과를 미디어에 활용하는 데 상대적으로 덜 적극적”이라고 한다(신기욱[2010], P.144).

브루킹스연구소, 후버연구소, 랜드연구소 등은 대학수준에 걸맞은 연구를 지향하며 정책 커뮤니티뿐 아니라 대학과도 긴밀한 연관을 맺는다. 후버연구소는 스탠퍼드 대학 안에 위치하며 상당수의 선임연구원이 스탠퍼드 등의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랜드연구소나 브루킹스연구소 등은 프로젝트별로 대학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기도 한다. 또한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온 학자나 정책 전문가들이 일정 기간 객원연구원으로 머물면서 연구를 수행하기도 한다(신기욱[2010], P.144).

미국 싱크탱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싱크탱크의 회전문 역할이다. 후버연구소, 브루킹스연구소 등 연구 중심 싱크탱크 외에 헤리티지재단, 미국기업연구소, 미국진보연구소 등 주창적 싱크탱크는 미국 행정부에 수시로 인력을 공급해 준다. 그리고 이들이 퇴임 후에는 연구원으로 다시 복귀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이러한 회전문 연결고리를 통해 싱크탱크와 정책 커뮤니티 그리고 정부는 긴밀한 관계를 갖고 미국의 정책을 주도해 갈 수 있다(신기욱[2010], P.144).

나. 사례 연구: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³⁰⁾

랜드연구소는 연구와 분석을 통하여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을 돕는 독립적인 성격의 비영리기관이다. 랜드연구소는 1948년 더글러스 비행기회사(Douglas Aircraft Company)의 지원으로 미 공군을 위한 연구와 분석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랜드연구소는 아직까지도 정부 지원에 크게 의존한다. 정부지원 외에 민간재단이나 기업 등의 후원이 있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다. 설립 이후 60년이 넘는 기간 랜드연구소는 교육, 빈곤, 범죄, 환경 및 국가안보 등 미국과 세계가 직면한 여러 도전과제들에 객관적 분석과 해결책 모색을 위한 연구를 하였다.

랜드연구소의 연구자들과 분석가들은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정책결정자들과 협력하고 있다. 우수한 연구자들은 직원, 자문단, 고문단의 자격으로 랜드연구소에 속해 있으며 노벨상 수상자도 여러 명 배출하였다. 랜드연구소는 민간 연구기관으로서 학계, 사업계 그리고 비영리 영역에 속한 저명한 공직자들과 리더들을 이사진으로 두고 있다.

랜드연구소는 “실용적 정책적 대안에 주력하는 일반적인 싱크탱크와는 달리 경제학과 사회과학에서 이론적 개념들을 빌려 국방 등 다른 분야에 새롭게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학제 간 계량적 문제해결 방식을 추구한다(신기욱[2010], P.66).” 한편, 랜드연구소의 연구원은 인터넷 관련 많은 원리를 개발하였다. 이 밖에도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게임이론, 델파이(Delphi) 방법론, 선형프로그래밍, 시스템분석, 실험모형 등 새로운 기법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랜드연구소는 군사 및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연구성과를 주도하였다.

이와 같이 랜드연구소는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선임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다. 후버연구소의 선임연구원처럼 종신직은 아니지만 연구활동을 지속하는 한 정년을 보장받고 있다. “선임연구원들은 연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받고 있으며 다른 연구원이나 연구팀들과의 협력과제도 많이 수행”한다. 선임 분석가의 연봉은 연구소에서 보장되며 다른 싱크탱크들의 연구원과는 달리 “자신의 연봉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에서 재원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 연구에 필요한 재원도 대부분 연구소 안에서 충원이 되므로 연구원이 직접 재단이나 개인 기부자와 접촉해서 재원을 마련할 필요도 없다(신기욱[2010], P.66).”

랜드연구소는 미국의 다른 싱크탱크들과는 달리 정부지원금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재원이다. 과거에는 “국방부나 공군, 육군 등 군사 관련 기관의 지원이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했으나 현재는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과 같은 건강 관련 부처나 주정부의 지원도 중요한 소스”(신기욱[2010], P.77)이다. 미국정부는 5년마다 정부지원연구개발센터(Federally Funded Research Development Center)를 지정하고 대규모 재정지원을 하는데, 랜드연구소는 설립 이후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적이 없다. 이러한 장기적인 정부지원을 토대로 랜드연구소는 매우 안정적이고 풍부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랜드연구소는 다른 싱크탱크들처럼

30)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로는 일반적으로 브루킹스연구소를 들 수 있다. 그런데 브루킹스연구소에 대해서는 이미 김동석(2013)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는 미국의 정부지원 연구기관인 랜드연구소를 사례 연구로 다루었다.

“민간재단이나 개인 기부자들로부터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활발하지 않다. 반면, 연구원 사이에는 연구소로부터 필요한 재원을 지원받기 위해 내부경쟁을 치열하게 치른다(신기욱[2010], P.78).”

랜드연구소는 정부의 대형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므로 큰 범위 내에서 상당 부분의 주제는 이미 정부에 의해 정해져 있다. 매년 내부공고를 통해 연구원들이 프로젝트 신청을 하고 협력과제를 장려한다. 연구 결과는 대부분 책 또는 연구보고서로 발간된다. 랜드연구소는 엄격한 학문적 기준에 의거하여 연구를 진행하므로 명성이 높고 연구원들은 자부심이 크다. 랜드연구소는 일반적인 싱크탱크와는 달리 대학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런 점에서 랜드연구소의 연구진은 스스로를 싱크탱크보다는 대학으로 불리기를 원한다.

랜드연구소의 연구는 국방 관련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쳤다. 그런데 “국방 관련 연구의 절반 정도는 기밀로 처리되어 비공개되므로 일반인이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관련 정부부처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최근 건강이나 의료보험 관련 프로젝트의 수가 늘어 가고 있으며 이 분야에 대한 정책적 영향력 또한 늘고 있다(신기욱[2010], P.79).”

결론적으로 랜드연구소는 헤리티지재단과 같은 주창적 싱크탱크와는 달리, “중장기적인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학문적인 방법론과 기준을 적용해 연구함으로써 국가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요 의의를 두고 있다. 단지 정책적 조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워싱턴 D. C.에 랜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의회 청문회 등에서 전문가 증언을 통해 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기도 한다. 또한 “전직 정부 관료들이 랜드연구소에 오거나 랜드 연구원이 정부에 들어가는 회전문 역할은 워싱턴에 있는 다른 싱크탱크들에 비해 비교적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신기욱[2010], P.79).”

2. 일본³¹⁾

가. 싱크탱크의 특징과 유형

일본은 관료집단이 정책의 입안과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정책 수행의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정책의 추진, 정책의 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모두 관장한다(Johnson[1982]). Johnson에 따르면 일본은 전형적인 발전지향형 국가로 MITI(통상산업성, 현 경제산업성)와 같은 관료집단이 국가발전에 관한 모든 정책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일본의 정책 형성과정에서 관료집단의 주도적인 역할은, 2001년 이후 다수의 정부 싱크탱크를 독립행정법인화하여 정책 수립의 독립과 책임경영을 강조하는 현재에도 별다른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다.

일본의 관료 주도형 정책 수립 생태계에 대해 김현철 교수는 일본 관료 개개인을 하나의 싱크탱크로 간주하였다(김현철[2010]). 일본 관료들은 많은 경험과 긴 재임기간, 독립성과 전문성, 예산집행 권한 등을 바탕으로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해 왔기 때문에 민간이나

31) 일본의 싱크탱크는 김현철(2010)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정치집단으로부터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다.³²⁾ 그러므로 일본의 관료사회에는 더욱더 뛰어난 인재가 모이고 권한 또한 집중되었다. 일본은 관료집단이 정책의 형성과 집행까지 주도하였기 때문에 싱크탱크는 발달하지 않았고 그 역할 또한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일본의 싱크탱크는 관료 주도로 생산하는 정책지식의 수직적 혹은 수평적 협력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즉, 관료의 정책 형성에 필요한 기초조사 단계와 세부 정보의 발굴에 있어서 협력체로서 기능하였다. 이와 함께 정책 심의와 자문 기능 역할을 하는 심의회와 위원회에 다수의 정부계 및 민간 싱크탱크의 연구원, 대학 교수, 기업인 등이 폭넓게 참가하고 있다. 실제 일본에서 관료는 대학 및 민간 싱크탱크 소속 지식인 집단의 협력을 얻는 것이 용이하다. 그리고 “관료의 자문 요청에 대하여 대부분의 지식인은 무보수로 협조에 응하고 특정 정책에 대한 연구회 결성에도 상당히 협조적이다.” 그리고 “관민협력형 구조는 관료를 둘러싸고 있는 심의회, 관료가 가담하는 연구회 등을 통해 중층적 및 암묵적으로 네트워크화되어 정책을 생산하고 제안한다(김현철[2010], P.3).”

현재 일본의 싱크탱크를 관료로부터의 조직적 독립도와 그 정책적 역할에 따라 구분하면 크게 네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제1 유형은 소관 성청(省廳)으로부터 재원을 조달받고, 연구진 구성은 독자적 연구진이 주류가 되어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계 대형 싱크탱크가 있다. 대표적으로는 경제산업성 산하의 아시아경제연구소(アジア經濟研究所, IDE, 개발경제/지역연구), 후생노동성 산하의 일본노동정책연구·연구기구(日本労働政策研究・研究機構, JILPT, 노동정책연구) 등이 있다.

제2 유형은 재정은 전적으로 소관 관청에서 지원받아 운영되나 조직 측면에서는 관청에 종속성이 강한 공공연구기관이다. 연구소의 인력은 관료 신분을 유지하면서 임시로 연구소에 파견된 연구자, 학자로서 소속 대학 혹은 연구소와 겸직하면서 해당 연구소의 Research Fellow로 활동하는 연구자, 연구소 전속의 연구자가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전임 연구진의 비율은 높지 않다. 연구소 운영도 소관 성청(省廳)에서 파견된 관료 출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은 과거에 소관 성청 내 in-house 조직으로 출발하였다. 대표적으로 내각부 산하 경제사회총합연구소(經濟社會總合研究所), 경제산업성 산하 경제산업연구소(經濟産業研究所, RIETI), 재무성 산하 재무총합연구소(財務總合研究所), 외무성 산하 일본국제문제연구소(日本國際問題研究所)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외무성 산하기관인 국제교류기구(JICA)도 in-house 형태의 JICA연구소를 두고 있다(김현철[2010], P.5).

제3 유형의 싱크탱크에는 민간의 영리 싱크탱크가 있다. 이들은 주로 대기업 계열 싱크탱크와 금융권 싱크탱크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퇴직 관료가 재단법인 혹은 사단법인 형태로 소규모 싱크탱크를 설립하여 과거 재직하였던 관청의 정책과제 수주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대형 민간 싱크탱크인 노무라총합연구소(野村總合研究所)와 미쓰비시총합연구소(三菱總合研究所)의 경우, 정부정책의 수립에는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책효과 분석 등의 분야에서는 정부정책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미쓰비시총합연구소의 경우

32) 김현철(2010)에서는 한국의 관료는 일본의 관료처럼 정책 형성과 집행을 주도하였지만 일본의 관료에 비해 권한과 책임은 적은 편이었다고 평가하였다.

토목, 건설, 계량 경제분석에 강점을 나타내는데, 연구소의 조사·연구 수입의 약 70%가량이 정부 프로젝트이다.

제4의 유형은 해당 정책별로 설치된 임시(ad-hoc)조직인 심의회 혹은 위원회 조직이다. 이런 형태의 싱크탱크는 다른 나라에서는 싱크탱크로 간주되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일본 특유의 관민협력체제의 산물로 싱크탱크로 간주된다. 일본의 관료사회에서는 정책 입안에 앞서 심의회를 주제별로 조직하는데, 참가 인력은 대학 및 연구기관의 외부 전문가 집단이 대부분이다. 심의회는 수시로 연구회도 개최하여 관료가 마련한 정책 심의를 수행한다. 그러나 심의회는 관료가 생산한 정책에 대한 정당성 부여와 저명한 학자의 심의를 거쳤다는 홍보 차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관료들도 생산한 정책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정책에 대한 우군을 만드는 의미가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장기 불황을 겪으면서 재정 압박으로 2000년대에는 싱크탱크의 해산과 통폐합이 이어졌다. 그 결과 일본의 싱크탱크는 현재 조직과 인력의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며, 관료 이외의 싱크탱크의 정책연구기능 역시 매우 소극적이다.

나. 사례 연구: 아시아 경제연구소³³⁾

아시아경제연구소(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IDE-JETRO)는 경제산업성 소관 독립행정법인 일본무역진흥기구(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JETRO)의 산하 연구소이다. 일본에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지역연구분야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정부계 싱크탱크이다. 아시아경제연구소는 1970년대 초반 한국의 KDI 설립준비기에 한국 관료들의 벤치마킹 대상이기도 하였다.

아시아경제연구소는 1958년 기시 수상의 주도하에 아시아 지역 경제 분야의 연구를 위해 민·관·재계의 공동 설립자금으로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에는 통상산업성(현, 경제산업성) 소관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지만 초기에는 경단련(經團連)이 운영자금의 대부분을 부담하였다. 아시아경제연구소는 1960년에 정부의 자금 지원을받기 유리한 특수법인으로 신분을 전환하였다. “1964년 일본의 OECD 가입과 함께 자유무역의 경향이 강해지면서, 일본은 새로운 무역 상대로서 아시아 지역 연구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통상산업성은 체계적 아시아 연구를 위해 1960년대 중반부터 연구소 운영비의 대부분을 부담하기 시작하였다.” 1998년에는 한국의 KOTRA에 해당하는 “일본무역진흥회(JETRO)와 통합되었으며, 2003년에는 일본무역진흥회와 단일한 조직으로서 함께 독립행정법인으로 지정되었다(김현철[2010], P.35).”

아시아경제연구소는 2008년 말 기준 전체 직원은 236명이고, 이 중 연구자만 150명에 이른다. 1994년 이전에는 대부분 대학 학부 졸업자를 연구자로 채용하였으나, 이후에는 석사 및 박사 학위자를 채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은 학부 졸업자 혹은 석사학위 소지자이다. 센터장 혹은 팀장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실적이나 연구기간이 중요한 기준이 되며 학위가 주요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

33) 일본의 또 다른 대표적 싱크탱크인 경제산업연구소(RIETI)에 대해서는 김동석(2013)을 참조.

아시아경제연구소 조직 구성은 일본의 정부계 싱크탱크와 달리 주요 연구인력에 관료 출신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다른 싱크탱크와는 차이가 크다. 행정부문에 예산과 독립행정법인 평가를 위해 관료 출신 직원 약 2~3명 정도가 파견근무하는 정도다. 2009년도 예산은 총수입액이 38억 6,264만엔이고, 이 중 90%인 34억 7,901만엔이 정부재원이다. 1999년 예산이 연간 98억엔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예산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급격하게 삭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시아경제연구소는 매년 90개 정도의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연구원 1~3명이 연구를 기획하여 외부 연구자와 함께 평균 1~2년간의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연구 결과를 연구총서 형태로 발간한다. 즉, 연구소 소속 연구자가 외부기관 소속의 연구자들과 팀을 이루는 공동연구를 진행하면서 월평균 1~2회의 연구모임에서 관료는 물론 대학, 여타 공공 및 민간 싱크탱크 연구자와의 협력관계를 형성한다.

3. 독일³⁴⁾

가. 싱크탱크의 유형 및 특징

독일의 싱크탱크는 공공재정지원을 받고 공익적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데, 이는 정치이념이 상대적으로 강한 미국의 싱크탱크와는 상당한 대조를 이룬다. 독일의 싱크탱크 유형을 살펴보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본 보고서의 주된 연구대상인 공공부문의 비대학 싱크탱크들은 대체로 (1) 4대 연구협회(Gesellschaft 또는 Gemeinschaft), (2) 정당재단(Politische Stiftung), (3)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특정 부처 소속의 소관연구기관(Ressortforschungs-institute) 등으로 구분된다(표 2-3 참조).

정당재단들은 연방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주로 재단이 소속되어 있는 특정 정당을 대상으로 정책지식을 제공한다.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의 주요 부처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소관연구기관들의 경우 직접적인 정책지식의 활용도는 매우 높으나, 정부부처를 제외한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연구 결과 활용이 매우 제한적이다. 반면,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 공동으로 재정지원을 받아 정책지식을 생산하여 일반대중에게 널리 배포하는 연구협회는 싱크탱크 본연의 의미에 가장 부합한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연구협회를 중심으로 독일의 싱크탱크 논의를 살펴보겠다.

34) 독일의 싱크탱크는 박성훈(2010)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표 2-3〉 독일 싱크탱크의 개요와 주요 기능

| | | | |
|----------|-------------|--|--|
| 공공 부분 | 비대학 연구기관 | 정당재단 | 안정적이고 규모 있는 조직적·물질적 자원을 활용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지식을 생산하고, 여론 형성을 통해 확산 |
| | | 연구협회; 독립학술형 싱크탱크 | 대학-산업계-정부와의 연계 담당 -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실용적·응용적인 학술연구에 집중하면서 대학 및 산업계와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 - 실용적 지식과 이론적 지식이 통합된 정책지식의 생산 및 확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함. |
| | | (정부부처) 소관연구기관 |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자문 역할 - 정부 특정 부처(주로 외청) 또는 주정부의 정책과 관련한 과제 수행이 주요 기능임. |
| | 대학 | 기초연구와 교육의 기능 담당 - 연구능력을 가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의 기능뿐만 아니라 활발한 산학연 공동연구 | |
| 민간 부분 | 산업체 연구 | 공공부문 연구기관의 역할을 보완하는 한편, 독립적인 연구를 통해 모기업의 경영전략 수립을 주로 지원 | |

자료: 박성훈(2010), P.2.

독일의 정책지식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정책지식의 수요자와 공급자 구조를 먼저 살펴보자. 싱크탱크들은 정책지식을 생산하고 이를 공익을 위해 제공하는 기관들이다. 정책지식의 수요자그룹은 대체로 (1) 연방정부, (2) 주정부, (3) 입법부(국회), (4) 정치정당, (5) 민간기업, (6) 학술부문, (7) 시민사회 등 일곱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박성훈[2010], P.4). 이들은 각자의 성격에 따라 일반적으로 싱크탱크가 생산한 정책지식을 제공받거나, 정책지식 제공자인 싱크탱크에 재정지원 또는 인력지원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하기도 한다.

우선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은 정책지식의 수요자로서 싱크탱크로부터 정책지식을 공급받는 한편, 싱크탱크에 대해 재정지원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는 “초지역적이면서 국가사회 전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일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독일의 기본법 91b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독일의 국회와 정치정당들은 대부분 일방적인 정책지식의 수요자로 활동한다. 민간기업들도 싱크탱크들이 생산하는 지식의 수요자들이다. 민간기업들 중에서 재력이 있고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자체적인 연구소 또는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싱크탱크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학계와 시민사회 역시 싱크탱크가 생산한 지식을 수요한다. 다만, 학계는 싱크탱크에 인력을 제공하기도 하는 등 교류자로서의 성격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대부분 일방적인 정책지식의 수요자로 기능한다고 하겠다(박성훈[2010, P.5).

한편, 독일의 정책지식을 공급하는 싱크탱크들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싱크탱크로 구분된다. 독일의 주요 대기업(예를 들면 BMW, Bosch 등) 또는 금융기관(Deutsche Bank 등)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간부분의 싱크탱크는 소속 기업(또는 기관)들의 이해관계를 전적으로 반영하는 연구활동을 수행하므로 본 연구의 관심대상은 아니다. 본 연구의 관심대상이 되는 공공부분의 싱크탱크는 대학교 직속의 대학연구기관(universitatinterne

Forschungsinstitute)과 비대학연구기관(außeruniversitäre Forschungsinstitute)으로 구분된다. 대학연구기관의 경우 독일의 교육제도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따라 대학교들이 위치한 연방주(Länder)의 대학교 예산에 대한 100% 재정지원 시 직접적으로 지원대상이 된다. 그러나 대학이 자체적으로 연구주제를 기획 및 수행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싱크탱크로 보기는 어렵다. 박성훈 교수가 지적하듯이, 독일에서는 비대학연구기관이 독일의 진정한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예산에 의해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유사한 성격의 연구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연합체를 형성하여 ‘협회’, ‘공동체’ 등의 조직을 구성하여 비교적 독립적·중립적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들이다(박성훈[2010], P.7). 독일에는 이러한 성격을 지닌 연구협회로서 ① 라이프니츠 연구협회, ② 막스플랑크 연구협회, ③ 헬름홀츠 연구협회 및 ④ 프라운호퍼 연구협회 등 4대 연구협회가 활동하고 있다(박성훈[2010], P.8)

독일의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싱크탱크에 대한 재정지원 및 통제와 더불어 독일 내에서 전반적인 학문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동 정책의 일부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학술평의회(Wissenschaftsrat: WR)’를 운영하고 있다. 학술평의회는 정부부처는 아니지만 정부부처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공공기관이다. 1950년대 중반 설립된 학술평의회는 독일의 교육 및 연구 정책에 대한 현황 평가 및 미래 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독일의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정부예산을 통해 주요 싱크탱크들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지원의 방법, 비중 및 향후 계획 등을 조정 및 협의하기 위하여 연방정부 및 각 주정부가 참여하는 ‘공동학술위원회(Gemeinsame Wissenschaftskonferenz: GWK)’를 운영한다. 4대 연구협회 중에서 라이프니츠 연구협회와 헬름홀츠 연구협회는 공동학술위원회 또는 재정지원기관 협의체의 강한 통제를 받고 있다(박성훈[2010], P.9).

연구협회에 소속된 연구기관들은 연구활동에 있어서 비교적 큰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비록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공공부문으로부터의 재정지원 규모가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80% 정도로 비교적 높지만 정부가 연구기관의 연구활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즉, 연구과제의 선정 및 집행, 그리고 연구 결과의 생성 등 거의 모든 지식창출의 과정에서 연구기관들은 매우 높은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연구과제 선정 이후 소속 연구기관들은 양질의 연구 결과를 생산하기 위해 전반적인 연구 과정을 관리한다. 특히 과제를 가장 책임자인 연구진에게 배정하는 작업은 대체로 자율성이 존중되는 방향에서 결정된다. “연구를 실제로 담당하는 연구진이 제안한 연구과제가 일단 소속 연구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연구기관 경영진에게 제안되고, 경영진이 이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박성훈[2010], P.34)

그러면 이하에서는 싱크탱크 운영에 있어서 독일 정부의 역할을 살펴보자. 소관연구기관들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필요에 따라 주요 부처가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직속 연구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된 연구대상인 4대 연구협회에 속한 연구기관들의 경우 정부와의 관계가 직접적이지 않다. 그렇지만 연방 및 주정부 차원에서 학술 및 교육정책의 전반에 관해 자문기구의 역할을 하는 학술평의회(WR)는 연구기관을 통제하는 기구로서 1차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학술평의회는 자문기구 역할 외에 연구기관들에 대한 기관 평가 업무도 담당하기도 하였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학술평의회가

수행하는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의 제정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물론 독일정부는 싱크탱크의 운영과 관련해 연구주제의 선정, 연구활동의 집행 및 연구 결과의 생성 및 활용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입장 반영이 가능하다. 특히 4대 연구협회의 경우 전체적인 연구 및 교육·학술 환경의 구성에 있어서는 학술평의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연방-주정부 사이의 조율을 통해 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시킬 수 있다. 특히 정부의 예산지원이 일정 비중을 초과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라이프니츠 연구기관의 경우 공동학술위원회나 재정지원기관 협의체 등의 경로를 통해 정부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사례 연구: 라이프니츠 연구협회

독일 싱크탱크에 관한 연구들은 4대 연구협회 중에서도 ‘막스플랑크 연구협회’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았다(박성훈[2010], p.3). 독일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막스플랑크 연구협회는 주로 자연과학이나 엔지니어링 분야의 기초연구에 주력하는 연구기관이다. 그러므로 사회과학적인 관점에서 국가사회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활용하는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라이프니츠 연구협회’가 본 보고서의 취지에 가장 부합한 연구기관이라 할 수 있다.

라이프니츠 연구협회는 독일 기본법 91b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초지역적이며 국가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행하는 대형 연구기관들에 대한 공공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는 소위 ‘청색(Blue List) 연구기관³⁵⁾들을 관장하는 연구기관들의 연합체이다. 라이프니츠 연구협회는 1997년 설립되어 역사는 짧지만, 1950년대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독일의 정책지식 분야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라이프니츠 연구협회는 현재 총 86개의 연구기관들이 참여하여 학술연합회(Wissensgemeinschaft)의 형태로 운영된다. 라이프니츠 연구협회에 속한 86개의 연구기관들은 다음과 같이 5개의 연구분야에 따라 구분되어 있다.

- 인문학/교육 분야: 14개 연구기관(+준회원 1개)
- 경제학/사회과학 분야: 17개 연구기관(+준회원 1개)
- 생명과학 분야: 23개 연구기관(+준회원 2개)
- 수학/자연과학/공학 분야: 22개 연구기관
- 환경/자원 분야: 10개 연구기관

라이프니츠의 86개 소속 연구기관들은 2008년 기준으로 12억유로 규모의 예산으로 약 14,2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전문연구인력은 6,500명이다. 라이프니츠 연구협회에 속한 연구기관들은 높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유하고 있고, 행정체계는 분권적인

35) 청색 연구기관이라 부르는 이유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고, 연구기관을 선정했을 때 연구기관의 목록을 푸른색 종이에 적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박성훈(2010, P.3) 참조.

형태를 지닌다. 그리고 소속 연구기관들 역시 자신들의 전략적 판단에 의거하여 이슈별로 특화된 연구를 하는 특징을 지닌다.

라이프니츠 연구협회는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단법인(eingetragener Verein) 성격을 지닌다. “연구 결과는 특정한 또는 특정 단체에 귀속되지 않고 국가사회의 발전을 함양한다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된다(박성훈[2010], P.18).” 라이프니츠 연구협회 소속 연구기관들은 상호간에 연구주제에 대한 분업체계를 형성하면서 동시에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국내외 대학교, 연구기관, 기업, 정부기관 및 사회조직들과도 활발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라이프니츠 연구협회는 내부 및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의사결정기구 및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로서 평의회(Senat)를 들 수 있다. 평의회는 연구협회의 이사회와 연방-주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학술위원회(GWK)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이다. 라이프니츠 연구협회의 일상적인 업무 처리는 연구협회 이사장과 이사회 및 사무국을 통해 이루어진다. 연구협회가 국가사회의 발전이라는 공익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필요한 경쟁력 확보 및 연구기관 평가업무 등 두 가지 업무에 있어서는 보다 중립적인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평의회가 그 업무를 담당한다.

“라이프니츠 연구협회는 1997년 발족하였지만, 그 연원은 1949년 3월 연방주들이 서로 협력하여 독일 국내의 ‘범지역 차원의 대형 연구기관’에 대해서 공동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쾨니히스타인 합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9년에는 독일 헌법 91b조를 신설하여 “범지역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국민경제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연구프로젝트에 대해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이 공동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1977년에는 이 공동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는 46개의 수혜기관에 대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파란색의 종이에 목록을 적어서 합의하게 되는데, 이 연구기관들이 바로 Blue List 연구기관이라 불리며, 나중에 라이프니츠 연구협회 소속의 연구기관들이 된다(박성훈[2010], PP.20~21).”

독일의 Blue List 연구기관의 수는 46~47개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러다 1990년 독일통일과 함께 큰 변화를 겪었다. “통일조약 제38조에 의거하여 동독 지역에 있던 인문사회과학 연구기관들 중에서 심사를 거쳐서 34개의 연구기관을 Blue List로 편입하였다(박성훈[2010], P.38).” 그 결과 총 연구기관의 수는 81개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연구기관들은 공동의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추구하고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도록 1993년에는 학술연합회(Wissensgemeinschaft)를 구성하였고, 1997년에는 라이프니츠 연구협회를 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하였다.

2002년에는 라이프니츠 연구협회가 소속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기능을 부여받으면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당초 연구기관들에 대한 평가는 독일학술평의회(WR)의 고유 기능이었다. 학술평의회는 동독 연구기관의 일부를 Blue List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기관 평가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2002년부터는 라이프니츠 연구협회의 평의회(Senat)가 평가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4. 프랑스³⁶⁾

가. 정책수립방식과 싱크탱크

프랑스는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일찍부터 중앙집권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프랑스는 정부가 중요한 행위자이며 기술 관료가 주도하는 전형적인 관료국가이다. 프랑스의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는 대혁명 이후 나폴레옹의 공화정, 왕정 복고, 공화정으로의 회귀과정을 거치면서 제도적으로 확립되었다. 이러한 정치체제에는 수상과 권력을 분점하는 대통령제가 자리 잡고 있다.

프랑스 경제 운영의 특징은 프랑스 모델이라는 함축적인 의미 안에 잘 드러난다. “프랑스 모델은 정부지출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을 정도로 국가가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재화 및 서비스시장에서의 정부 규제가 매우 많은 경제 운영을 지칭하고 있다(문우식·박명호[2010], P.8).” 또한 정부부문은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도 깊이 개입하므로 노조활동이 취약하고 노사관계의 사회적 합의 도출도 쉽지 않다. “역사적으로 철도 근로자, 공공부문 종사자, 택시 기사, 약사, 변호사, 공증인 등 다양한 사회 계층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다. 이런 사회적 결속의 결과 시장에서의 경쟁은 위축되었고, 소비자들에게는 높은 가격과 낮은 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었다(문우식·박명호[2010], P.8).” 뿐만 아니라 프랑스 국민은 선진국 중 드물게 공공부문의 지원을 요청한다. 이런 프랑스 모델을 사회적 조합주의라고 부른다. 그리고 정치권과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필요성 역시 높아졌다. (문우식·박명호[2010]).

한편, “프랑스는 경제가 부분적으로는 자유화되어 있지만 개입주의적인 경제운영 전통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문우식·박명호[2010], P.8).” 프랑스의 개입정책은 산업정책과 관련하여 멀리는 중상주의 시대의 콜베르부터 유래되는 오래된 전통이다. 2차대전 후 경제계획과 국영화를 통해 개입주의를 이어 갔다. 2차대전 이후 프랑스는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 속에서 국영화를 추진하였다. 국영화는 경제 재건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조달하려면 불가피하였다. 전기, 가스, 석탄, 보험, 저축은행 등의 국유화가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자동차회사인 르노와 같이 전시 부역자에 의해 운영되었던 기업도 국유화되었다.

한편, 전후 프랑스는 낙후한 경제 부흥과 더불어 산업화와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5개년 경제계획을 수립하였다. 유도계획(indicative planning)이라 불리는 프랑스의 경제계획은 러시아 형태의 지시와 명령을 내리는 방식의 계획경제가 아니라 경제주체들을 스스로 일하도록 유인을 제공해 주는 유도적인(indicative) 계획이다. 프랑스 경제계획은 1960년대부터는 정치의 영향을 받으면서 실효성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1960년대 중반부터 산업정책이 전면에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프랑스 산업정책의 목표는 국제경쟁력 제고이며, 이를 위해 소위 국가대표기업(national champion) 육성을 적극 추진하였다. 특히 이 당시에는 항공, 컴퓨터 등의 첨단분야에서 세계시장을 목표로 하는 공기업을 설립하였고, 기업 간 수직·수평 통합을 통한 기업 집중과 대형화를 장려했다(문우식·박명호[2010], P.8).” 프랑스는 국가대표기업을

36) 프랑스의 싱크탱크는 문우식·박명호(2010)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육성하기 위해 국내 시장 보호와 함께 특정 부문에서 세계 최고 기업 만들기 전략을 발전시켰다. 이런 맥락에서 지하철, 발전소, 통신 분야에서는 정부지원이 대폭 강화되었다. 이와 같은 일방적인 지원정책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자원배분만 왜곡시켰다고 비판받았다. 이에 따라 1970년대 이후 국유화 또는 공기업 설립 모두 더 이상 추진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정부개입이 약화되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정부는 민간기업의 주주로서 또는 합작을 통해 민간부문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이었다(문우식·박명호[2010]).

1981년 사회당 정부의 집권과 더불어 프랑스의 개입주의는 또다시 강화되었다. 1981년부터 1995년 기간 사회당의 미테랑 대통령 집권 시기의 사회당은 집권 초기 대규모 국영화를 추진해 정부개입 강도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사회당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프랑스 경제가 성장동력을 상실하면서 1980년대 중반부터 개입주의가 퇴색하고 정부가 정책형성과정에서 행사하던 주도적 역할은 다소 완화되었다(문우식·박명호[2010], P.9).”

한편, 대통령은 사회당 소속이었지만 1986~88년, 1993~95년 기간에 걸쳐 우파인 수상이 내각을 이끄는 동거내각(cohabitation)이 들어섰다. 이들 우파 내각은 대규모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시도해 정부개입을 지속적으로 축소시켰다. 이에 따라 미테랑 대통령 집권 말기에는 국유화, 산업지원, 경기부양책 등의 이념지향적 정책이 실용적인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그 결과 정부개입이 대폭 완화되었고 긴축정책이 거시경제의 기조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정책전환은 프랑스의 지도자들이 지난날의 방식으로는 경제성장을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발생하였다. 이와 함께 세계화와 EU 경제통합은 프랑스의 개입 정도를 약화시켰다. 특히 “단일시장 출범과 유로화의 도입 등 유럽통합의 진전은 프랑스 정부의 자율적 입법 기능을 약화시켰고 정책 집행에서도 제약을 받게 되었다(문우식·박명호[2010], P.9).” 최근 프랑스는 개입주의적 산업정책은 포기하였다. 그리고 시장친화적인 기업정책으로 정책 방향의 전환을 이루었다. 특히 프랑스는 최근 높은 중소기업의 비중을 고려해 중소기업 지원 및 국내 산업보호 정책을 강화하였다. 또한 “국내 투자 및 고용 촉진과 고소득층의 해외이민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 공립대학 연구소, 고용촉진기관 등에 투자 시 5만유로의 부유세 공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문우식·박명호[2010], P.9).”

프랑스의 중앙집권적 국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효과적으로 정책이 집행하려면 전문성을 인정받는 관료엘리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다. 이를 위해 프랑스는 이미 19세기 중반부터 고등사범학교(ENS), 폴리테크닉(polytechnique), 광산학교(ecole des mines), 토목학교(ecole des ponts et chausees) 등의 특수전문학교(grandes ecoles)를 통해 우수한 전문분야 공무원들을 양성하였다. 한편, 1945년 드골 대통령은 전문 일반행정 관료를 양성하기 위해 국립행정학교(ENA)를 설립하였다. ENA 체제가 발족하면서 공화주의로 무장된 동질적 집단인 엘리트 관료가 프랑스 행정의 근간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들 “엘리트관료는 모두 공무원 직종단(corps)에 소속되는데, 특히 이른바 프랑스의 3대 고위 공무원단(국가원, 회계원, 회계감사원)과 이에 준하는 외교, 국방 분야의 고위 공무원단, 그리고 광산, 토목 등 기술공무원단에 진출해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정을 주도하였다(문우식·박명호[2010], P.10).” 이들 엘리트관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관료들은 특수한 신분집단을 형성하고 그 구성원들 사이에 폐쇄적인 경력개발을 해나간다. 둘째, 관료들은 업무성격상 일반 행정기관을

통제하고 조언하며 심판하는 일을 한다. 셋째, 소속 공무원단 사이에서 자유롭게 이동한다. 소속 공무원단을 떠나는 경우 산하 기관장이나 정무직에 진출 후 원소속 공무원단으로 자유롭게 복귀한다. 국가인재가 고위 공무원단에 집중되어 있는 프랑스 관료체제는 개방형 임용제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과학과 프랑스 공무원들의 기술관료적 능력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는다. 즉, 프랑스 발전의 원동력은 바로 유능한 공무원이다. 그런 만큼 “프랑스의 엘리트 관료주의 모델은 공무원 충원과 훈련에 있어 모범적인 모델로 제시되기도 한다(문우식·박명호[2010], P.10).” 그렇지만 지나친 관료집단의 우월의식과 엘리트주의는 정책결정과정의 폐쇄성과 형식주의적 관리행태를 낳아 국가정책에 다른 사회적 파트너들이 활동할 공간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대두된다.

이와 같이 프랑스는 정책수립과정 및 공무원 양성과정이 중앙집권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프랑스 사회에서의 싱크탱크의 역할 및 존재는 다른 나라와는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우선 프랑스에서는 전통적 의미의 싱크탱크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다. 싱크탱크가 독자적인 연구를 수행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분야에서 공공정책을 제안하는 조직을 뜻한다면 이런 조직은 프랑스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는 국가가 수많은 공공연구소를 통해 항상 전문가 집단과 긴밀하고 통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싱크탱크에 대한 별도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민간으로부터의 재원조달이 연구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정부부문 이외에서 재원을 조달받는 연구기관은 민간기업의 연구소를 제외하고는 생각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싱크탱크가 발전하지 못한 보다 중요한 이유는 프랑스의 전통적인 국가주의적 정책결정방식 때문이다. 여기서 국가주의적 정책결정방식이란 정책 수립 단계에서 이익집단의 압력을 배제하고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즉, “정책당국은 정책 수립 단계에서 정책의 내용을 이익집단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결정을 취할 수 있다(문우식·박명호[2010], P.11).” 이에 따라 이익집단의 목소리가 정책 집행 단계에서 크게 반영되지 않으며 싱크탱크의 필요성도 크지 않다. 기본적으로 프랑스에서는 국가와 국민 간 별도의 중재자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Schmidt[1996]). 이러한 정책형성방식은 미국, 독일 등 다른 선진국들과는 대조적이다. 미국은 로비스트 집단이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독일 역시 사회집단이 정책 수립 단계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는 싱크탱크의 역할이 존재한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정책생산자로서 연구기관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영미권에서 사용되는 협의의 싱크탱크 정의를 사용하기보다는 싱크탱크 개념을 확대해석할 필요가 있다(문우식·박명호[2010], P.11).”

나. 사례 연구: 전략분석연구소(Centre d'Analyse Strategique: CAS)³⁷⁾

전략분석연구소(CAS)는 총리실 소속 기관으로 경제계획청(Commissariat General du Plan: CGP)을 계승하여 2006년 창설되었다. “전략분석연구소의 전신인 CGP는 1946년 유럽통합의 아버지라 불리는 Jean Monnet에 의해 창설되어 프랑스 경제의 복구는 물론 경제계획을 통해 프랑스의 고도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경제계획의 성격상 부처 간 경제조정 역할 수행을 위해 왔다(문우식·박명호[2010], P.28).” 정권이 변하면서 여러 번 역할 변화가 있었다. 그렇지만 기본 임무는 정부의 계획 수립을 지원하여 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의 연구소의 인력을 동원하여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실제 CGP 내에 CNE(Conseil National d'Evaluation), CEPII(Centre d'Etudes Prospectives et d'Informations Internationales), CERC(Conseil de l'Emploi, des Revenus et de la Cohesion sociale) 등의 기관이 만들어졌다. 이 밖에도 CGP는 정보 다원화를 위해 연구기관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였다. 이렇게 해서 OFCE, IRES, CEPREMAP, CREDOC 등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우파정권과 더불어 시장친화적인 경제정책이 강조되면서 경제계획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그 결과 CGP의 기능은 약화되었고 지금과 같은 전략분석연구소로 재편되었다.

CAS는 “경제, 사회, 환경, 문화에 관한 전략을 연구하고 특히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주요 연구분야는 지속 가능 성장, 유럽, 사회, 고용, 기업, 세계화 등이며 특히 ‘변화하는 환경에 부합하는 정책방향 설정’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다음과 같은 5개의 전략 축을 설정하고 있다(문우식·박명호[2010], P.28).”

- 1) 경제성장과 고용, 사회정의와 연결
- 2) 기회 균등, 차별 금지, 민주주의에의 참여 강화
- 3) 가족, 세대, 사회그룹 간 화합과 균형 만들기
- 4) 지속 가능 발전 안에서 과학기술 발전
- 5) 유럽과 세계 속에서 프랑스의 역할과 위상 강화

연구소의 운영은 중앙부처 국장급에 해당하는 소장에 의해서 운영된다. 연구소는 내부의 전임연구원 외에도 필요시 원활한 연구를 위해 다른 부처의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및 학자를 연구에 참여시키고 있다(문우식·박명호[2010], P.30). 연구소의 연구과제는 자체로 정해지기도 하고 수상에 의해 제시되기도 한다. 이를 위해 소장은 매년 연구계획을 작성하며 이를 발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상원의장, 국회의장, 경제사회이사회(Conseil economique et social)의 회장은 수상에 연구과제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연구소의 최고 운영기관으로 소장을 포함하는 정책위원회를 운영한다. 한편 연구소는 제도와 사회, 사회문제, 경제·금융, 노동·고용·훈련, 과학기술 및 지속발전 등 5개의 국을 두고 있다. 그리고 국제경제 연구를 담당하는 CEPII를 산하 연구소로 두고 연구 지원을 받는다.

CAS는 정부 예산사업으로 전략과 전망(Strategie et Prospective)을 총괄 관리한다. 동 과제를 위해 CAS는 자체 예산 외에 부속기관인 CEPII, CERC, 산하 자문단체인 CAE, CAS,

37) 문우식·박명호 (2010), pp.27~33 내용을 정리하였음.

CERC, COR 등의 예산을 모두 총괄하고 있다. 2008년 현재 이러한 기관들에 대한 총인건비는 약 1,400만유로이고 행정비용은 1,000만유로이다. 2008년 현재 CAS의 전임인력은 현재 175명이며, 이 중 부속연구기관인 CEPII에 45명이 속해 있다.

제4절 한국의 경험과 KDI

1. 한국의 싱크탱크: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국에는 많은 정부출연연구기관(government-sponsored research institute)이 존재한다. 이들 연구기관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국가 예산에서 직접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런 독특한 운영은 과거 한국의 개발경험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정부 주도형 성장모형을 채택했던 한국은 정책 수립, 집행 및 평가를 모두 정부가 직접 담당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기능 역시 정부로 집중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민간부문의 역할이 증대되었던 1980년대 이후에는 민간부문의 싱크탱크의 역할이 같이 커졌지만 경제개발 초기에는 정부, 학계를 망라하여 정책 수립을 지원할 전문인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정책 수립 아이디어를 지원받았다.

최근 한국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외에 민간부문에 많은 싱크탱크가 운영되고 있다. 우선, 삼성, 현대, LG, SK 등 한국의 유력한 대기업들은 대부분 자체적으로 연구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 민간기업 연구소들은 주로 기업 내부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업 차원의 민간연구소 외에 전경련 및 은행연합회 등이 설립한 연구기관이 있다. 이들 연구기관 역시 자신이 속한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전개한다. 알제리 정부는 한국의 정부출연기관에 관심이 크므로 이하에서는 한국의 싱크탱크 논의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한국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은 1966년 KIST, 1971년 KDI가 설립된 이후 과학기술 및 경제 분야에서 정책 수립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받는다. 이들 연구기관은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하였고, 정부 공무원들이 지니지 못했던 전문지식을 활용해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공무원 집단과 연구기관 간의 협력, 보완 및 경쟁의 기본 틀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지만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공무원 집단의 전문지식수준 향상, 대학 및 민간 연구기관의 신장, 그리고 경제활동에서 정부의 역할 변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위상은 변하고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이와 같이 변모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그 결과 정부출연기관의 위상 제고를 위한 많은 보고서가 작성되었다.³⁸⁾

1970년대 KDI 설립 이후 정부는 개별 부처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개별 부처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기관을 자신의 산하에 제각기 설립하였다. 그 결과 경제·사회 정부부처의

38) 한국에서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어떻게 운영할지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새로운 위상과 관련된 보고서는 이런 배경에서 작성되었다.

산하에 23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만들어졌다. 23개 출연연구기관의 명단과 설립시기는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다. 출연연구기관 중 KDI는 전체 연구기관을 대표하는 종합연구원 성격을 지니지만, 나머지 연구원은 모두 특정 분야의 전문 연구원 성격을 지닌다.

한편,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개편작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이루어졌다. 당시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 요구가 거세지면서 연구기관의 관리·운영 체제에도 일대 전환이 가해졌다. 1999년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입법을 통해 새로운 형식의 연구회 제도를 도입하였다. 당시 정부 각 부처 산하에서 활동하던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을 유사한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하나의 연구회 구조 안에서 묶었다. 이런 연구회 제도의 도입 목적은 1)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보장하고, 2) 정부부처와 출연연구기관의 연결고리를 정리하여 연구기관이 부처의 간섭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3) 학제 간 연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유기적 협력연구를 강화하기 위해서이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2008]). 다시 말하면 연구회 시스템을 통해 연구자원의 유기적 활용을 통한 시너지를 유도하고, 정부부처에 대해서는 예측적 개념을 없애며, 시장원리가 지배하는 연구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표 2-4〉 한국의 정부출연연구기관(경제, 인문, 사회 분야)

| 기관명 | 영문 기관명 | 영문 약칭 | 설립 |
|--------------|--|--------|------|
| 한국개발연구원 | Korea Development Institute | KDI | 1971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IHASA | 1971 |
| 한국교육개발원 |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KEDI | 1972 |
| 산업연구원 | Korea Inst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 KIET | 1976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Korea Rural Economics Institute | KREI | 1978 |
| 국토연구원 | Korea Research Inst for Human Settlements | KRIHS | 1978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KWDI | 1983 |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 | KISDI | 1985 |
| 에너지경제연구원 |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 KEEI | 1986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STEPI | 1987 |
| 한국교통연구원 |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 KOTI | 1987 |
| 한국노동연구원 | Korea Labor Institute | KLI | 1988 |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KIC | 1989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NYPI | 1989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Korea Inst.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KIEP | 1989 |
| 한국법제연구원 |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KLPI | 1990 |
| 통일연구원 |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KINU | 1990 |
| 한국행정연구원 |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KIPF | 1991 |
| 한국조세연구원 |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KIPF | 1992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KEI | 1992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Korea Marime Institute | KMI | 1997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Korea Research Inst. for Vocational Educ. & Training | KRVET | 1997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Korea Inst. for Oumiouium and Evauiation | KICE | 1998 |

자료: 김동석(2013), P.80.

연구회의 출범과 더불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법인 격은 유지하되, 연구회의 산하기관으로 편입되면서 개별 연구기관의 이사회는 폐지하였고, 연구회라는 비상설연합 이사회의 지배를 받도록 하였다. 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의 예산은 정부출연금과 정부 수탁사업에 주로 의존하며, 정부출연금은 정부로부터 직접 지원받았다. 결과적으로 현행 연구회 제도하에서 예산은 정부 예산에서 직접 지원받는 출연금과 정부부처의 연구개발사업 수탁금으로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와 같이 새롭게 시도된 연구회 체제는 연구원의 관리 및 운영에서 획기적 변화를 통해 과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연구기관의 생산성 저하 해결, 시대 및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 함양 등을 이루고자 하였다. 그러나 연구회 제도 출범이 10여 년 지난 현 시점에서 판단할 때 연구회 체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받는다. 연구회 체제는 2005년 경제분야와 인문분야를 하나로 통합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새롭게 출범시켰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체제는 연구기관의 정체성 확립, 국가 정책 어젠다 발굴, 중장기 대안 개발, 민간 연구기관 및 대학과의 차별성 강화 등의 당면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까지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2. 사례 연구: KDI

가. 설립배경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은 1971년 3월 한국의 경제 전반에 관한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5개년계획 수립 및 정책 입안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정부는 이미 1966년 2차 5개년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 정책연구기관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당시 한국에는 주요 경제정책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어떤 기관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2차 5개년계획 과정에는 미국 원조자금에 의해 많은 외국 전문가를 초청해서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외국 자문인력을 대체할 국내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기관 설립을 검토하였다(한국개발연구원[2003; 2012]).

1970년 한국개발연구원법을 제정·공포하였는데, 그 당시 이미 한국정부와 주한 미국원조당국(USAID)은 당시 대층자금계정에 남아 있던 13억원 전체를 KDI 설립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합의하였다. 그리고 USAID는 170만달러의 원조자금을 추가적으로 지원하였다. KDI는 초기 3년은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운영비를 조달했지만 그 이후 인플레이션에 의한 기금 실질가치의 감소로 정부의 출연금에 의존하기 시작해 지금도 연구원의 운영은 정부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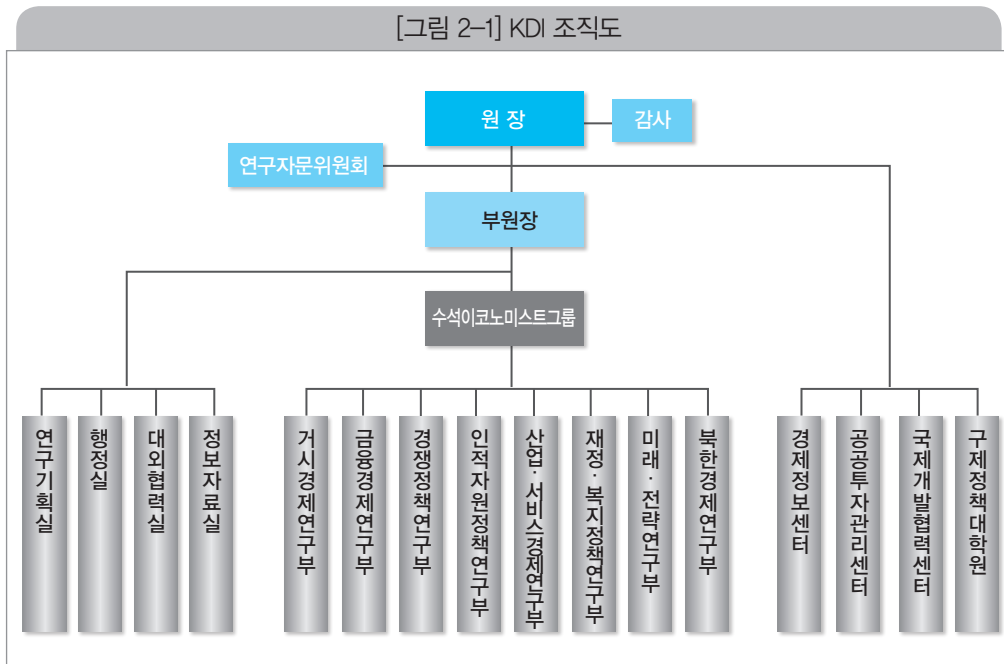
KDI는 1981년 우리의 개발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기 위한 국제개발교환계획(IDEP)을 주축으로 국제교류협력센터 기능을 추가하였다. 이후 1991년에는 경제정책 홍보 및 경제교육을 담당하는 경제정보센터를 부설기관으로 두었다. 이어서 1997년에는 국제대학원을 설립하였고, 2000년에는 공공투자사업의 사전평가, 중간관리 및 사후평가를 주 업무로 하는 공공투자관리센터도 연구원 내에 설립하였다. 이와 같이 KDI는 초창기 설립목적의 범위를 넘어서 크게 확대·진화하였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종합연구원 성격의 KDI는 초기

정책연구기능에만 국한되었던 KDI 모습보다 알제리에 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나. 지배구조, 조직 및 예산

KDI의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설립 후 연구회 체제로 전환되기 이전까지 KDI는 9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연구원의 연간 계획, 예산, 회계 결산 등을 포함하는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결정을 했다. 9명의 이사 중 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는 모두 비상근 이사로 구성되었다. 8명의 비상근 이사 중 4명은 경제부처 차관으로 구성되었고, 나머지 4명의 이사는 대부분 교수 중에서 임명되었다. 1999년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회 체제로 전환되면서 KDI의 이사회는 없어졌고, KDI를 포함한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과 감사, 예산 등은 연구회의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결정되었다.

현재 KDI는 원장, 부원장, 수석이코노미스트, 8개 연구부서, 3개 센터 및 대학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 기준 376명이 근무하고 있다. KDI의 조직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2012년도 KDI 예산 총액은 596억원이다. 그중 472억원은 정부출연금이고 나머지 125억원은 자체수입으로 조달되었다. 정부출연금은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고에서 지원받는 예산이고, 자체수입은 수탁과제수입, 이자수입, 보고서 판매수입 등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수탁과제수입이 자체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다. KDI의 과제

KDI의 역사를 회고해 보면 KDI는 한국의 개발연대에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수립 지원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받는다. 특히 198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안정화, 개방화 추세 속에서 KDI는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최근 KDI는 대한민국 최고의 싱크탱크로서 국가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National Agenda(NA)의 발굴 및 연구를 선도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현재 한국경제가 대내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양극화 및 계층 간 갈등, 인구 고령화, 급속한 복지수요 증가, 산업구조 변화, 교육 및 일자리 문제 등과 더불어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형성과정에서 우리의 위치를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KDI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가교 역할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KDI는 선진국의 정책제도와 성공 및 실패 경험의 연구를 통해 우리의 발전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세계은행, IMF, OECD 등 국제기구와 Brooking Institution 등 유수한 연구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공동연구를 활성화하여 연구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제5절 알제리에 주는 시사점

1. 주요국의 사례가 ADI에 주는 시사점

주요국의 싱크탱크 사례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각국의 싱크탱크는 한 나라의 정책 수립 형성방식에 따라 그 역할과 기능이 상이하다. 우선 미국은 주요 정책이 의회를 중심으로 수립된다. 그러므로 미국의 싱크탱크는 행정부보다는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이들이 권력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국의 정당 지향적인 특징은 최근 더욱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는 일반적으로 재원을 외부에서 조달하여 인건비로 충당한다. 일본은 관료집단이 정책 수립과 집행을 모두 주도하므로 싱크탱크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일본의 싱크탱크는 관료가 생산하는 정책지식의 수직적 혹은 수평적 협력체로서 존재한다. 일본의 싱크탱크는 대체로 공무원이 파견되거나 전직 공무원에 의해 운영되는 특징을 지닌다. 독일의 싱크탱크는 공공재원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독립성을 지닌다. 특히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정책지식을 생산하는 연구협회는 많은 연구기관들로 구성된다. 라이프니츠 연구협회의 경우 경제학 및 사회과학 분야의 17개 연구기관을 포함해 전체 86개의 연구기관이 참여한다. 그리고 연구협회의 주제 선정에서 평가까지 전 과정이 다른 비교대상 국가에 비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한편, 중앙집권적 시스템을 운영하는 프랑스에는 전통적인 의미의 싱크탱크는 존재하지 않는다. 프랑스는 정부조직 안에 수많은 공공연구소를 운영하므로 독립적인 조직인 싱크탱크에 대한 별도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싱크탱크는 정부의 지원과 관리를 받는 공공연구소를 의미하는 광의의 개념을 지칭한다. 그러므로 프랑스의 싱크탱크는 정부의 틀 안에서 정부의 지시에 의해 정책연구를 수행한다.

이와 같이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의 싱크탱크는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그 역할과 미션이 각기 다르다. 그런데 이들 주요 국가의 경험은 알제리가 원하는 정책연구기관에는 잘 부합되지 않는다. 미국의 민간 중심이면서 정치 주창적인 싱크탱크는 알제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다. 일본식 관료의존형 싱크탱크는 알제리에는 적용 가능할 수 있지만 공무원 중심의 싱크탱크 운영은 현재 알제리 정부가 지향하는 모형은 아니다. 그리고 독일형 독립성을 지닌 싱크탱크나 프랑스식으로 정부조직 내에 존재하는 싱크탱크 역시 알제리의 문제의식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고도성장과정에서 5개년계획을 포함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미션을 갖는 한국 싱크탱크의 경험이 알제리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한국의 경험이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기관은 연구인력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 1970년대 한국에는 경제분야에 우수한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DI는 우수 인력을 초빙하기 위해 당시로서는 최고 대우를 해주었다. 그 결과 KDI는 설립 초부터 가장 우수한 경제학자로 구성된 연구기관으로 출범하였다. 물론 과연 관료 중심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던 한국정부 내에서 싱크탱크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는 다른 문제이다. KDI의 연구인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정부정책 수립을 지원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2003], p.45). 한편으로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책자문을 수행하였다. 그중에서도 5개년계획 수립과 관련된 거시계량모형과 부문계획모형 수립을 통해 정부정책을 지원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연구진이 정부기관에 파견되어 해당 부처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였다.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되어 특정 정책 수립을 지원하거나 경제부처 장관의 자문관으로 파견되었다. 이런 KDI의 경험은 알제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면 이하에서는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알제리의 연구기관 설립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2. ADI의 mission과 지배 구조

가. 미션(mission)

ADI는 학술연구를 지향하는 독립 연구기관이 아닌 정책연구기관이어야 한다. ADI는 알제리 정부를 위한 중장기 비전 및 5개년계획 등 중장기 정책연구과제와 더불어 연차 운영계획과 같은 단기 정책과제 연구를 주도해야 한다. KDI는 설립 초기부터 한국정부의 정책수요에 부응하여 주요 경제정책 과제를 자문하였다. 일례로 한국의 KDI가 수립될 당시 한국정부는 중화학공업으로 산업구조를 전환시키고자 하였다. 이런 정부의 요구에 부응하여 KDI는 중화학공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5개년계획 수립 시 거시경제모형 및 부문경제모형을 개발하였다. 한국의 KDI가 설립되던 시기에는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이 최대의 과제라는 점에서 KDI는 당시 경제적인 문제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미 알제리 장기 비전 작업에서 살펴보았듯이 알제리는 현재 산업다변화 및 경제 전반의 효율성 제고와 같은 경제문제뿐만 아니라 주택, 교육, 보건 등 사회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알제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inclusive growth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경제와 사회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복합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1970년대 한국의 KDI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므로 ADI는 설립 초기부터 경제문제와 사회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감각을 잘 유지해야 한다.

경제 및 사회 문제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에서 ADI의 위상이 중요하다. 한편으로 ADI가 경제부처에 지나치게 의존적이면 사회문제를 간과하기 쉽다. 다른 한편, ADI가 사회문제를 주관하는 부처에 의존적이면 경제문제를 등한시할 수 있다. 이런 여건을 감안할 때 ADI는 특정 정부의 산하기관이 아닌 특정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연구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하면 ADI는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면서 독립적인 이사회가 기관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ADI의 법적 지위를 공공기관으로 할지 민간기관으로 할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단지 ADI를 민간연구기관으로 운영하는 경우 현재 알제리에 민간연구기관으로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는 사례가 있는지 검토 후 법적·제도적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나. 예산

한편, ADI의 예산과 관련하여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우선 KDI 설립 초기와 같이 기금 운영 방법이 있다. ADI를 기금으로 운영하는 경우 매년 정부에 예산 신청을 따로 할 필요가 없으므로 기관운영의 독립성 측면에서 큰 장점을 지닌다. 둘째 매년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다. 매년 예산을 받는 경우 연구기관 운영의 독립성 측면에서는 약점일 수 있다. 그렇지만 연구원 설립 초기에는 정부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고로부터 매년 지원받는 방안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

그리고 설립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ADI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연구역량 역시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면 ADI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과의 용역계약을 통하여 자체수익사업을 허용해야 한다. KDI는 설립 초기에는 기금으로 운영되었지만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기금 수익률이 줄면서 정부 예산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지원만으로 KDI 운영비를 충당하기 어렵게 되면서 KDI는 정부부처, 국내외 공공기관의 용역사업을 수행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다. 조직

ADI의 조직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연구조직의 구성이다. KDI는 초기 수평적으로 연구부가 운영되었다. 연구부를 수평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개별 연구진이 독자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자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연구진 간 협업을 통한 연구역량 강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KDI는 수평적 운영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이후 중 또는 대부제로 연구부를 운영하였다. 참고로 KDI는 현재 연구부가 8개의 부로 구성되었다.

ADI의 주요 미션이 중장기 비전, 5개년계획 수립 지원과 더불어 inclusive growth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ADI의 연구부는 5개 정도로 나누는 방안이 바람직할 수 있다. 경제 및 사회 분야의 다양성에 비추어 볼 때 연구부의 구분은 전공분야별로 세분화하기보다는 연관 분야를 아우르는 방법이 보다 적절하다. 예시적으로 1) 거시정책 및 모형 개발, 2) 산업정책, 3) 사회정책, 4) 국토개발, 5) 글로벌 정책연구를 담당하는 부서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거시정책 및

모형 개발부는 중장기 비전 수립에서 5개년계획 지원을 포함한 분야의 모형 수립 및 연간 경제 운영방안을 지원한다. 둘째, 산업정책분야는 산업다변화, 석유산업 개편방안 등 산업경쟁력 제고방안을 연구한다. 셋째, 사회정책분야는 인적자원 육성, 보건, 인구 문제 등 알제리의 주요 사회정책 분야를 총괄한다. 넷째, 국토개발분야는 알제리의 지역균형발전, SOC 투자, 주택 관련 정책을 연구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정책연구는 근접 국가 및 관심지역 경제 동향을 포함한 국제경제 전반을 연구한다.

해외 유사 연구기관 사례를 감안할 때 ADI는 설립 초기 박사급 연구인력 채용 목표를 30명으로 정하고 박사급 연구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원 및 연구행정원 40명, 행정직원 30명을 포함하여 전체 인원 100명 정도로 연구원을 시작할 수 있다. 연구부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부서의 업무로는 인사, 총무, 회계, 재무, 시설관리, 조달, 계약, 연구관리, 평가보상, 도서, 전산, 홍보, 출판 등 분야가 매우 다양하다. ADI 조직의 규모와 관리의 측면에서 다수의 담당부서를 두기보다는 설립 초에는 유형별로 몇 개의 팀으로 통합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1) 총무인사, 2) 재무회계, 3) 정보자료, 4) 시설관리 등의 팀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인사관리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수한 연구인력의 채용이다. 경제학 및 인접 학문을 전공한 알제리 전문인력시장의 수급상황을 고려해 국내외에서 가장 우수한 연구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려면 높은 급여수준과 부대 혜택(fringe benefit)을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인력 충원이 원활해질 때까지는 초빙 혹은 겸임(비상임) 연구위원을 일정 수준 채용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해외 인력도 영입할 수 있다. 연구직은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는 연구위원과 석사 및 학사 학위 소지자인 연구원 그리고 연구행정원으로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ADI 설립을 위해서는 설립준비위원회와 설립추진실무반을 동시에 운영해야 한다. 설립준비위원회는 해당 부처의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련 부처의 차관, 국내외 학계 및 민간부문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연구원의 비전, 설립목적, 업무분야 등을 논의하는 동시에 ADI 설립과정을 감독한다. 설립추진실무반은 설립준비위원회를 지원하여 설립과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도록 하며, 해당 정부 부처 및 다른 유관 정부부처의 중간급 간부, 국내외 학계 및 민간부문의 중견 학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회 체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08.
- 김동석, 「사우디아라비아 경제발전을 지원할 싱크탱크 설립」, 『2012 경제협력국가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사우디아라비아』, 한국개발연구원, 2013.
- 김현철, 「주요국의 싱크탱크: 일본」, 『주요 5개국의 싱크탱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0.
- 문우식·박명호, 「주요국의 싱크탱크: 프랑스」, 『주요 5개국의 싱크탱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0.
- 박성훈, 「주요국의 싱크탱크: 독일」, 『주요 5개국의 싱크탱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0.
- 신기욱, 「주요국의 싱크탱크: 미국」, 『주요 5개국의 싱크탱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0.
-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연구사례: 지난 30년의 회고』, 고려문화사, 2003.
- _____, 『대한민국 정책연구의 산실』, KDI 개원 40주년 정책연구사례집, 서울: 동아일보사, 2012.
- _____, 『2012 경제협력국가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알제리』, 2013.
- 홍일표, 『세계를 이끄는 생각: 사람과 아이디어를 키워라: 미국 싱크탱크의 전략』, 중앙북스, 2008.
- Goodman, J. C., “What Is A Think Tank?” NCPA in(<http://www.ncpa.org/pub/what-is-a-think-tank>), 2005.
- Johnson, Chalmers A.,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2.
- KDI, Policy Recommendations for Economic Development in Priority Areas of the Kingdom of Saudi Arabia (II),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KDI, 2013.
- Keynes, J. M.,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McMillan, 1936.
- McGann, James G., “The Global ‘Go-To Think Tanks’: The Leading Public Policy Research Organizations in the World,” Think Tanks and Civil Societies Program, University of Pennsylvania, 2010.
- _____, Think Tanks and Policy Advice in the United States: Academics, Advisors, and Advocates. NY: Routledge Research in American Politics, 2007.
- Reed, L., “A Student’s Essay That Changed the World,” Mackinac Center for Public Policy, 2005.
- Schmidt, V., From State to Marke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 Wallace, William., “Afterward: Soft power, Global Agendas”. In Think Tank Traditions: Policy Research and the Politics of Ideas. Eds. Diane Stone and Andrew Denham, New Yor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4.
- Weaver, R. Kent., “The Changing World of Think Tank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Vol. 22, No. 3, 1989, pp.563~578.

제3장 교육분야

채재은 (가천대학교)

< 요약 >

본 연구는 알제리 국가비전 2030 수립 지원을 목표로 한 『2012 경제협력국가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알제리(KDI, 2012a)』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Algeria Five Year Plan 2015~19」을 수립하는 데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과 고등교육 발전에 관한 권고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알제리의 고용구조와 인적자원의 수준을 고찰하여 인력수급의 불일치 정도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알제리의 2030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산업인력 수요를 개략적으로 추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직업교육훈련과 고등교육의 현황 및 이슈를 논의하였다. 아울러 알제리가 산업발전과 직업교육훈련 및 고등교육의 발전을 연계시키는 데 시사점을 줄 수 있는 한국의 경험들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2015~19 알제리 발전계획」의 교육부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는 권고안들을 제안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결과, 알제리는 산업인력 양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이슈에 직면해 있었다. 알제리가 2030년까지 연 7% 수준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비율’을 현재(6.2%, 2010년)보다 3배 이상 확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소지한 반숙련 노동력 비율이 63.3%에 달하고, 주로 중도탈락한 학생들이 직업교육훈련을 선택하고 있다. 아울러 직업교육훈련의 형식적인 인프라(자격제도, 훈련과정 등)는 갖추어져 있으나, 정작 질 관리에 필요한 자격검정제도와 평가제도가 미흡한 편이었다. 그리고 공기업 중심의 경직적인 노동구조와 더불어 인력수급의 불일치로 인해 청년실업률(22.4%)이 전체 실업률보다 높은 문제가 있었다. 특히 인문·사회계열 대졸자의 실업률이 높은 편인데, 이는 그동안 산업인력 양성에 필요한 이공·자연계열보다는 인문·사회계열이 주로 확대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2015~19 발전계획」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알제리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양성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는 「2015~19 산업인력양성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경험을 벤치마킹하여 경제발전과 인력양성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투자를 하며, 성과 평가에 기반하여 재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하에 1) 산업발전과 인력양성의 효율적 연계 체제 구축, 2) 직업교육훈련의 질 제고 및 전략적 확대, 3) 고등교육기관과 산업체 간 협력 강화 등의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산업발전과 인력양성의 효율적 연계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주요 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국가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정책, 경제정책, 인력양성정책 간의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산업수요를 반영하는 인력양성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알제리 노동시장의 인력 수요와 공급을 사전에 예측하여 국가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양성하고 배분할 수 있도록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많은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의 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자격기술검정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직업교육의 질 제고 및 전략적 확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학진학과 연계될 수 있는 직업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여 우수한 학생들을 산업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정규교육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둘째, 48개 주정부에서 분권화되어 실시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기관의 교육과정과 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소기업의 학습조직화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직업능력개발 훈련기준, 훈련매체, 과정 개발 등을 지원하는 기관을 설립·운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고등교육기관과 산업체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분야 위주로 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대학과 산업체가 협의해서 운영하는 계약학과나 산업체가 자체 개발한 훈련과정을 대학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위탁학과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각 대학들이 지역 산업체들의 인력양성 수요를 반영하여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1절 서론

만 25세 이하 인구 비율이 49%(2012년)나 되는 ‘청년 국가’인 알제리의 경우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s development)은 향후 국가의 발전 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KDI[2012a]). 인적자원개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알제리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석유자원이 경제성장을 위한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알제리 정부가 수립한 「2010~14 발전계획(Algeria Five-Year Plan 2010~2014)」에서도 인적자원개발은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 재건설의 중핵 분야로서 간주되고 있다. 실제 2010~14년

발전계획 예산의 8.8%(252억달러)가 인적자원개발에 투자되고 있다(Algerian government[2010], pp.3~4). 그러나 「2010~14 발전계획」에서는 교육시설 확대 및 여건 조성 등과 같은 교육기회 확대에 주력한 반면에, 질적 발전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이러한 문제는 산업인력 양성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직업교육훈련 및 고등교육 투자계획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2010~14 발전계획」에서는 주로 직업교육훈련 및 고등교육 시설 및 인프라 확대에 집중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질적 발전 방안을 산업인력 수요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알제리 국가비전 2030 수립 지원을 목표로 했던 『2012 경제협력국가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알제리(KDI[2012a])』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2010~14년 알제리 발전계획의 후속 계획 성격을 띠는 「Algeria Five Year Plan 2015~19」을 수립하는 데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과 고등교육 발전에 관한 권고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첫째, 알제리의 산업 및 경제, 교육 현황 및 이슈를 다룬 국내의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둘째, 알제리를 세차례 방문하여 관계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을 면담하여 「알제리 2015~19 발전계획」과 관련된 자체 준비과정 및 자료를 수집하고, 한국 측으로부터 지원받고자 하는 정책자문 사항을 파악하였다. 셋째, KSP 사업의 일환으로 알제리 공무원들을 초청하여 국내에서 개최하는 세미나(2013년 9월 초)를 활용하여 직업교육훈련 및 고등교육의 실태 및 발전수요를 파악하고, 연구진이 마련한 정책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개발협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알제리 2015~19 발전계획」과 관련한 교육과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절에서는 알제리의 산업인력 수요와 공급 간의 불일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고용구조와 인적자본의 수준을 고찰하였다. 제3절에서는 알제리의 2030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산업인력 수요를 개략적으로 추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직업교육훈련과 고등교육 부문의 이슈를 논의하였다. 제4절에서는 알제리가 산업발전과 직업교육훈련 및 고등교육의 발전을 연계시키는 데 시사점을 줄 수 있는 한국의 경험들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는 「2015~19 알제리 발전계획」의 교육부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는 권고안들을 제안하였다.

제2절 알제리의 고용구조와 인적자원의 수준

본 절에서는 알제리의 주요 산업 현황과 고용구조를 고찰하여 산업인력 수요와 공급 간의 불일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Human Development Report 2013(UNDP, 2013)」 등을 활용하여 알제리의 인적자원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1. 고용구조

가. 고용 및 산업 현황

알제리의 연령별 노동시장 참여 현황은 <표 3-1>과 같다. 2011년 현재 15세 이상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40.0%이고, 남성의 경우 65.3%, 여성의 경우 14.2%로 성별 격차가 상당히 큰 편이다. 청년층(만 15~24세)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25.8%로 상당히 낮은 편이며, 그중 여성의 참여율은 9.2%에 불과한 문제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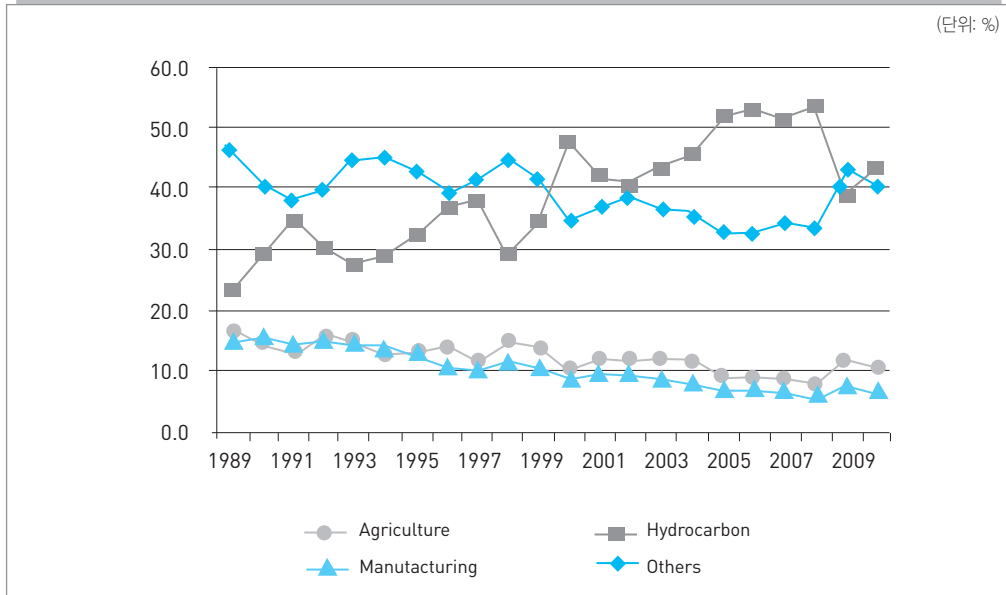
알제리의 산업구조는 그동안 공업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석유·가스 부문의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이다. [그림 3-1]에서 나타났듯이, 2009년 현재 석유·가스 부문(hydrocarbon) 비중이 40%를 상회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 부문(others) 40%, 농업 10%, 제조업 6%에 머물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원부국의 경우 제조업 비율이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알제리의 경우 1989년 15%에서 2010년 6%로 현저히 낮아졌다(KDI[2012a]). 이는 제조업이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분야라는 점을 염두할 때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단기간에 경제성장을 이룩한 동아시아 국가들(한국, 대만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제조업의 활성화는 저개발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MoIT and UNIDO[2011]).

<표 3-1> 노동시장 참여 현황(2011년)

| | 남성 | 여성 | 합계 |
|--------|------|------|------|
| 15세 이상 | 65.3 | 14.2 | 40.0 |
| 15~24세 | 41.7 | 9.2 | 25.8 |
| 25~34세 | 86.0 | 24.8 | 55.6 |
| 35~54세 | 89.2 | 16.0 | 52.0 |
| 55~59세 | 64.2 | 7.6 | 38.5 |
| 25~54세 | 87.8 | 19.8 | 53.6 |
| 15~59세 | 71.4 | 15.8 | 43.9 |
| 60세 이상 | 15.2 | 1.7 | 8.5 |
| 65세 이상 | 9.3 | 0.9 | 5.1 |

자료: Algerian Government(2013), p.15.

[그림 3-1] 산업구조의 변화



주: 각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자료: 알제리 국민계정(재인용: KDI[2012b], p.151).

이러한 석유·가스 부문에 편향된 산업구조의 특성은 알제리의 고용구조에도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다. 2011년 현재 고용 현황을 산업 대분류별로 살펴보면, 농업 10.8%, 산업(BTP 포함) 30.9%, 상업 및 서비스 58.4%이다(Algerian government[2013], p.14). 이를 다시 세부 산업별로 살펴보면 <표 3-2>와 같다. 세부 산업 중에 가장 비중이 큰 분야는 서비스로, 시장 서비스(3.4%)와 시장 외 서비스(35.6%)를 포함하면 39%나 된다. 그 다음으로는 건설(16.6%), 상업(12.8%), 제조업(12.2%)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은 편이다. 아울러 성별 고용격차를 살펴보면, 서비스업과 제조업 분야를 제외하고는 남성의 고용률이 여성보다 높은 편이다.

<표 3-2> 고용 현황(2011)

| | 남성 | | 여성 | | 합 계 | |
|----------|-------|------|-----|------|-------|------|
| | 명 | 비중 | 명 | 비중 | 명 | 비중 |
| 농업 | 987 | 12.3 | 45 | 3.0 | 1,034 | 10.8 |
| 광산업 | 179 | 2.2 | 12 | 0.8 | 192 | 2.0 |
| 제조업 | 840 | 10.4 | 336 | 21 | 1,175 | 12.2 |
| 건설 | 1,571 | 19.5 | 24 | 1.6 | 1,595 | 16.6 |
| 상업 | 1,174 | 14.6 | 58 | 3.7 | 1,232 | 12.8 |
| 교통 및 통신 | 594 | 7.4 | 33 | 2.1 | 627 | 6.5 |
| 시장 서비스 | 256 | 3.2 | 67 | 4.3 | 323 | 3.4 |
| 시장 외 서비스 | 2,437 | 30.3 | 984 | 63.0 | 3,421 | 35.6 |

자료: Algerian government(2013), p.14.

교육수준별 노동시장 참여율을 살펴보면 <표 3-3>과 같다. 2011년 현재 노동시장 참여자 중 중학교 이하의 학력 소지자는 63.3%이며, 고등학교 학력 소지자는 21.5%, 대학교 학력 소지자는 15.2%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노동시장 참가자 중 ‘비숙련 노동자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보여주며, 따라서 인력양성체계의 강화와 더불어 이미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재교육이 시급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표 3-3> 교육수준별 노동시장 참여율(2011)

| (단위: %) | | | |
|---------|------|------|------|
| | 남성 | 여성 | 합계 |
| 무학력 | 10.9 | 7.6 | 10.3 |
| 초등학교 | 20.1 | 7.5 | 17.9 |
| 중학교 | 38.5 | 19.3 | 35.1 |
| 고등학교 | 20.6 | 25.8 | 21.5 |
| 대학교 | 10.0 | 39.9 | 15.2 |

자료: Algerian government(2013), p.16.

나. 실업

알제리 정부는 2000년 이후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와 지속적인 경제성장 등으로 인해 2000년 30% 수준이던 실업률을 2010년에는 20%로 낮출 수 있었다(KDI[2012b]). 이러한 결과는 정부부문의 일자리 창출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지난 십여년간에 나타난 출산율 저하, 노동시장 참여율 감소 등의 결과로도 볼 수 있다(Furceri[2012]). 전체적으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실업률이 높은 편이며, ‘도시 지역’이 농촌 지역보다 실업률이 높은 편이다. 그리고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실업률이 높은 편이다. 실업의 성별 격차와 지역 간 격차는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고학력일수록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은 인력양성과 산업수요 간의 양적·질적 불일치가 심각한 상태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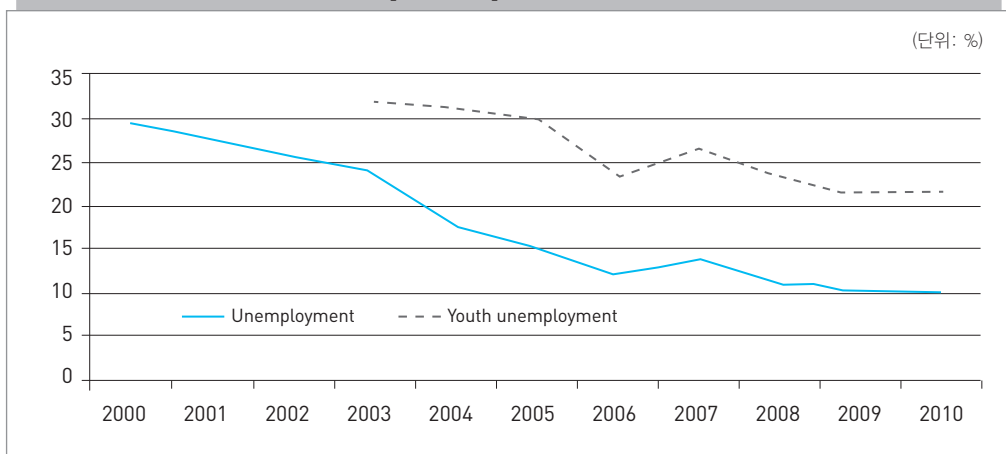
〈표 3-4〉 실업률 현황(2011)

| | | 남성 | 여성 | 합 계 |
|------|--------|------|------|------|
| 연령 | 합 계 | 8.4 | 17.2 | 10.0 |
| | 16~24세 | 19.1 | 38.1 | 22.4 |
| | 25세 이상 | 6.0 | 12.6 | 7.2 |
| 교육수준 | 무학 | 2.4 | 3.0 | 2.5 |
| | 초등학교 | 6.3 | 7.4 | 6.3 |
| | 중학교 | 11.9 | 18.6 | 12.6 |
| | 고등학교 | 6.9 | 15.0 | 8.6 |
| | 대학교 | 8.9 | 22.4 | 15.2 |
| 지역 | 농촌 | 14.6 | 31.3 | 22.8 |
| | 도시 | 15.9 | 48.1 | 31.4 |
| | 합 계 | 15.0 | 37.4 | 26.0 |

자료: Algerian government(2013), p.16.

한편 지난 10년간 전체 실업률이 많이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 3-2]에서 나타나듯이 전체 노동력의 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청년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여러 선행연구(World Bank[2007]; KDI[2011; 2012]; Furceri[2012])에서 지적했듯이 공기업 중심의 경직적인 노동시장구조뿐만 아니라, 인력 수요와 공급 간에 상당한 수준의 불일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표 3-5〉에서 나타나듯이 대졸자 중 인문·사회계열 출신 비율이 현저히 높은 편인데, 이는 산업구조조정과 더불어 산업인력 양성체계의 개편 등과 같은 청년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림 3-2] 실업률 추세



자료: UNDP(n.d.)에서 자료를 발췌하여 필자 작성.

〈표 3-5〉 대졸자 전공별 실업률 현황(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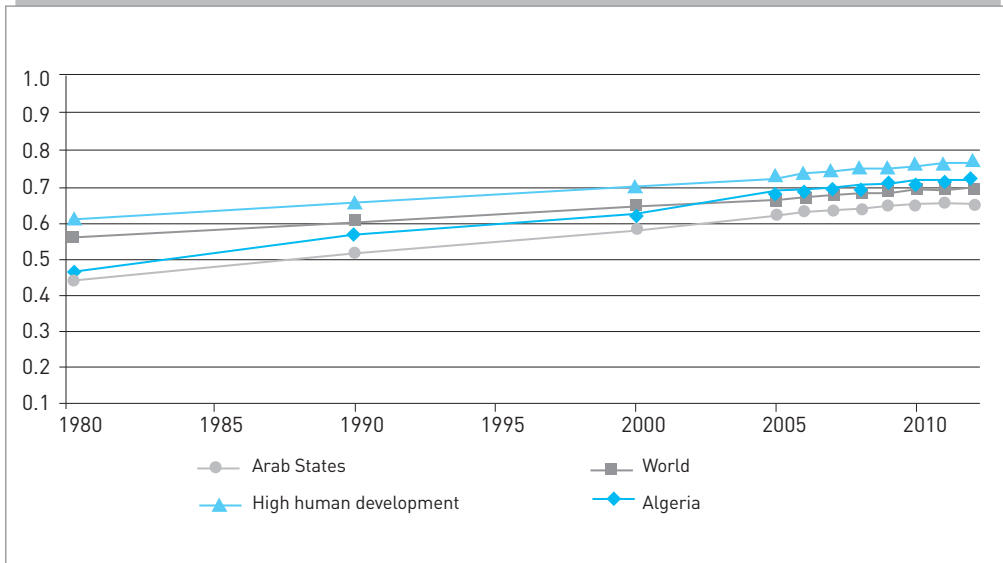
| (단위: %) | | | |
|---------|------|------|------|
| | 합 계 | 남성 | 여성 |
| 인문계열 | 27.3 | 14.7 | 34.4 |
| 사회계열 | 28.7 | 14.0 | 43.7 |
| 과학계열 | 18.1 | 9.8 | 28.6 |
| 공학계열 | 14.8 | 9.4 | 39.7 |
| 합 계 | 21.4 | 11.1 | 21.4 |

자료: Furceri(2012), p.18.

2. 인적자원수준

알제리는 지난 10년간 경제성장으로 인해 인적자원수준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유엔개발계획국(UNDP)에서 개발한 인간다운 생활수준을 측정하는 복합지수인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의 값이 1990년 0.562에서 2010년 0.691로 향상되었다. [그림 3-3]에서 나타나듯이, 지난 이십 년간 알제리의 HDI 값의 개선 정도는 아랍 국가들의 평균과 세계 평균보다 높으며, HDI 상위 국가들(High Human Development)과의 격차도 많이 줄어들었다.

[그림 3-3] 인적개발지수 변화 추세(1980~2010)



자료: UNDP(n.d.).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개선해야 할 여지는 많이 남아 있다. 주요 국가들의 HDI 지수값 현황을 보여주는 <표 3-6>에서 나타나듯이, 알제리의 평균 교육연한(7.6년)은 같은 자원부국인 모로코(4.4년), 리비아(7.3년), 튀니지(6.5년)보다는 길지만, 말레이시아(9.5년), 칠레(9.7년)보다는 짧은 편이다. 그리고 2012년 인간개발지수(HDI)를 살펴보면, 알제리의 2012년 HDI 순위는 93위로, 전년도 127위보다 30위나 상승하였지만, 튀니지(94위), 리비아(64위), 말레이시아(64위)보다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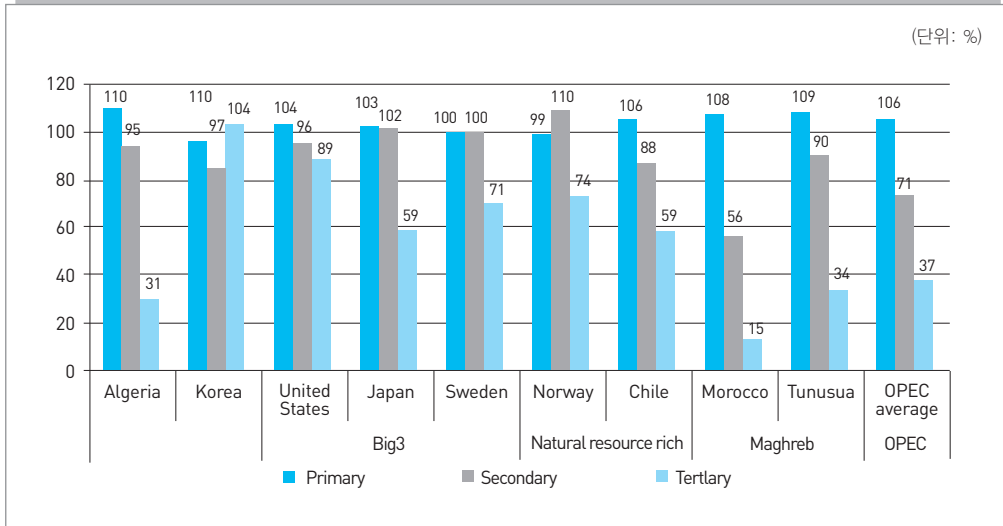
<표 3-6> 국가별 인간개발지수(2013)

| | HDI 순위 | HDI 지수값 | 출산 시 기대 수명 | 평균 교육 연한 | 평균 재학 기간 | 1인당 국민 소득 (GDP) | 1인당 GNI 순위 - HDI 순위 | 비소득 HDI |
|--------|--------|---------|------------|----------|----------|-----------------|---------------------|---------|
| 알제리 | 93 | 0.713 | 73.4 | 7.6 | 13.6 | 7,418 | 4 | 0.755 |
| 한국 | 12 | 0.909 | 80.7 | 11.6 | 17.2 | 28,231 | 15 | 0.949 |
| 주요 4개국 | 미국 | 3 | 0.937 | 78.7 | 13.3 | 43,480 | 6 | 0.958 |
| | 일본 | 10 | 0.912 | 83.6 | 11.6 | 32,545 | 11 | 0.942 |
| | 독일 | 5 | 0.920 | 80.6 | 12.2 | 35,431 | 10 | 0.948 |
| | 스웨덴 | 7 | 0.916 | 81.6 | 11.7 | 36,143 | 6 | 0.940 |
| 자연 부국 | 노르웨이 | 1 | 0.955 | 81.3 | 12.6 | 48,688 | 4 | 0.977 |
| | 칠레 | 40 | 0.819 | 79.3 | 9.7 | 14,987 | 13 | 0.863 |
| | 말레이시아 | 64 | 0.769 | 74.5 | 9.5 | 13,676 | -7 | 0.791 |
| | 리비아 | 64 | 0.769 | 75.0 | 7.3 | 13,765 | -8 | 0.791 |
| | 모로코 | 130 | 0.591 | 72.4 | 4.4 | 4,384 | -13 | 0.608 |
| | 튀니지 | 94 | 0.712 | 74.7 | 6.5 | 8,103 | -6 | 0.746 |

자료: UNDP(2013), pp.143~144의 자료를 발췌하여 필자 작성.

알제리의 인적자원수준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그림 3-4]와 같다. 2010년 현재 초중등교육 등록률 면에서는 [그림 3-4]에 포함된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고등교육의 등록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졸 실업률이 높고, 특히 인문·사회계열의 실업률이 다른 계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학문계열에 대한 구조조정 없이 현 고등교육시스템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림 3-4] 주요국의 교육수준별 등록률 비교(2010)



자료: UNDP(n.d.)에서 자료를 발췌하여 필자 작성.

제3절 알제리의 산업인력 수요와 직업교육훈련 및 고등교육 현황

본 절에서는 알제리 비전 2030 연구 결과(KDI[2012])와 알제리 정부의 산업발전계획 등을 토대로 「알제리 2015~19 발전계획」 실현을 위한 인력수요를 산업부문별, 숙련도별로 개략적으로 추정하였다. 아울러 알제리의 직업교육훈련과 고등교육의 실태를 다른 개도국들과 비교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알제리의 주요 이슈와 도전과제를 도출하였다.

1. 산업인력 수요 추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9년 현재 알제리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석유·가스 부문의 비중이 40%를 상회하고 있으며, 기타 부문(40%)을 제외하고 농업이 10%, 제조업이 6%를 차지하고 있다. 알제리 국가비전 2030 수립 지원을 목표로 한 『2012 경제협력국가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알제리(KDI[2012a])』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알제리의 현행 산업구조가 유지될 경우, 2030년에 제조업 비율은 유가 변동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8~10%대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예측이 유지된다면 「2015~19년 알제리 발전계획」에 따른 산업인력 수요도 현재 수준과 유사할 것이다.

그러나 알제리 정부가 지향하는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외자 유치의 확대, 산업화와 근대화 목표를 실현하고, 더 나아가 2030년까지 연 7% 수준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비율'을 2010년 현재 6.2%에서 16.2%(유가 변화가 없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대신에 석유·가스 부문 비중은 43.2%에서 18.2%까지 감소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KDI[2012a]). 이러한 수준으로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다각화도 필요하지만, 제조업 발전에 필요한

인력공급을 2030년까지 현재보다 약 3배 정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KDI [2012a]).

〈표 3-7〉 산업구조 변화가 있는 경우 2030 산업구조 전망

| | 고유가 시나리오 (연 4.7% 상승) | | 중간 수준 유가 시나리오 (연 2.8% 상승) | | 유가 변화 없는 경우 (연 0.0% 상승) | |
|-------------|-------------------------|-----------|------------------------------|-----------|----------------------------|-----------|
| | 부가가치 (10억달러) | 비중 (%) | 부가가치 (10억달러) | 비중 (%) | 부가가치 (10억달러) | 비중 (%) |
| 농업 | 93.0 | 14.2 | 100.6 | 15.3 | 107.6 | 16.4 |
| 제조업 | 95.4 | 14.5 | 106.0 | 16.2 | 116.2 | 17.7 |
| 기타 서비스업 | 292.5 | 44.6 | 328.0 | 50.0 | 362.3 | 55.2 |
| 비석유·가스 전체 | 480.9 | 73.3 | 534.6 | 81.5 | 586.1 | 89.3 |
| 석유·가스 | 175.1 | 26.7 | 121.4 | 18.5 | 69.9 | 10.7 |
| GDP | 655.0 | 100.0 | 656.0 | 100.0 | 656.0 | 100.0 |
| 인구(천명) | 44,645.0 | | 44,645.0 | | 4,464.5 | |
| 1인당 GDP(달러) | 14,692.9 | - | 14,692.9 | - | 14,692.9 | - |

주: 전망은 2010년 GDP를 총량 전망의 성장률 연 7%로 외삽하며, 따라서 부가가치는 2010년 실질가격 표시(10억달러) 금액이며 비중은 %임.
자료: KDI(2012a), p.139.

실제 2010년부터 알제리가 추진해 온 「2010~14 발전계획(Algerian government[2010])」에서도 석유·가스 부문의 비중을 줄이면서 산업을 다각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로서 강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알제리 정부는 약학 산업, 식품산업, 건설업, 자동차 및 기계 산업, 전기 및 전자 산업, 화학산업, 재활용 및 재생 산업, 섬유산업, 미래산업 등을 활성화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2010-14 발전계획」에서는 국가 부의 창출의 근원으로서 산업발전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3조 4,500억 디나르(463억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1조 디나르(132억달러)는 농업과 농촌개발을 위해서 투자하고, 1,500억 디나르는 중소기업의 활성화, 3천억 디나르는 중소기업 용자 지원을 위해 투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력시설과 석유화학산업 및 공기업의 현대화를 위해서 2조 디나르(264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표 3-8〉 산업발전 및 고용 관련 투자계획(2010~14)

(단위: 10억 디나르)

| | 분야 | 투자액 |
|------|----------------------------|-------|
| 산업부문 | 농업과 농촌개발 | 1,000 |
| | 중소기업의 활성화 | 150 |
| | 중소기업 용자 지원 | 300 |
| | 전력시설과 석유화학산업 개발 및 공기업의 현대화 | 2,000 |
| | 소 계 | 3,450 |
| 실업지원 | 대학 졸업생의 훈련과 전문훈련 | 150 |
| | 중소기업 지원 | 80 |
| | 임시직 창출 | 130 |
| | 합 계 | 360 |

자료: Algerian government(2010), pp.5~6 자료를 토대로 필자 작성.

이와 같은 산업의 다각화를 위한 투자 외에도 알제리 정부에서는 10% 이하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2014년까지 300만개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하여 3,600억 디나르(48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 중 42%(1,500억 디나르, 28억달러)는 대졸자의 훈련과 전문훈련에, 22.2%(800억 디나르, 11억달러)는 중소기업 지원에, 그리고 35%(1,300억 디나르, 17억달러)는 임시직 창출을 위해서 투자될 예정이다. 이러한 투자계획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제조업을 포함한 산업분야 전반에 고용 창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확대된 투자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직업교육훈련의 양적 확대와 질적 발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그동안 인문·사회계열 중심으로 확장되어 온 고등교육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질 때, 산업수요와 인력공급 간의 불일치가 줄어들고, 산업인력 공급의 양적 확대가 실업률 증가를 초래하지 않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직업교육훈련의 현황과 주요 이슈

직업교육훈련체제는 2002년 단행된 국가교육훈련체제 개혁의 결과로서 도입되었으며, 중도탈락 청소년들의 진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과정을 다양화하고, 산업인력 수요를 충족하여 전체적인 인력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MFEP[2012b]). 직업교육훈련은 학교교육 체계와 분리되어 전문훈련교육부(Ministry of Professional Training and Education: MFEP)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MFEP 외의 정부부서, 회사 내 훈련기관, 민간훈련기관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 현재 직업교육훈련은 743개의 직업훈련센터, 4개의 훈련교육연구소, 96개의 직업훈련특수훈련소, 1개의 국가원격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MFEP[2013]).

2012년 현재 전문훈련교육부(MPTE)에서는 22개 분야의 422개 유형의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직업훈련의 유형은 크게 훈련시설 내 훈련(residential training), 현장실습(apprenticeship), 원격교육(distance training), 야간훈련(evening training)으로 구분된다.

직업훈련과 연계하여 자격체제는<표 3-9>와 같이 5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5단계로 올라갈수록 자격수준이 높으며, 자격수준별로 소요되는 훈련기간과 수여되는 학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표 3-9〉 직업교육훈련 자격 유형(2012)

| 자격수준 | 교육수준 | 훈련기간 (개월) | 자격증 |
|-----------|-----------------|--------------|---|
| Level I | 중학교 4년 미만 수준 | 6 | Certificate of Vocational Training Specialist(CFPS) |
| Level II | " | 12 | Professional Aptitude Certificate(CAP) |
| Level III | 중학교 4년 수준 | 18 | Masters Certificate Professional(CMP) |
| Level IV | 고등학교 2년 수준 | 24 | Technician Certificate(BT) |
| Level V | 고등학교 3년 수준 | 30 | Higher Technician Certificate(BTS) |

자료: MFEP(2013), p.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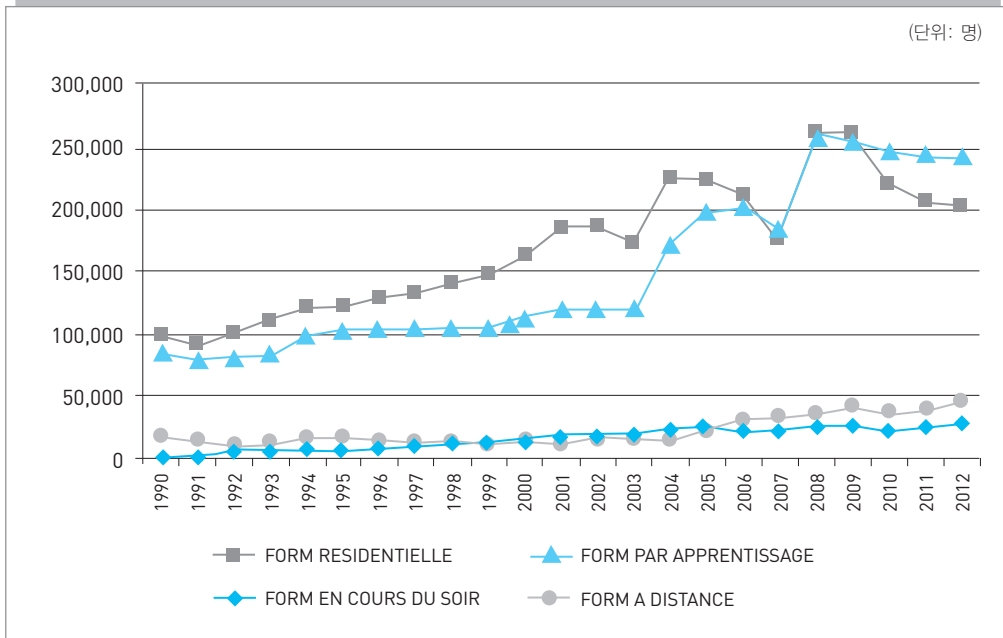
직업교육훈련은 2개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과정별로 별도의 학위가 수여된다. 1단계 과정을 이수하면 1차 직업학위(vocational diploma: DEP 1)가 수여되고, 2단계 과정을 이수하면 2차 직업학위(vocational diploma: DEP 2)가 수여된다. 각 과정별 총 교육시간은 72주로, 이 중 전체 교육시간의 77%(56주)는 직업훈련시설 내 직업훈련으로 구성되고, 나머지 16주는 기업 내 훈련으로 이루어진다. 기업들은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현장실습 지도, 훈련교사 양성, 각 단계별 시험문제 개발 등에 참여함으로써 직업훈련에 기여한다. 그리고 주요 산업과 관련하여 5개의 직업훈련 전문 연구소들이 있는데, 그 유형은 산업 유형(type IND), 농산업 유형(type AGR), 관광산업 유형(type HRT), 건설 및 공공 부문 유형(type BTP), 경영 및 상업 유형(type TER)으로 구분된다(MFEP[2012b]).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알제리가 당면한 첫 번째 이슈는 직업교육훈련이 학교교육과 분리되어 학교 밖의 훈련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 사회적 위상이 낮다는 점이다(MFEP[2013]). 현재는 중도탈락생이나 중등학교 졸업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들이 직업훈련기관에 진학함에 따라 학생들의 훈련 동기나 능력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이 양성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직업훈련기관의 사회적 위상이 떨어지고,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위한 훈련기관이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³⁹⁾

두 번째 이슈는 청소년 인구의 증가에 대응하여 직업교육훈련 기회를 적절히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3-5]에서 나타나듯이, 직업교육훈련 참가자는 지난 20년간 두배 이상 증가하였다. 2007년에 일시적으로 직업교육훈련 규모가 감소되었으나 그 이후 전체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39) 2013년 9월 3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개최된 '2013 KSP with Algeria Interim Reporting & Capacity Building Workshop'에서 알제리 측 관계자들이 제시한 의견임.

[그림 3-5] 직업교육훈련 참여자 현황



자료: MFEP(2012a).

세 번째 이슈는 알제리가 앞으로 공업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조업 분야의 직업교육훈련 비율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표 3-10>에서 나타나듯이, 2012년 현재 직업교육훈련 유형 중 행정 및 경영 기술(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technic)이 19.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호텔관광(15.0%), 공공업무 영역(10.6%)이다. 반면에 제조업 인력을 양성하는 기계 엔지니어링과 철강 분야(mechanical engineering and steel)는 1%, 전기·전자 분야(electrical-electronics)는 7.2%에 불과하다.

〈표 3-10〉 직업교육훈련 분야별 훈련생 비율(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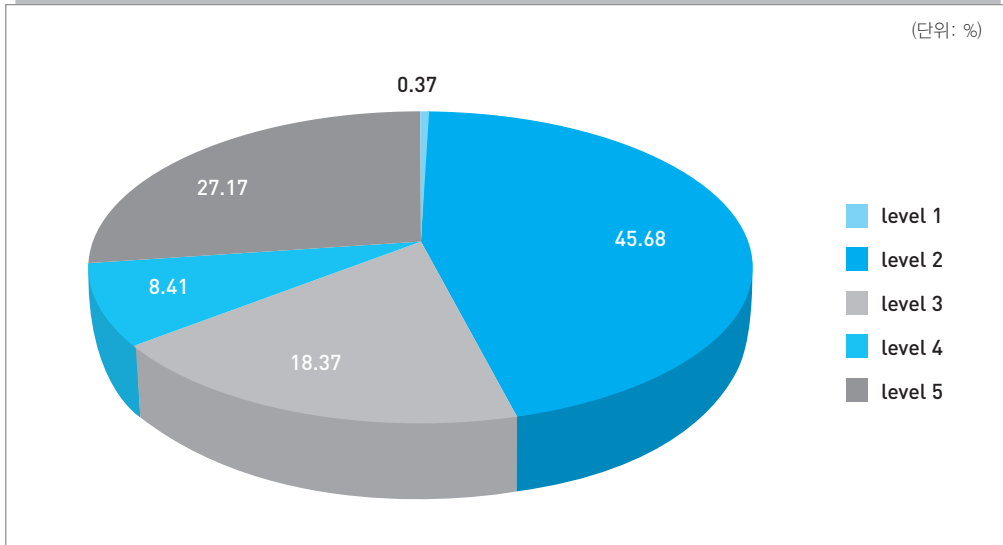
(단위: %)

| 직업교육훈련 분야 | 학교훈련 | 현장실습 | 야간제 | 합 계 |
|--------------|------|------|-----|-------|
| 농업 | 0.8 | 0.8 | 0.0 | 1.7 |
| 예술 및 산업 그래픽 | 0.2 | 0.1 | 0.0 | 0.3 |
| 전통공예 | 3.4 | 1.4 | 0.0 | 4.8 |
| 목공 및 가구 | 1.1 | 2.6 | 0.0 | 3.7 |
| 공공작업 | 5.8 | 4.6 | 0.2 | 10.6 |
| 화학산업 | 0.1 | 0.1 | 0.0 | 0.2 |
| 철강산업 | 2.1 | 7.4 | 0.0 | 9.5 |
| 기계 엔지니어링과 철강 | 0.4 | 0.6 | 0.0 | 1.0 |
| 가죽 및 피부 | 0.3 | 0.3 | 0.0 | 0.6 |
| 전기·전자 | 4.5 | 2.6 | 0.1 | 7.2 |
| 의류 섬유 | 6.0 | 1.9 | 0.1 | 8.0 |
| 호텔·관광 | 2.5 | 12.4 | 0.1 | 15.0 |
| 농공산업 | 0.2 | 0.2 | 0.0 | 0.4 |
| 컴퓨터 | 2.4 | 0.9 | 1.3 | 4.6 |
| 수자원 및 환경 | 0.4 | 0.2 | 0.0 | 0.5 |
| 비즈니스 서비스 | 3.9 | 5.3 | 0.4 | 9.5 |
| 기계·엔진·기어 | 0.8 | 2.0 | 0.0 | 2.8 |
| 수산업 | 0.1 | 0.1 | 0.0 | 0.1 |
| 행정 및 경영 기술 | 7.9 | 10.1 | 1.0 | 19.1 |
| 오디오 및 비디오 기술 | 0.2 | 0.3 | 0.0 | 0.5 |
| 합 계 | 43.1 | 53.6 | 3.3 | 100.0 |

자료: MFEP(2012a).

네 번째 이슈는 직업교육훈련의 양적 확대에 부응하는 질적 발전이 수반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MFEP[2013]). 직업교육훈련 수준이 5단계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생의 대부분이 2, 3단계에 집중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림 3-6]에서 나타나듯이, 2단계와 3단계에 전체 훈련생의 55%가 집중되어 있고, 가장 높은 단계인 5단계의 비율은 27.17%에 불과하다. 이에 더하여 각 단계별 졸업시험은 있지만, 직종별 국가 수준의 자격검정제도가 없어서 직업교육훈련의 질에 대한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림 3-6] 직업교육훈련 수준별 이수 현황(2012)



자료: MFEP(2012a).

아울러 자치지역(Wilaya)별로 훈련 생간에 상당한 수준 차이가 있다. <표 3-11>에서 나타나듯이, SETIF 지역은 1~5단계 훈련을 이수한 훈련생이 1,675명에 이르는 데 비해 훈련생이 0명인 지역들(CHLEF, SAIDA, EL BAYADH 등)도 다수 있다. 이러한 편차는 지역의 인적자원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표 3-11> 지역별 훈련생의 기술자격 취득 현황(2012)

(단위: 명)

| | WILAYA | NIVEAUX | | | | | TOTAL |
|----|----------------|---------|-------|-----|----|-------|-------|
| | | QUAL | 2 | 3 | 4 | 5 | |
| 1 | ADRAR | 0 | 1,118 | 172 | 0 | 489 | 1,779 |
| 2 | CHLEF | 0 | 0 | 0 | 0 | 0 | 0 |
| 3 | LAGHOUAT | 0 | 396 | 27 | 0 | 28 | 451 |
| 4 | OUM EL BOUAGHI | 0 | 0 | 0 | 0 | 296 | 296 |
| 5 | BATNA | 0 | 1,425 | 207 | 77 | 333 | 2,042 |
| 6 | BEJAIA | 0 | 154 | 36 | 0 | 1,193 | 1,383 |
| 7 | BISKRA | 0 | 208 | 38 | 0 | 130 | 376 |
| 8 | BECHAR | 0 | 0 | 0 | 0 | 108 | 108 |
| 9 | BLIDA | 0 | 0 | 0 | 0 | 325 | 325 |
| 10 | BOUIRA | 0 | 216 | 99 | 66 | 184 | 565 |
| 11 | TAMENRASSET | 0 | 154 | 0 | 15 | 46 | 215 |
| 12 | TEBESSA | 180 | 101 | 21 | 0 | 557 | 859 |
| 13 | TLEMCEN | 0 | 18 | 0 | 0 | 624 | 642 |
| 14 | TIARET | 0 | 319 | 36 | 0 | 77 | 432 |
| 15 | TIZI OUZOU | 0 | 96 | 21 | 0 | 250 | 367 |

〈표 3-11〉의 계속

(단위: 명)

| | WILAYA | NIVEAUX | | | | | TOTAL |
|----|--------------------|---------|-------|-------|-----|--------|--------|
| | | QUAL | 2 | 3 | 4 | 5 | |
| 16 | ALGER | 0 | 0 | 0 | 0 | 839 | 839 |
| 17 | DJELFA | 15 | 309 | 40 | 0 | 866 | 1,230 |
| 18 | JJEL | 0 | 0 | 0 | 0 | 778 | 778 |
| 19 | SETIF | 0 | 41 | 20 | 58 | 1,556 | 1,675 |
| 20 | SAIDA | 0 | 0 | 0 | 0 | 0 | 0 |
| 21 | SKIKDA | 17 | 147 | 36 | 13 | 157 | 370 |
| 22 | SIDI BEL ABBES | 0 | 13 | 0 | 0 | 93 | 106 |
| 23 | ANNABA | 0 | 131 | 12 | 0 | 437 | 580 |
| 24 | GUELMA | 0 | 186 | 7 | 0 | 261 | 454 |
| 25 | CONSTANTINE | 108 | 0 | 0 | 0 | 260 | 368 |
| 26 | MEDEA | 0 | 448 | 10 | 13 | 0 | 471 |
| 27 | MOSTAGANEM | 0 | 64 | 103 | 0 | 67 | 234 |
| 28 | M'SILA | 0 | 67 | 53 | 0 | 66 | 186 |
| 29 | MASCARA | 60 | 351 | 0 | 0 | 106 | 517 |
| 30 | OUARGLA | 0 | 237 | 64 | 0 | 341 | 642 |
| 31 | ORAN | 0 | 73 | 0 | 0 | 25 | 98 |
| 32 | EL BAYADH | 0 | 0 | 0 | 0 | 0 | 0 |
| 33 | ILLIZI | 64 | 0 | 0 | 0 | 64 | 128 |
| 34 | BORDJ BOU ARRERIDJ | 0 | 15 | 0 | 0 | 0 | 15 |
| 35 | BOUMERDES | 10 | 35 | 0 | 0 | 48 | 93 |
| 36 | EL TARF | 0 | 303 | 41 | 0 | 213 | 557 |
| 37 | TINDOUF | 0 | 0 | 0 | 0 | 0 | 0 |
| 38 | TISSEMSILT | 0 | 0 | 0 | 0 | 113 | 113 |
| 39 | EL OUED | 0 | 399 | 59 | 45 | 889 | 1,392 |
| 40 | KHENCHELA | 0 | 208 | 0 | 83 | 457 | 748 |
| 41 | SOUK AHRAS | 0 | 142 | 0 | 0 | 312 | 454 |
| 42 | TIPAZA | 0 | 309 | 0 | 39 | 270 | 618 |
| 43 | MILA | 0 | 0 | 0 | 0 | 612 | 612 |
| 44 | AIN DEFLA | 7 | 159 | 29 | 44 | 97 | 336 |
| 45 | NAAMA | 0 | 52 | 0 | 0 | 64 | 116 |
| 46 | AIN TEMOUCHENT | 0 | 0 | 0 | 0 | 70 | 70 |
| 47 | GHARDAIA | 0 | 117 | 102 | 0 | 407 | 626 |
| 48 | RELIZANE | 0 | 148 | 235 | 19 | 17 | 419 |
| | TOTAL | 461 | 8,159 | 1,468 | 472 | 14,125 | 24,68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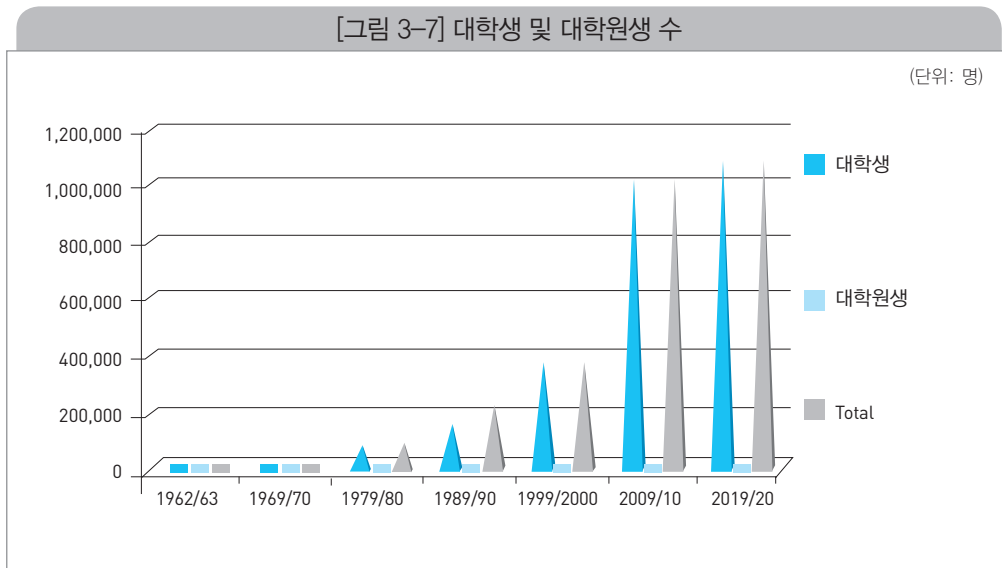
자료: MFEP(2012a).

마지막으로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 간의 협력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OBG[2011]; MFEP[2013]). 기업이 현장실습 등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턴십 등의 현장실습 기관을 확보하는 데 직업훈련기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고등교육의 현황과 주요 이슈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대응하여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알제리 정부는 최근에 대학교육과 연구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의 질 관리는 최근에 주목받는 정책이슈로, 2010년에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국가평가기구(National Evaluation Committee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CNE)와 과학 연구 및 개발에 관한 국가평가위원회(National Evaluation Council for Scientific Research and Development Technology: CNEERSDT)가 설립되었다(Ministre de l'Enseignement Superieur et de la Recherche Scientifique[2012]). 이러한 고등교육정책들의 대상이 되는 기관은 2013년 현재 141개 대학(universities), 10개 대학센터, 4개 부설대학, 19개 대학원, 5개 사범대학(higher normal schools), 10개 대학준비학교, 3개 통합학교, 1개 계속교육대학, 6개 훈련기관이다(MESRS[2013], p.14).

고등교육과 관련하여 알제리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첫째, 높은 청년층 인구 비율로 인하여 계속 급증하고 있는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다. [그림 3-7]에서 나타나듯이 대학생은 1990년대 말부터 급증하여 2009/10학년도에는 100만명대 이르고 있다. 대학원생도 1962/63학년도와 2010/11학년도 사이에 156명에서 60,617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현재의 높은 청년층 인구 비율을 고려할 때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 Ministre de l'Enseignement Superieur et de la Recherche Scientifique(2012), p.37.

이와 같이 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교수당 학생 수가 점차 늘어나고, 그에 따라 대학교육의 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표 3-12>에서 나타나듯이, 교수당 학생이 1989/90학년도에는 12명이었으나, 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2010/11학년도에는 27명으로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 수의 증가에 맞추어 교수 충원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12〉 고등교육기관의 교수당 학생 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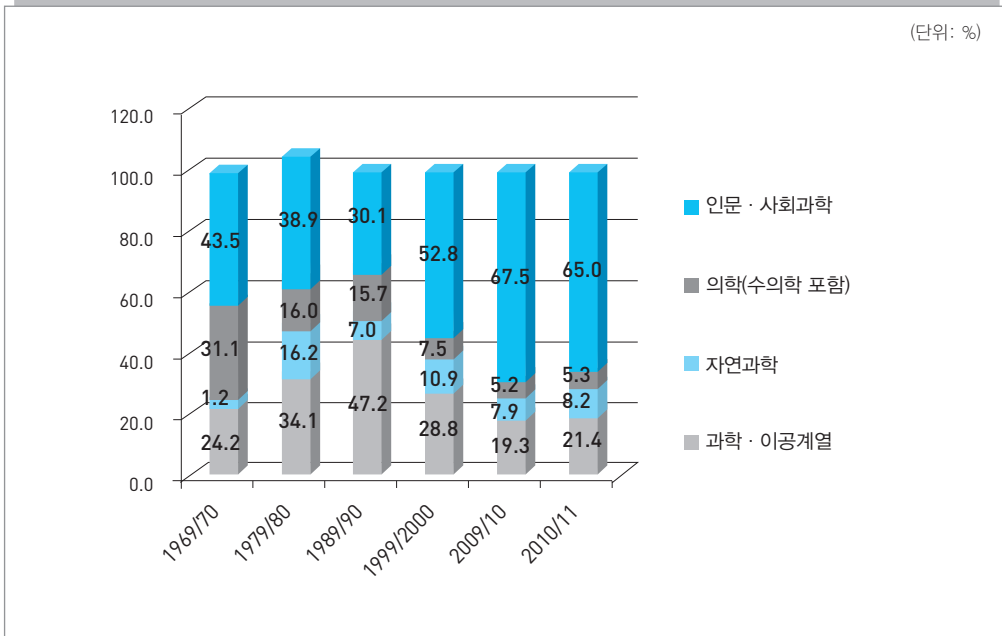
(단위: 명)

| | 1962/63 | 1969/70 | 1979/80 | 1989/90 | 1999/2000 | 2009/10 | 2010/11 |
|----------|---------|---------|---------|---------|-----------|-----------|-----------|
| 정규 교수 수 | 298 | 842 | 7,497 | 14,536 | 17,460 | 37,688 | 40,140 |
| 등록 학생 수 | 2,725 | 12,243 | 57,445 | 181,350 | 407,995 | 1,034,313 | 1,077,945 |
| 교수당 학생 수 | 9 | 15 | 8 | 12 | 23 | 27 | 27 |

자료: Ministr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 Scientifique(2012), p.59.

둘째, 고등교육의 사회적 적합성(social appropriateness)을 높이는 것이 주요 이슈이다. 2000년대 이후 산업발전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과학·이공, 자연, 의학 계열별 학생 수는 줄어든 반면에, 인문·사회계열의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림 3-8]에서 나타나듯이 1999/2000학년도와 2010/11학년도 사이에 인문·사회계열 학생 비율은 52.8%에서 65.0%로 증가한 반면에, 과학·이공계열 학생은 28.8%에서 21.4%로 감소하였다.

[그림 3-8] 전공분야별 대학생 현황



자료: Ministr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 Scientifique(2012), p.40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작성.

이러한 추세는 실업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13>에서 나타나듯이 인문·사회계열 출신의 실업률이 과학·이공계열 출신의 실업률보다 높은 편이다. 이러한 결과는 알제리의 산업발전 및 고용 증가, 그리고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학문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3-13> 학문계열별 대학생 실업률 현황

| (단위: %) | | | |
|---------|------|------|------|
| | 합 계 | 남성 | 여성 |
| 인문계열 | 27.3 | 14.7 | 34.4 |
| 사회계열 | 28.7 | 14.0 | 43.7 |
| 과학계열 | 18.1 | 9.8 | 28.6 |
| 공학계열 | 14.8 | 9.4 | 39.7 |
| 합 계 | 21.4 | 11.1 | 21.4 |

자료: Furceri(2012), p.18.

셋째, 산학협력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알제리 정부에서는 Technology Park 설립 등을 통해서 대학들이 지역의 산업인력 양성과 R&D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고등교육 개혁의 핵심 과제로 설정해 왔으나, 여전히 그 성과는 미미한 편이다.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2~2013(World Economic Forum, 2012)』에 의하면, 알제리 대학들과 산업체들이 R&D 면에서 협력하는 정도는 144개국 중 최하위일 정도로 낮은 편이다.

마지막으로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주요 이슈 중의 하나이다.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2~2013』에 의하면, 144개국 중 알제리의 국가경쟁력은 110위이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은 108위이다. <표 3-14>에 나타나듯이 고등교육 경쟁력 지표 중 3개 지표(총등록률, 과학자 및 공학도의 활용 가능성, 인구 100만명당 PCT 특허 수)를 제외하고, 기타 지표는 100위보다 낮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교육 및 연구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표 3-14> 대학교육 및 연구 경쟁력(2012~13)

| 지표 | 가치 | 순위(총 144개국) |
|--------------------|------|-------------|
| 고등교육 등록률(%) | 30.8 | 74 |
| 연구 및 훈련서비스의 활용 가용성 | 2.8 | 138 |
| 직원 훈련 | 2.6 | 142 |
| 혁신역량 | 1.9 | 143 |
| 연구기관의 질 | 2.1 | 141 |
| 대학-산업체 R&D 협력 | 1.9 | 144 |
| 과학자 및 공학도의 활용 가능성 | 4.0 | 72 |
| 인구 100만명당 PCT 특허 수 | 0.2 | 91 |

자료: The World Economic Forum(2012), p.89.

제4절 한국 사례

본 절에서는 알제리 정부가 「2015~19 발전계획」의 부문별 계획으로서 직업교육훈련과 고등교육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데 시사점을 줄 수 있는 한국의 경험을 소개하였다. 이에 따라 <표 3-1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시기별(1960년대, 1970~80년대, 1990년대 이후) 산업인력양성정책의 특징을 제시하고, 아울러 주요 직업교육훈련 및 고등교육 정책을 제시하였다.

<표 3-15> 한국의 직업기술훈련 정책의 변화

| | 관점 | 사회경제적 상황 | 교육 상황 | 주요 정책 | 교육과 산업의 연계 |
|-------------------------------------|--------------|--|---|--|-----------------|
| 1960년대: 직업교육훈련제도 도입기 | 산업인력 양성 | 1인당 GDP 100달러 제1, 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수립 및 추진 - 주요 수출품: 오징어, 가발 | 초등교육의 보편화 | 산업교육진흥법(1963) 실업고등전문학교 신설(1963) 실업교육시설 확충 특별회계(1967) 과학기술교육진흥 5개년계획(1967~71)(1967) 직업훈련법(1967) | 산업발전을 위한 수단적 기능 |
| 1970년대~ 1990년대 초반: 산업인력 중점육성기 | 국가적 경제발전의 관점 | 중화학공업 중심 제3,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추진 - 주요 수출품: 섬유 봉제 1인당 GDP 1만달러 정권 변화에 따른 정치적 안정 필요성 - 주요 수출품: 자동차, 철강 3D 기피현상과 기능인력 부족 현상 심화 - 주요 수출품: 자동차, 전자, 반도체 | 중학교 교육의 보편화 고교 진학을 급증 고등교육 팽창 | 시범농고 육성(1972) 전문학교 신설, 중화학공업교육 강화 방안(1973) 산업교육진흥법 개정: 산학협동(1972) 국가기술자격법 제정(1973) 공업교육의 특성화(1974~78) 직업훈련기본법 제정(1971) 지방대 특성화 정책(1974) 2년제 대학의 전문대학 통합(1979) 공고정상화정책 (과학기술교육진흥방침 수립)(1981) 자영농과 신설(1980)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설립(1987) 산업대학 설치(1990) 고등학교 직업기술교육 체제 개편(1990) | 강력한 연계 |

〈표 3-15〉의 계속

| | 관점 | 사회경제적 상황 | 교육 상황 | 주요 정책 | 교육과 산업의 연계 |
|---------------------------|---|---|--------------|--|------------|
| 1996년 이후: 평생직업 교육체제 | 개인 수요자 관점 -▽통합적 평생 직업적 관점 | 경제성장을 둔화 금융위기와 구조조정 - 주요 수출품: 자동차, 전자, 반도체, 조선 1인당 GDP 1만 5천달러 산업구조 고도화 | 입학자원의 감소. | 고용보험법 제정(1993) 공과대학 중점육성사업(1994) 신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1996)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1996)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1997) 직업교육체제 개편(2000) 근로자직업능력개발촉진법 (2004) 마이스터 고등학교(2008) 산학협력 선도대학사업 (2011) | 연계 약화 |

자료: 진미석(2009), p.362를 일부 수정하여 필자 작성.

1. 경제성장과 인력양성의 연계⁴⁰⁾

한국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인력양성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목표의 달성으로 산업과 고용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면서부터이다. 1961년에 GDP의 39.1%를 점유하던 농수산업 부문이 1966년에는 34.9%로 감소하고, 제조업과 광공업 부문은 15.5%에서 20.5%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연계하여 직업교육훈련체제가 정비되어 산업발전과 수출의 증가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기능인력의 양성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의 주요 직업교육훈련정책으로는 전문계 교육의 강화와 5년제 실업고등학교(고등학교 3년+고등교육 2년)의 설립 근거가 되는 산업교육진흥법(1963년)과 직업훈련계획 수립 및 직업훈련원 설치의 근거가 되는 직업훈련법(1967년) 제정을 들 수 있다(진미석[2009], p.360).

1970년대는 제3·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72~81년)과 함께 직업교육훈련이 양적·질적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한 시기이다. 제3·4차 계획기간 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된 경제정책인 '중화학공업화'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중심으로 직업교육훈련이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공업계 고등학교 및 직업훈련기관이 확대되었고, 아울러 공고의 특성화, 실험·실습 교육 및 산학협력의 활성화, 공업계 고교 대상 재정지원 확대 등이 추진되었다. 이 시기에 제정된 주요 직업교육훈련법으로는 사업장에 의한 직업훈련 의무제도를 도입한 「직업훈련에 관한 특별조치법」(1974년)과 사업주가 의무이행을 못하는 경우 일정액의 분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직업훈련분담금제도를 제도화한 「직업훈련기본법」(1976년 12월 31일, 법률 제2973호)을 들 수 있다. 아울러 1974년에 지방대학의 이공계, 농학 계열, 수산학계열, 해양학계열, 항공학계열을

40) 이 부분은 「직업교육훈련 100년사(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8)」를 주로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집중 육성하는 지방대학 특성화 정책이 추진되었다(김종철 외[1989]). 이어서 1979년에 중견기술인력 양성수준을 다원화하고, 대학유형을 다양화하기 위해 전문대학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주간 수업 위주로 이루어지는 4년제 대학과 차별화하여 생산직 근로자들의 대학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주간제와 야간제를 도입하였고, 계약학과 운영 등을 통해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구조의 특성이 노동집약에서 기술집약으로 변화하고, 대량 생산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그리고 유연생산체제로 전환되면서 직업교육훈련도 대대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아울러 경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교육열이 높아지면서 중등 수준 이하의 직업훈련 수요는 줄어들고, 전문대 이상의 직업훈련 수요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정책도 양적 확대를 벗어나 질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직업훈련 제도 및 정책, 직업훈련의 내용 및 자격검정제도, 인력 수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는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현 산업인력공단)이 설립되어 직업훈련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1990년대에는 지식기반사회에 맞추어 평생학습과 훈련이 강조됨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체제도 대대적으로 개편되었다. 과거의 사내교육시스템을 대신하여 '수요자 중심'의 자율적인 훈련체제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 훈련기관들이 다기능 기술자 양성을 위한 기능대학으로 개편되었고, 고급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산업대학이 설립되었다. 아울러 실업예방, 고용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도모하는 고용보험법이 1993년에 입법화되어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정책에도 변화가 있었다.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92~96년)과 경제 5개년계획(1993~97년)에 근거한 과학산업단지 및 첨단산업기지 건설 등에 따른 고급인력수급계획이 수립되었다(이현청 외[1999]). 동 계획에 따라 '이공계 학과'에 우선적으로 정원이 증원되게 되었다. 아울러 1994년에 '공과대학 중점지원 사업'이 추진되어 1994년부터 1998년까지(5년간) 매년 선정된 대학(총 8개교)당 50억원씩, 총 2,000억원이 지원되었다(장수명[2004]).

2000년대에 들어서 평생학습사회와 지식기반경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과 고등교육정책도 질적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직업교육훈련의 패러다임이 전면적으로 전환되어 산업계 수요 부응에서 개인적 수요 부응으로, 그리고 전문계 고등학교로부터 고등교육 단계의 직업교육훈련으로의 전환이 강조되었다(진미석[2009], p.361). 이에 따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폴리텍을 중심으로 고등교육 수준의 직업교육훈련이 활발해짐과 동시에,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도입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능력개발 기회가 확대되었다. 동시에 대학과 산업체 간의 연계를 강조하는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는 일련의 법률(고용보험법 개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대한 제·개정이 이루어지고, 실업계 학교의 혁신을 위한 마이스터고도 신설되었다. 아울러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가 직무역량 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모듈(learning module)을 개발하여 전문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에 적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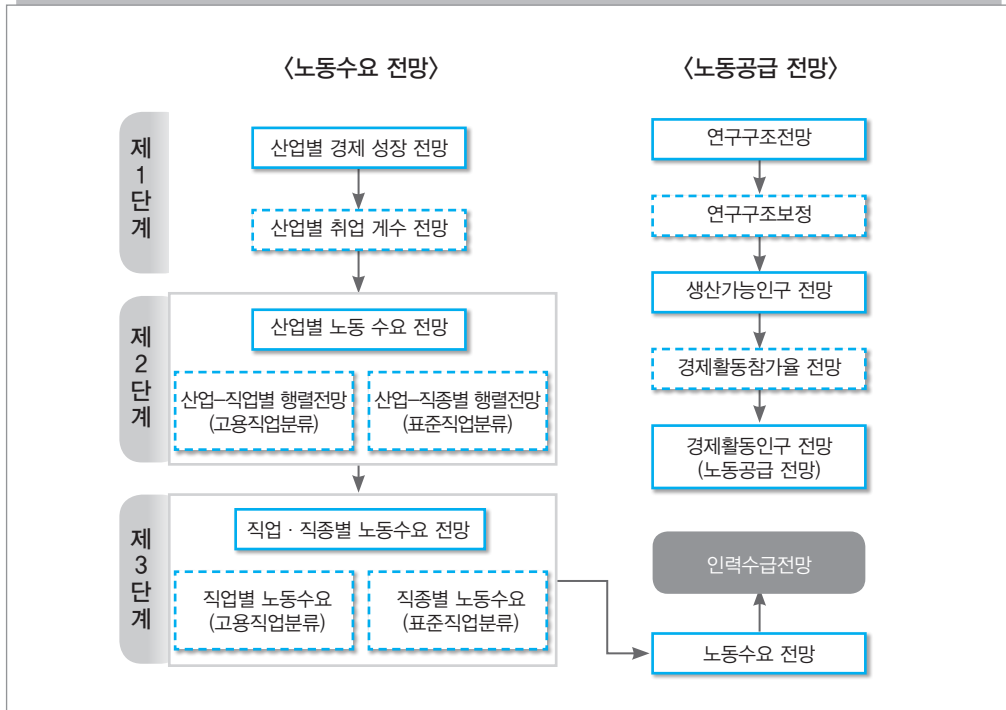
이와 같이 한국정부는 경제발전과 긴밀히 연계하여 산업인력양성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경제발전계획이 주기적으로 수립되던 1970~80년대에는 산업발전계획과 인력양성계획이 밀접히 연계되어 추진되었다. 1990년대 이후 정부 주도에서 시민사회 주도로 사회발전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경제계획과 인력양성계획 간의 연계는 다소 느슨해졌지만, 여전히 경제발전에 필요한 산업인력 공급은 인력양성정책의 핵심 전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하에서는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알제리의 산업발전 동향, 알제리 관계자 컨설팅 결과 등을 고려하여 알제리 정부가 「2015~19 발전계획」에 맞추어 직업교육훈련과 고등교육을 발전시키는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주요 정책을 1) 산업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2) 직업교육의 질 제고 및 전략적 확대, 3) 고등교육기관과 산업체 간의 협력 강화로 구분하여 소개하였다.

2. 산업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가.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체계 구축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노동시장의 인력수급을 미리 예측하여 국가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양성하고 배분하기 위해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전망 자료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고용정책, 산업정책, 교육정책 등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아울러 개인적 차원에서는 진로 및 직업 선택을 위한 상담 및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2012], p.5). 고용노동부에서 총괄 부처가 되고, 한국고용정보원이 전담기관이 되어 관련 부처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실시하고 있다. 인력수급전망은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노동력 전망, 취업자 전망,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2012], p.5). 이 중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은 노동력 전망(인력공급 전망)과 취업자 전망(인력수요 전망), 그리고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노동력 전망은 성별·연령별·학력별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인구 전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취업자 전망은 산업별·직업별 취업자 전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2012], p.5).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은 학력별·전공계열별 수급차 전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요소로 이루어진 인력수급 총량 전망의 기본 체계는 [그림 3-9]와 같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인력수급전망은 2011~20년 전망으로, 2020년까지의 산업별·직업별 인력수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3-9] 한국의 총량 전망의 기본체계



자료: 고용노동부 · 한국고용정보원(2010), p.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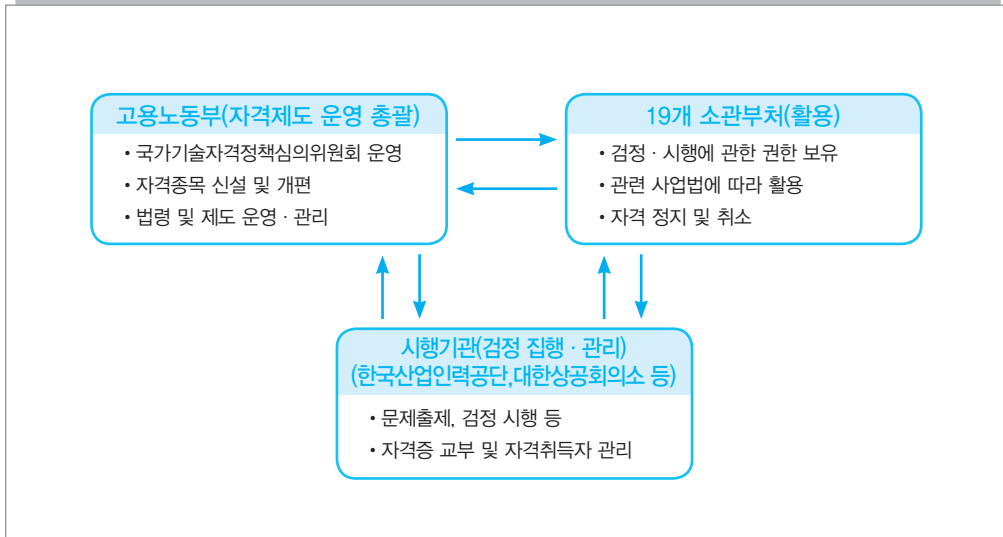
나. 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⁴¹⁾

1973년 한국정부는 당시 여러 부처와 기관들에 의해서 운영되던 국가자격을 통합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만들었다. 2013년 현재 자격은 관리주체에 따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국가자격은 국가기술자격과 기타 국가자격으로 구분된다. 국가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제시된 기사, 기능사 등을 말하며, 기타 국가자격은 각각의 법률에 근거하여 신설·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그림 3-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가기술자격은 '제도운영 총괄기관', '자격취득자 활용기관'과 '자격 시행 기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제 운영 총괄은 「국가기술자격법」을 관리하는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한다(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2012]). 자격취득자 활용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자격종목별 소관부처에서 담당한다. 자격 시행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담당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 운영체계는 [그림 3-10]과 같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2010년 말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556개이고, 자격 등급체계는 기술·기능 분야의 5개 등급(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과 서비스분야 1~3개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41) 참고자료: "2011 Modularization of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 Role and Function of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System in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Ability(KDI, 2012)."

[그림 3-10] 한국의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체계



자료: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2012), p.45.

국가기술자격검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같이 정부에 의해서 인정된 7개의 특별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자격검정제도는 고용주에게는 구직희망자의 직업역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적자원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들에게는 자신의 능력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근무여건 개선, 구직 및 전직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특히 국가기술자격증은 취득자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보증으로 구직, 승진, 보수 인상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다. 국가인적자원위원회

한국정부는 중장기 전망하에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인 국가 인적자원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1년에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았으며, 관계 장관, 국정과제 위원장, 노동계 대표, 산업계 대표 등이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동 위원회는 1) 인적자원개발정책 기획 총괄·조정·평가, 2) 인적자원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3) HRD 사업 조정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담당하였다(교육인적자원개발부 · 한국교육개발원[2006], p.186).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13인의 관계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활동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가 운영되었다. 이러한 추진체제에 근거하여 인적자원개발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밝힌 국가 계획인 「국가인적자원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동 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으로서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교육인적자원개발부 · 한국교육개발원[2006], p.187). 첫째, 중장기 정책 방향 및 핵심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국가 계획이며, 둘째 교육, 훈련, 과학기술, 복지, 문화 정책 등을 포함하는 범부처 차원의 종합계획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셋째, 비전과 목표를 담은 전략계획이며, 넷째

미래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유도계획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인적자원 개발정책·사업조사·분석·평가의 근간이 되는 기본계획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3. 직업교육의 질 제고 및 전략적 확대

가. 우수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정책

실업계 고등학교는 1960~80년대에 반숙련 근로자를 양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1960년대 실업계 고등학교는 제1차와 제2차 경제발전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산업인력을 공급하였다. 이어서 1970년대에는 기술계 고등학교의 특화와 모범 농업고등학교 지정 사업이 교육부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 한국경제의 중심 산업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이전함에 따라 실업계의 중점 영역도 기술인력 양성으로 변화하였다. 1990년에 기술인력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인문계 학생과 실업계 학생 비율을 50:50으로 맞추는 고등학교체제 개편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와 같은 정책 변화에 따른 일반계와 실업계 고등학교 현황은 <표 3-16>과 같다.

<표 3-16> 한국의 일반계와 실업계 고등학교 현황

(단위: 개, %)

| | 학교 | | | | 학생 | | | |
|------|-------|------|-----|------|-----------|------|---------|------|
| | 일반고 | 비중 | 실업고 | 비중 | 일반고 | 비중 | 실업고 | 비중 |
| 1965 | 389 | 55.5 | 312 | 44.5 | 254,095 | 59.6 | 172,436 | 40.4 |
| 1970 | 408 | 45.9 | 481 | 54.1 | 315,367 | 53.4 | 275,015 | 46.6 |
| 1980 | 748 | 55.3 | 605 | 44.7 | 932,605 | 55.0 | 764,187 | 45.0 |
| 1990 | 1,096 | 65.1 | 587 | 34.9 | 1,473,155 | 64.5 | 810,651 | 35.5 |
| 2000 | 1,193 | 61.0 | 764 | 39.0 | 1,324,482 | 63.9 | 746,986 | 36.1 |
| 2010 | 1,561 | 69.3 | 692 | 30.7 | 1,496,227 | 76.2 | 466,129 | 23.8 |

자료: Educational Statistics(n.d.).

이와 같이 경제발전에 실업계 고등학교들이 많이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그에 따른 고등교육의 확대로 인해 실업계의 위상이 추락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계의 인력양성 요구에 부응하는 우수한 고등학교를 육성하려는 일련의 정책들이 도입되고 있다. 그 예로서 ‘마이스터고 제도’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들 수 있다. 마이스터고는 고교 졸업자의 선취업 후진학을 촉진하고 산업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08년에 도입되었다. 고교 교육 단계에서 우수한 직업기술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직업훈련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재건하고, 산업체에 양질의 인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마이스터고는 학교와 기업이 함께 만드는 실무형 수업, 협약 기업을 오가며 배우는 현장실습, 재직자 특별전형 등을 활용한 일과 학업의 병행을 주요 강점으로 표방하고 있다(이주호 외[2011]). 2013년 현재 전국에 38개의 마이스터고가 운영되고 있다(MOE[n.d.]).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은 채용 예정 중소기업과 특성화고등학교를 연계하여 기업의 다양한 인력수요를 반영한 취업맞춤형 기술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고 있다(중소기업기술진흥원[2013]).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와 학생, 기업에 대해서 교육부, 중소기업청, 병무청,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참여 학교에는 실습 기자재, 실험장비, 프로그램 개발비 등이 지원된다. 참여 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업기간 중 24세까지 입영 연기, 산업기능요원 편입 우대, 맞춤형 교육훈련 지원금 등이 지원된다(중소기업기술진흥원[2013]). 그리고 참여 기업에는 맞춤형 인재 확보,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소요인원 배정 시 우대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중소기업기술진흥원[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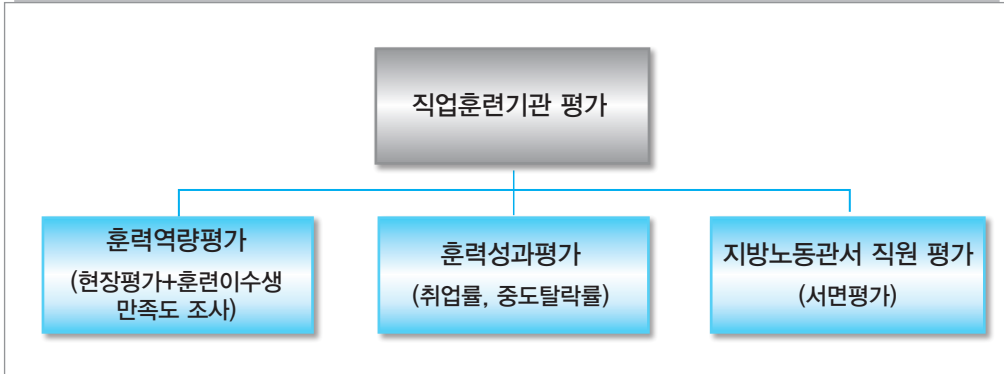
나. 한국산업인력공단(HRD Service of Korea)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조에 의거하여 다양한 직업훈련기관들을 통합함으로써 1982년에 설립되었다. 동 기관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평생학습 지원, 숙련기술장려사업, 자격검정, 고용촉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5개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능력개발 지원으로 기업의 학습조직화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직업능력개발 훈련기준, 훈련매체, 과정 개발 등을 지원한다. 둘째, 자격시험의 수립 및 시행으로 자격시험의 출제와 관리, 취득자 관리 등을 담당한다. 셋째, 외국인 고용 지원으로, 고용허가제 취득에 필요한 한국어능력시험(EPS-KLT)을 시행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체류를 지원한다. 넷째, 직업훈련 관련 국제교류협력과 해외취업 지원으로, 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 사업과 개발도상국 직업훈련 사업 등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숙련기술 장려 및 기능대회 개최로 대한민국 명장, 숙련기술 전수자, 우수 숙련기술인을 선정하고, 국내외 기능경기 개최를 지원한다(HRD Service of Korea[n.d.]). 이와 같은 다양한 역할을 통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인적자원 개발과 관리에 기여하고 있다.

다. 직업훈련기관의 평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근거하여 1999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직업훈련기관 평가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추구한다(고용노동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8], 재인용: 전재식 외[2012], p.30). 첫째,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훈련기관의 질적 향상을 촉진한다. 둘째, 훈련기관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요자의 훈련기관 선택권을 확대한다. 셋째, 훈련기관 간의 경쟁을 강화하여 훈련시장의 건전성을 높인다. 넷째, 평가와 연계된 지원체제를 마련하여 직업훈련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직업훈련기관 평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림 3-1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직업훈련기관 평가는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다(Rha[2012]). 첫째, 훈련역량 평가는 현장평가와 훈련생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현장평가는 교육훈련 전문가와 내용 전문가가 3인 1조의 평가팀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만족도 조사는 전문기관이 전화, 이메일, 팩스 등을 활용하여 수행한다. 둘째, 훈련성과 평가는 HRD-net에 입력된 중도탈락률, 취업실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셋째, 지방노동관서 직원에 의한 서면평가는 지방노동청의 실사 및 감독 결과 등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은 훈련기관은 1년간 평가 등이 면제되고 있다(전재식 외[2012]).

[그림 3-11] 한국의 직업훈련기관 평가



자료: Rha(2012), p.24(필자 번역).

4. 고등교육기관과 산업체 간의 협력 강화

가. 이공계 인력 양성사업

이공계 인력 양성은 1970년대 이래 고등교육정책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1974년에 지역의 지리적·사회문화적·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여 대학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대학 특성화 사업’이 추진되었다(Weidman and Park[2000], p.48). 동 사업은 공학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51개의 직업 관련 전공을 대상으로 추진되었으며, 추후 공과대학의 설립을 촉진하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이에 더하여 한국정부에서는 수도권 대학들의 정원을 통제하던 시절에도 이공계 학생 정원은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다.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92~96)과 경제 5개년계획(1993~97)에 근거한 과학산업단지 및 첨단산업기지 건설 등에 따라서 이공계 인력의 확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이현청 외[1999], p.24). 이 외에도 지역 산업과 대학의 연구기능을 연계하여 전국 주요 산업권역의 효율적인 인력 및 지식정보의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1994년에는 공과대학 중점지원사업이 추진되었다. 총 8개 대학이 선정되었으며, 각 대학에는 1994년부터 1998년까지(5년간) 매년 50억 원씩, 총 2,000억 원이 지원되었다(장수명[2004]).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 <표 3-17>과 같이 한국의 공학·제조·건설 분야의 고등교육 신입생 비율은 24%(2010년)로, OECD 회원국 평균(15%)보다 훨씬 높은 편이다.

<표 3-17> 교육분야별 고등교육 신입생 분포 비교(2010)

| (단위: %) | | | | | | | | |
|------------|--------------|-------|---------------|-----|--------------|----|----|-----|
| | 인문· 예술·교육 | 보건·복지 | 사회과학· 경영·법 | 서비스 | 공학· 제조·건설 | 과학 | 농업 | 미분류 |
| OECD 평균 | 21 | 13 | 32 | 6 | 15 | 10 | 2 | 2 |
| 한국 | 26 | 14 | 20 | 8 | 24 | 8 | 1 | - |

자료: OECD(2012), Table C3.4.

나. 계약학과제도

계약학과는 전문대학과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이 국가와 지자체, 산업체 등과의 계약을 통해 정원 외로 산업체 근로자 및 취업예정자들을 선발하여 학위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이다.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계약학과의 유형은 크게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으로 구분된다. 이 중 ‘채용조건형’은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재교육형’은 산업체 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 향상, 전직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 계약학과 운영 현황은 <표 3-18>과 같다.

<표 3-18>연도별 운영 현황

| | 2008 | | | 2010 | | | 2012 | | |
|-------|------|-----|-------|------|-----|-------|---------|-----|--------|
| | 학교 | 학과 | 학생 | 학교 | 학과 | 학생 | 학교 | 학과 | 학생 |
| 채용조건형 | 5 | 7 | 457 | 10 | 18 | 596 | 2(20) | 41 | 1,054 |
| 재교육형 | 38 | 156 | 5,598 | 69 | 253 | 8,620 | 103 | 385 | 11,220 |
| 합 계 | 42 | 163 | 6,055 | 71 | 271 | 9,216 | 105(20) | 426 | 12,274 |

주: ()는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 계약학과를 동시에 설치·운영하는 대학 수를 의미함.
자료: 교육부(2013), p.2.

다. 산학협력 프로젝트

한국정부에서는 지식기반경제로 전환하고, 경제성장의 지속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산학협력을 강조해 왔다. 2003년에는 산학협력기본계획이 발표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1) 수요에 기반한 인력훈련시스템 개발, 2) 기술혁신 R&D 및 기술상업화 촉진, 3) 다양한 기술이전정책을 통한 기술의 확대 및 응용 활성화, 4) 대학, 기업, 연구센터에 기반한 혁신회사의 설립 지원 등이다(Kim[2008], p.80). 이 외에도 교육부에서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 학교기업 지원, 전문대학 학생의 해외인턴십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산학협력 선도모델을 통해 우수 기술인력 양성과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서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Leadership in the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LINC)」이 추진되고 있다(KDI[2012b]). 사업 지원을 받는 대학은 산업체 운영의 실제와 경험을 교육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산학협력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현장경쟁력이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더 나아가 대졸 실업률을 줄이는 역할을 맡게 된다(이주호 외[2011]). 아울러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과 산업체가 협력하는 ‘산학협력 가족회사제도’가 도입되었다. 동 제도를 통하여 산업체는 현장훈련, 인턴십, 고용 기회 등을 대학생들에게 제공하고, 파트너 대학들은 산업체에 연구 지원 및 장비 대여 등을 함으로써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이주호 외[2002]).

제5절 정책권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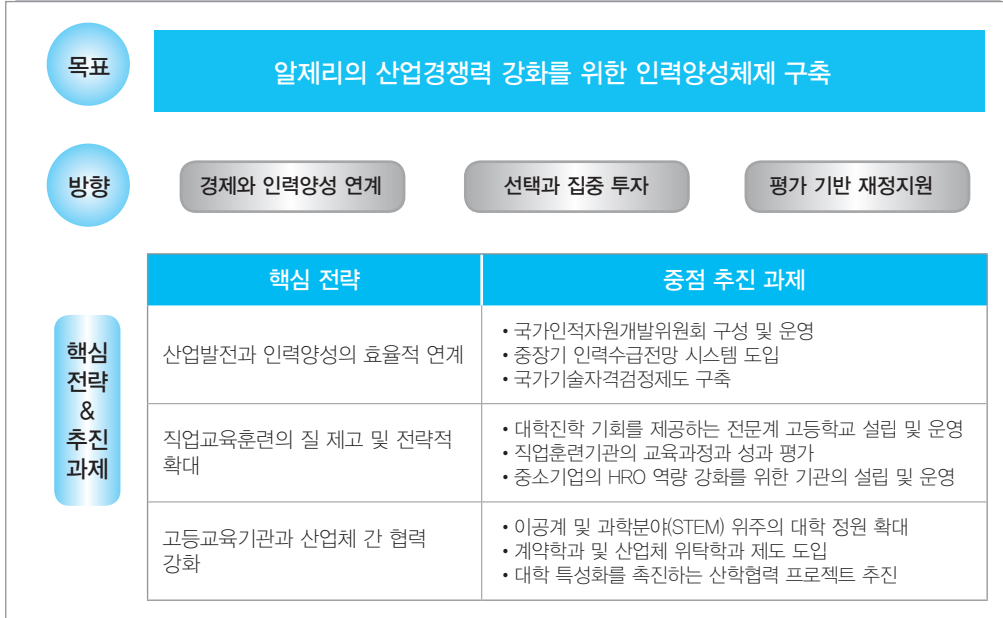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알제리의 발전계획, 산업인력 수요 및 교육여건, 그리고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알제리 2015~19 발전계획」의 교육부문 계획 수립 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Algeria Five Year Plan 2015~19」의 교육부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시사점을 줄 수 있는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직업교육훈련 및 고등교육 발전방안과 관련된 권고안을 제시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알제리 2015~19 산업인력양성계획」의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였고, 그 내용을 토대로 1) 산업발전과 인력양성 간의 효율적 연계 구축, 2) 직업교육의 질 제고 및 전략적 확대, 3) 고등교육기관과 산업체 간의 협력 강화 측면에서 정책권고안을 제시하였다.

1. 「2015~19 산업인력양성계획」의 목표 및 방향

알제리 정부가 지향하는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외자 유치의 확대, 산업화와 근대화 목표를 실현하고, 더 나아가 2030년까지 연 7% 수준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비율’을 2010년 현재 6.2%에서 16.2%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2015~19 산업인력양성계획」의 목표 및 방향을 [그림 3-12]와 같이 설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2015~19 산업인력양성계획」의 목표로서 ‘알제리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양성체제 구축’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발전과 인력양성 간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 제2차 경제개발계획부터 산업발전계획과 인력양성계획을 밀접히 연계하여 경제성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러한 한국의 경험을 벤치마킹하여 산업발전 및 인력양성 정책 간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서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인력양성체제를 알제리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선택과 집중 투자를 인력양성의 정책방향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 모든 인력양성기관을 골고루 지원하기보다는 산업발전전략과 연계하여 핵심 기능을 수행하거나 성과가 뛰어난 기관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평가에 기반한 재정지원으로서, 인력양성기관 간의 경쟁을 통해 교육훈련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학생 수에 토대한 일률적인 지원을 점차 축소하고, 각 직업훈련기관과 대학의 성과를 반영하여 재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하에 「2015~19 산업인력양성계획」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1) 산업발전과 인력양성의 효율적 연계 체제 구축, 2) 직업교육훈련의 질 제고 및 전략적 확대, 3) 고등교육기관과 산업체 간 협력 강화 등의 전략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3-12] 2015~19 산업인력양성계획 관련 정책권고안



자료: 필자 작성.

마지막으로 [그림 3-12]에 제시된 정책방안들은 알제리의 교육훈련 제도와 여건, 그리고 산업발달 동향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교육훈련 및 고등교육에 관한 법적 제도를 구비해야 하는 정책들(중장기 인력수급제도, 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 전문계 고등학교 설립, 중소기업 HRD 지원기관, 산업체 위탁학과 운영 등)은 정책방향 및 세부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2015~16년 동안 방안 수립 및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2017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에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정책 변경을 통해서 비교적 단기간에 추진이 가능한 정책(인적자원개발위원회 출범, 대학 정원 확대정책, 산학협력 지원, 직업훈련기관 평가)은 2015년에 개발 및 검토 과정을 거친 후 2016년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

2. 핵심 전략 및 추진 과제

가. 산업발전과 인력양성 간의 효율적 연계 구축

1) 국가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015~19 발전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업발전정책과 인력양성계획을 긴밀히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앞서 한국 사례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한국의 경우 1980~60년대에는 경제발전계획과 인력양성계획을 밀접히 연계하여 추진하였고, 2000년에 들어서는 국가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제성장과 연계하여 주요 부처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조정하였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초중등교육, 직업훈련, 고등교육 및 연구를 각각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알제리의 경우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 본 연구를

위해 이루어진 알제리의 정부관계자들과의 컨설팅 과정(2회)에서도 산업정책과 인력양성 간의 연계 부족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알제리 2015~19 발전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주요 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국가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동 위원회에서 산업정책, 경제정책, 인력양성정책 간의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산업수요를 반영하는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시스템 도입

알제리 노동시장의 인력 수요와 공급을 사전에 예측하여 국가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양성하고 배분하기 위해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체계적인 인력수급전망 없이 인력양성이 이루어질 경우, 인력수급 불일치로 인해서 실업문제와 인력 부족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인력수급전망 자료는 고용정책, 산업정책, 교육정책 등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개인의 진로 및 직업 선택을 위한 상담 및 의사결정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2007년부터 고용노동부 산하의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관련 부처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실시하고 있다.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은 노동력 전망, 취업자 전망,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으로 이루어진다. 알제리의 경우 산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인력양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알제리의 경우 비공식 산업분야의 고용비율이 높은 편이므로, 공식 및 비공식 노동시장을 포함한 인력수급전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3) 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 구축

수많은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의 질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알제리 정부에서도 국가자격기술검정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알제리에는 국가기술자격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교육훈련과정 졸업을 위한 시험은 실시되고 있지만, 정작 훈련생들이 훈련을 통해서 특정한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자격검정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에서는 국가기술자격제도에 기반하여 국가기술자격검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하여 2010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556개이며, 자격검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같이 정부에 의해서 인정된 7개의 특별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자격검정제도는 고용주에게는 구직희망자의 직업역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적자원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개인들에게는 자신의 능력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근무여건 개선, 구직 및 전직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이러한 장점들을 고려할 때, 알제리에서도 자격별로 국가 수준의 검정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나. 직업교육의 질 제고 및 전략적 확대

1) 대학진학과 연계되는 전문계 고등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직업교육훈련의 질을 제고하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학진학과 연계될 수 있는

직업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직업훈련이 산업체의 인력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직업훈련기관을 확대하는 것은 양질의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 되기 어렵다. 이미 알제리에서 직업훈련기관은 중등학교 진학에 실패한 학생들이 진학하는 기관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직업훈련체제의 한계를 뛰어넘는 대안 모색이 필요하며, 그 대안으로서 직업교육훈련기관인 전문계고등학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는 1960~90년대에 반숙련 근로자를 양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는 경제성장에 따라 실업계 고등학교들의 위상이 낙후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산업계의 인력양성 요구에 부응하는 우수한 고등학교를 육성하려는 일련의 정책들이 도입되고 있다. 최근에 비교적 우수한 성과를 내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한국의 ‘마이스티고 제도’는 양질의 취업이 보장될 경우 직업계 고등학교도 우수한 학생을 유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특성화고등학교를 연결하여 기업의 인력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도 실업계고의 사회적 역할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사례들을 참고하여 알제리에서도 명문 실업계고를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학교시스템 내에서 직업교육훈련이 이루어지면 대학진학과도 연계가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금보다는 우수한 학생들이 직업교육훈련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공기업에 우선적으로 취업시킬 필요가 있으며, 졸업 후 산업현장에서 최소 2년 이상 종사한 경우 대학진학에 있어서 우선 입학 기회를 제공해 주는 정책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직업교육훈련과 고등교육이 연계될 때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경로라는 직업교육훈련의 스티그마(stigma)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2) 직업훈련기관의 교육과정과 성과 평가

직업훈련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직업훈련기관의 교육과정과 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알제리의 경우 직업훈련이 48개 주정부에서 분권화되어 실시되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성과관리 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직업훈련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내용과 성과를 평가하는 국가 수준의 직업훈련기관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1999년부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근거하여 직업훈련기관 평가사업을 고용부에서 주도하고 있다. 평가기준 및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훈련기관 주도의 자율적인 질적 발전을 촉진하고, 평가와 재정지원을 연계함으로써 훈련기관의 성과를 제고하고 있다. 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의 개발과 교사훈련 등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훈련생의 교육만족도, 취업률, 중도탈락률 등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3) 중소기업의 HRD 역량 강화를 위한 기관의 설립 및 운영

현재 노동시장참여자 중 반숙련 노동자 비율(2011년 중학교 이하 학력 소지자: 63.3%)이 높은 편임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재교육은 알제리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도 알제리 기업들에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재교육 의무가 부가되어 있고, 평생교육시설 등을 통해서 재교육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재교육의 질도 높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재교육에 참여할 인센티브가 적기 때문에 재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학습조직화와 근로자의 직업훈련, 자격검정, 고용 촉진, 평생학습 등을 지원하는 기관을 설립·운영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1982년에 다양한 직업훈련기관들을 통합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설립하였다. 동 기관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평생학습 지원, 고용 촉진, 자격검정, 숙련기술장려사업 등을 담당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직업훈련의 질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알제리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재교육을 개별 기업에 맡기기보다는, 이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산업인력공단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 고등교육기관과 산업체 간의 협력 강화

1) 이공계 및 과학분야(STEM) 위주의 대학 정원 확대

알제리는 청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고등교육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대학진학률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높은 ‘인문·사회계열’ 위주로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개설된 학과들을 확대하기보다는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분야 위주로 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 알제리 정부가 과학연구진흥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이공계 인력 양성 비율도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전체적인 인력양성 측면에서 그 비율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1970~80년대 중화학공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공계열 위주로 대학 정원을 확대하고, 1990년대에는 공과대학 육성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한국 경험을 벤치마킹하여 알제리 정부에서도 국립대학의 신설 및 전공 확대를 STEM 분야 위주로 추진하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2) 계약학과 및 산업체 위탁학과 제도 도입

산업체의 인력수요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계약학과와 산업체 위탁학과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대학과 산업체가 협의해서 개발하거나, 산업체가 자체 개발한 훈련과정을 대학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과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도 산업체의 인력수요가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대학과 산업체 간의 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이슈로 대두하고 있고, 그에 따라 산업체 위탁경영 및 계약학과 제도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고급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분담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이 육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알제리에 도입될 경우, 대학교육과 취업이 바로 연계됨으로써 대졸 실업률 감소와 고급 기술인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인문·사회계열에 치우친 대학교육의 균형을 잡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대학 특성화를 촉진하는 산학협력 프로젝트 추진

모든 대학이 정부재정을 지원받는 알제리 국립대학들이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들이 지역 산업체들의 인력양성 수요를 반영하여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대부분의 대학이 유사한 학과를 개설하는 형태는 고등교육 진학률의 제고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산업분야별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알제리의 국토가 광활하며 지역별 경제여건에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체가 되어 산업체와 지역발전기관 등을 연계하도록 지원하는 대학 특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지식기반경제하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산학협력을 강조해 왔다. 각종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통해서 대학과 산업체 간의 개발연구의 활성화, 기술이전, 대학기업 및 창업보육센터 설립 등을 지원해 왔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대학에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우수한 실적과 계획을 가진 대학들을 평가하여 재정을 선별적으로 지원해 왔다. 이러한 한국의 경험을 벤치마킹하여 알제리에서도 대학 특성화를 촉진하는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업성과와 재정지원을 연계하는 성과기반 재정지원시스템(performance-based funding system)을 도입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제6절 결론

본 연구는 알제리 국가비전 2030 수립 지원을 목표로 한 『2012 경제협력국가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알제리(KDI[2012a])』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Algeria Five Year Plan 2015~19」을 수립하는 데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과 고등교육 발전에 관한 권고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알제리의 고용구조와 인적자원의 수준을 고찰하여 인력수급의 불일치 정도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알제리의 2030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산업인력 수요를 개략적으로 추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직업교육훈련과 고등교육의 현황 및 이슈를 논의하였다. 아울러 알제리가 산업발전과 직업교육훈련 및 고등교육의 발전을 연계시키는 데 시사점을 줄 수 있는 한국의 경험들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2015~19 알제리 발전계획」의 교육부문 계획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권고안들을 제안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알제리 정부가 석유부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산업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알제리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인력양성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경험을 벤치마킹하여 경제발전과 인력양성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투자를 하며, 성과평가에 기반하여 재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하에 1) 산업발전과 인력양성의 효율적 연계 체제 구축, 2) 직업교육훈련의 질 제고 및 전략적 확대, 3) 고등교육기관과 산업체 간 협력 강화 등의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산업발전과 인력양성의 효율적 연계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주요 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국가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정책, 경제정책, 인력양성정책 간의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산업수요를 반영하는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알제리 노동시장의 인력 수요와 공급을 사전에 예측하여 국가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양성하고 배분할 수 있도록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많은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의 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자격기술검정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직업교육의 질 제고 및 전략적 확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학진학과 연계될 수 있는 직업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여 우수한 학생들을 산업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정규교육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둘째, 48개 주정부에서 분권화되어 실시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기관의 교육과정과 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소기업의 학습조직화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직업능력개발 훈련기준, 훈련매체, 과정 개발 등을 지원하는 기관을 설립·운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고등교육기관과 산업체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분야 위주로 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대학과 산업체가 협의해서 운영하는 계약학과나 산업체가 자체 개발한 훈련과정을 대학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위탁학과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각 대학들이 지역 산업체들의 인력양성 수요를 반영하여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 고용노동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7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평가 집계훈련 평가 매뉴얼」, 2008.
-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증장기 인력수급 전망 2008~18」, 2012.
- 교육부, 「계약학과 설치 운영 Q&A」, 2013.
- 교육부(<http://english.moe.go.kr>)(검색일자: 2013. 6. 10.).
- 교육인적자원개발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백서』, 2006.
- 김종철, 『한국고등교육연구』, 배영사, 1979.
- 이주호 외, 『인재대국』, 한국경제신문, 2011.
- 이현청 외, 「대학 정원 자율화에 따른 고등교육분야별 교육수급 추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9.
- 장수명 외, 「국가 및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의 역할」, 한국교육개발원, 2004.
- 전재식 외, 「직업훈련정책 평가체계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2.
- 중소기업기술진흥원, 「기정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신청기업 매뉴얼(중소기업특성화 고인력양성)」, 2013.
- 진미석,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 직업 교육과 훈련의 위상」, 이종재 외, 『한국교육 60년 성취와 과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9, pp.357~383.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교육훈련 100년사』, 1998.
-
- Algerian government, “Algeria 5 Year Plan (2010~2014),” 2010.
- Algerian government, “La Strategie de Developpement Industriel pour Realiser la Vision 2030,” 2013.
- Educational Statistics(<http://cesi.kedi.re.kr>) (Date of Access: July 1, 2013).
- HRD Service of Korea(<http://www.hrdkorea.or.kr>) (Date of Access: July 1, 2013).
- Furceri, “Unemployment and Labor Market Issues in Algeria,” IMF Working Paper, 2012.
- KDI, Algeria: Establishment of National Vision 2030, 2011.
- KDI, 『2012 경제협력국가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알제리』, 2012a.
- KDI, Establishment of Algeria’s National Vision 2030, 2012b.
- Kim, G. W., “From a Beginner Education Country to a Rich Education Country,” Special Symposium commemorating the 60-Year Anniversary of the Country’s Establishment (1): Korea Sociological Association, 2008, pp.129~130.
- MESRS (Ministre de l’Enseignement Superieur et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l’Enseignement Superieur en Algerie 1962~2012,” 2012.
- MESRS (Ministre de l’Enseignement Superieur et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Education, Enseignement Superieur et Recherche Scientifique,” Programme de Partage de Connaissances KSP 2013, 2013.

- MFEP, “Annuaire Statistique 2011,” 2012a.
- MFEP, “L’Enseignement Professionnel un Nouvel Itineraire Educatif et Professionnel en Algerie,” 2012b.
- MFEP, “Algerian Educational System,” 2013 KSP with Algeria Interim Reporting & Capacity Building Workshop, 2013.
- MoIT and UNIDO, “Viet Nam Industrial Report 2011,” 2011.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2, 2012.
- Oxford Business Group, “The Report Algeria 2011,” (Retrieved May 12, 2011, from <http://www.oxfordbusinessgroup.com>), 2011.
- Rha, “Quality Assurance System of Training Institutions in Korea,” Conference 2012~10, 2012, pp.1~38.
- The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2~2013,” 2012.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13.
- UNDP(<http://www.undp.org>) (Date of Access: July 1, 2013).
- Weidman, J., and N. Park(eds.), Higher Education in Korea, Falmer Press, 2000.
- World Bank,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Algeria: A Public Expenditure Review”, 2007.

제4장 2015~2019 5개년 투자계획을 위한 알제리 산업정책 방향과 전략

김 종 일 (동국대학교)

< 요약 >

알제리가 2030년 15,000달러(2010년 가격 기준) 수준의 고소득국가로 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다각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비석유부문, 특히 제조업의 생산이 연 11.3~12.3% 정도 성장해야 할 것이다. 알제리 정부도 비석유부문을 성장을 통한 산업구조 다각화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알제리의 「2010~14 5개년투자계획」을 보면 투자 총액에서 산업발전에 할당하는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으며, 이 중에서도 많은 부문이 공기업부문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산업발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이 자원배분에서 등한시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정책재원을 투자할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금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유망한 기업이나 산업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공기업은 비효율성의 문제가 있으며, 유망한 민간기업에 대한 신뢰가 없다. 둘째는 정책재원을 배분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정책조직이 부재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알제리의 산업정책은 산업투자부 등 다양한 정부기관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조직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없다. 또한 산업정책은 산업연관과 시장전망에 기반하여 전략적으로 수립·집행되어야 하고 이를 통하여 시장에 신뢰를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현재 알제리의 산업정책에서 얼마나 구현되는지 알기 힘들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알제리의 산업발전을 위한 양대 과제로 제조업에서의 민간부문의 성장과 국영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환경의 개선 및 국영기업의 개혁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필요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의 산업정책 경험을 소개하고, 한국의 산업정책 경험이 시사하는 바를 알제리의 양대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책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제1절 서론

알제리가 2030년 15,000달러(2010년 가격 기준) 수준의 고소득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다각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비석유부문, 특히 제조업의 생산이 연 11.3~12.3% 정도 성장해야 할 것이다.⁴²⁾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이 실현되기는 매우 힘들지만, 세계경제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현재 상태에서 안정되어 있다면 알제리 경제는 향후 5년간 3~4%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⁴³⁾ 하지만 장기적으로 알제리 경제가 장기 전망에서 제시하는 바대로 에너지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든 산업구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비석유부문, 특히 제조업부문의 비중이 높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5년간 알제리 경제가 3~4% 성장한다면, 제조업부문은 경제성장률보다 1.5~2배 수준의 높은 성장률을 실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⁴⁴⁾

알제리 정부도 비석유부문을 성장을 통한 산업구조 다각화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과제를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2010~14년 5개년 투자계획에서 보면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6.9%(전체 2,860억달러 투자액 중 198억달러)인데, 이 중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한 투자 132억달러를 제외하면 중소기업 육성에 60억달러, 발전소 건설, 석유화학산업 육성, 공기업 현대화에 264억달러를 할당하고 있다.⁴⁵⁾ 이렇게 볼 때 전체 투자액에서 산업발전을 위하여 할당한 액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으며, 이 중에서도 많은 부분이 공기업부문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 산업발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이 자원배분에서 등한시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정책재원을 투자할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금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유망한 기업이나 산업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공기업은 비효율성의 문제가 있으며, 유망한 민간기업에 대한 신뢰가 없다. 둘째는 정책재원을 배분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정책조직이 부재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알제리의 산업정책은 산업투자부 등 다양한 정부기관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조직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없다. 또한 산업정책은 산업연관과 시장전망에 기반하여 전략적으로 수립·집행되어야 하고, 이를 통하여 시장에 신뢰를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현재 알제리의 산업정책에서 얼마나 구현되는지 알기 힘들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알제리의 산업발전을 위한 양대 과제로 제조업에서의 민간부문 성장과 국영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환경의 개선 및 국영기업의 개혁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필요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의 산업정책 경험을 소개하고, 한국의 산업정책 경험이 시사하는 바를 알제리의 양대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책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먼저 제2절에서는 알제리의 산업구조 현황과 2012년 장기 비전 연구에서 도출한 장기 산업전망의 시사점을 살펴보고, 제3절에서는 이러한 장기 산업전망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 알제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정책적인 노력을 알아보고

42) 김종일(2013) 참조.

43) 알제리는 2000년대에 들어와 3~4% 성장하였으므로, 유가에 큰 변동이 없는 이상 이러한 성장률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44) 김종일(2013) 참조.

45) Fatah Mahraz, Algeria Five-Year Plan, 2010~2~14. 참조.

평가하였다. 제4절에서는 산업발전을 통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한 한국의 경험을 소개한다. 제5절에서는 알제리의 산업구조 다각화를 위하여 한국 경험이 시사하는 바를 알아본다.

제2절 알제리 산업구조와 장기 산업전망

1. 알제리 산업구조의 비정형성

경제성장에 따르는 산업구조의 패턴을 관찰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조업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공업화가 진행된다. 하지만 알제리는 2000년대 이전에 비하여 성장률이 높아졌지만 제조업의 비중은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알제리는 1990년대 내전과 경제위기로 인하여 탈공업화가 진행되었다. 자원부국에서 제조업 비중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석유·가스 부문을 제외하여 보더라도 제조업의 비중은 10%로 여전히 낮다고 평가된다. 이를 볼 때 지난 20여 년간 산업구조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에서 볼 수 있는 현상과는 차이가 크다.

〈표 4-1〉 알제리의 산업구조

| | 2010 실제 GDP | | 2010 석유·가스 부문 배제 시 비중 | |
|-----------|-----------------|-----------|--------------------------|-----------|
| | 부가가치 (10억달러) | 비중 (%) | 부가가치 (10억달러) | 비중 (%) |
| 농업 | 16.9 | 10.5 | 16.9 | 18.4 |
| 제조업 | 10.0 | 6.2 | 10.0 | 10.9 |
| 기타 서비스업 | 65.0 | 40.2 | 65.0 | 70.7 |
| 비석유·가스 전체 | 91.9 | 56.8 | 91.9 | 100.0 |
| 석유·가스 | 61.9 | 43.2 | 0.0 | 0.0 |
| GDP | 161.8 | 100.0 | 91.9 | 100.0 |
| 1인당 GDP* | 4,496.2 | | 2,553.8 | |

주: 알제리 국민계정에 기초하여 석유·가스 부문을 포함한 경우와 제외한 경우를 계산함. 1인당 GDP*는 단위가 달러임.

이러한 산업구조를 유지한 채 알제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이며, 알제리가 2030년에 고소득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비석유부문의 높은 성장을 통하여 산업구조가 정상적인 국가로 변화해야 한다. 2012년 연구에서는 Chenery, Robinson, and Syrquin(1986)과 같이 횡단면 비교 분석을 통하여 알제리 산업구조의 비정형화 정도를 가늠하여 보았다. 즉, 1인당 GDP와 1인당 GDP의 승수, 인구, 천연자원 의존도(수출에서 천연자원이 차지하는 비중), 서비스업의 비중 등 한 국가의 제조업 비중의 결정요소를 고려하여

불 때, 부존자원, 인구규모, 서비스화 정도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알제리의 제조업 비중은 모형이 제시하는 평균적인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7.5%p 증가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⁴⁶⁾

2. 산업구조 전망

따라서 알제리가 2030년까지 고소득국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석유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산업구조가 정상적인 국가로 탈바꿈해야 한다.⁴⁷⁾ 이러한 가정 아래 2012년 연구에서는 석유·가스 부문과 비석유·가스 부문으로 알제리의 경제를 나누어 석유·가스 부문은 미국의 에너지정보청(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의 유가전망에 기초하여 독립적으로 전망하고, 비석유·가스 부문은 알제리의 산업구조가 정상화되는 가정 아래 얼마만큼 성장해야 15,000달러(2010년 가격 기준) 되는가를 역으로 계산하여 보았다.⁴⁸⁾ 이렇게 하여 전망된 2030년 알제리 산업구조는 <표 4-2>와 같으며, 이러한 전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중간 수준 유가 시나리오의 경우 농업은 2010년 이후 20년간 연평균 8.9%, 제조업은 11.8%, 서비스부문은 8.1% 성장해야 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4-2> 2030 산업구조 전망

| | 고유가 시나리오 (연 4.7% 상승) | | 중간 수준 유가 시나리오 (연 2.8% 상승) | | 유가 변화 없는 경우 | |
|--------------|-------------------------|-----------|------------------------------|-----------|-----------------|-----------|
| | 부가가치 (10억달러) | 비중 (%) | 부가가치 (10억달러) | 비중 (%) | 부가가치 (10억달러) | 비중 (%) |
| 농업 | 93.0 | 14.2 | 100.6 | 15.3 | 107.6 | 16.4 |
| 제조업 | 95.4 | 14.5 | 106.0 | 16.2 | 116.2 | 17.7 |
| 기타 서비스업 | 292.5 | 44.6 | 328.0 | 50.0 | 362.3 | 55.2 |
| 비석유·가스 전체 | 480.9 | 73.3 | 534.6 | 81.5 | 586.1 | 89.3 |
| 석유·가스 | 175.1 | 26.7 | 121.4 | 18.5 | 69.9 | 10.7 |
| GDP | 656.0 | 100.0 | 6,56.0 | 100.0 | 6,56.0 | 100.0 |
| 1인당 GDP* | 14,692.9 | | 14,692.9 | | 14,692.9 | |

주: 김종일(2013)의 전망치임. 전망치는 2010년 GDP를 총량 전망의 성장률 연 7%로 외삽한 것임. 부가가치는 2010년 실질가격 표시 금액임. 비중은 %, 1인당 GDP*는 단위가 달러임.

우선 알제리가 지속적이고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조업의 높은 성장률이 필요한가? 선진국 경제발전의 역사와 국가 간 횡단면 분석의 기존 연구에 따르면 공업화를 거치지 않고 고소득국가가 되기는 힘들며, 특히 제조업의 성장이 없이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기는

46) 김종일(2013) 참조.

47) 장기 비전 총량부문의 GDP 전망에 맞추어 2030년 알제리 1인당 GDP를 15,000달러(2010년 가격 기준)로 상정하였다. 물론 이 전망은 비전으로 매우 낙관적이다.

48) 고유가 시나리오에 따라 원유가격이 연 4.7% 상승하는 경우, 연 2.8% 상승하는 경우, 유가 변화가 없는 저유가 시나리오로 나누어 보고, 석유·가스 부문의 생산량은 현재와 같은 수준이 유지된다고 상정하였다. 김종일(2013) 참조.

힘들다. 전 세계에서 동아시아 지역만이 연 7%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는데, 한국이나 대만은 30년간 연 8% 이상 성장하였다.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같은 자원부국도 연평균 7%와 6%씩 성장하였다. 이러한 동아시아 국가의 공통점은 빠른 공업화를 달성한 점이다.⁴⁹⁾ 그렇다면 지난 20년간 탈공업화 과정을 겪은 알제리가 연평균 12%의 제조업 성장을 이루는 것이 가능한가? 이것은 한국의 경우를 상정하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한국의 제조업은 1960년 이후로 1960년대 15.5%, 1970년대 14.5% 정도 성장하였는데, 1960년대 경제개발 초기 20년 이상 연평균 15% 수준의 높은 제조업 성장률을 달성하였다.⁵⁰⁾

물론 현재 알제리가 처한 상황에 비추어 한국과 같은 고속 공업화를 달성하기는 힘들 것이며, 한국의 경험을 그대로 알제리에 적용하기도 힘들 것이다. 하지만 알제리의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대하여 평가하여 보고,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효과적이 되도록 하는 데 유용한 한국 경험의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제3절 알제리의 산업발전을 위한 전략과 투자

1. 알제리 5개년 투자계획의 내용과 문제점

알제리 정부는 내전이 끝난 이후 경제 복구와 발전을 위하여 5개년 단위로 재정투자계획을 세우고 집행하고 있다. 도로 등 교통인프라, 공공사업, 수자원 관리, 주택 건설 등이 지금까지 투자가 집중된 부문이다. 이들 부문이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04년 33%, 2006~09년 53%, 2010~14년에는 55%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1~04년 5개년계획은 경제복구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는데, 생활의 질 개선, 빈곤퇴치, 이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간 불균등 시정 등이 정책목표로 설정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주거 등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한 공공사업, 지역개발, 인적자원 개발, 농업과 어업 발전, 경제개혁 지원 등으로 투자부문이 나뉘어 수립 집행되었다. 2005~09년 5개년계획에서는 물가안정과 기초인프라 건설을 통한 경제성장이 정책목표로 제시되었다. 투자계획에서는 생활의 질 개선, 인프라 건설, 경제개발 지원, 전기 및 교통 현대화, 통신망 구축 등이 5대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이전 계획에 비하여 경제개발이 주된 사업대상으로 자리 잡았다. 2010~14년 5개년계획은 인근 국가의 정치적 소요에 따라 고 실업률에 대한 사회불만 해소와 주거 개선 등 국민의 직접적인 투자 만족도 고양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주요 투자부문으로 주거, 교육, 고등교육, 일자리 창출, 전기 및 수자원 관리 등이 제시되었다. 재원배분의 측면에서 보면 투자의 우선순위는 경제인프라, 농업, 주거, 교육, 문화 인프라, 마지막으로 생산활동 지원으로 보인다.⁵¹⁾

49) 김종일(2013) 참조.

50) 김종일(2013) 참조.

51) 5개년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Azzazz Larbi(2013) 참조.

〈표 4-3〉 알제리 5개년계획 재정투자계획

(단위: 10억 디나르, %)

| 분야 | 2001~2004 | | 2005~2009 | | 2010~2014 | |
|------|-----------|-----|-----------|-----|-----------|-----|
| | 액수 | 비중 | 액수 | 비중 | 액수 | 비중 |
| 교통 | 55 | 10 | 700 | 17 | 2 800 | 13 |
| 공공사업 | 45 | 9 | 600 | 14 | 3 100 | 15 |
| 수자원 | 31 | 6 | 393 | 9 | 2 000 | 9 |
| 주거 | 44 | 8 | 555 | 13 | 3 700 | 17 |
| 합계 | 175 | 33 | 2 248 | 53 | 11 600 | 55 |
| 총예산 | 525 | 100 | 4 203 | 100 | 21 214 | 100 |

주: 총예산은 5개년계획 재정투자계획 총예산. 비중은 총예산에서 각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Larbi(2013).

전반적으로 알제리의 5개년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교통이나 수자원 등 기초인프라 건설과 공공 일자리 창출, 지역개발, 주거시설 개선 등 사회개발 등에 우선적으로 재원이 배분되고 있다. 2010~14년 5개년 투자계획에서 보면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6.9%(전체 2,860억달러 투자액 중 198억달러)인데, 이 중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한 투자 132억달러를 제외하면 중소기업 육성에 60억달러 정도, 발전소 건설, 석유화학산업 육성, 공기업 현대화에 264억달러를 할당하고 있다.⁵²⁾ 이렇게 볼 때 산업발전에 할당하는 금융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으며, 이 중에서도 많은 부분이 공기업부문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 이러한 알제리의 5개년 투자계획은 경제개발에 모든 재원을 집중한 한국에 비하여 사회개발적 성격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알제리의 5개년 투자계획의 경험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다. 첫째, 교통, 수자원 관련 인프라 건설은 국가건설을 위하여 매우 필요한 사업이지만, 공공사업은 높은 실업률에 대처하기 위하여 단기적·단편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장기 전략이 없는 단기 사업이며, 주택건설사업도 국민의 생활의 질을 고양하는 점에서 바람직할지 모르나 경기부양적 효과 외에 장기적인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는 미흡하다. 둘째, 이러한 투자계획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매우 낮은 점이 지적된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유가상승으로 재정수입이 증가하고 투자재원은 확보되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사업 수립 및 집행 역량이 미흡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셋째, 집행되는 사업의 경우에도 승인절차가 복잡하고 계약이 지연되는 등 행정적 비효율성이 지적된다. 넷째, 투자계획에는 다양한 세부 예산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지만 각 계획 간의 유기성이 없이 투자계획이 열거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다섯째, 이에 따라 비용-편익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고 다수의 사업에서 자원낭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것은 앞서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 전략성이 부족하고 수립 이후에도 사업 집행에 있어서 행정적 효율성이 미흡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5개년 투자계획에서 볼 때, 이렇게 산업부문에 대한 투자가 매우 낮은

52) Fatah Mahraz, "Algeria Five-Year Plan, 2010-2-14," 2013. 참조.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정책재원을 투자할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금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유망한 기업이나 산업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공기업은 비효율성의 문제가 있으며, 유망한 민간기업에 대한 신뢰가 없다. 둘째는 정책재원을 배분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정책조직이 부재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알제리의 산업정책은 산업투자부가 주관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조직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없다. 또한 산업정책은 산업연관과 시장전망에 기초하여 전략적으로 수립·집행되어야 하고, 이를 통하여 시장에 신뢰를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현재 알제리의 산업정책에서 얼마나 구현되는지 알기 힘들다.

2. 알제리 정부의 산업발전전략의 내용과 문제점

알제리 산업발전전략에 대해서는 「알제리 산업발전 전략보고서(2007)」와 함께 최근 산업투자부가 준비하고 있는 「알제리 산업발전 전략보고서(2013)」가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으나, 현재 2013년 판은 아직 출판이 안 되어 본 고에서는 참조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우선 기존의 「산업발전 전략보고서(2007)」를 기초로 하여 알제리 산업발전전략의 기초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데 국영기업, 중소기업, 해외투자기업 등 각 분야 기업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해외투자기업의 진출로 인하여 국내기업이 시장에서 구축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는 집중과 선택이 없이 모호하고 절충적인 산업육성전략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과거와는 달리 수입대체보다는 수출 촉진에 지대한 관심을 보인다. 이에 따라 해외투자를 유치하고자 하지만 대규모 다국적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며, 국영기업의 개혁보다는 지원을 통한 국영기업의 육성을 내세운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영기업은 내수시장 지향적이지만, 산업발전전략에서는 국영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 등 지식경제 인프라의 구축을 강조하지만 이를 수행할 경제주체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다.

현재 알제리 산업투자부는 2013년 산업전략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공표하고 있지 않다. 대신 산업부의 Haddad Said(2013)에 따라 현재 알제리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발전을 위한 중점 전략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0~14년 전체 투자액에서 산업발전을 위하여 264억달러를 할당하였다. 알제리 정부는 이를 통하여 첫째, 2만개 중소기업 지원과 20만개 새로운 창업 지원, 둘째, 제조업 등 산업부문의 GDP 비중 확대, 셋째, 산업지구 확충 등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와 함께 철강, 기계, 제약, 농생산을 중점 지원분야로 설정하였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은행대출 지원이 주요 정책수단이었으며, 중점산업 육성은 주로 공기업의 고도화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였다. 현재 투자계획이 진행 중이어서 성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현재 창업의 경우에는 목표의 70%인 142,117개의 창업을 이루어 냈으나 영세 소기업이 90%이다. 또한 지역적으로 알제 등 북부지역에 60%가 몰려있으며, 대부분이 서비스 업종이다. 그리고 중소기업 고도화 사업에서는 2만개 기업이 목표였으나, 2013년 4월 현재 1,100개 기업 지원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산업발전전략적인 측면에서 지난 5개년계획은 정부의 투자비중도 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과도 기대에 못 미친다고 평가된다. 이는 기업의 고도화에 필요한 정책자원과 재원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적 여건의 확충도 미비했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조사에 따르면 알제리는 151위(2013년 기준)를 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토지 획득과 민간부문에 대한 은행대출 접근성의 부족에서 어려움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알제리 정부는 2015~19년 5개년계획에서는 산업발전을 위하여 세가지 중점 정책분야를 설정하고 있다. 첫째, 산업구조의 재편, 둘째, 기업 투자환경 조성, 셋째, 혁신역량 제고 등이다. 산업구조 재편을 위해서는 2007년 산업발전 전략보고서에서 피력한 바대로 전략산업 육성을 내세우고 있으며, 기업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산업공단 조성 및 제도 개선,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혁신시스템 구축, 기술 및 숙련 조성을 하부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산업구조 재편을 위한 전략산업으로는 기존의 산업 중에서는 섬유, 가죽, 목재 및 가구 등 경공업분야와 철강, 건설자재, 전선, 가전, 제약, 석유화학 등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자, 조선, 음·식료, 운송, 환경 분야 등 첨단기술이 요하는 신사업분야는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틀을 잡고 있다.⁵³⁾

이상을 이행할 5개 전략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첫째, 제조업의 두 자릿수 성장률 달성, 둘째, 수입 의존도 감소를 위한 수입대체산업 육성, 셋째, 비석유 수출산업의 성장, 넷째, 산업지구의 지리적 확산, 다섯째, 기술개발의 확충 등이다. 우선 제조업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20년까지 8% 수준으로 증가시키고 제조업 부가가치 성장률을 연 10%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2013~20년 사이 67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둘째로,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통하여 GDP 대비 수입 비중을 현재의 28% 수준에서 25%로 낮추며, 셋째로 수출산업 육성을 통하여 2020년까지 비석유·가스 수출을 GDP의 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넷째로, 현재 산업생산의 비중이 집중된 북부 알제리의 비중을 2020년까지 현재의 57%에서 45% 수준으로 내리고, 대신 남부와 고원지대의 비중을 각각 20%와 35%로 증가시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고급 기술 산업의 국내생산 비중을 현재의 12.5%에서 2020년에는 25% 수준으로 증가시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 전략산업, 부가가치 산업, 사양산업, 신흥산업, 첨단기술산업 군 등 6개 군으로 나누고, 주요 18개 업종을 육성 산업으로 선정하였다. 이와 함께 경제발전에 있어서 에너지와 정보통신 산업을 중점 산업군으로 고려하고 있다.⁵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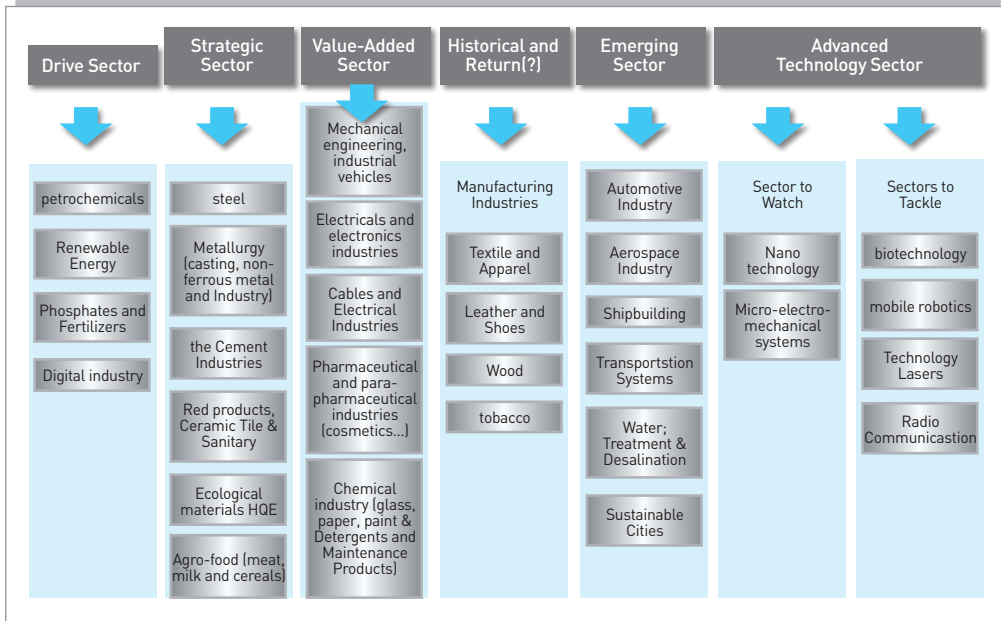
비록 2013년 산업전략 보고서는 입수하지 못했지만, 중간보고회 등을 통하여 산업부 담당자의 보고에 기초하여 정리한 현재 알제리 정부의 산업전략은 이상과 같다. 현재의 산업전략은 2007년 전략보고서에 비하여 5개 전략목표와 함께 각 목표에 대하여 생산, 고용, 구조 등에 있어서 계량적 목표를 설정한 점에서 진일보하고 있다고 평가되나, 여전히 전략이 추구하는 바에 대한 목표와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내용이 잘 제시되지 않고 있다. 산업전략의 3개 축인 산업구조개편, 기업환경 개선, 혁신역량 구축과 5개 하위 전략 간의 상응이 잘 제시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전략의 3대 축과 5개 하위 전략적 목표들간의 관계도 명확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5개 하위 전략목표를 구현시키는 집행계획이 없다. 즉, 전략목표가 수립되었으면 이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각 부문별 투자와 인력수급 등 자원배분계획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부재한 상황이다. 나아가 각 전략목표 실현을 위한 예산배정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데, 이는 전략목표를 위한 실행계획이 부재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53) Haddad Said(2013) 참조.

54) Haddad Said(2013) 참조.

나아가 이러한 산업전략의 실행을 위하여 에너지분야와 정보통신분야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설정이 알제리의 산업구조 개편을 위하여 적절한 선택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비록 에너지분야가 생산성이 높으며, 이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이 수익성도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에너지분야는 자본집약적이며 가치사슬 측면에서 산업연관이 낮은 분야로서 고용창출효과가 낮다. 나아가 정보통신분야는 알제리 산업의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 될 수는 있겠으나, 정보통신 제조산업의 경우에는,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글로벌 가치사슬을 형성하며 생산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알제리가 2020년까지 이 분야에 진입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정보통신기술 활용산업의 경우에는 알제리 사회의 정보화의 진전과 함께 생산과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도와 같이 정보통신서비스분야가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한 국가가 존재하여 알제리 산업의 성장동력이 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경우에는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IT 인력이 풍부하지만, 알제리의 경우에는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IT 인력이 풍부하지 못하다. 다만, [그림 4-1]의 전략산업군 중 첨단산업이나 신흥산업에 있어서는 외국과의 협업을 통한 산업발전을 기획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략을 단순히 첨단산업 등 일부 산업에 제한하기보다는 전체 산업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산업에서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공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49% 룰'과 같은 해외투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기업환경 개선을 통하여 기존의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의 합작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알제리의 산업역량을 고려할 때, 대대적인 수출 육성이나 수입대체를 위하여 전면적인 산업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지난 1970년대에 실패한 산업화의 경험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으며, 2020년까지는 3,500만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규모 있는 내수시장이 유인하는 해외기업과 국내기업의 합작투자를 촉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4-1] 산업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산업군



자료: Haddad Said(2013).

3. 알제리 정부의 산업정책 집행 조직 및 구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5개년 투자계획에서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액의 비중도 작을 뿐 아니라 투자계획의 집행률도 낮으며, 집행된 사업도 행정적 비효율성을 수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나아가 투자계획의 세부 사업간의 연계성도 부족한데, 이는 계획 수립에 있어서 전략성이 미흡하고, 이와 함께 사업 집행에 있어서 행정적 효율성이 낮다는 문제점에 기인한다. 이러한 문제는 김종일(2013)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산업정책을 구사하기 위한 정책대상인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역동성이 부족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역동성을 촉발하는 전략적인 산업정책적 신호가 약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산업투자부의 산업전략을 보더라도 정책의 목표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배분계획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알제리 정부의 당면과제에 있어서 산업발전이 우선순위에서 사회정책이나 복지정책에 비하여 낮은 순위에 있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다음으로 이러한 산업정책을 수행하는 정책 조직과 구조의 문제점에 기인할 수도 있다. 최근 산업정책에 관한 논의는 산업정책을 수직적·선별적 산업정책으로 좁게 보는 과거의 시각에서 벗어나 산업발전과 관련된 모든 경제적·비경제적 정책요인을 살펴보는 시각으로 이전하고 있다(Rodrik[2008]). 따라서 산업정책의 성공요인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성공적인 산업정책의 내용보다는 어떻게 산업정책을 국가의 사정에 맞게 수립하고, 수립된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한 국가의 산업정책의 성공은 산업전략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산업정책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량은 우선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국가적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역량, 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명확하고 객관적인 규칙과 규율을 설정할 수 있는 역량, 이러한 규칙하에서 다양한 산업정책적 수단을 신중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역량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Altenburg[2011]).

이러한 논의하에서 알제리의 산업정책 집행 조직 및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⁵⁵⁾ 알제리 산업정책의 주무부처는 현재 산업중소기업투자부(Ministry of Industry, SME and Investment Promotion, 산업부)이며, 산업정책에 다수의 정책조직과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다. 산업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책지원수단으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액공제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ANDI(National Agency for Investment Development), 투자에 필요한 토지 매매 및 규제를 관할하는 ANIREF(National Agency for Intermediation and Regulation of Land) 등을 산하 조직으로 두고 있으며, 산업부는 투자와 관련된 정책조정기구로 CNI(National Investment Council) 두고, 지방정부, 재무부, 무역, 에너지, 관광부 등 관련 부처, ANDI 등 관련 조직이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투자부가 산업중소기업투자부로 개편됨에 따라 창업에 필요한 소액대출서비스를 하고 있는 ANGEM(National Agency for the Management of Micro Credit), 청년 창업을 위한 비용 지원과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를 하는 ANSEJ(National Agency to Support Youth Employment) 등 창업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맡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ANDPME(National Agency for the Development of SMEs)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및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55) 알제리 산업부 홈페이지 참조(www.mipmepi.gov.dz, 접속: 2014. 2. 10.)

제한된 이상의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때, 알제리 산업부의 산업정책은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 지원(신용보증 및 이자 보조), 투자와 관련된 세액공제, 창업을 위한 소액대출, 투자 관련 정보 및 행정지원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산업용지 접근성에 관련된 ANIREF가 산업부 업무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때, 토지시장의 불완전성이 산업투자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투자유인으로는 부가세 감면, 기자재 및 장비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부동산 취득 관련 세금 감면, 법인세 감면(최장 10년) 등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볼 때, 알제리의 산업정책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지원, 창업을 위한 소액대출, 투자를 위한 세액 감면 및 토지사용 지원,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세금 감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5개년계획의 투자계획에서도 재원배분에 있어서 창업과 기존기업의 고도화를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를 통하여 대부분 서비스 업종의 영세 창업이 이루어졌으며, 중소기업 고도화 사업에서는 1,100개 기업에 그쳐 집행률이 매우 낮다. 이렇게 볼 때, 산업부가 발간하는 산업발전 전략보고서는 알제리가 당면한 산업발전을 위한 과제를 인식하는 수준에 그쳐 실제 산업발전전략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개년계획의 재원배분에서 보듯이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 외에 주요 산업에 대한 지원은 산업부나 CNI 등 정책부처의 종합적인 산업정책과정을 통한 다기보다는 각 산업별 주요 공기업에 대한 개별적인 재무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알제리의 공기업 관리는 국가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 of the State)가 관장하고 공기업 중 부처 산하의 공기업은 부처가 관리하며, 그렇지 않은 기업은 투자위원회에서 직접 관리한다. 알제리 측에서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공기업군 중 에너지, 화학, 식품가공 산업 공기업의 생산은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예상대로 광업과 건설자재 분야는 상승기조를, 그 외의 섬유, 가죽, 종이, 기타 제조업 분야의 공기업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고용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성은 쇠퇴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장비의 노후화, 품질 개선을 위한 기술 부족, 재무 악화, 비효율적 거버넌스 구조, 경영 취약, 경직적 고용관계 등이 지적된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크게 성과가 없으며, 이를 위한 공기업의 취득할 민간의 유인도 없다고 평가된다. 나아가 보충재정법(LFC 2009)에 따라 외국인 지분의 '49%'률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합작투자의 여지도 좁아진 형편이다.

김종일(2013)에서 평가한 바와 같이 알제리의 산업발전을 위한 두 개의 축이, 첫 번째, 민간의 규모 있는 산업부문의 기업의 성장과, 두 번째, 기존의 주요 공기업의 개혁에 있다고 본다면, 첫 번째 민간부문 육성에 있어서는 오히려 사회정책에 가까운 소액대출을 통한 영세창업 촉진에 그치고 있으며, 두 번째 공기업 개혁에 있어서는 제한된 민영화 추진과 기존의 기업에 대한 재무지원 외에 별다른 전략적 구조조정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알제리의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정책조직의 개편이 요구되며, 이와 함께 이러한 정책조직이 체계적이고 일관적으로 산업발전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정치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제4절 한국의 산업발전 정책과 과정

본 절에서는 한국의 중화학공업정책과 이어진 구조조정정책의 경험을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서 알제리의 2015~19년 5개년 계획의 산업발전전략 수립과 집행에 주는 시사점을 알아보기로 하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중화학공업정책은 전형적인 국가 주도형 수직적 산업정책으로 알제리가 이미 1970년대에 실패를 경험한 정책을 답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보다는 김종일(201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수출과 내수시장에서 생산과 고용을 주도할 수 있는 민간기업의 활성화와 함께 산업생산에서 여전히 비중이 높은 공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앞 절에서 보았다시피 알제리의 산업정책은 개별 부처의 산하 공기업에 대한 임의적인 지원과 함께 영세 창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정책적 금융지원으로 구성되어 전략성이 매우 미흡하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중화학공업정책 경험은 산업정책의 내용보다는 산업정책 관리역량 강화가 우선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나아가 1970년대 과도한 수직적 산업정책의 후유증으로 인한 거시경제적 불안정과 유희설비 문제에 당면하여 1980년대 한국정부는 산업합리화와 자유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데, 이러한 경험은 알제리의 공기업 구조조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 한국의 중화학공업 육성과 구조조정⁵⁶⁾

1970년대 한국정부는 1960년대의 경공업 중심의 수출촉진형 산업정책에서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는 수입대체형 선별적 산업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이러한 정책전환은 저임후발국의 등장에 따른 산업고도화의 필요성, 자본재 수입에 따른 국제수지 악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 등 경제적인 유인과 함께 국제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른 자주국방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결과였다. 한국정부는 중점적으로 육성할 업종과 참여할 기업을 정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전형적인 선별적 산업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중화학공업육성정책은 제3차 5개년계획기간(1972~76)과 제4차 5개년계획기간(1977~81) 속에 구체화되었다. 이미 2차 5개년계획기간(1967~71)에 주요 산업에 대한 개별적인 공업진흥법(기계, 조선, 섬유, 전자, 석유화학, 철강, 비철금속 등)을 제정하여 특정 산업에 대한 수입대체를 촉진하였지만, 1973년 중화학공업육성정책이 발표되고 중화학공업화추진위원회가 범정부 기구로 발족되며 전략산업 육성이 경제정책의 최우선 사업으로 등장하였다. 한국정부는 철강,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화학을 6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목표와 투자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하여 창원기계공업단지,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 여천종합석유화학공업단지, 구미전자공업단지 등을 조성하여 유사 업종 간의 산업연관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중화학공업 육성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회임기간이 길어, 자원 확보와 함께 필요한 기술과 인력수급이 충족되는 등 대규모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한국정부는 선정된 전략산업에 대하여 장기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조세유인을 대폭적으로 제공하였다. 이와 함께 신규 기술인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각종 전문대학과 직업학교를 확대 신설하고, 기술개발을 위하여 정부출연연구소를 신설·확대하였다. 특히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체계 전반을 통제하고 국민투자기금을 조성하여 전략업종에 대한 선별적이고 특혜가

56) 중화학공업육성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지만 본 절은 안충영 외(1995) 참조.

많은 금융지원을 집행하였다. 이러한 전폭적인 지원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금융산업의 왜곡과 함께 현재 한국의 산업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차별체제가 탄생하였다. 이와 함께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수입통제를 강화하고, 외국인투자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유치산업 보호를 위한 진입장벽을 높여 주었다.

이러한 범정부적인 지원으로 인하여 1980년대에는 제조업생산에서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50%를 넘어가고, 현재 한국경제를 주도하는 수출산업의 기반이 되어 중화학공업육성정책의 목표는 달성되었으나, 1979년 2차 석유파동과 함께 세계경제의 위축으로 중화학공업의 저조한 가동률과 함께 과잉투자에 따른 부실화 문제가 대두되었다.⁵⁷⁾ 이에 따라 정부는 1979년부터 중화학공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조정하기 시작하여 1983년까지 산업합리화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발전시설, 자동차, 디젤엔진, 중전기기, 전기교환기, 동계련 산업에서의 합병과 시설규모를 축소 조정함으로써 과잉설비 문제를 해소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하여 국제적인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에 집중 지원하여 수출경쟁력 확보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중화학공업에 대한 투자조정은 부실화되어 있는 사업을 합병·이전시키며 이에 필요한 자금을 규제금융을 통하여 공급하였다. 이러한 투자조정은 해당 업체의 경영합리화와 혁신노력 제고를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였으나, 흡수합병에 따른 기업의 대형화로 경제력 집중을 가속화시켰다. 하지만 1986년 이후 엔고, 유가 하락, 금리 하락에 따른 세계경제의 회복으로 함께 중화학공업의 수출 호황과 함께 가동률이 정상화되고 기업의 수익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후 1980년대의 산업정책은 산업합리화와 자유화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이에 따라 1970년대의 선별적인 산업정책에서 수평적인 산업정책으로 전환되었으며, 다양한 경쟁제한조치가 완화되고 수입자유화와 금융자유화가 추진되었다. 우선 과거의 개별공업육성법이 단일법률체제로 공업발전법이 제정되었으며, 산업합리화를 위한 조세 감면 지원을 가능하게 하였다. 일반적으로 산업합리화는 부실회사의 통폐합,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생산감축 등의 조치가 수반되었으며,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 부채의 장기저리부채로의 대환과 처분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이를 위한 금융 및 조세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산업지원체제도 개편되었는데, 제5차 5개년계획(1982~86)부터 시행되었다. 과거 육성정책하에서의 각종 수입규제 및 지입제한 등 규제요소가 축소되었으며 선별적 산업육성정책이 기술 및 인력 등 기능적 지원정책으로 개편되었다. 하지만 국가경제 전체에서 필요한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을 위하여 기술선도산업, 자원절약산업, 수출유망산업 등에 대해서는 선별적 지원정책이 지속되었다. 하지만 지원방식에 있어서는 과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연구개발을 통한 산업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다.

나아가 중화학공업정책하에서 소외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다. 또한 대외개방 면에서도 수입자유화와 함께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방도 점차 확대되었다.

57) 안충영 외(1995) 참조.

2. 한국 경험의 시사점

한국의 중화학공업육성정책은 전형적인 국가 주도형 선별적 산업지원정책으로, 한국의 산업고도화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지만 정부에 의한 과도한 자원배분에 대한 개입은 금융시장의 왜곡과 함께 1970년대 말 거시경제적 불안정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1980년대에는 중화학공업 투자조정, 산업합리화, 거시경제 안정화, 자유화 정책을 통하여 과도한 정부 주도 산업정책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중화학공업정책에 대한 평가는 Amsden(1989)과 같이 후발국의 산업고도화를 위해 정부개입은 필요하며 한국의 성공적인 결과에 비추어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Yoo(1986)와 같이 정부개입에 따르는 금융시장의 왜곡과 경제력 집중으로 비용이 높은 구조전환과정으로 보는 부정적인 시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한국은 브라질이나 알제리와 같이 국가 주도형 산업고도화 정책을 실시하였지만, 다른 국가와는 달리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렇다면 한국의 성공요인은 무엇인가?⁵⁸⁾

첫째, 브라질이나 알제리가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하여 국영기업에 대한 투자를 집중한 반면, 한국은 국가가 선정한 산업에 참여할 민간기업을 선정하여 정책자원의 배분은 정부가 결정하였지만, 생산과 기업활동에 있어서는 민간기업의 경영기법과 이윤동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둘째, 나아가 중화학공업육성정책하에서 전폭적인 정부의 지원체제하에서 기업은 투자에서 오는 장기적인 수익성보다는 특혜금융과 투자유인에서 예상되는 혜택과 이에 따른 기업 확장이 참여의 주요 동기가 되었으며, 정책이 경과됨에 따라 다수의 기업이 경쟁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목표의 달성에 따르는 금융지원의 지속 여부가 기업에 매우 중요하게 되었으며, 이는 기업 간 경쟁을 유도하였다.⁵⁹⁾

셋째, 한국정부는 중화학공업육성정책 초기부터 이 산업이 요구하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내수시장으로는 부족하며 궁극적으로 수출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른 국가와는 달리 중화학공업 육성에 있어서도 수출지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수출지향성으로 인하여 1970년대 말 한국은 다른 남미 국가에 비하여 적지 않은 외채를 가지고 경제위기를 맞았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수출호조와 함께 외채문제가 해소되었다.

넷째,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한국정부는 산업연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 지역의 산업단지를 특화하여 클러스터효과를 시현하고자 하였다. 특히 최종제품 생산에서 시작하여 중간재와 원료로 확대되는 후방연관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국영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의 기업가정신과 시장유인의 활용, 산업연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등은 전형적인 개입주의적 산업정책의 폐해를 줄이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볼 수

58) 중화학공업의 특징에 대해서는 박영구(2005) 참조.

59) 특히 금융부문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기업활동을 통제하는 주요 수단이었다.

있다. 이러한 중화학공업육성정책 자체의 특징과 함께 한국정부의 정책역량도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 하였다.

한국의 중화학공업육성정책은 단기적으로 과도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하여 비효율과 부작용이 있었지만, 엔지니어링적인 접근으로 산업이 요구하는 설비, 인력, 기술 등의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투자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산업정책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포괄적인 지원체제로 구성되었다. 특히 브라질 등 타국에 비하여 한국의 중화학공업육성정책은 투자와 함께 이에 필수적인 인력과 기술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바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그대로 반영되는 명확한 신호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 말 과도한 산업정책으로 인하여 거시경제적 불안정과 함께 과잉설비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다른 국가와는 달리 신속하게 정책의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하여 정책의 방향을 선회하는 정책적 유연성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중화학공업화가 목표에 따라 달성된 것은 정책의지를 실제 집행으로 실현하는 한국정부의 정책적 역량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최고지도자가 중화학공업화를 국가 제일의 사업으로 선정하고 사업과정 내내 계획의 수립과 추진, 이에 따르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쟁겼다.

이러한 정치적 리더십의 의증을 정책으로 시현하는 정책집행기제가 개발연대 초기에 갖추어져 있었다. 이미 1961년에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기획원이 설립되어 이후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추진에 있어서 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조정하게 하였으며, 경제기획원은 기획과 예산배분권을 통하여 각 부처의 정책을 조율하였다.⁶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1973년 중화학공업육성정책이 선포되며 이 정책을 전담하는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경제기획원 장관, 재무부 장관, 상공부 장관, 건설부 장관, 과학기술처 장관, 문교부장관 등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회기획단장은 경제통이 아닌 엔지니어 출신으로 상공부 출신의 관료가 1974년에서 1979년까지 단장으로서 중화학공업육성정책을 추진하였다. 박영구(2011)는 이를, 최고지도자가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면서 경제적 측면에서 시기상조라는 경제관료의 의견에 부딪히자 엔지니어 출신의 공업테크노크라트에게 산업입지와 산업투자를 기획하는 작업을 맡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중화학공업입지의 건설이라는 엔지니어링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최고지도자가 인식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중화학공업육성정책은 수립 초기에서부터 구체적인 산업단지의 건설과 생산용량 등으로 목표가 매우 구체적이었으며, 산업별 목표 실행의 방법과 시간적 계획도 구체적이었다.

이러한 산업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고 관련 부처를 참여하게 함으로써, 정보공유와 논의를 거쳐 부처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를 위한 예산의 확보와 배정은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따라 경제기획원의 업무였으며, 경제기획원은 경제의 컨트롤 타워로서 기획과 예산배정 기능을 갖고 관련 경제부처를 조율하였으며, 예산집행에 대한 감독과 평가를 통하여 계획의 집행을 모니터링하였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60) 이러한 기획 및 예산 업무와 함께 경제기획원은 통계업무를 관장함으로써 경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였다.

경제기획원의 예산과정에 있어서 정치적 입김이 최고지도자에 의해 차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경제개발계획은 정치적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추진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1979년에 중화학공업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방향 전환을 가능하게 하였다.

제5절 알제리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1. 한국과 알제리의 차이점과 산업정책방향

알제리는 1962년 독립 이후 사회주의 정부하에서 국영기업 중심의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한 경험이 있다. 현재의 다수의 국영기업은 이 당시 설립된 기업들이다. 하지만 알제리의 중화학공업화는 1970년대 석유가격의 인상과 함께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농업기계, 건설자재, 운송장비, 비료, 석유화학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었다. 이러한 국영기업 중심의 육성정책으로 인하여 민간부문의 투자는 매우 위축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 투자의 부실화가 대두되며 공기업 효율화를 위한 개혁이 추진되었는데, 한 가지는 비용감축과 생산합리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노력과 또 다른 한 가지는 규모가 과도하게 커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평가되는 거대 국영기업을 기능에 따라 다수의 중소기업으로 분할하는 조치를 단행하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부실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의 금융지원이 계속되며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더욱 강화되었다. 하지만 1986년 석유가격의 하락과 함께 거시경제적 불안정이 고조되었으며, 이후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탈피하고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였다.

이렇게 알제리의 중화학공업육성정책은 비효율적인 국영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전략산업을 지원하는 관련 산업과 기술 및 인력수급의 미비, 과잉투자와 부실화, 단기 부실을 막는 단기금융에 비하여 계획에 대응하는 장기금융의 미흡 등으로 인하여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김계환[2013]). 그렇다면 알제리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산업발전을 위하여 전략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사실 한국의 중화학공업육성정책 공과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대만이나 동아시아 국가의 산업화는 한국과 같은 국가 주도적 선별적 산업정책과는 달리 해외투자 유치와 함께 현지화에 대응한 지원산업(supporting industries)의 확장을 통하여 산업발전을 이룩하였다. 다만,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무역과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겠다. 나아가 지난 1980년대 이후 알제리의 국내 산업이 위축되어 현재 규모 있는 민간부문의 기업이 별로 없으며, 여전히 국영기업의 생산과 고용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한국과 같은 선별적 산업육성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김종일(2013)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민간기업의 발전을 위한 경제적 환경의 조성과 국영기업 개혁을 추진하여 산업분야에서 민간기업의 비중을 높이고, 이와 함께 국영기업 구조조정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활동에 대한 공식적 규제개혁과 함께 비공식적인 진입장벽을 제거해야 하며, 민간기업의 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영기업의 개혁을 위해서는 각 부처별로 관리하고 재무적 지원을 하는 국영기업 관리방식을 지양하고 통제권을 정치적 권한이 있는 중앙기구로 집중해야 하며, 국영기업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적합한 관리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산업분야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유인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2015~19 5개년 투자계획에서의 산업투자 전략

2010~14 5개년 투자계획에서는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비중도 낮을 뿐만 아니라 국영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이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소액대출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국영기업에 대한 지원도 이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없어서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각 부처별로 산하 국영기업에 대한 분절화된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종일(201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 기간산업에서 국영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나, 다수의 기업이 장비 낙후화와 경영의 비효율로 인하여 가동률이 낮으며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렇게 볼 때 2015~19 5개년계획에서는 산업발전을 위한 투자의 전략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투자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여겨진다.⁶¹⁾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이미 2007년 산업개발 전략보고서와 2013년 최근의 산업부의 정책대안을 보면 어느 정도 그림이 나와 있다고 보인다. 석유화학, 제약, 비료, 식품가공, 철강, 기계, 건설자재, 자동차, 정보통신 등의 산업 등이 알제리 정부에서 고려되는 전략산업이라고 보이는데, 알제리의 부존자원, 산업발전 상황에 비추어 당장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산업과 장기적으로 육성되어야 할 산업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차별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이미 Bejaia 식품가공, Sidi Bel Abbes 전자 등과 Oran 경제특구 등으로 정책적인 계획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의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검토와 집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1) 단기적으로는 시장수요가 있으며 고용을 많이 창출할 수 있고 나아가 가능하면 수출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산업으로는 식품가공업, 관광업, 건설자재, 섬유 산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⁶²⁾ (2) 다음으로는 주요 산업의 경우에 있어서 민간기업이 진입하여 활동영역을 넓히는 산업에 대해 기능적이고 수평적인 산업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필요한 경우 이러한 민간기업과의 협의를 통하여 산업활동의 장애를 없애 주고, 성장을 하는 데 필요한 생산요소 공급의 원활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⁶³⁾ (3) 나아가 고용창출이나 기술 습득 등 전략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산업발전이 가능한 산업에 대해서는 '49% 룰'의 예외조항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국영기업과의 합작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영기업에 대한 재정투자는 이러한 합작투자를 유치하는 정책적 유인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5) 산업 관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여야 한다. 특히 타당성이 있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업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전략적으로 중요성이 있는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과 국내 민간기업의 투자를

61) 이는 선별적 산업정책으로의 회귀라기보다는 수평적 산업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략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하며, 산업정책은 집행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선별성을 띠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최근의 다른 연구에서도 산업정책의 선별성 강화를 지지하는 논의가 다수 나오고 있다. 이러한 유의 연구로는 Lin and Monga(2010)가 있으며 알제리 산업정책의 개혁에 대해서는 Testas and Karagiannis(2012)가 있다.

62) 이는 산업개발 전략보고서(2007), 김종일(2013), Housmann et al.(2010)을 기초로 한 필자의 개략적인 판단이다. 하지만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벤치마크분석, 무역구조분석, 산업구조분석이 각 산업에 대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63) 김종일(2013)에 따르면 식품가공산업에서 민간기업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시멘트 등 건설자재 산업과 전자산업에서 해외기업과의 합작투자가 있었다.

유치하여 시범적인 산업클러스터 육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산업발전전략을 기획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기구에 대한 권한과 책무성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치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 정책기구가 관할하는 범위가 정해져야 할 것이다. 앞절에서 제시한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한 시장규제 완화와 금융제도 개선 및 국영기업 개혁을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정책기구가 설립되고 최고 정책결정권자가 직접 정책을 추진하여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것이 정치경제적으로 가능하지 않는다면, 선별된 산업에 대해 일정한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고 제한적이거나 이 산업에서 산업클러스터의 구축과 관련하여 국영기업의 개혁, 민간기업의 활성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전략적인 정책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CNI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하고 산업부 내의 ANDI의 기능을 개편하거나, 새로운 정책기구를 설립하여 정치권력이 신임하고 역량이 있는 전문가 집단에게 산업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권한과 예산을 줄 필요가 있다.

- 김광모, 『한국의 산업발전과 중화학공업화정책』, 지구문화사, 1988.
- 김계환, 「알제리의 사회주의적 공업화」, 산업연구원 세미나 자료, 2013.
- 김종일,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알제리 산업전망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방향」, 『2012 경제협력국가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알제리』, KDI, 2013.
- 박영구, 「구조변동과 중화학공업화」, 이대근(편) 『새로운 한국경제발전사: 조선후기에서 20세기 고도성장까지』, 나남출판, 2005.
- 박영구, 「1970년대 중화학공업 추진 행정기관 연구: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와 기획단」, 『한국행정사학지』 28, pp.257~285, 2011.
- 안충영·김주훈, 「대외지향적 무역정책과 산업발전」, 차동세·김광석(편) 『한국경제 반세기: 역사적 평가와 21세기 비전』, 나남출판, 2005.
- Altenburg, Tilman, *Industrial Policy in Developing Countries: Overview and Lessons from Seven Country Cases*, Discussion Paper, DIE, 2011.
- Chenery, H., S. Robinson, and M. Syrquin, *Industrialization and growth: a comparative study*, World Bank,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 Hausmann R., B. Klinger, and J. R. López-Cálix, “Export Diversification in Algeria,” in J.R. López-Cálix, P. Walkenhorst, and N. Diop (eds.), *Trade Competitiveness of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olicies for Export Diversification*, World Bank, 2010
- Larbi, Azzazz, “l’expérience Algérienne en planification: A travers les programmes de développement,” a material presented at KSP dialogue meeting, 2013.
- Lin, J. and C. Monga, “Growth Identification and Facilitation: The Role of the State in the Dynamics of Structural Change,” World Bank working paper, 2010.
- Mahraz, Fatah “Algeria Five-Year Plan, 2010–2–14,” manuscript, 2013.
- Ministry of Investment Promotion, “Document de la Stratégie Industrielle,” 2007.
- Rodrik, D., “Normalizing Industrial Policy,” Commission on Growth and Development Working Paper No. 3, Washington, DC, 2008.
- Said, Haddad, September 2013. “Nouvelle Politique Industrielle,” presentation for Korea–Algeria KSP 2013.
- Testas, A. and N. Karagiannis, “Toward an Alternative Industrial and Trade Profile for Algeria: The Challenge of the Developmental State Model,” *Journal of North African Studies* 17(4), pp.631–652, 2012.
- UNIDO, *Economic Development in Africa, Report 2011: Fostering Industrial Development in Africa in the New Global Environment*, 2011.

Yoo, J. 1989. "The Government in Korean Economic Growth." KDI policy report.

알제리 민간투자사업(PPP)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방안

- 알제리 KSP PPP 사업의 진행과정
- 알제리 KSP PPP 사업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 총론

제1장 알제리의 인프라 개발

제2장 한국의 PPP제도 현황

제3장 알제리 PPP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제언

알제리 KSP PPP 사업의 진행과정

이 지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1. 추진배경

알제리는 아프리카, 중동, 유럽을 연결하는 요충지로 북서 아프리카의 경제대국이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두 번째로 큰 영토와 3,400만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잠재력이 큰 국가이며,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철광석, 인광석 등이 풍부한 자원부국이다. 우리나라는 알제리와 1990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지속적으로 정치·경제적 우호협력 기반을 강화해 왔으며, 특히 2006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의 알제리 국민방문을 계기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선언' 서명을 통해 제반 분야에서 양국 관계 경장을 공식화하였다. 정상회담을 통해 알제리의 부테플리카(Abdelaziz Bouteflika)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의 전수를 강하게 희망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알제리 경제개발 및 산업활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양국 정상은 상호 간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한국의 압축적 경제성장 경험을 알제리에 전수하는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완수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한국이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새로운 협력모델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12년 9월 4일에 실시되었던 알제리 정부조직 개편으로 새로 부임한 Bachir Messaitfa 장관은 최종보고회 및 정책실무자 연수를 통해 KSP 사업의 중요성을 이해하였으며 향후 알제리와의 KSP가 지속되기를 희망하였고, 알제리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획전략부는 총리실 직속 청으로 바뀌었으며 Messaitfa 장관은 총리실 이름으로 2013년 1월까지 서면수요조사서 제출을 약속하고 실제로 제출을 마쳤다.

알제리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11년도 이래로 알제리가 KSP 중점지원사업 국가로 선정되어 현재 2013년도까지 3년간 사업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2006년 처음으로 KSP 사업을 시작한 이래 네 번째로 진행하게 된 사업이다. 2013년도 알제리와의 KSP 사업은 ‘알제리 민간투자사업(PPP)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방안’이라는 대주제 아래 ① 알제리의 인프라 개발, ② 한국의 PPP 제도 및 경험, ③ 알제리 PPP제도 및 PPP Unit 도입을 위한 정책제언 등 총 3개의 세부 주제로 확정하고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 진행과정

가. 수요조사서 접수 및 연구과제 선정

새로 부임한 Bachir Messaitfa 총리실 전략기획청 장관은 향후 알제리와의 KSP가 지속되기를 희망한 가운데, CNED는 2013년 12월까지 사업 완료를 강하게 요청하여 5개년 개발계획 및 ADI 설립 지원사업과 진행일정이 서로 상이한바, 부득이하게 두 팀으로 나뉘어 진행하게 되었다. 알제리 사절단 PPP 팀에서는 주제를 알제리 민간투자사업(PPP)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방안으로 하여 연구방향을 설정하였으며, 협력부처는 재무부 국가개발기금으로 지정하였다.

〈표 1〉 2013 알제리 KSP 수요조사 및 주제 선정

| 사업명 | | (알제리) 2013년 경제협력국가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 | |
|----------|------------------|--|---|--|
| 총괄PM | | 전홍택(VISION 팀-SEPS) 박현(PPP 팀-CNED) | 사업관리자 | 전홍택 |
| I. 후보 주제 | 수요조사서 수신 여부 및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조사서 수신 여부 - Secretaire d'état Prospective et des Statistiques(SEPS)와 Caisse National d'équipement pour le développement(CNED) of Ministry of Finance에서 각각 공관을 통해 2013년 KSP를 위한 서면수요조사서를 제출함. □ 수요조사서 내용 | | |
| | | 2013 알제리 KSP(서면수요조사서) | | |
| | | No. | 요청 주제 | 제안 부처 |
| | 1 | Leadership and Promotion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the Field of Financing Projects, Economic and Social Infrastructure | Ministry of Finance, CNED (재무부 국가개발기금) | Mr. Telidji Mohamed Salim, Directeur des Methodes |
| | 2 | Creation of an Algeria Development Institute Transformation of Vision 2030 Project into 5-Year Economic Plan | Secretary of State to the Prime Minister in charge of Prospective and Statistics(총리실 전략기획국) | Mr. Mustapha Hammouda Principal Private Secretary |

〈표 1〉의 계속

| 사업명 | | (알제리) 2013년 경제협력국가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 |
|-----------------|---|---|---|
| | 우리측 제안 주제 | □ 우리 측에서 제안한 주제 | |
| | | 자문분야 | 제안 주제 |
| | | PPP 팀 | I. 알제리의 인프라 개발 II. 한국의 PPP제도 및 경험 III. 알제리 PPP제도 및 PPP Unit 도입을 위한 정책제언 |
| II. 최종 주제 선정 과정 | □ 2013년 4월 22일(월)~24일(수) 동안 진행된 세부실태조사와 2013년 6월 통해 우리 측과 대상국의 제안 주제 조정과정(구체화, 수정, 제외, 통합)을 주제별로 상세히 기술 | | |
| | □ 사업 최종 주제 | | |
| | 자문분야 | 제안 주제 | |
| | PPP 팀 | I. 알제리의 인프라 개발 II. 한국의 PPP제도 및 경험 III. 알제리 PPP제도 및 PPP Unit 도입을 위한 정책제언 | |

나. 연구진 선정

2013년도 알제리 KSP는 2012년부터 김세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총 연구 책임을 맡아 한국·알제리 정부의 긴밀한 연구협력 및 최고위급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알제리의 수요를 바탕으로 주제를 확정된 후, 한국 내 관련 부처의 협조를 얻어 주제에 관한 정통한 지식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정책 추진과정에 참여하였던 한국의 학자, 민간 실무경험자로 전문가 팀을 〈표 2〉와 같이 구성하였다.

〈표 2〉 알제리 KSP 국내연구진 및 자문과제

| 자문과제 | 성명 | 소속·직책 |
|-------------------------------------|-----|--------------------|
| 총괄PM | 박현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 ① 알제리의 인프라 개발 | 고유은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전문연구원 |
| ② 한국의 PPP 제도 및 경험 | 김혜영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전문위원 |
| ③ 알제리 PPP 제도 및 PPP Unit 도입을 위한 정책제언 | 박현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다. 수요조사 및 세부실태조사(5월 6일~11일)

본 방문에서는 국책사업관리청(Caisse Nationale d'Equippement pour le Developpement, CNED), 알제리국영에너지공사(Algerian Energy Company: AEC), 국가투자기금(Fonds National d'Investissement: FNI) 그리고 알제철도공사(Entreprise Metro d'Alger: EMA)의 대표와 면담을 실시하였다. CNED는 국가재정사업을 평가하는 기관으로서, PPP 기능을 포함하여 국가 재정과 투자를 함께 관리하는, 즉 PIMAC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확대되기를 도모하고 있고 2013 KSP를 통해 ① PPP 센터 설립 관련 법률적으로 필요한 패키지 제시, ② PPP 센터에 필요한 인원구성 제안, ③ PPP 센터의 업무 매뉴얼 제시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라.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연수(12월 1일~7일)

2013년 12월 1일~7일 동안 한국에서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연수-PPP제도 설립'을 실시하였다. 알제리의 GRINE Amar CNED 청장을 사절단장으로 한 8명의 알제리 사절단(CNED, FNI, Algerian Energy Company)은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연수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여 중간보고회 및 기관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알제리 사절단은 한국개발연구원, 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철 9호선 등을 방문하여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2013년도 알제리 KSP 주제인 PPP제도 설립을 위해 참고가 될 수 있는 한국의 사례를 직접 체험하였다. 그 결과 연구진은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알제리 사절단의 피드백을 검토하여 향후 보고서 및 최종보고회에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사절단은 한국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마. 고위정책대화 및 최종보고회(3월 24일~28일)

2014년 3월 24일에서 28일 동안 알제리에서 '2013년도 알제리 KSP-PPP 최종 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를 실시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이태희 실장을 단장으로 하여 한국의 연구진이 알제리 수도 알제에서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를 실시하였다. 최종보고회에서는 세부 주제인 ① 알제리의 인프라 개발, ② 한국의 PPP 제도 및 경험, ③ 알제리 PPP제도 및 PPP Unit 도입을 위한 정책제언에 대한 연구 보고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에서는 Farid Tiaiba 알제리 재무부 차관을 포함한 100여 명의 현지 전문가 및 유관부처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적인 질의 및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고위정책대화에서는 알제리 재무부 차관, CNED 청장 등 고위관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KSP-PPP 연구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PPP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과 관련한 지속적인 KSP 사업 추진에 관심을 보였다.

알제리 KSP PPP 사업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박 현 (서울시립대학교)

1. 시사점

한국은 1994년 민간투자법을 도입한 이후 한편으로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투자사업을 단순히 민간의 활동영역으로 간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재정운용의 한 축으로 인식하여 체계적인 재정운용 관점에서 민간투자사업을 관리하여 왔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한국은 인프라 개발에 소요되는 재원의 상당 부분을 민간이 담당하여 재정운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이중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이 민간투자제도 본연의 성과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다음을 꼽을 수 있다.

가.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립

전통적으로 정부가 담당하던 인프라의 개발과 운영을 민간이 담당하는 것은 기존 조달방식의 큰 변화를 의미한다. 기존의 법제와는 상이한 구조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법제 정착을 위하여 기존 법제와의 상충을 해결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기존 법제의 특례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였다. 예를 들어 민간투자법을 제정하여 기존 사회기반시설 공급주체로서 공공부문에 부여하였던 특권을 민간부문에 부여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민간투자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국·공유 재산에 대한 무상사용 수익 허가권을 운영기간 동안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계약으로 부지를

매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민간투자법과 관계 법률의 적용에 있어 민간투자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민간투자법의 특례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각종 행정절차의 인허가 절차를 위한 별도 절차 없이 인허가를 의제하도록 하였고,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 추진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은 민간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 공급 및 운영 주체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나. 정부의 사업위험 분담노력

민간투자사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원조달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민간 투자자는 사업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적정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은 민간투자제도 도입과정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민간부문의 참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유인책들을 도입하였다. 정부의 위험분담 및 재정지원 방식은 건설기간 동안의 건설보조금 지급, 실시협약 해지 시의 해지시지급금 도입, 운영기간 중의 운영위험 등을 분담하는 제도 등으로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다양한 시장 유인정책이 때로는 정부가 과도하게 많은 사업위험을 부담하여 재정운용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정부의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수단들을 도입하고, 이러한 재정지원 수단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격성 조사(VfM test)를 수행하는 등 정부지원에 신중을 기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다. 민간투자사업 전담기구(PPP Unit)를 통한 사업관리

전형적인 민간투자사업은 민간부문이 사업의 D-B-F-O(Design-Build-Finance-Operate)를 담당하는바,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금융, 법률, 경제 등 전문분야의 지식이 요구된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PIMAC)는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정기구로서 법률에 의하여 민간투자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연구와 개별 민간투자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담당한다.

또한 PIMAC은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여부 결정을 위한 단계에서부터 타당성 분석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뿐만 아니라 주무관청의 사업 추진 여부 결정을 위한 지침과 세부 요령 등 표준화된 지침을 제공하고 추진 여부 의사 결정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PIMAC은 민간투자사업의 건설, 운영 기간 중의 사후관리 업무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장기간의 민간투자사업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 간의 의견대립, 금융조건 변경 등에 따른 자금제조달 이익 공유, 분쟁조정 지원 등 공공과 민간 부문 간 장기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을 처리한다.

라. 재정당국의 선도적 역할

한국은 민간투자제도의 도입 및 제도 확산 과정에서 현재의 기획재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법과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는 등 민간투자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물론,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의장을 맡아 다양한 주무부처가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모니터링과 평가를 주관하였다. 이를 통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재정운용과 일관성을 갖고 관리할 수 있고, 사업부처의 선도적 역할 수행함에 따른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는 초기 단계부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략적 심사 및 기획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민간투자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지침과 같은 법령 및 정부 규정상 다음 사항들에 대한 높은 수준의 종합적인 정책방향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정부지출 측면에서 PPP 분야의 재정지출을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편입하여 국가재정의 통합적인 측면에서 PPP 관련 지출을 살펴볼 수 있게 하고, PPP 관련 재정지출에 국가 재정지출의 2% 상한을 두는 등의 통합화된 체계를 구축하였다.

마. 표준지침 마련을 통한 사업 추진의 투명성 확보

민간투자사업은 추진과정에서 대상사업 선정, 사업계획 평가, 협상, 실시협약 체결 등의 각 절차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은 대상사업 지정의 원칙으로서, 수익자 부담능력 원칙, 수익성 원칙, 사업편익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 등을 미리 정하고 있다. 수익자 부담능력의 원칙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할 경우 수익자들이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고부담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한국은 민간투자법과 시행령 이외에도 사업 추진단계별로 수행하는 의사결정 기준과 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공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 선정의 객관화된 기준과 절차 및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는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통하여 표준지침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 조사 요령,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 요령, 사업계획에 관한 평가 관리 요령 등을 마련하여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PPP 활성화를 위해서는 PPP 법률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최초의 민간투자법이 제정되던 당시 상황은 알제리의 PPP 입법에 유용한 시사점을 준다. 민간투자법이 제정되던 1990년대 초반 한국은 인프라 부족으로 물류비용 증가로 인하여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여 국가경쟁력 하락을 타개하여야 한다는 범정부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제도적인 노력의 하나로 민간투자법이 도입되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알제리에서는 현재 PPP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여 PPP 입법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현존하는 입법체계 내에서 PPP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하위 규정들을 정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판단된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PPP 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2. 기대효과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알제리에 민간투자법률 도입 등 제도를 정비하고 PPP Unit을 설치하는 것은 인프라 개발재원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한국의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프라 투자소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부족한 인프라 투자소요를 적기에 해소하고, 동시에 석유 관련 재원의존도가 높은 재정구조하에서 인프라재원을 다양화하여 지속적인 인프라 개발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NED에 설치되는 PPP Unit은 민간투자사업관리에 필요한 전문성을 보완하는 동시에,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PPP Unit은 단기적으로는 PPP에 대한 국가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PPP 관련 행정규정들을 정비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현행 조달절차 관련 규정을 PPP제도를 포괄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정부가 향후 조달할 인프라시설에 대한 잠재적 조달방법을 상정하여 그에 맞는 조달기준을 제시한다. PPP Unit은 향후 PPP제도 활성화 시 참가 가능한 국내외 건설 및 금융 투자자들의 PPP 참가능력 함양에 대한 교육 등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 PPP Unit은 장기적으로 PPP 법제를 위한 준비작업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PPP가 단순히 재정의 확장운용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PPP Unit을 재정부와 긴밀한 협력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총론

박 현 (서울시립대학교)

알제리는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수단으로서 석유 관련 재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대안적인 인프라 개발방식으로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 및 행정적 환경을 진단하고 민간투자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 민간투자제도의 발전과정을 연대기적으로 고찰하여, 한국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성공요인과 한계를 분석하고 알제리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에 대한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한다.

한편, 민간투자사업 방식은 인프라 개발 및 운영에서 민간부문이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여 정부와 민간부문 간 관계를 맺는 것으로서 복잡한 재원조달구조뿐 아니라 시설물의 유지·관리 기간을 포괄하는 장기 계약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성공적인 민간투자사업의 관리를 위해서는 기존의 재정사업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능력에 추가하여 금융, 법률 등 민간투자사업에 특수한 전문성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세계은행과 OECD 등 국제기구들은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투자사업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고 정부의 민간투자사업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구(PPP Unit)의 설립을 권고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한국의 PPP Unit에 해당하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고 알제리에 PPP Unit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민간투자제도 활성화와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알제리 인프라 개발 현황 및 장래 투자계획 등을 살펴본다. 또한 개별 사업단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수담수화 민간투자사업의 현황을 조사하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의 한계와 문제점을 살펴본다.

1. 알제리 인프라 개발 현황

알제리는 세계시장 점유율 0.9%, 세계 15위(아프리카 3위)의 원유와 함께 세계 시장 점유율 2.4%, 세계 9위(아프리카 3위)의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는 자원부국이다. 알제리는 또한 북아프리카 지역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국내총생산, 인구 3천 7백만명, 원유 및 천연가스 매장량 각각 122억배럴과 4조 5천억㎥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가장 큰 국가이다. 국제 에너지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원유·가스 판매수입이 증대되고 있어, 알제리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지는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원유·가스 수출비중이 전체 수출의 98%에 달하는 등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알제리는 국가경제 발전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석유의존적 경제구조에서 벗어나고자 지난 10년간 사회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공공사업 분야에 큰 힘을 쏟고 있다. 특히 2,860억달러 규모의 2010~14년 중기 계획의 공공사업은 도로 및 고속도로 확장, 공항 및 항만시설 개선 등 인프라 개발을 핵심 사업으로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인프라 개발에서의 재정의존도를 낮추고 민간투자 등 투자재원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알제리에는 해수담수화사업을 중심으로 외국자본의 인프라 개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PPP)을 위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각 사업시설에 대한 개별법에 따라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인프라 개발을 위한 정부재정의 대안 재원으로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알제리는 합작투자 법인 설립 시 외국인은 최대 49%, 현지법인은 최소 51%로 지분 소유에 대한 규제를 설정하고, 외국인 단독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없는 등 최근 외국인 투자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알제리에서 PPP 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은 해수담수화 사업 등 11개 사업이 있으며, 국영 알제리에너지공사(Algerian Energy Company: AEC)가 외국 투자자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BOO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알제리 국책사업관리청(Caisse Nationale d'Equipement pour le Developpement: CNED)은 알제리 대형 재정사업 평가 및 관리를 수행하는 재무부에 소속된 기관이다. CNED는 국가 기반시설을 위한 공공투자 효율성 증진, 대형 경제 및 사회기반 사업에 대한 평가, 사업 수행 및 모니터링 과정의 개선, 대형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을 최적화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 또한 CNED는 인프라 개발에 소요되는 다양한 재원을 개발하여야 할 임무를 갖고 있는바, 민자사업방식을 기존의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유력한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2. 한국 민간투자제도의 발전과 교훈

한국의 민간투자사업은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여 인프라 구축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uild-Transfer-Operate: BTO) 및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Build-Transfer-Lease: BTL) 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은 각각 경제적 인프라 및 사회적 인프라 구축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한국의 민간투자사업 관련 법과 제도 정비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민간부문이 주요 주체로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 법과 제도의 기반을 다지게 된 계기는 1994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정에서 찾을 수 있다. 최초 민간투자법 제정 이후 민간투자제도를 운영해 오면서 제도적 주안점에 변화가 있어 왔다. 민간투자제도 도입 초기에는 장기금융을 담당할 금융산업이 취약하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제도운영의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1990년대 말 금융위기를 맞아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사업위험을 대폭 완화하여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민간투자사업 관리가 체계화되면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규율을 강화하는 데 제도운영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 추진단계별로 VFM(Value for Money)을 확보하는가에 대한 검증 강화, 재정지원 증가에 대한 심의 강화,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사전검토 강화 등을 통하여 국가재정운용에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민간투자법은 민간부문이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및 운영 주체가 되기 위한 확고한 권리로서 관리운영권을 부여하고 민간사업자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였다. 또한 민간투자법은 민간투자사업의 적용을 받는 사회기반시설의 범위를 특정하고, 주요 사업 추진방식을 명확히 하며, 민간투자사업에 적용되는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민간투자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투자사업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민간투자 관련 법과 제도에 따라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책으로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특례, 재정지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설립 등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한 각종 부담금 및 조세 감면, 금융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제도적 혜택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사회기반시설 투융자 회사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에 투자하는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유인책을 마련하였다.

위와 같은 제도적 지원책에 근거하여 개별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에서 건설보조금 지급, 해지시지급금 지급, 운영기간 중 위험 부담 방식의 정부지원이 가능할 수 있었으며, 이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의 큰 요인이 되었다.

한편, 한국정부는 2005년 중반부터 민간투자사업을 재정운용의 중요한 축으로 인식하고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인프라 개발이 재정사업을 통한 방식과 비교해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가 민간투자사업 관련 정책 수립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 대상사업 선정의 원칙을 정하고, 민간투자사업심의회를 통한 대상사업 심의 등을 통하여 추진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할 뿐 아니라 예산 배정 기능을 통하여 민간투자사업 관련 예산 배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들을 수립한다.

민간투자제도에 관한 연구와 개별 민간투자사업의 관리를 지원하는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서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법령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수권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는 민간투자사업의 공정한 절차 보장, 재정집행의 효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타당성 분석, 민간투자사업 이해관계자들의 이해 조정 등을 위한 세부 지침을 작성한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단계별로 적용되는 세부 지침과 적용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위와 같이 한국의 민간투자사업은, 한편으로는 민간사업자의 참가를 위한 법·제도적인 확고한 기반과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안 수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조화 속에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내실을 이루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3. 알제리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현재 알제리에는 민간투자 방식을 통하여 다수의 인프라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PPP를 위한 별도의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성문법(written law) 체계를 따르고 있는 알제리에서 PPP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알제리 PPP 입법을 위해서는 우호적인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PPP 입법 및 제도 도입을 위한 환경평가는 정부부처 및 공공부문의 PPP 도입에 대한 공감대 형성, 자금조달을 담당할 금융기관의 성숙도,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할 투자자들의 노하우 등의 제반 사회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부처를 비롯한 공공부문 및 의회의 PPP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PPP란 전통적인 재정을 통한 인프라 개발의 대체수단으로서 이를 제도화하는 데는 특수한 사회적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 온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매우 긴급한 재정환경에서 추가적인 재정조달이 필요할 때 PPP가 정당화되는 경향이 있다. 본 KSP 연구진은 PPP에 대한 일반적인 환경과 알제리 상황을 종합하여 알제리에 PPP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환경 조성 정도를 진단하였다. 진단 결과 본 연구진은 알제리의 PPP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관점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PPP 입법 및 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른 활성화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접근을 제안한다.

알제리에서 현재 PPP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 현 단계에서는 현존하는 입법체계 내에서 PPP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하위 규정들을 정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 다른 한편으로 중장기적으로 PPP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PPP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된다.

민간투자사업 관리를 지원하는 전문기구인 PPP Unit은 이러한 단기 및 중장기 목표를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PP Unit은 기존의 재정사업과 다른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PPP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PPP제도의 법적·제도적 정착을 위한 제도 연구,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PPP Unit을 설치할 장소로는 한국의 PIMAC 설립 및 그 역할에 대한 경험에 비추어 CNED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CNED는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등 재정사업 관리능력을 수행하여 왔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바, 재정사업의 평가 및 관리에 적용하였던 절차와 방법론을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적용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과 재정사업을 통합된 체계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PPP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재정당국의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한데, CNED는 재정부와 긴밀한 업무적 연계구조를 갖고 있는 것 또한 CNED가 PPP Unit의 설치 장소로 적합한 이유이다.

제1장 알제리의 인프라 개발

고 유 은 (한국개발연구원)

< 요약 >

알제리는 세계시장 점유율 0.9%, 세계 15위(아프리카 3위)의 원유와 함께 세계시장 점유율 2.4%, 세계 9위(아프리카 3위)의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는 자원부국으로, 북아프리카 지역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국내총생산, 인구 3천 7백만명, 원유 및 천연가스 매장량 각각 122억배럴과 4조 5천억㎥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가장 큰 국가이다.

국제 에너지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원유·가스 판매수입이 증대되고 있어, 알제리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지는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원유·가스 수출비중이 전체 수출의 98%에 달하는 등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알제리는 국가경제 발전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석유의존적 경제구조에서 벗어나고자 지난 10년간 사회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공공사업 분야에 큰 힘을 쏟고 있다. 특히 2,860억달러 규모의 2010~14년 중기 계획의 공공사업은 도로 및 고속도로 확장, 공항 및 항만시설 개선 등 인프라 개발을 핵심 사업으로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인프라 개발에서의 재정의존도를 낮추고 민간투자 등 투자재원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알제리에는 해수담수화사업을 중심으로 외국자본의 인프라 개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PPP)을 위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각 사업시설에 대한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인프라 개발을 위한 정부재정의 대안 재원으로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알제리는 합작투자 법인 설립 시 외국인은 최대 49%, 현지법인은 최소 51%로 지분 소유에 대한 규제를 설정하고, 외국인 단독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없는 등 최근 외국인 투자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알제리에서 PPP 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은 해수담수화사업 등 11개 사업이 있으며, 국영 알제리에너지공사(Algerian Energy Company: AEC)가 외국 투자자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BOO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알제리 국책사업관리청(Caisse Nationale d'Equipement pour le Developpement: CNED)은 알제리 대형 재정사업 평가 및 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가 기반시설을 위한 공공투자 효율성 증진, 대형 경제 및 사회기반 사업에 대한 평가, 사업수행 및 모니터링 과정의 개선, 대형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을 최적화하고 다양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제1절 경제 동향 및 재정여건

1. 경제 동향

알제리는 세계시장 점유율 0.9%, 세계 15위(아프리카 3위)의 원유 및 세계시장 점유율 2.4%, 세계 9위(아프리카 3위)의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는 자원부국이다. 뿐만 아니라 금, 다이아몬드, 철광석, 아연 등 광물자원도 풍부한 국가이다. 알제리는 리비아, 모로코, 튀니지를 포함하는 북아프리카 지역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국내총생산, 인구 3천 7백만명, 원유 및 천연가스 매장량 각각 122억배럴과 4조 5천억⁶⁴⁾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가장 큰 국가이다.

가. 경제성장 일반

알제리 경제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경제성장률(GDP)은 최근 3년간 2.4~3.5%를 유지하고 있다. 2010년에는 유가상승 및 원유 생산량 증가로 3.6%를 기록하였으나, 2011년 중동지역 민주화운동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하락한 2.8%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은 원유 생산량 증가, 정부의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등으로 3%대로 회복되었다. 그러나 2013년과 2014년에도 3%대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다.

〈표 1-1〉 알제리 최근 실질국내총생산(GDP) 추이

|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 | | | | 예측 | |
| 경제성장률(GDP) | 3.6 | 2.8 | 3.3 | 3.1 | 3.7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3; 알제리 재정부, 2014. 3.

64) 한국수출입은행, MENA 3개국 국가 현황과 진출여건, 2013. 4.

나. 국제경제 지표

1) 상품수지 및 무역수지

상품수지는 국제유가 상승과 원유 수출 증대로 흑자기조를 보이고 있다.⁶⁵⁾ 2011년에는 식료품 수입 증가 및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자본재 수입 증가로 전체 수입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및 원유 수출 증대로 전년 대비 확대되었으며, 2012년에도 이와 같은 추세가 유지되어 상품수지 규모는 약 263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⁶⁶⁾

2) 경상수지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와 소득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상품수지 흑자에 따라 흑자기조를 계속하고 있다.⁶⁷⁾ 2011년에는 경상수지가 GDP 대비 8.9%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에는 서비스수지 및 소득수지 적자 확대로 전년 대비 축소된 6.0%를 기록하였다. 소득수지의 경우 외국 기업들의 이익금 송금 증가로 적자가 계속되고 있으며, 서비스수지도 원유 및 천연가스 산업 개발과 관련한 서비스 지출 증대로 적자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⁶⁸⁾

3) 외환보유액

외환보유액은 원유 수출에 따른 수입이 꾸준히 유입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말 1,910억달러에 달하였다.⁶⁹⁾ 알제리는 2000년대 들어 고유가가 지속되어 외환사정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외채상환에 정부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2006년 100억달러의 외채를 조기상환하였다. 이렇듯 유가상승에 따른 이익 초과분을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등 대외부채 감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03년 GDP 대비 34.6%를 기록하였던 총외채잔액은 2008년 이후 5%를 밑돌거나 평균 약 3%대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크게 축소되는 등 국가의 외채상환 태도는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65) 한국수출입은행, MENA 3개국 국가 현황과 진출여건, 2013. 4.

66) 한국수출입은행, MENA 3개국 국가 현황과 진출여건, 2013. 4.

67) 한국수출입은행, MENA 3개국 국가 현황과 진출여건, 2013. 4.

68) 한국수출입은행, MENA 3개국 국가 현황과 진출여건, 2013. 4.

69) 한국수출입은행, MENA 3개국 국가 현황과 진출여건, 2013. 4.

〈표 1-2〉 주요 대외거래 지표

| (단위: 백만달러, %) | | | | | |
|---------------|---------|---------|---------|---------|---------|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경상수지 | 34,452 | 411 | 12,131 | 19,697 | 12,881 |
| 경상수지/GDP | 20.1 | 0.3 | 7.5 | 8.9 | 6.0 |
| 상품수지 | 40,600 | 7,780 | 18,200 | 27,940 | 26,267 |
| 수출 | 78,590 | 45,180 | 57,090 | 72,880 | 73,434 |
| 수입 | 37,990 | 37,400 | 38,890 | 44,9940 | 47,166 |
| 외환보유액 | 143,544 | 149,347 | 162,915 | 183,122 | 190,660 |
| 총외채잔액 | 6,210 | 7,368 | 7,211 | 6,072 | 4,159 |
| 총외채잔액/GDP | 3.6 | 5.3 | 4.5 | 3.1 | 2.5 |

자료: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3.
 2) 한국수출입은행, MENA 3개국 국가 현황과 진출여건, 2013, 4;
 3) 알제리 재정부, 2014, 3.

4) 2013년 현황 및 전망

IMF는 계속되는 수입 증가와 함께 원유가격이 점차적으로 하락할 경우 향후 알제리 경상수지는 악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IMF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2014년 경상수지는 GDP 대비 각각 1.8%와 1.2%로 전망되고 있다.⁷⁰⁾ 실제로 2013년에는 원유가 하락, 수출량 감소로 전체적으로 원유 수출을 통한 수입이 전년도 동 기간에 비해 14.3% 감소하였다. 원유 수출량은 2012년 동 기간에 비해 10.6%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상반기 경상수지는 12억달러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전년도 동 기간에는 10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⁷¹⁾

알제리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2013년 1~8월동안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88억달러 수준으로 전년 동기 164억달러 대비 46.5%로 대폭 하락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의 수출규모는 456억달러로 전년 동기(486억달러) 대비 6% 이상 감소한 반면, 수입은 368억달러로 전년 동기(322억달러) 대비 14% 이상 증가하였다. 주요 수출 감소 품목으로는 원유(7.1%), 원자재(31.8%), 산업장비(18.18%) 등이며, 주요 수입 증가 품목은 농업장비(49.5%), 석유제품(25.8%), 산업장비(20.4%), 식료품(14.1%) 등이다.⁷²⁾

반면, 외환보유고는 2013년 12월 말 기준 1,897.5억달러로, 2012년 6월 1,897.6억달러와 거의 유사하며, 2012년 12월 말 1,906.6달러에 비해서도 크게 감소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외채잔액은 2013년 6월 말 기준 34.3억달러로 지난 수년간 기록 중 최저치로, 알제리의 대외재정 상황은 양호한 상태다.⁷³⁾

70)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3.

71) 대한민국 외교부 국가 및 지역 정보, "2013년 상반기 알제리 경제 동향(알제리 Laksaci 중앙은행장 발표)".

72) 대한민국 외교부 국가 및 지역 정보, "알제리 수출입 동향(1~8월)".

73) Mohamed Laksaci, Banque d'Algerie, Septembre 2013

다. 국내경제 지표

1) 소비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는 지난 3년간 국내수요 증가와 식료품가격 상승, 정부지출 증가로 인해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있었다. 2011년의 경우, 원유 및 식료품 가격 상승과 높은 실업률 등으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 진정을 위해 공무원 임금이 인상조치되는 등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되어 4.5%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다.⁷⁴⁾ 2012년의 8.9% 물가상승률은 19.6%에 달한 곡물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주요 곡물 수입국인 미국과 러시아의 가뭄에 따라 곡물 수입가격이 상승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사회불안이 고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상승을 공공부문 근로자에서 전 부문 근로자로 확대하는 정책을 취하였다.⁷⁵⁾

2012년 8.9%에 달했던 물가상승률은 금년 2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서,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3년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59%로 전년도 동 기간 7.29%에 비해 낮아졌으며, 연말 및 2014년까지 5%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식료품가격 상승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⁷⁶⁾

2) 재정수지

재정수지는 국제유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유가상승 시 재정수지 흑자, 하락 시 재정수지 적자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제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GDP 대비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하락해 적자를 기록한 후, 2010년 유가상승과 원유 생산량 증가 등으로 재정수입이 확대되어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는 1.8%로 축소되었다. 2011년에는 공무원 임금 인상, 사회보장제도 확대 등 경제 유화책 시행과 인프라 개발을 위한 정부지출 확대로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었으나, 고유가로 인한 원유 생산 및 수출량 증가로 적자폭은 전년 대비 다소 축소된 1.3%를 기록하였다.⁷⁷⁾ 2012년에는 원유 생산량 감축으로 인한 원유 수출의 수입(收入)이 감소하면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폭은 3.3%로 다소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알제리 재정지출은 2011년 6,418,63억 디나르(Algerian Dinar)에서 2012년 5,153,66억 디나르로 약 1,265억 디나르가 감소하였다.⁷⁸⁾ 2011년에는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17년 통계 중 가장 많은 재정지출금액을 기록하였다.

74) 한국수출입은행, MENA 3개국 국가 현황과 진출여건, 201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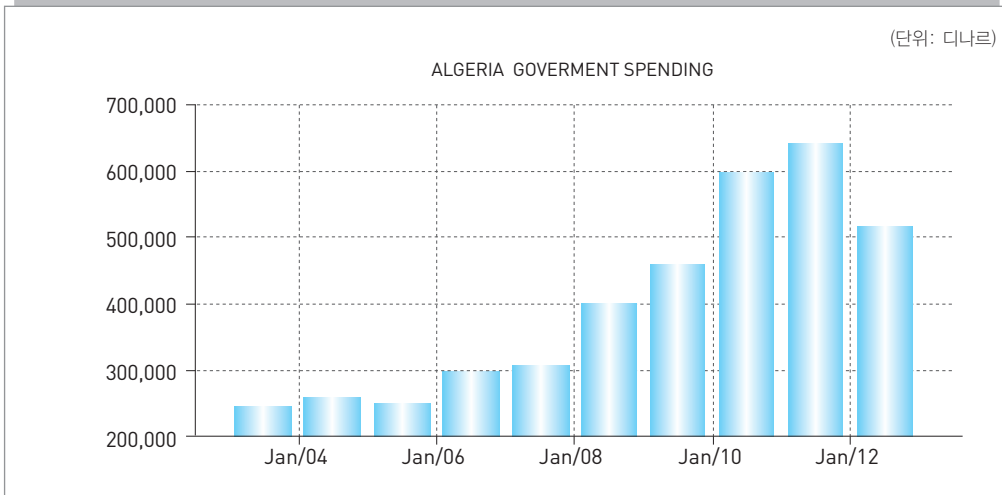
75) 한국수출입은행, MENA 3개국 국가 현황과 진출여건, 2013. 4.

76) 대한민국 외교부 국가 및 지역 정보("2013년 상반기 알제리 경제동향(알제리 Lakssaci 중앙은행장 발표)")

77) 한국수출입은행, MENA 3개국 국가 현황과 진출여건, 2013. 4.

78) 환산하면 2011년과 2012년 재정지출은 각각 약 80,79억달러, 64.87억달러이다(2013. 11. 30. 기준 1달러 =79.45디나르).

[그림 1-1] 알제리 재정지출



자료: Office National des Statistiques(www.tradingeconomics.com).

<표 1-3> 주요 국내경제 지표

| | 2010 | 2011 | 2012 | (단위: %) | |
|-----------|------|------|------|-----------|------|
| | | | | 2013 | 2014 |
| 소비자물가 상승률 | 3.9 | 4.5 | 8.9 | 예측 5.0 | 4.5 |
| 재정수지/GDP | 1.8 | 1.3 | 3.3 | - | - |

자료: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IMF, October 2013.
2) 한국수출입은행, MENA 3개국 국가현황과 진출여건, 2013. 4.

2. 재정여건 및 당면과제

가. 원유 가격 및 수출량에 따른 재정악화 가능성

IMF의 분석에 따르면, 알제리 정부재정은 원유가격 등락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⁷⁹⁾ 그러나 알제리 재정지출은 많은 부분 원유 수출에 따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 상반기에는 유가 하락으로 원유 수출을 통한 수입이 전년도 동 기간에 비해 14.3% 감소하였다. 지난 3년간 국제유가를 살펴보면, 2011년 가장 높았다가 현재는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3년 상반기 평균가는 108.6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 113.37달러에 비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제 원유가 배럴당 평균가격 추이는 다음과 같다.

79) IMF, IMF Country Report No. 13/47, February 2013.

〈표 1-4〉 평균 원유가격

| (단위: 달러배럴) | | | | |
|------------|-------|--------|--------|------------|
| | 2010 | 2011 | 2012 | 2013(1~6월) |
| 평균 원유가격 | 80.15 | 112.94 | 111.05 | 108.6 |

자료: Mohamed Laksac, Banque d'Algérie, Septembre 2013.

원유가격뿐 아니라 수출량 감소 또한 재정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알제리 국내 전력수요의 빠른 증가는 발전연료로서의 석유·천연가스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며, 이는 알제리의 석유·천연가스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표 1-5〉 알제리 원유 내수 소비 추이

| (단위: 천배럴/일) | | | | | |
|-------------|------|------|------|------|------|
|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원유 | 286 | 309 | 327 | 327 | 345 |

자료: British Petroleum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2(한국수출입은행, MENA 3개국 국가 현황과 진출여건, 2013, 4. 발체).

나.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에 따른 성장주체 다양화 제약

알제리 정부는 유가 하락 및 포스트오일(post-oil) 시대를 대비하고 에너지산업에 대한 지나친 편중으로 인한 산업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구조 재편정책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시행 후 몇 년이 흘렀으나 알제리는 여전히 석유산업이 총 GDP의 36%, 재정수입의 70%, 총수출의 99%를 차지하고 있어 석유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고, 유가 등락과 원유 생산량 증감에 따라 경기가 급격히 변동되는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⁸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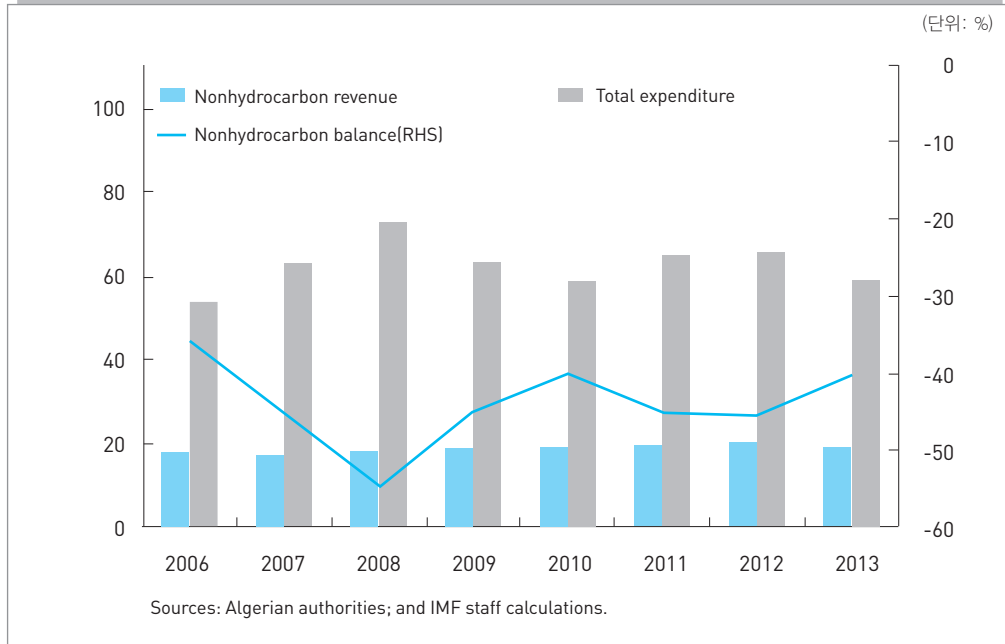
알제리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앞의 표에서처럼 2010년 1.8%에서 2011년 1.3%로 다소 줄어들었지만, 같은 기간 비석유부문의 GDP 대비 적자는 2010년 45.1%에서 2011년 39.8%로 오히려 악화되었다. 이는 공무원 임금 상승 등에 따라 증가한 재정지출보다 비석유부문에서 오는 수입이 더 적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2011년 균형재정 유가는 2010년 85달러에서 2011년 109달러까지 상승했다.⁸¹⁾ 2012년에는 높은 재정지출 기조에 원유 생산량 감축으로 인한 원유 수익마저 감소하면서 GDP 대비 재정부채는 3.3%까지 증가했다.

80) 한국수출입은행, MENA 3개국 국가 현황과 진출여건, 2013, 4.

81) 균형재정 유가(fiscal break-even oil prices)란, 정부예산과 균형을 이루는 석유가격을 말한다. IMF 전망에 따르면 알제리의 2014년 균형재정 유가는 2014년 유가전망치에 매우 근접하거나 상회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IMF Country Report(Feb. 2013); IMF World Economic Outlook(Oct.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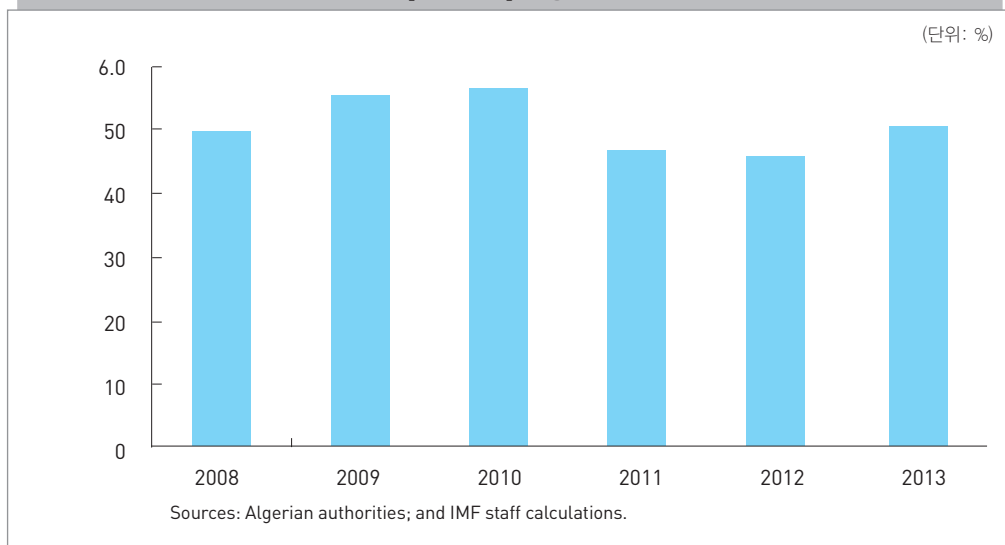
낮은 비석유부문 수입과 높은 재정지출로 인해 비석유부문의 재정균형은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비석유부문 수입에 비해 재정지출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1-2] 비석유부문 재정균형



주: 비석유부문 GDP 비율.
 자료: IMF, IMF Country Report No. 13/47, February 2013.

[그림 1-3] 재정지출



주: 재정지출에 대한 비석유부문 수입 비율.
 자료: IMF, IMF Country Report No. 13/47, February 2013.

제2절 인프라 개발 현황 및 계획

1. 알제리 인프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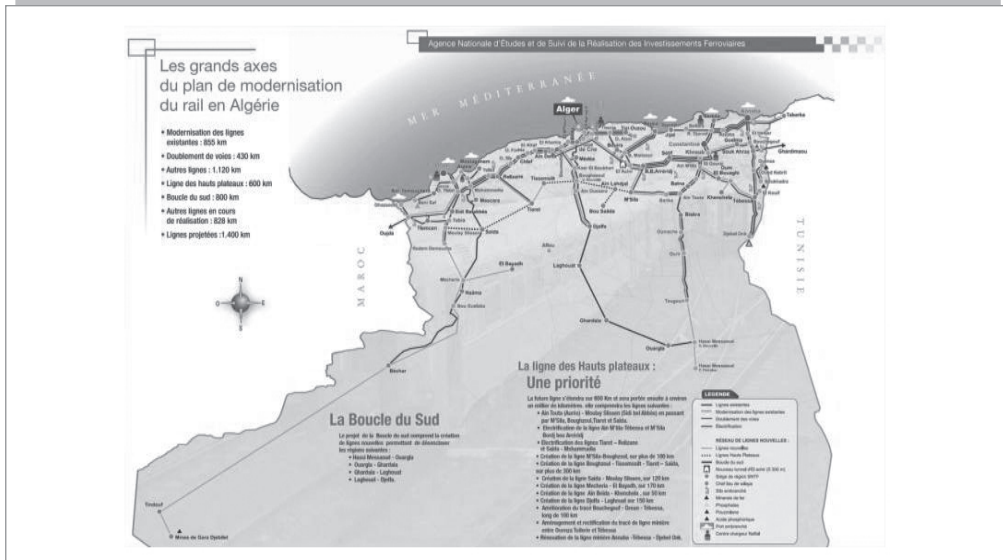
알제리 국토는 2,382km²로 한반도의 11배에 달하는 광활한 면적이며, 북쪽으로는 지중해 연안이 맞닿아 있고 남부는 사하라 사막이 있는 건조한 땅이다.⁸²⁾ 알제리에는 현재 64개의 활주로 시설을 갖춘 공항과 3개의 헬기장, 9개의 항만이 있다. 철도망의 총길이 3,973km로 세계 44위며, 도로는 포장도로 87,605km, 비포장도로 26,040km로 세계 42위의 도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도로망과 철도망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북부에 집중되어 있다.⁸³⁾

〈표 1-6〉 알제리 인프라시설 현황

| | | 시설 수(개) | 총길이(km) | 세계순위 |
|-----|------|---------|---------|------|
| 공항 | 활주로 | 64 | — | 36 |
| | 비활주로 | 93 | — | |
| 헬기장 | | 3 | — | — |
| 철도 | | — | 3,973 | 44 |
| 도로 | 포장 | — | 87,605 | 42 |
| | 비포장 | — | 26,050 | |
| 항만 | | 9 | — | — |

자료: CNED.

〈그림 1-4〉 알제리 철도망 현황(2010년)



자료: CNED

82) 한국수출입은행, MENA 3개국 국가 현황과 진출여건, 2013, 4.

83) The World Factbook, CIA.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ag.html>).

〈표 1-7〉 2010~14년 계획 주요 사업 내역별 투입예산

| | 분야 | 내용 | 투입예산 |
|---------|---------|--|----------|
| 삶의 질 개선 | 교육 | - 교육기관 5,000개 설립 - 40만명을 위한 기숙사 설립 | 2,232억달러 |
| | 의료 | - 1,500개 보건시설 설립 | 84억달러 |
| | 주택 | - 주택 200만호 공급 | 500억달러 |
| | 전력·가스 | - 100만호 가스공급망 신축 - 농촌 22만호 전력망 신축 | 47억달러 |
| | 수자원 | - 35개 댐, 25개 송수시스템, 34개 하수처리장, 8개 담수설비 등 | 278억달러 |
| | 청소년 | - 청소년 시설 5,000개소, 체육관 80개, 수영장 400개 등 | 153억달러 |
| | 보훈 | - 17개 박물관, 역사유적 복구, 요양시설 등 | 2억달러 |
| | 종교 | - 사원 및 문화센터 건립 | 16억달러 |
| | 문화·방송 | - 문화단지, 도서관, 극장, 예술학교, 과학공원, 방송네트워크 개선 등 | 33억달러 |
| 인프라 구축 | 도로·항만 | - 도로 확장 및 현대화 항만 확장 | 419억달러 |
| | 철도 | - 철도망 확장 및 현대화 - 14개 도시의 전동차 신설 | 328억달러 |
| | 국토관리 | - 국토, 환경 관리 | 68억달러 |
| | 공공서비스 | - 지방정부, 사법, 정부규제, 세금, 교역, 노동 분야 시설 및 서비스 개선 | 203억달러 |
| 개발 지원 | 농업지원 | - 농업, 농촌 지원 | 135억달러 |
| | 중소기업 진흥 |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산업지구 지정 및 대출지원 | 61억달러 |
| 금융 지원 | 자금융자 | - 신규 발전소 건설, 석유화학산업 개발, 공공기업 현대화를 위한 은행 대출지원 | 220억달러 |
| 고용 | 고용창출 | - 대출자 취업 및 훈련, 기업 창업 지원 | 47억달러 |
| 과학 | 과학개발 | - 과학연구 지원 등 | 34억달러 |
| 총계 | | | 2,860억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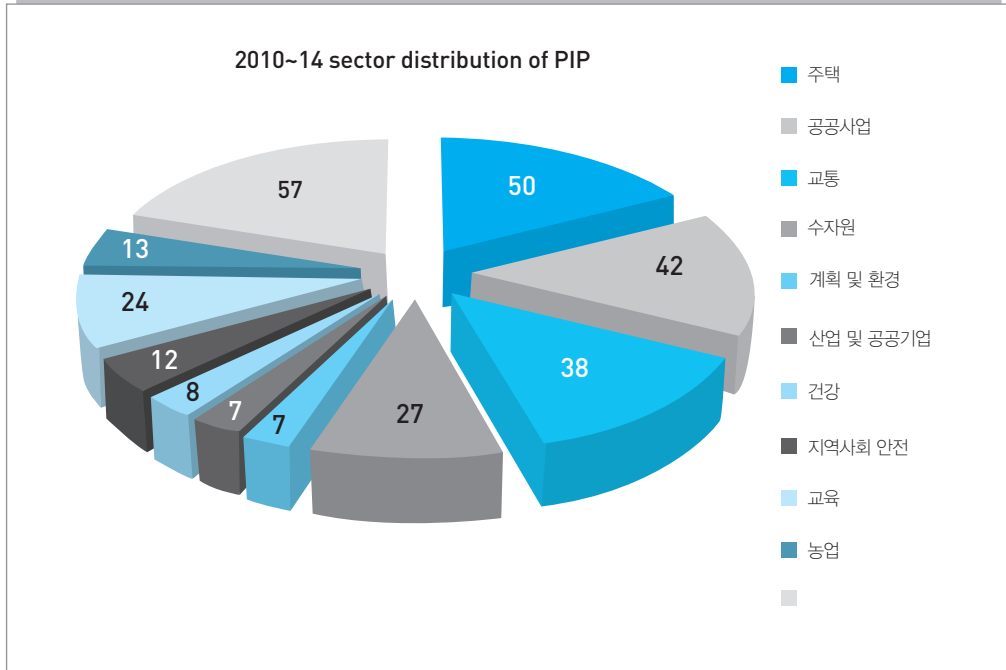
자료: KOTRA.

나. 부문별 계획

부문별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인적자원 개발사업이 전체 계획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즉, 교육, 의료, 주택, 전력 및 가스, 수자원 분야 사업과 복지사업 등이다. 인프라 사업은 주로 2,500km에 해당하는 도로 확장사업과 12,000km 길이의 현대화 사업이 있으며, 17개 철도망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도로 신설에는 약 420억달러가 소요될 예정이다.⁸⁷⁾

87) 한국수출입은행, MENA 3개국 국가현황과 진출여건, 2013. 4.

[그림 1-6] 부문별 PIP



자료: CNED.

수자원 사업의 경우, 20개 이상의 댐 건설을 통해 91억^m 규모 지표수(surface water)를 확보할 예정이다.

<표 1-8> 기존 및 예정 댐 사업

| | 1999 | 2005 | 2010 | 2014/17 |
|----------------------|------|------|------|---------|
| 개수(개) | 47 | 56 | 66 | 93 |
| 용량(1억 ^m) | 42 | 57 | 71 | 91 |

자료: CNED.

다. 공공지출 현황

경제인프라에 소요된 예산은 2009년에서 2011년 전체 예산의 약 25%에서 30%를 차지하였다. 알제리 정부는 사회인프라의 경우 동 기간 동안 5% 안팎의 예산을 활용하였으며, 정부인프라에는 6%~9% 정도를 배정하였다.

〈표 1-9〉 분야별 재정지출

| (단위: %) | | | | | |
|-----------|-------|-------|-------|-------|-------|
|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농업 및 어업 | 1.3 | 1.8 | 1.8 | 1.5 | 1.3 |
| 관개 및 수도 | 15.6 | 15.3 | 18.0 | 18.0 | 21.3 |
| 경제인프라 | 32.3 | 37.4 | 28.0 | 25.3 | 29.9 |
| 주택 | 15.7 | 13.0 | 16.2 | 19.5 | 10.3 |
| 교육 및 직업훈련 | 10.7 | 9.4 | 10.2 | 10.2 | 9.6 |
| 사회인프라 | 3.5 | 3.8 | 4.8 | 4.7 | 5.8 |
| 정부인프라 | 4.6 | 5.6 | 6.0 | 7.5 | 8.7 |
| 도시개발 | 6.7 | 5.5 | 5.4 | 4.3 | 3.6 |
| 기타 | 9.5 | 8.1 | 9.6 | 8.9 | 9.5 |
| 총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주: 전체 대비 비율임.
 자료: IMF, IMF Country Report No. 13/49, February 2013.

제3절 인프라 개발 및 투자 제도

1. 외국인투자정책

가. 외국인투자 관련법

알제리의 외국인투자 유치는 2001년 제정된 신(新)투자법(New Investment Code, 법령 01-03)에 의거한다. 투자는 투자자의 국적, 법인 또는 자연인 및 국내 거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며, 외국인투자는 통신, 전기, 가스 등 국가전략산업 일부를 제외한 모든 기간산업분야에서 가능하다.⁸⁸⁾ 또한 1997년 1월 공포된 Executive Decree No. 97-40에 따라 국가경제 보호와 관련된 업종으로 규정된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에는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다. 1997년 5월에 공포한 Executive Decree No. 97-154 제5조에 따라 부동산 관련 업종 투자에는 주택부의 허가가 요구된다.

알제리 정부는 2001년 8월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고자 투자유치 단일 창구인 알제리 투자개발청(National Agency for Investment Development: ANDI)⁸⁹⁾을 설립하였다. 외국인투자자의 보장사항으로는, 투자자의 국적에 관계없는 동등한 대우, ANDI의 결정에 대한이의 제기 시 지방법원 항소나 중재 가능, 투자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의 전액 환전 기능 등이 있다.⁹⁰⁾

88) 한국수출입은행, MENA 3개국 국가 현황과 진출여건, 2013. 4.

89) Agence Nationale de Développement de l'Investissement.

90) 한국수출입은행, MENA 3개국 국가 현황과 진출여건, 2013. 4.

나. 외국인투자 절차

알제리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자는 먼저 ANDI에 투자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내용에는 투자대상 분야, 투자지역, 고용인원, 관련 기술 및 자원조달 계획, 투자계획 재정 평가서, 환경보호 요건, 예상 투자기간, 투자 관련 계약 등이 포함된다.⁹¹⁾

ANDI는 외국인투자자의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며, 투자신청 후 투자 관련당국에서는 서류심사를 거쳐 투자 허가 여부를 통보하는데, 이는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⁹²⁾

대규모 투자의 경우 총리실 직속 국가투자심의위원회에서 직접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외국인투자자는 현지법인 설립과 연락사무소 형태의 지사 설치로 유형이 나누어지며, 동일한 절차와 과정으로 설립되나 소요비용과 구비서류는 상이하다. 알제리 내 영업활동을 위해서는 영업주체로서의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법인은 단독 투자법인 및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투자법인(joint venture)으로 구분된다. 신(新)투자법에 따른 국가전략산업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율은 최대 49%까지 가능하다. 알제리 상법에 규정된 법인의 형태는, 알제리 상법 제592조에 의한 주식합명회사(stock company, SPA), 제564조에 의한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SARL), 그리고 개인회사(One person company with limited liability, EURL) 등이 있다.

지사 혹은 연락사무소 설립에는 상무부의 허가(2년 단위 갱신 가능)가 필요하며, 이윤 추구 활동은 금지되어 있다. 직원의 급여, 사회보장세 등의 영업비용은 모회사가 알제리 디나르화로 지급해야 한다.

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약

알제리 정부는 2009년 추가재정법(Complementary Finance Law)에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시행 중에 있다. 본 조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율은 최대 49%로 제한되며, 단순 판매법인도 알제리 측 지분을 최소 30% 유지해야 한다.⁹³⁾ 또한 외국인투자자는 투자 인센티브로 면제받은 세금을 상응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4년 동안 알제리 국내에 재투자해야 한다.⁹⁴⁾

91) 한국수출입은행, MENA 3개국 국가 현황과 진출여건, 2013. 4.

92) 한국수출입은행, MENA 3개국 국가 현황과 진출여건, 2013. 4.

93) 한국수출입은행, MENA 3개국 국가 현황과 진출여건, 2013. 4.

94) 한국수출입은행, MENA 3개국 국가 현황과 진출여건, 2013. 4.

라. 외국인투자 우대조치

2007년 1월에 공포된 Executive Decree No.07-08의 부록(Appendix)에 명시된 일부 활동 등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투자는 각 투자단계별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다. 투자 이행 단계에서는 투자 이행을 위해 수입한 장비에 대한 관세가 면제되고,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투자의 일부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세가 면제된다. 사업 수행 단계에서는 법인소득세 및 직업활동세가 3년간 면제된다.⁹⁵⁾

또한 정부가 지정한 특별지역 내에서 환경보호, 자연자원 보존, 에너지 절약, 지속 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청정기술(clean technologies)을 사용하는 외국인투자자는 각 투자단계별로 별도의 추가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다. 투자 이행 단계에서는 회사 설립이나 증자 시 0.2% 할인세율이 적용되고, 필요 인프라 설치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알제리 측에서 부담한다. 사업 수행 단계에서는 법인소득세 및 직업활동세가 10년간 면제되고, 투자의 일부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시점부터 10년간 재산세가 면제되며, 재정손실 이월 및 감가상각기간 조정 등이 가능하다.⁹⁶⁾

2. PPP 사업의 수행주체 및 기존 사업

가. 알제리국영에너지공사(Algerian Energy Company: AEC)

AEC는 주식회사로 2001년 5월에 설립되었으며, 국영 Sonelgaz와 Sonatrach이 49:51로 출자하여 설립한 공기업이다. AEC는 외국투자자들과의 파트너십을 위해 협력하고, 국내 및 해외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설립목적이 있다. 활동은 알제리 국내와 투자자의 해당 국가에서도 가능하다. 현재까지는 PPP 사업과 관련하여 주로 담수화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투자하고 있는 사업들의 수익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재정상태는 양호하다. 회사의 인력 구성은 약 50여 명으로, 경제, 법률, 엔지니어링 등 인적 구성이 다양하다.⁹⁷⁾

나. 사업 추진 방식 및 체계

2013년 5월 세부실태조사 시 AEC를 면담하였으며, AEC, CNED 등 관련 기관 면담내용에 따르면 AEC는 국내 및 해외 투자자에 대한 invitation to tender(appel d'offre) 공고 후 프로젝트 컴퍼니(SPV)를 설립한다. 재정법에 따라 지분비율은 51% 알제리 국내회사, 나머지 49%는 외국회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보통의 경우 SPV 참여사가 대출자로 참여하지는 않으며, 해외투자자가 시공과 운영·관리를 모두 구성하여 참여한다. call for tender는 입찰과는 다른 경쟁방식으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거쳐서 투자자를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5~6개 사업자 중 최저가 concession price를 제시하는 경쟁자가 선정된 후 기술평가가 수행되는 과정을 거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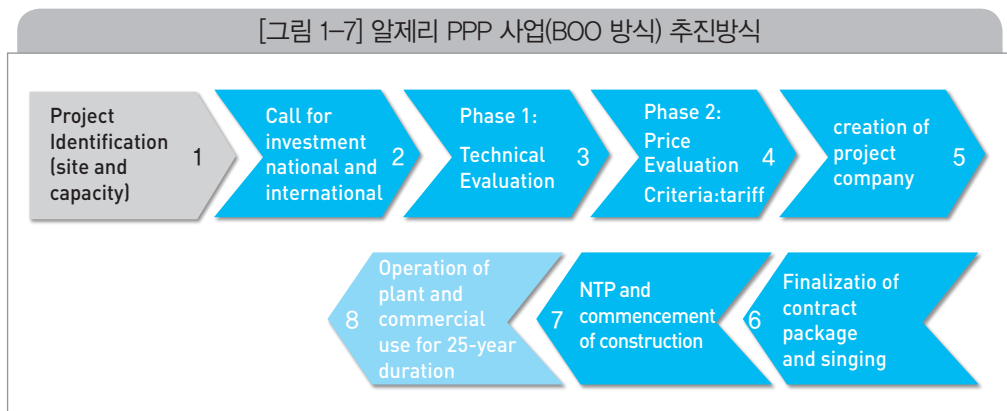
95) 한국수출입은행, MENA 3개국 국가 현황과 진출여건, 2013. 4.

96) 한국수출입은행, MENA 3개국 국가 현황과 진출여건, 2013. 4.

97) AEC 면담내용, 2013. 5.

현재 수행되고 있는 해수담수화시설의 경우, Sonatrach과 국영수자원공사(Algerienne Des Eaux: ADE)가 물을 구매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담수화사업은 물공급을 독점적으로 하는 ADE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자금액, 물 가격, 사업 수익성 등이 담보되어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별도의 지원 없이 self-financing이 가능한 구조이다. Sonatrach과 ADE는 25년 동안의 물 판매를 100% take or pay 보증한다.

토지와 관련하여, 과거 알제리 현지법인에만 토지사용권(Concession)을 주던 초기에는 AEC가 토지사용권을 가지고 있고 해외참여자가 토지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형태였는데, 이제는 법이 변경되어 SPV도 토지사용권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투자비에 지가도 포함되어 있다.



자료: AEC, 2013, 12.

다. 해수담수화사업 추진방식

일반적인 담수화사업의 수요 및 기술에 대한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는 수자원부 관할이며, 사업을 위한 건설 부분은 에너지부에서 담당한다. 10만^m 이상 대규모 건설사업일 경우 에너지부가 AEC로 사업 수행을 위임하며, 소규모 시설은 ADE에서 직접 담당한다. 여러 관련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에너지부, 수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정기적인 부처 간 회의(inter-ministerial meeting)가 열리고 여기에 AEC도 참여한다. AEC의 소관 및 승인부처는 에너지부로, AEC는 에너지부 장관에서 월례 보고서를 제출한다.

라. 사업 사례

현재 수행 중인 총 13개 사업 중 11개 사업이 담수화사업, 2개가 전력사업이며(central electrique), 참여회사는 GE 등 미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스페인 회사이다. 알제리의 PPP 사업은 모두 BOO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운영만 따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 대출은 전부 알제리 현지 은행을 통해 조달한다.

2.5억달러 규모 Hamma 담수화 사업의 경우만 예외적으로,⁹⁸⁾ AEC가 30%, 미국의 GE가 70%를 출자하였고, SPV(Hamma Water Company)가 30% 자본금을 대고, 투자금의 70%를 OPIC⁹⁹⁾에서 대출받는 형태로 추진되었다.¹⁰⁰⁾

제4절 CNED의 역할과 기능

1. 설치 근거 및 목적

CNED는 산업적이며 상업적인 공공기관(public industrial and commercial institution, ICPI)으로, ICPI는 국립대학 같은 행정기능만을 담당하는 행정기관과 차별된다. CNED는 2004년 재정법 제70조에 따라 재무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되었다.¹⁰¹⁾

2004년 6월 공포된 Executive Decree No. 04-162는 CNED의 설립목적에 담고 있다. CNED는 국가 기반시설을 위한 공공투자 효율성 증진, 대형 경제 및 사회 기반사업에 대한 평가, 사업 수행 및 모니터링 과정의 개선, 대형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을 최적화하고 다양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 수행업무 및 관련 분야

CNED는 국가 인프라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산집행의 사전·중간·사후 평가를 담당하며, 공공인프라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사업 수행 관청에 사업의 전 기간에 걸쳐 지원을 한다. 완공 후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공공지출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일을 한다.

주요 소관부문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분야, 댐, 상하수, 해수담수화시설 등 수자원분야, 병원 등 보건의료분야, 대학 등 교육분야와 체육시설 등이다.

3. 조직체계

CNED 이사회는 재무부 장관이나 그의 대표를 의장으로, 내무부, 교통부, 공공사업, 수자원, 국토정비 등 관련 부처의 장관이나 그의 대표이며, 연 3회 회의를 개최한다. CNED의 장은 재무부의 제안을 통해 대통령의 임명을 받는다.

98) 사업을 추진한 2003년 당시는 협상에 따라 지분율을 30:70으로 정하였다. 2009년 이후 사업만 새로운 규정(51:49)의 적용대상이 된다. 추진 중인 11개 담수화사업 중 8개 사업이 2009년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51:49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1995년에 체결된 첫 번째 사업인 카할라마, Hamma 등 세 개 사업이 새로운 규정에서 제외되었다.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과거 사업 중 한 개 사업만이 상가포르 투자자와 협상 결과 지분율 변경 동의를 이루었다. 테네스 사업의 경우 스페인 투자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해외투자자인 스페인 측이 51%의 지분율을 그대로 갖도록 추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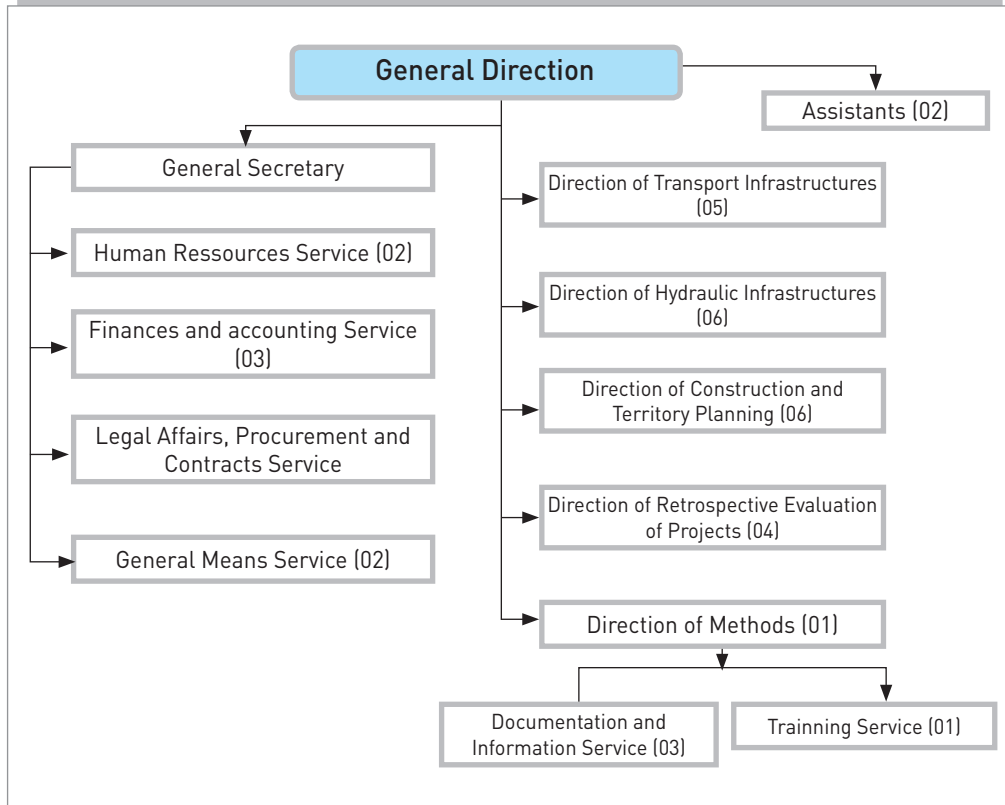
99)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해외민간투자공사)은 개도국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미국의 정부기관이다.

100) AEC 면담내용, 2013. 5.

101) 2013년 5월 세부실태조사 시 CNED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인터뷰 하였으며, 소개 자료 등을 CNED를 통해 전달받았다.

2013년 6월 현재 CNED는 37명의 조직원과 5개 부서 및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2개 부서는 수평적 구조이며 나머지 3개 부서는 기술평가를 수행하는 부서이다. 경제·환경 등은 모든 분야에 걸쳐 자문을 제공한다.

[그림 1-8] CNED 조직도



자료: CNED.

평가를 위해 CNED 자체 인력을 활용하고 때에 따라 외부인력을 활용하기도 한다. 예컨대 Identification 단계에서는 사업별로 2명을 배치하고, Feasibility study 단계에서는 내부인력 2~3명과 외부 전문가를 추가 구성한다.

4. 재정평가과정과 CNED의 역할

알제리는 2009년 국가재정법 시행령(Decree No.98227) 개정에 따라 대형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CNED가 이를 단계별로 관리하고 있다.

2010년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관리운영지침을 개발하였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사회적 평가 등의 항목이 새롭게 포함된 운영지침으로 maturation guideline, follow-up management, ex-post management가 있으며, 2010년 1월에 각 부처에 배포하였다. CNED의 역할은 각

부처가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Identification(식별) 단계에서는 예비조사 수준으로 사업을 검토하고 필터링하는 역할을 한다. Feasibility(타당성조사) 단계에서는 사업 발주부처와 직접 접촉하여 경제성, 환경성 등을 검토하고 타당성조사를 수행한다. Feasibility study 단계에서는 CNED가 비용-편익을 재산정하며, 내·외부 인력을 활용한다. Preparation(준비) 단계는 상세설계 단계로, 기술적인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며, 본 단계 이후 시공입찰을 진행한다. 시공 관련 funding은 CNED 검토 이후에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표 1-10〉 재정사업 3단계 평가체계

| 단계 | 소요기간 | 내용 |
|----|------|---|
| 1 | 2주 | CNED가 예비조사 수준(상위 계획 포함 여부 등)으로 사업을 검토하고 필터링 |
| 2 | 6주 | 사업 발주부처와 직접 접촉하여 경제성, 환경성 등 Option을 검토하고 타당성조사를 수행 |
| 3 | 4주 | 상세설계(detailed study) 단계로 작업은 4주간 수행하며, 이는 기술적인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는 단계로, 본 단계 이후 시공입찰 |

자료: 세부실태조사(2013. 5).

2005~09 5개년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은 현재 realization 단계(설계 완료)로, 3단계의 본 maturation 평가체계가 2009년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기존 추진 사업들을 CNED 평가로 중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012~14 5개년계획에 따른 사업 중 30여 개 사업이 3단계를 거쳐서 수행된다.

CNED는 의견을 제시하면 재무부에서 이에 근거해 예산을 편성(financing decision)하며, 유보사항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제외하는 구조를 취한다. 예산배정의 경우, CNED의 검토보고서는 재무부에 제출하기 때문에 예산배정은 이후 재무부 예산과에서 한다.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013」, 2013.

기획재정부 · 한국개발연구원, 『2012 경제발전경험 모듈화사업: 한국의 민간투자사업: 제도적 정비 및 정책 성과로부터의 교훈』, 2013.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13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2013.

Jay-Hyung Kim, on Public-Private Partnership Infrastructure Projects: Case Studies from the Republic of Korea, KDI, 2011.

UNESCAP, A Guidebook on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Infrastructure, 2011.

World Bank and PPIAF, “Public-Private Partnerships Reference Guide, Version 1.0,” 2012.

제2장 한국의 PPP제도 현황

김혜영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요약 >

한국의 민간투자사업은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여 인프라 구축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및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은 경제적 인프라 및 사회적 인프라 구축의 주요 수단이 되었다.

한국의 민간투자사업 관련 법·제도 정비과정을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공공부문이 주도했던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민간부문이 주요 주체로 나설 수 있는 법·제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을 제정한 것에서 출발한다. 법적 기반에 더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제도적 주안점은, 초기에는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위험의 분담방안에 역점을 두었던 반면, 최근에는 각 단계별 VFM 확보 검증 강화, 재정지원 증가에 대한 심의 강화,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사전검토 강화 등 재정관리 측면의 제도 보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민간투자법은 민간부문이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및 운영의 주체가 되기 위한 확고한 권리로서 관리운영권을 부여하고 민간사업자에게 법적 지위를 보장하였다. 민간투자법은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시설인 사회기반시설의 범위를 특정하고, 주요 추진방식을 명확히 하며, 민간투자사업에 적용되는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민간투자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투자사업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정부의 지원책은 국·공유 재산에 대한 특례, 재정지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설립 등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한 각종 부담금 및 조세 감면, 금융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제도적 혜택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사회기반시설 투융자 회사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에 투자하는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유인책을 마련하였다.

위와 같은 제도적 지원책에 근거하여 개별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에서 건설보조금 지급, 해지시지급금 지급, 운영기간 중 위험 부담 방식의 정부지원이 가능할 수 있었으며, 이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의 큰 요인이 되었다.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의 측면뿐만 아니라 재정관리 측면에서,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조달이 재정사업을 통한 조달과 비교하여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가 민간투자사업 관련 정책 수립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 대상사업 선정의 원칙을 정하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한 대상사업 심의 등을 통하여 추진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할 뿐 아니라 예산 배정 기능을 통하여 민간투자사업 관련 예산 배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들을 수립한다.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서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법령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수권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는 민간투자사업의 공정한 절차 보장, 재정집행의 효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타당성 분석, 민간투자사업 이해관계자들의 이해 조정 등을 위한 세부 지침을 작성한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단계별로 적용되는 세부 지침과 적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위와 같이 한국의 민간투자사업은, 한편으로는 민간사업자의 참가를 위한 법제도적인 확고한 기반과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안 수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조화 속에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내실을 이루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제1절 한국의 민간투자사업 관련 법률 및 제도 소개

1. 한국의 민간투자사업 현황

한국의 민간투자사업은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과 정부정책적인 지원방향에 따라 성장해 왔다. 민간투자사업의 성장은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여 인프라 구축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규정에 따라 BTO, BOT, BOO, BTL 방식 등으로 추진할 수 있으나, 대부분이 BTO와 BTL 방식으로 추진된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추진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과 대상시설별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대상시설별로 구분하면, 사업 수는 교육사업(217개)과 환경사업(167개), 투자비는 도로사업(41.5조원)과 철도사업(18.9조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1〉 추진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단위: 개, 억원, %)

| | | 사업 수 | | 총투자비 | | 평균투자비 |
|-----|-----|------|--------|---------|---------|-------|
| | | | 비중 | | 비중 | |
| 수익형 | BTO | 202 | 1.09 | 679,549 | 1.25 | 3,364 |
| | BOT | 4 | 0.62 | 6,580 | 0.67 | 1,645 |
| | BOO | 7 | 66.87 | 12,318 | 29.08 | 1,760 |
| | 소계 | 213 | 68.58 | 698,447 | 31.00 | 6,769 |
| 임대형 | BTL | 430 | 31.42 | 286,401 | 69.00 | 666 |
| 합 계 | | 643 | 100.00 | 984,849 | 100.00% | 1,532 |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2013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2013.

〈표 2-2〉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단위: 개,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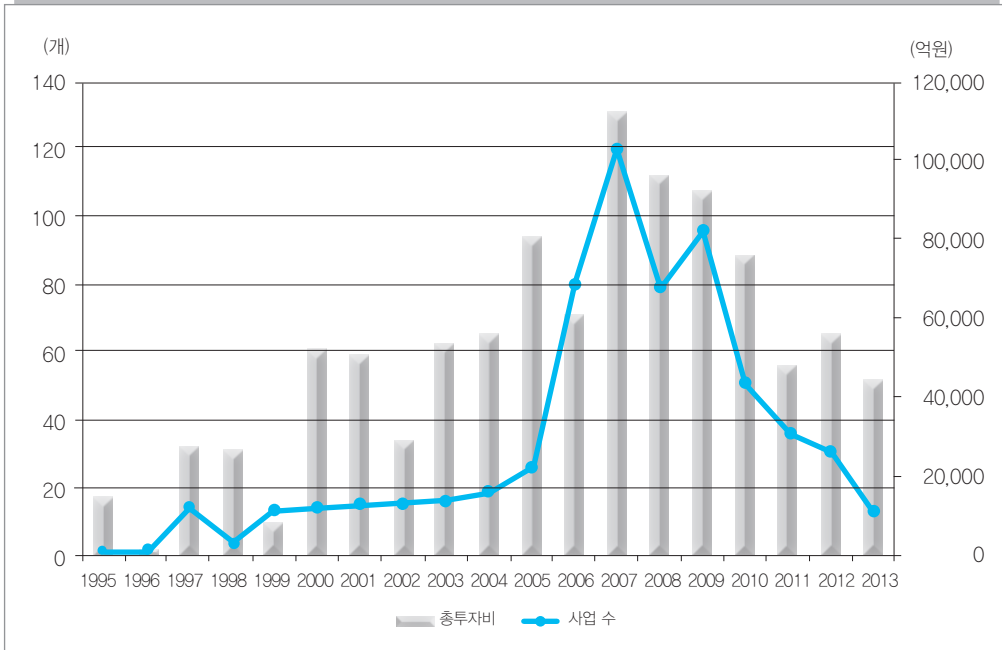
| | 사업 수 | | 총투자비 | | 평균투자비 |
|------|------|--------|---------|--------|--------|
| | | 비중 | | 비중 | |
| 도로 | 83 | 12.91 | 414,844 | 42.12 | 4,998 |
| 철도 | 14 | 2.18 | 188,508 | 19.14 | 13,465 |
| 환경 | 167 | 25.97 | 121,025 | 12.29 | 725 |
| 교육 | 217 | 33.75 | 93,719 | 9.52 | 432 |
| 항만 | 18 | 2.80 | 69,282 | 7.03 | 3,849 |
| 국방 | 71 | 11.04 | 55,813 | 5.67 | 786 |
| 문화관광 | 39 | 6.07 | 16,676 | 1.69 | 428 |
| 유통 | 6 | 0.93 | 12,605 | 1.28 | 2,101 |
| 공항 | 13 | 2.02 | 6,635 | 0.67 | 510 |
| 정보통신 | 5 | 0.78 | 3,398 | 0.35 | 680 |
| 복지시설 | 10 | 1.56 | 2,343 | 0.24 | 234 |
| 합 계 | 643 | 100.00 | 984,848 | 100.00 | 1,532 |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2013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2013.

1994년 민간투자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사업 수와 투자비가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1999년 민간제안방식과 MRG가 도입된 이후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투자금액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임대형 방식이 도입된 2005년 이후에 사업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2007년에 사업 수(120개)와 투자금액(11.5조원) 모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림 2-1] 연도별 사업 수 및 총투자비 추이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2013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2013.

그간의 괄목한 만한 성장은 사회기반시설의 공급을 확대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최근에는 초기의 민간투자사업 추진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던 재정부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정관리 측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각 단계별 VFM 확보 검증 의무화, 건설보조금수준의 상한 가이드라인, 재정지원 증가에 대한 심의기능 강화,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정부지출에 대한 회계 반영, 민간투자사업 추진 개시 결정 시의 사전검토과정을 강화하는 등 재정관리 측면에서의 제도 보완이 강구되고 있다.

2. 한국의 PPP Act 법률 체계

한국의 민간투자사업 관련 규범체계는 다음과 같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Implementation guidelines.

Civil law 체계인 한국의 법제하에서, 민간투자법은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업시행조건은 정부를 기속하도록 하는 원칙을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법에서 정한 관리운영권, 실시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가. PPP Act 제 · 개정 주요 내용

한국의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의 건설 공급 및 운영에 민간 참여를 유치하기 위하여 1994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이하 민자유치촉진법)」으로 처음 제정되었다.

1994년의 민자유치촉진법은, 민자유치 대상시설을 1종 시설과 2종 시설로 구분하여 소유권 귀속을 달리 하였다. 1종 시설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이다. 1종 시설은 시설 완공 후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킨 뒤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사용권을 부여한다. 2종 시설은 관광단지, 유통단지 등의 시설로서 완공 후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시설로 하였다.

그 이후 1998년 12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정부 주도 방향보다 민간과 정부가 대등한 위치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취지를 담아냈다. 민자유치촉진법에서의 제1종, 제2종 시설의 구분을 폐지하고, 정부 재정지원 강화, 사업추진 방식 다양화 및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 방법을 규정하는 방향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 강화 및 민간제안사업의 도입은 민간투자사업에서 민간부문에 참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5년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으로의 개정은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로서의 사회기반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을 도입하였다. 수익형 방식(BTO)의 민간투자사업 방식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프라시설(학교, 병원, 하수관거 등)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방식 다양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 방법론으로서 VFM 분석을 의무화하는 등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담아냈다.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된 이후에는 2011년 민간투자법의 대상시설로서 사회기반시설의 범위를 꾸준히 확대하여 왔고,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 활성화, 민간투자사업 시행과 관련한 분쟁해결기구로서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의 합리적 제도보완책을 꾸준히 마련해 가고 있다.

나. PPP Act 및 관계법률의 관계

PPP Act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실시협약을 통한 사회기반시설의 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제공하였다. 또한 전형적인 공공조달주체로서의 공공부문의 역할을 민간부문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1) 기존 공공조달분야에 적용되는 법률에 우선하여 민간투자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2) 민간부문이 공공조달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부여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PPP Act는 이러한 법률상 근거를 부여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1) PPP Act의 우선 적용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 건설 및 운영에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는 기본법적 성격과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민간투자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적용되는 개별 법률(도로법, 철도법, 항만법, 항공법 등) 등의 관계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하였다. 또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관계법률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로 의제된다.

2) 인허가 의제 효과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면, 관계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 허가 등과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인허가 의제 규정으로 사업시행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기능하여 왔다.

다. PPP Act하에서의 사업시행자의 공법상 특권

민간부문인 사업시행자는 공공조달의 주체로서 자신이 투자한 민간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자신이 건설한 사회기반시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이다. 한국의 민간투자법은 이를 관리운영권으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공권 외에,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한 전제로서 기존에 사회기반시설의 공급주체인 ‘공공부문’을 대체하는 지위에서 사업 시행을 위한 공법상 권한(토지의 수용권, 사용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민간투자법에 따라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또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이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 시설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는다.

관리운영권은 종래 정부재정으로 건설되어 공공부문이 운영을 전담하고, 운영 관련 비용을 재정에서 지원받던 구조하에서, 사용료를 시설이용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구조로의 변화를 위한 법적인 권리 개념이다.

한국의 민간투자법은 이를 부동산 물권에 유사한 지위로 인정하여, 관리운영권을 등록하도록 하고, 민간투자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들은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2) 토지수용권 및 국·공유 재산의 무상 사용·수익권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준공 시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 특히 귀속시설(revertible facilities)의 경우 운영기간이 끝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또한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 예정지역에 있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3. 민간투자법에 따른 PPP

PPP의 범위는 각국의 법제 및 정책에 따라 그 범위가 일원화되기 어렵고, PPP에서의 정부 및 민간의 역할분담에 대해서도 각국의 법제에 따라 다르다.

한국의 민간투자법에 따른 PPP의 범위는 1) 법에서 열거한 ‘사회기반시설’을 위한 건설 및 운영을 위하여야 하고, 2)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PPP 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본다.

가. 사회기반시설의 범위 특정

민간투자법은 민간투자 대상시설의 형태를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익을 위해 추가 조달이 필요한 부문들에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는 취지를 명확히 하였다.

민간투자법이 열거하는 ‘사회기반시설’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율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에 포함되는 시설로 정의하고, 다음 표의 시설로 열거하고 있다.

대상시설의 유형을 규정하는 방식에 대해 새로운 형태의 시설에 민간자본을 융통성 있게 혁신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에 실제적으로 적합한 민간투자사업 유형의 범위를 정하고 어느 정도의 규제를 하는 방식은 공공성을 고려한 시설 특징이 이루어지므로 정부는 추진 근거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투자대상시설의 사전 확정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인허가 등 사전 리스크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정부와 민간 부문 모두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¹⁰²⁾

102)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 『2012 경제발전경험 모둠화사업: 한국의 민간투자사업 제도적 정비 및 정책 성과로부터의 교훈』, 2013.

〈표 2-3〉 사회기반시설 유형(민간투자법 제2조)

| 분 야 | 소관부처 | 사회기반시설 유형 |
|---------|--------------------|---|
| 도로(4) | 국토교통부 |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Roads and appurtenances) |
| | | 노외주차장(Off-road parking lots) |
| | | 복합환승센터(Intermodal transfer center), 지능형 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 |
| 철도(3) | 국토교통부 | 철도(Railroads) |
| | | 도시철도(Urban Railroads) |
| | | 철도시설 |
| 항만(3) | 해양수산부 | 항만시설(Harbor facilities) |
| | | 어항시설(Fishery harbor facilities) |
| | | 배후간선망 연결시설 및 기반시설 |
| 공항(1) | 국토교통부 | 공항시설(Railroad facilities) |
| 수자원(4) | 국토교통부 | 다목적댐(Multi-purpose dams) |
| | | 하천시설(River facilities) |
| | 환경부 | 수도(Waterwork systems) |
| | | 중수도(Intermediate water works) |
| 정보통신(5) | 미래창조과학부 | 전기통신설비(Telecommunication facilities) |
| | | 초고속정보통신망(Super-high spe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
| |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 정보통신망(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
| | 국토교통부 | 공간정보체계(Spatial information system)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Infrastructure of ubiquitous cities) |
| 에너지(4) | 산업통상자원부 | 전원설비(Electric source facilities) |
| | | 가스공급시설(Gas supply facilities) |
| | | 집단에너지시설(Integrated energy facilities) |
| | | 신·재생에너지설비(New and renewable energy facilities) |
| 환경(8) | 환경부 | 하수도(Sewage systems), 공공하수처리시설(public sewage terminal disposal facilities), 분뇨처리시설(excreta treatment facilities) |
| |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facilities for reuse of sewage and wastewater) |
| | | 폐기물처리시설(Waste disposal facilities) |
| | | 폐수종말처리시설(Wastewater treatment terminal facilities) |
| | | 공공처리시설(Public treatment facilities) |
| | | 재활용시설(Recycling facilities) |
| 유통(3) | 국토교통부 | 물류터미널(Logistics terminals), 물류단지(Logistics complexes) |
| | | 여객자동차터미널(Bus terminals) |

〈표 2-3〉의 계속

| 분 야 | 소관부처 | 사회기반시설 유형 |
|--|---------|--|
| 문화체육관광 (13)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지(Tourist destinations), 관광단지(Resort complexes) |
| | | 전문체육시설(Specialized sports facilities), 생활체육시설(Public sports facilities) |
| | | 도서관(Libraries) |
| | | 박물관(Museums), 미술관(Art galleries) |
| | | 국제회의시설(International Conference facilities) |
| | | 문화시설(Cultural facilities) |
| | 안전행정부 | 자전거 이용시설(Facilities for bicycle riding) |
| | 여성가족부 | 청소년수련시설(Juvenile training establishments) |
| | 미래창조과학부 | 과학관(Science museums) |
| | 국토교통부 | 도시공원(Urban parks) |
| 교육(3) | 교육부 | 유치원(Kindergartens) |
| | | 초·중등학교(Schools for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
| | | 고등학교(Schools for higher education) |
| 국방(1) | 국방부 | 국방·군사시설 중 교육, 복지시설 등(Installation necessary for education, training and others attached to military units) |
| 주택(1) | 국토교통부 | 공공건설임대주택(Public rental housing) |
| 산업단지(1)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집적기반시설(Industrial cluster infrastructure) |
| 복지(6) | 보건복지부 | 어린이집(Nursing facilities) |
| | | 노인주거복지시설(Residential c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
| | | 노인의료복지시설(Medical c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
| | | 재가노인복지시설(Facilities for home care for the elderly) |
| | | 공공보건의료기관(Public health and medical service facilities) |
| 장애인복지시설(Welfar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 | |
| 산림(2) | 산림청 | 자연휴양림(Natural and recreational forest) |
| | | 수목원(Arboretums) |

나. PPP Act의 사업 추진방식

1) PPP의 참여자

민간투자사업의 참여주체들은 건설사, 금융기관, 정부(주무관청) 등이다. 건설사, 운영사, 재무적 투자자들이 설립한 사업시행법인이 주무관청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회기반시설의 자금조달, 건설, 운영을 책임지는 구조로 추진된다.

민간투자사업에 참가하는 이들 주체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사업에 참여하게 되고, 민간부문 내에서 계약관계를 형성하여 위험배분 약정을 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수주 실적과 시공 이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건설 후에는 지분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투자수익률과 채권 회수 위험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 들어 BTO 사업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의 낮은 기대수익률과 MRG 폐지에 따른 위험으로 수요 리스크 헤징 없이는 투자에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BTL 사업에 대해서는 지분출자에는 매우 소극적이며, 채권 회수에 비교적 안전한 대출 중심의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초창기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조달하는 목표에 초점을 두었고, 최근에는 MRG 부담 완화 등 및 민간투자사업 관련 재정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PPP Act의 주요 추진방식

한국의 민간투자법이 규율하는 내용은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결정을 하기 이전 단계의 측면과 사업시행자의 권리 보장 및 정부의 지원 또는 감독 규정 등이다.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결정 이전 단계의 측면은 추진방식, 추진 결정 이전의 타당성 분석, 실시협약 체결 이전 단계의 추진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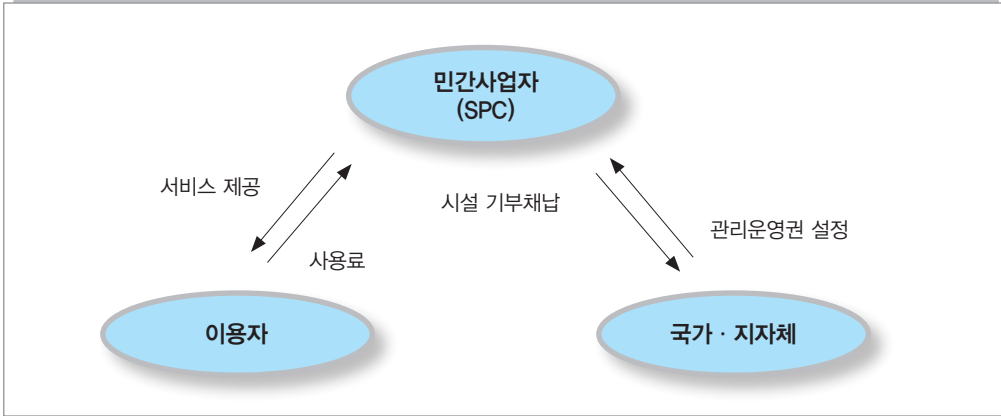
이 중 PPP의 추진방식은 ‘사회기반시설’의 조달 측면에 맞추어 규정하고 있고, 추진방식 또한 주로 시설물의 준공 이후 소유권 귀속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

소유권 귀속 측면에서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방식이 주로 추진되고 있고, 민간투자비 회수방식에 따라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uild-Transfer-Operate: BTO) 또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uild-Transfer-Lease: BTL)으로 구분된다. 기타 BOT(Build-Own-Transfer), BOO(Build-Own-Operate)로도 추진 가능하다.

BTO, BTL 방식의 경우 소유권을 정부에 귀속시키고,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한다.

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uild-Transfer-Operate: BTO)

[그림 2-2]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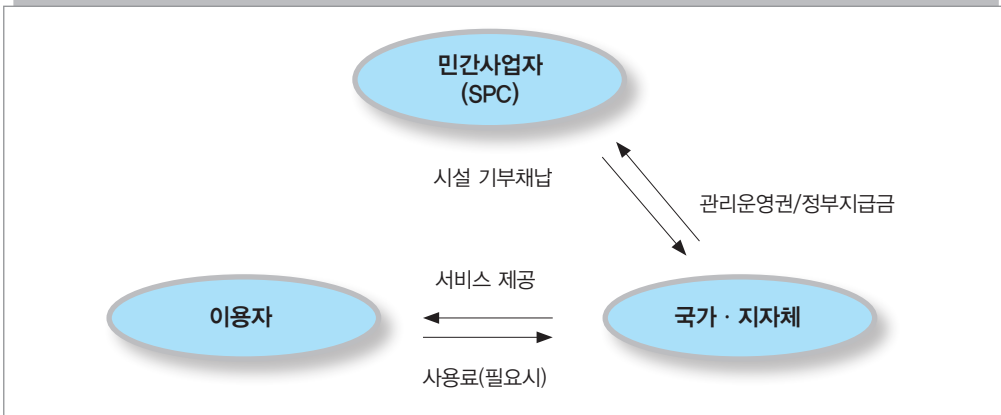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기반으로 자신의책임 하에 사업시설을 운영하고 그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도로, 철도 등 수익(통행료 등 사용료 수입) 창출이 용이한 시설의 조달에 이용되는 방식이다.

사업시설 이용자가 일반 수요자(원인자)가 되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시장위험(수요변동위험)을 부담하므로, 사용료수준과 더불어 건설보조금의 지급이나 운영수입 보장 여부가 사업 참여에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Build-Transfer-Lease: BTL)

[그림 2-3]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구조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기반으로 사업시설을 주무관청에 임대하고 그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음으로써 투자비를 회수한다. 학교, 문화시설 등 수요자(학생, 관람객 등)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의 경우에 추진되는 방식이다. 사업시행자의 서비스의 질과 정부지급금(임대료와 운영비)의 지급수준이 핵심적인 요소이며, 설계, 건설, 운영의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성과요구수준과 성과평가에 따라 정부지급금을 가감하여 지급 가능하다.

다. PPP 추진을 위한 타당성 분석

한국의 PPP 추진을 위한 Feasibility Analysis는 다음과 같이 수행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정부고시 방식과 민간이 제안하는 민간제안 방식은 그 타당성 분석과정 및 검토대상 기준이 다소 상이한 점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정부고시 방식 또는 민간제안 방식을 불문하고, 타당성 분석, 적격성 조사,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이라는 단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1) 정부고시사업의 타당성분석

주무관청이 민간투자 대상사업을 지정하기 이전에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고,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의 검토의견을 얻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얻어야 한다.

타당성 분석은 다음의 판단절차를 거친다.¹⁰³⁾

1. 타당성 판단: 해당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등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계층화분석법(AHP)으로 해당 사업의 추진 타당성이 확보되는지 여부를 판단
2. 적격성 판단: 제1호에 따른 추진 타당성이 확보되는 경우 정부 실행 대안과 민간투자 대안을 비교 분석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격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되, 정량적 분석 및 정성적 분석을 종합하여 판단
3. 민간투자 실행 대안 구축: 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이 확보되는 경우 재무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적정 사업비, 사용료, 정부 재정지원 규모 등을 산출하고 민간투자 실행 대안을 제시하며, 실행 가능한 부대·부속 사업 발굴 및 민자적격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2) 민간제안사업 제안내용의 검토 기준

민간부문이 제안한 사업의 검토는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그 제안내용을 검토한다.

103)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 공고 제2014-87호) 제65조.

1. 정부의 중장기 계획, 국가의 투자우선순위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출자자 구성의 적정성
3. 창의성, 효율성 비용의 적정성 등을 감안한 품질의 확보 가능성 등 건설 및 운영 계획의 적정성
4. 수요추정방법의 적정성 및 추정수요를 정부 예측 수요와 비교 등 추정수요의 적정성
5. 관련 부처 협의 및 민원 처리계획의 적정성
6. 재무모델, 도면, 각종 산출근거의 적정성 등 사업계획 도서의 수준
7. 해당 시설 건설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및 편익 증대 효과
8. 비용, 수입 산출근거 등 사업성 분석 결과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
9. 요구된 정부 재정지원 방식이나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
10. 그 밖에 법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도 수요 추정의 적정성,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비용 편익 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다. 적격성 조사는 정부고시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타당성 분석, 적격성 조사, 민간투자 실행 대안 단계로 수행한다.

라. PPP Act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1) 정부고시사업(Solicited Pro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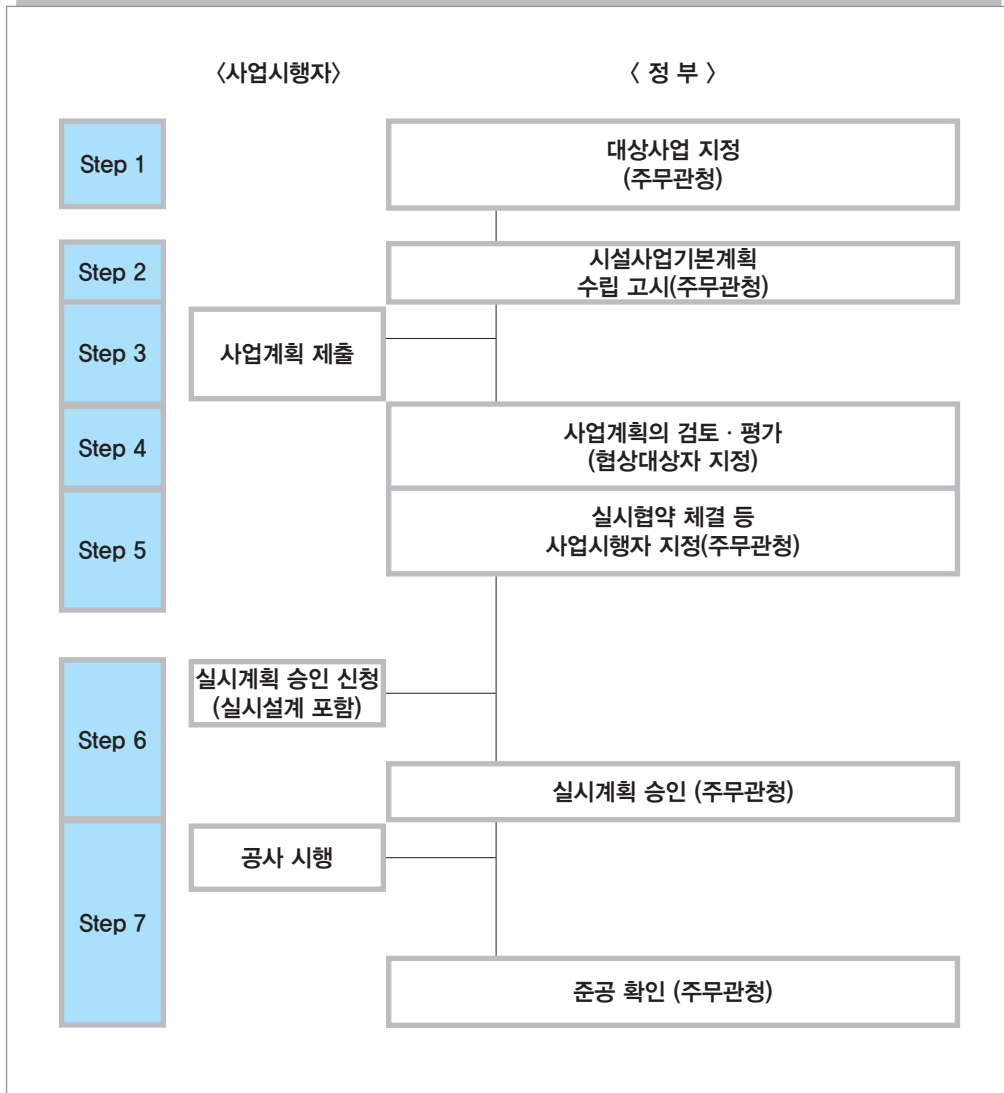
정부고시사업의 첫 번째 단계는 대상사업을 지정하는 것이다. 대상사업을 지정하기 이전에 주무관청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게 해야 한다.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지정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여 공개경쟁을 통하여 사업계획을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다.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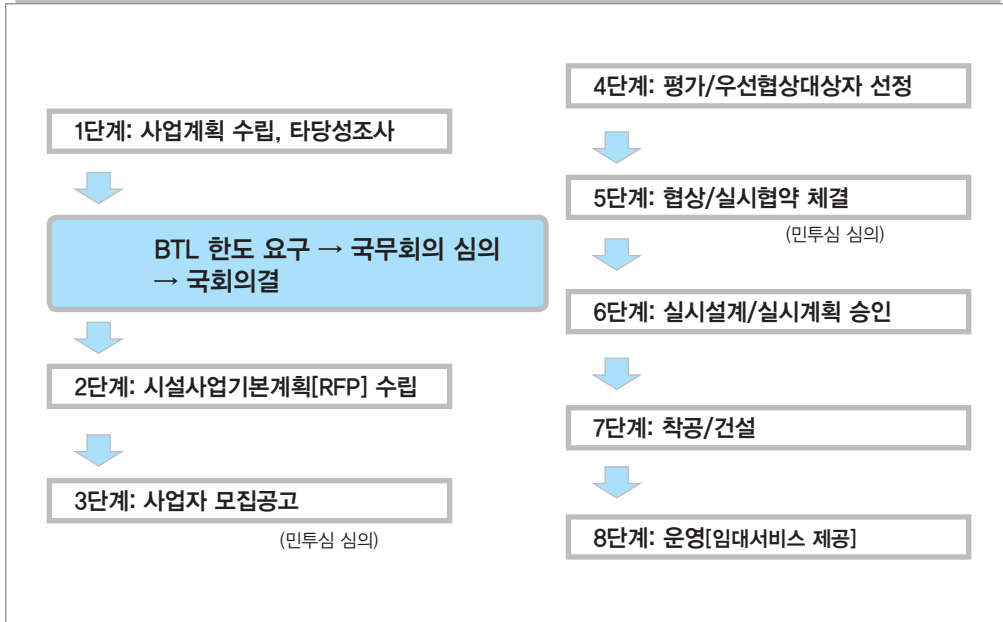
실시협약 체결 이후 실시계획 승인, 착공을 거쳐 사회기반시설이 준공된 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또는 무상사용기간 동안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 운영하게 된다.

[그림 2-4] 민간투자사업(BTO) 정부고시사업 추진절차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BTL 한도 요구, 국무회의 심의,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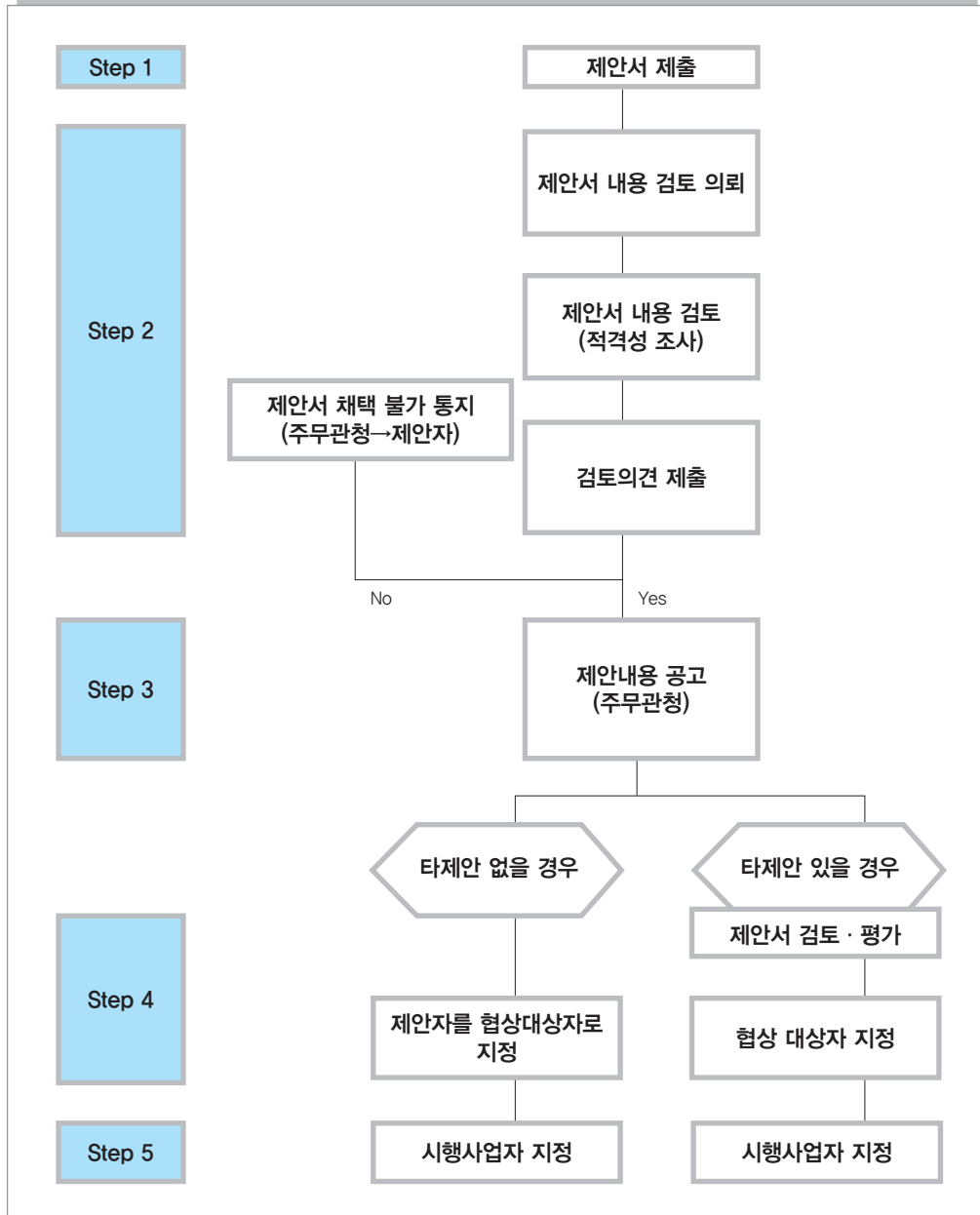
[그림 2-5]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정부고시사업 추진절차



2) 민간제안사업(Unsolicited Project)

한국의 민간제안사업은 PPP Act에 따라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민간제안사업이 허용되고 있다. PIMAC이 제안내용의 검토를 하여야 하며, 정부고시사업과 마찬가지로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림 2-6]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민간제안사업 추진절차



4. PPP Act에 따른 PPP 지원체계

가. 인허가 등 행정지원 및 국·공유 재산에 대한 특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되면 관계법률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도 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절차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민간부문인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의 수용 및 사용권을 부여하고,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사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계약으로 국·공유 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행정지원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대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부대사업 시행과 관련한 인허가를 의제하는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나. 재정지원의 법률상 근거 마련

민간투자법은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subsidy) 또는 장기 대부의 형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재정지원(financial support)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 사업의 실시협약에서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의 협상내용에 따른 건설보조금 비율, 기타 재정지원에 대한 약정을 하게 된다.

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신용보증 형태의 지원방식이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대출기관등 으로부터 민간투자비 용자를 받을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한다. 구체적으로 보증대상은 사업시행자의 대출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함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및 그 채권의 원리금 지급을 위한 대출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한다.

기금은 다음 재원으로 조성한다(민간투자법 제31조).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그 외의 자의 출연금
3. 보증료 수입
4. 기금의 운용수익
5.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라. 부담금 및 조세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농지법」,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또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또는 과밀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마. 금융 관련 규제완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은행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되는 금융 관련 규정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바. 실시협약에 따른 정부의 지원체계

정부는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재정지원 근거에 따라 개별 사업의 실시협약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지원은 시설별로 재정지원이 없다는 전제하에 계산된 사용료와 대체시설과 비교하여 발생하는 편익 및 경쟁력 등을 고려한 적정 사용료를 비교하여 적정 사용료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민간투자법 제53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주로 이루어지는 재정지원 형식은, 1) 건설단계에서 건설보조금 지급, 2) 해지할 경우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고, 3) 운영기간 중에 사업시행자의 운영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재정지원을 약정할 수도 있다.

1) 건설 보조금 지급

건설단계에서의 재정지원은 건설보조금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 투입계획과 연계하여 재정지원시기를 실시협약에서 정한다. 건설보조금은 사업의 공정률과 자기자본 투입 일정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일정 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도별·분기별로 적정하게 배분하고, 직전 분기 말까지의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기자본 출자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금차입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또는 누계 공정률이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건설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2) 해지시지급금 지급

실시협약이 해지될 경우 주무관청은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한다. 개별 사업별 실시협약에서

해지시지급금 규모 산정기준을 합의하고 있다. 해지시지급금은 소유권이 정부에 귀속되는 시설에 대하여 실시협약이 해지됨으로써 정부가 누리게 되는 소유권의 이익이 부당한 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고, 해지시지급금을 보장함으로써 민간사업시행자는 투입한 민간투자자금의 일정 정도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사업자의 참가를 활성화하는 제도로 자리 잡았다.

기획재정부가 공고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해지시지급금 산정기준을 표준화하여 공고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건설기간 중에는 기투입 민간투자자금을 기준으로 하되 투입자금의 기회비용 보상범위는 귀책사유별로 지급수준을 차등화하여 산정하고, 운영기간 중에는 기투입 민간투자자금의 상각액과 미래기대수익의 현재액을 기준으로 하되 귀책사유별로 지급수준을 차등화하여 산정하고 있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건설기간 중에는 기존에 투입된 민간투자자금(민간투자비-건설이자)을 기준으로 하되 투입자금의 기회비용 보상금액을 귀책사유별로 차등화하여 산정하고, 운영기간 중에는 잔여 기간의 시설임대료의 현재액을 기준으로 하되 귀책사유별로 차등화하여 산정한다.

3) 운영기간 중 위험부담¹⁰⁴⁾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이후 운영기간 중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일정 수준의 운영수입을 보장해 줌으로써 정부가 운영기간 중의 위험을 일부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2009년 이전에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운영수입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보장해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통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운영위험을 정부가 분담했다. 제도 초기의 민간사업자의 위험부담을 줄여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MRG제도는 수요 과다 예측으로 인한 정부 분담분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2009년 이후에 체결하는 새로운 사업의 실시협약에서는 MRG 약정을 하지 않고 있다.

2009년 이후에는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투자위험분담금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해 주는 ‘투자위험의 분담제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5.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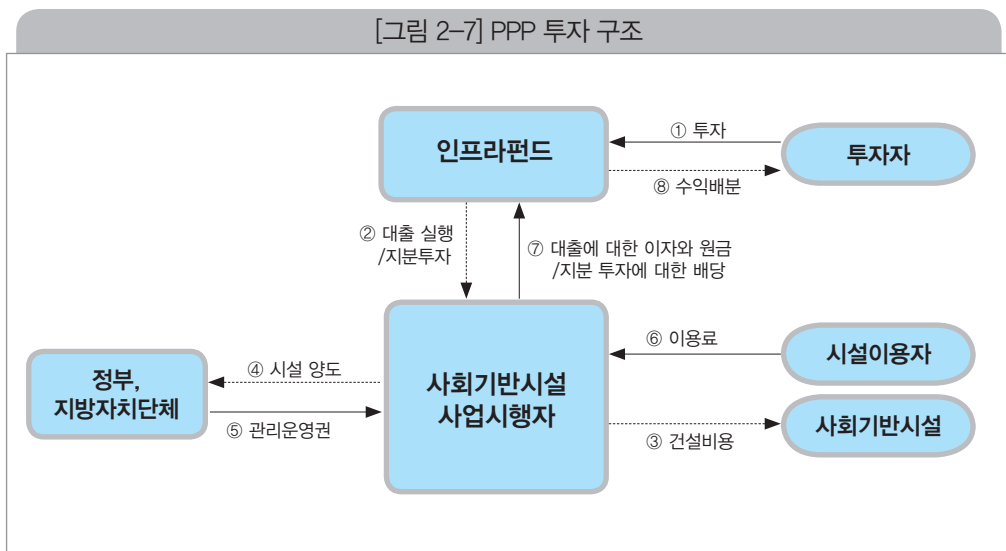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하는 투융자 집합투자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투자법에 인프라펀드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다.

104) Jay-Hyung Kim, Public-Private Partnership Infrastructure Projects: Case Studies from the Republic of Korea, KDI, 2011.

집합투자기구인 인프라펀드를 사회기반시설사업투자에 유인하기 위하여 법제적으로는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일반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특례를 마련하였다.

인프라펀드의 법제적 근거를 도입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자금조달수단이 다양화되었고, 이는 사회기반시설사업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현재 한국의 인프라펀드는 주로 연기금, 보험회사 등의 사모펀드 형식으로 설립되고 있다. 투자형태는 주로 민간투자사업시행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채권 취득, 사업시행법인에 대한 대출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다.



민간투자법은 2011년 8월, 개정으로 자금조달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유형을 기존의 ‘회사형’ 외에 ‘투자신탁형’으로 확대하였다.

인프라펀드의 유형을 시장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투자신탁형으로 확대하여,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한편,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collective investment)의 일반법인 자본시장법에서의 제한을 특례 형식으로 완화하여 집합투자기구가 사회기반시설사업 투자에 더욱 유용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 설립절차: 기획재정부 협의 + 금융위 등록
- 직접대출 허용
 - 투융자회사의 경우 직접대출이 가능
 - 투융자신탁의 경우(수익증권 총액의 30% 이하) 직접대출이 가능
- 환매금지형
- 차입금의 허용 및 한도(자본금의 30%, 수익증권 총액의 30%) 설정
- 신주발행의 허용, 주식상장의 의무화, 투자한도의 제한 적용 배제, 의결권 제한의 적용 배제

제2절 PPP 관련 기관 및 조직

1. 주무관청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이다. 개별 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로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주체이다.

국가 단위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물류 등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가 주요 주무관청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사회기반시설(지방도, 하수관거시설, 하수도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무관청이 되고, 학교시설의 경우 교육감이 주무관청이 된다.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회기반시설의 설계, 시공, 운영 관련 내용은 실시협약의 범위 안에서 권리·의무가 확정되므로 구체적인 사업 관련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는 실시협약에 따라 규율된다.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발굴 및 타당성 분석
2.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지정 및 고시
3.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또는 제3자 제안공고 작성 및 공고
4. 사업계획 또는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5.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6. 실시계획 승인
7. 부대사업 시행 승인 관련 실시계획 변경 승인 또는 제안서 승인
8. 시공·운영 등 사업이행 감독 및 실시협약 관리, 임대형 민자사업의 서비스 성과평가 및 정부지급금 등 사업·관리 및 감독
9.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업정보의 제공 등

2.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사업 추진 관련 정책 부서로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민간투자제도 정책 추진방향과 매년도 추진계획을 포함하고,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및 민간투자사업 관련 추진절차를 표준화하고 있다.

표준화된 추진절차와 지침을 마련하여 공고함으로써 이를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관련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였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민간투자사업 선정의 원칙,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 지정 이후 타당성 분석 관련 방법론 및 절차, 사업계획 평가 이후 협상과정에서 주무관청이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실시협약 체결 과정에서의 주요 지침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내용과 절차 관련 내용은 주무관청이 준수하여야 하는 준칙 및 통일화된 규범으로 작용한다.

민간부문의 책임으로 규정된 자금조달과 관련해서는 자기자본 유지 의무 및 자금재조달 이익 공유 등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의 위험분담에 관한 내용, 정부의 재정지원으로서의 건설보조금, 해지시지급금 지급 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자의적인 재정지원을 방지하고, 재정지원과 관련된 VFM을 준수하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부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및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산하에 설립하여 개별 민간투자사업 관련 심의기능, 분쟁조정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둔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7.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8. 대상사업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9.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10.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및 사회기반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 각 부의 차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8명 이내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학식이 있는 민간 위원으로 구성한다.

나.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은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공익을 대변하는 각 3명씩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민간투자사업 관련 분쟁은 양 당사자의 대립으로 인한 사회기반시설의 공공성이 훼손될 염려가 있고, 장기간의 사업기간 동안 다양한 쟁점이 발생하여 전문적인 기관에 의한 분쟁조정의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분쟁해결방법인 소송 또는 중재의 방법만으로 어려운 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분쟁조정 방법을 도입하였다.

3. 국회의 역할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예비한도액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의결한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경우 정부는 정부지급금(임대료 및 운영비)을 지급하여야 하고, 국가의 재정부담이 수반되므로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4.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가. 설립 근거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민간투자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개발연구원의 부설로 설립되었다.

나. 조직

공공투자관리센터는 3 Division으로 구분되어, 재정사업 평가, 민간투자사업 지원, 정책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 지원 Division은 민자제도팀, 민자사업팀, 민자금융팀으로 기능상 구분되어 있다. 민자제도팀은 민간투자법령과 기본계획 작성 및 지원, 민간투자사업 제도기반 정비방안 수립, 민자적격성 조사 수행 등의 업무를 수립하고 있다. 민자사업팀은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의 평가, 시설사업기본계획 검토, 민간투자사업 협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민자금융팀은 자금제조달 사전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다. 업무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3. 사업계획의 검토, 평가,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업무 지원
4.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대한 검토 평가
5. 민간투자사업 관련 인허가 등 신청 업무의 대행
6. 외국인 민간투자자를 위한 투자상담 및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외국인본의 유치활동 지원
7. 민간투자대상사업의 검토 및 타당성 분석
8. 민간투자사업 추진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9. 민간투자제도의 개선 및 관련 분야 연구
10. 민간투자대상사업의 발굴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11. 민간투자사업 운영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 작성, 공표
12. 민간투자사업 추진 업무별 세부 요령의 작성, 공표

라. 민간투자사업 사후관리

PIMAC은 민간투자사업의 건설, 운영 기간 중의 사후관리 업무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장기간의 민간투자사업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 간의 의견대립, 금융조건 변경 등에 따른 자금재조달 이익 공유, 분쟁조정 지원 등의 사후관리 업무는 민간투자사업 전담 기구로서 축적된 업무역량 및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들임과 동시에 민간투자사업 관련 정책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안들이다.

• 타당성 분석에 대한 재검증

사업 추진 의사결정 이후에도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재검증하는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단계별로 수요 예측의 전제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수요 예측 재조사를 시행하고, RFP와 비교하여 협상과정에서 총사업비 증가 등 사업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 민자적격성 조사 재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 추진 이후 국고지원의 증가, 사용료 부담 증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재정당국은 이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으며, PIMAC의 재검증 결과는 사업 추진을 원하는 주무관청과 재정부담을 고려하는 재정당국의 정책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실시협약 변경 등 자문

실시협약 체결 이후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발생하는 실시협약 해석과 관련된 양 당사자의 이견이 발생했을 때 자문, 주무관청에 불리하게 실시협약을 변경할 경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실시협약 범위 내에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 발생하는 이견에 대한 자문을 수행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자금재조달 계획서 검토

사업시행자가 자금재조달을 실시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PIMAC에 자금재조달 계획서의 사전검토를 요청한다. PIMAC은 자금재조달 계획서를 검토한 후 자금재조달로 인한 공유이익을 산정한다. 뿐만 아니라 자금재조달과 관련한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대행할 수 있고, 자금재조달 세부 요령을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다.

-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지원

실시협약 당사자가 민간투자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기획재정부 내의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PIMAC은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인의 신청내용과 피신청인의 답변서를 검토하여 신청인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신청과 관련된 현장조사, 서면조사 등의 사실조사 업무, 전문가 의견 등 의견 청취, 법규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5.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관리는 신용보증기금이 관리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사업시행자 등이 대출기관 등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 자금의 대출, 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함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및 그 채권의 원리금 지급을 위한 대출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한다.

기금의 부담으로 동일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 한도는 3천억원으로 한다.

제3절 PPP Implementation Guidelines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이 지켜야 하는 일반지침은 기획재정부가 공고하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매해 개정하여 공표하는 기본계획은 한 해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주무관청이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지침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절차에서의 지침은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작성·공표하고 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 객관성을 유지하고 주무관청의 민간투자사업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행요령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 조사에 관한 세부 요령
2.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 및 표준안
3. 사업계획 평가관리에 관한 세부 요령
4.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 요령
5. 임대형 민자사업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 요령
6. 표준실시협약안
7. 임대형 민자사업 타당성 분석에 관한 세부 요령
8.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
9. 복합화시설사업 표준 기본협정서안
10.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사안에 대한 요령

제4절 한국 PPP의 성공요인

1. 민간사업자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수요 증대의 필요성이 부각되던 1990년대의 중·후반기에 한국정부는 민간 자금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였다.

정부의 재정으로 건설되고 운영되어 왔던 사회기반시설 공급 부문에 민간부문의 자금을 유치하여 건설하고, 이의 운영을 민간부문이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적 설계를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기존의 사회기반시설의 공급주체를 공공부문에 한정하였던 법적·제도적 기반을 민간사업자가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으로 바뀌 나가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었다.

민간투자법은 기존 사회기반시설 공급주체로서 공공부문에 부여하였던 특권을 민간부문에 부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민간사업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국·공유 재산에 대한 무상사용 수익 허가권을 운영기간 동안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계약으로 부지를 매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의 법제와는 상이한 구조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법제 정착을 위하여 기존 법제와의 상충을 해결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기존 법제의 특례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민간투자법과 관계 법률의 적용에 있어 민간투자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민간투자법의 특례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각종 행정절차의 인허가 절차를 위한 별도의 절차 없이 인허가를 의제하도록 하였고,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 추진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한편, 각종 세제지원과 금융규제 관련 법률에서의 규제완화 조치 등은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활성화는 실질적인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은 민간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 공급 및 운영 주체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2. 정부의 위험분담정책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의 조달의 측면이 있지만, 참가하는 민간부문에게는 ‘투자’의 수단으로서 사회기반시설이라는 측면이 있다. 앞에서 살펴본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로써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투자자의 투자위험을 적절히 분담하는 정책이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민간투자제도 도입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참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유인책들이 도입되었고, 그 제도의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정부의 위험분담정책 또한 조금씩 수정·보완되고 있다.

정부의 위험분담 및 재정지원 방식으로는 건설기간 동안의 건설보조금 지급, 실시협약 해지시의 해지시지급금 도입, 운영기간 중의 운영위험 등을 분담하는 제도 등을 도입하여 왔다.

이러한 위험분담정책은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민간사업자들이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

한편, 한국정부는 이러한 위험분담정책에 대하여 정부의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수단들을 발전시키고 있고, 이러한 재정지원수단의 VFM을 확보하는지에 대한 검토방법들을 정교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의 본래 취지상 민간이 부담하여야 하는 영역으로서 건설기간 중의 총사업비 변경 위험, 운영기간 중의 운영비 초과 위험 등의 비용 증가, 건설기간 준수 등의 위험에 대해서는 실시협약을 통하여 민간이 위험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다.

3. 전담기구를 통한 민간투자사업 관리

PIMAC은 한국개발연구원 산하 기구로 설립되어 정책분석가들의 도움을 받아 독립적인 검토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정책분석가들의 평가 결과가 객관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아 왔던 것이 민간투자사업 전담기구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데 기여하였다.

PIMAC은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여부 결정을 위한 단계에서부터 타당성 분석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뿐만 아니라 주무관청의 사업 추진 여부 결정을 위한 지침과 세부 요령 등 표준화된 지침을 제공하고 추진 여부 의사 결정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결정을 위한 단계에서 정부 재정부담의 VFM을 확보하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부문과의 실시협약 체결 시 정부에 위협의 경감방안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며, 민간의 자금재 조달로 인한 이익 공유 방안을 검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주무관청의 자문기구이자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 확보 노력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PIMAC은 민간투자사업의 건설, 운영기간 중의 사후관리 업무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장기간의 민간투자사업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 간의 의견대립, 금융조건 변경 등에 따른 자금재조달 이익 공유, 분쟁조정 지원 등의 사후관리 업무는 민간투자사업 전담기구로서 축적된 업무역량 및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들임과 동시에 민간투자사업 관련 정책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안들이다.

4. 재정당국의 선도적 역할 및 VFM 기준을 통한 재정효율성 제고

민간투자사업 추진과정에서 재정당국의 선도적 역할 수행은 예산 배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사업부처의 선도적 역할 수행에 따른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의 민간투자제도 시행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사업평가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과 예산 배정을 수행하고, 민간투자사업 의사결정을 수행함으로써 일선 부처들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공의 의견 수렴과정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기획재정부가 초기 단계부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략적 심사 및 기획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가 이루어졌다. 민간투자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과 시행지침과 같은 법령 및 정부 규정상 다음 사항들에 대한 높은 수준의 종합적인 정책방향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는 (1)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을 잠재적으로 비효율적인 공공조달방식으로 보는 이유, (2) 정부가 선호하는 민간투자사부문 및 방식, (3) 민간투자사업과 전통적 재정사업 비교 분석시 정부의 기준, (4)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등이다. 민간투자법령은 민간투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부문을 특정하여 주고, 추진 방식과 절차를 마련하며, 정부 및 민간사업자의 역할,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을 규정한다.¹⁰⁵⁾

특정 조달방식에 대한 편익(bias)을 없애고 VFM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조달과정에서의 사업평가를 위한 통일된 체계를 수립하였다.¹⁰⁶⁾ 이를 통해 잠재적인 투자사업에 대하여 비용-편익 분석과 VFM 조사 같은 조달방식 평가(Procurement option test)가 수행된다. 표준적인 조달방식 평가는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105)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민간투자사업: 제도적 정비 및 정책 성과로부터의 교훈』, 2013.

106)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민간투자사업: 제도적 정비 및 정책 성과로부터의 교훈』, 2013.

첫째 단계는 투자결정을 위해 실시하는 타당성조사이다. 국가경제 관점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비용-편익 분석이 수행된다. 타당성조사의 실시는 사업을 진행할지 여부를 가능할 뿐만 아니라 조달부처가 사전에 사업준비작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만약 사업 수행이 타당한 것으로 판명되면 두 번째 단계로서 조달방식, 즉 전통적 조달방식과 PPP 중 더 나은 조달방식을 선택하기 위하여 VFM 평가가 실시된다. 기본적으로, PPP가 전통적 조달방식보다 더 나은 VFM을 달성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정부실행대안(PSC)에 대한 정부비용 및 성과를 PPP 대안의 정부비용 및 성과와 비교한다. VFM 평가를 통하여 정량적인 VFM 결과를 제시하고,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조달방식을 결정하는 합당한 근거를 제시한다. VFM 평가 과정에서 평가자는 사업의 전생애주기 중 초기 단계에서 위험을 고려하고, 이에 따라 추후 입찰 과정에서 위험 이전 방안을 고려하도록 한다. 만약 PPP 방식에 VFM이 없으면 해당 사업은 전통적 방식으로 시행한다. 최종 단계에서는 PPP나 전통적 조달방식 대안에 대한 최적 대안을 수립하여 제안한다.¹⁰⁷⁾

5. 표준지침 마련을 통한 사업의 투명성 확보

민간투자사업은 추진과정에서 대상사업 선정, 사업계획 평가, 협상, 실시협약 체결 등의 각 절차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은 대상사업 지정의 원칙으로서, 수익자 부담능력의 원칙, 수익성 원칙, 사업편익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 등을 미리 정하고 있다. 수익자 부담 능력의 원칙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할 경우 수익자들이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고부담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하게끔 한다.

또한 민간 투자자의 입장에서 민간투자사업자의 투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지,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는지 등의 기준을 명시적으로 정하여 참여하는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정부로 하여금 사전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주로 사회적 인프라시설의 확충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사회기반시설의 법적 적합성, 경제적·재무적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국민에게 기초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국공립 시설, 국가의 중장기 투자계획 등에 이미 반영된 사업인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함으로써 재정사업 추진 대안보다 적기 완공으로 인한 사업편익 조기 향유,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도 향상, 서비스의 질 제고 등 사업편익 증진과 설계, 사업의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총비용의 절감 등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한다.

이러한 원칙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별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한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며, 타당성 분석을 위한 표준지침 마련으로 민간투자사업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107)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 『2012 경제발전경험 모더니화사업: 한국의 민간투자사업: 제도적 정비 및 정책 성과로부터의 교훈』, 2013.

민간투자사업 선정의 객관화된 기준과 절차 및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는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기도 하다.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관청 입장에서는 재정부담이 수반되고, 공공시설 및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사용료 부담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선정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과 재정의 효율성 등은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입장에서는 제안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여부 결정기준이 자의적일 경우 민간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할 수 있고, 사업계획의 평가 결과로 인한 이익 박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구조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통하여 표준지침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 조사 요령,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 요령, 사업계획에 관한 평가 관리 요령 등을 마련하여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절차의 투명성 확보 노력을 하였다.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013」, 2013.

기획재정부 · 한국개발연구원, 『2012 경제발전경험 모듈화사업: 한국의 민간투자사업: 제도적 정비 및 정책 성과로부터의 교훈』, 2013.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13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2013.

Jay-Hyung Kim, *Public-Private Partnership Infrastructure Projects: Case Studies from the Republic of Korea*, KDI, 2011.

UNESCAP, *A Guidebook on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Infrastructure*, 2011.

World Bank and PPIAF, “Public-Private Partnerships Reference Guide, Version 1.0,” 2012.

제3장 알제리 PPP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제언

박 현 (서울시립대학교)

< 요약 >

알제리 PPP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제언

현재 알제리에는 PPP 유형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PPP를 위한 별도의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성문법(Written Law) 체계를 따르고 있는 알제리에서 PPP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알제리 PPP 입법을 위해서는 우호적인 환경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PPP 입법 및 제도 도입을 위한 환경 평가는 정부 부처 및 공공부문의 PPP 도입에 대한 공감대 형성, 자금조달을 담당할 금융기관의 성숙도,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할 투자자들의 노하우등의 제반 사회 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 부처를 비롯한 공공부문 및 의회의 PPP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PPP란 전통적인 재정을 통한 인프라개발의 대체 수단으로서 이를 제도화하는 데는 특수한 사회적인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온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매우 긴급한 재정환경에서 추가적인 재정조달이 필요할 때 PPP가 정당화되는 경향이 있다. 본 장에서는 PPP에 대한 일반적인 환경과 알제리 상황을 종합하여 알제리에 PPP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환경조성여부를 진단하였다. 진단 결과 본 연구진은 알제리의 PPP 제도 도입을 위하여, 단기적인 관점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PPP 입법 및 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알제리에서 현재 PPP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 현 단계에서는 현존하는 입법체계 내에서 PPP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하위 규정들을 정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판단된다. 다른 한편으로 중장기적으로 PPP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PPP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된다.

PPP Unit은 이러한 단기 및 중장기 목표를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PP Unit은 기존의 재정사업과 다른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PPP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PPP 제도의 법적 제도적 정착을 위한 제도 연구,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PPP Unit을 설치할 장소로는 한국의 PIMAC의 설립 및 그 역할에 대한 경험에 비추어 CNED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CNED는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등 재정사업관리 능력을 수행하여 왔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바, 재정사업의 평가 및 관리에 적용하였던 절차와 방법론을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적용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과 재정사업을 통합된 체계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PPP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재정당국의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한데, CNED는 재정부와 긴밀한 업무적 연계구조를 갖고 있는 것 또한 CNED가 PPP Unit의 설치 장소로 적합한 이유이다.

제1절 PPP제도의 이점

PPP의 의미와 적용범위는 나라마다 민간부문의 참여 정도, 위험부담 정도 및 정부의 역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상이할 수 있다. 한국의 경험에 비추어 PPP를 정의하면, 정부와 민간부인이 계약을 통하여 사회기반시설의 공급을 위한 민간의 자금조달,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경험과 세계 각국의 PPP제도를 통하여 PPP는 다음과 같은 잠재적 이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PPP는 정부의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여 인프라를 적기에 건설하여 재정운용의 유연성(fiscal flexibility)을 높일 수 있다.

둘째, PPP는 민간의 참여를 통하여 인프라 개발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통상 PPP 사업자 선정이 민간부문 간의 경쟁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경쟁과정에서 최적화된 건설 및 운영 계획, 자금조달비용의 최소화, 생애주기비용을 최소화하는 최적 대안을 선정할 수 있는 등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셋째, 민간부인이 운영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공공부문보다 서비스 질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사전에 확정된 서비스 요구수준을 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서비스수준 유지 의무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부문이 독점하였던 분야에 민간부문이 참가하여 공공-민간 간 경쟁을 초래하여 장기적으로는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개혁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제2절 PPP제도 도입을 위한 알제리 환경 진단

알제리는 해수담수화시설 및 일부 에너지시설에 민간부문의 자금을 조달하여 건설 및 운영하는 방식의 PPP 사업을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그 운영방식은 BOO (Build-Own-Operate) 방식, 즉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여, 완공 후 일정 기간 이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방식이다. 정부 또는 공기업은 토지 및 사용료 수입 등의 위험을 일부 분담해 주는 약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위와 같이 일부 인프라시설부문 PPP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민간 참여가 이루어지고 조달절차와 관련한 일반 정부조달 관련 법률 규정이 적용될 뿐 PPP제도 일반을 규율하는 법·제도는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다.

경험적으로 PPP 관련 제도 정비는, 법률 또는 정부정책 등의 제도적 틀을 통하여 1) PPP 사업 추진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2) 관련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의무와 역할을 명확하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PPP제도 정비의 가장 큰 이점은, 잠재적인 사업시행자들이 사업 추진방식을 이해하고 사업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위험을 줄임으로써 민간, 특히 외국의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PPP 법률과 관련 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PPP제도를 활성화기 위해서는 현재 PPP 관련 제반 환경이 조성되었는가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PPP제도를 위한 환경으로는 1) 정부 등 공공부문의 PPP 도입을 위한 인식과 열정, 2) 민간자금조달 기관인 금융기관의 성숙도, 3)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할 민간부문의 발전 정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정부나 의회 등 공공부문의 인식과 환경은 PPP를 위한 법률과 제도의 정비를 위한 목표와 실행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고려 요인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진은 관련 정부부처와 PPP 사업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잠재적인 PPP 참여기관 그리고 CNED 등을 방문하여 집단적·개인적으로 면담할 기회를 가졌다. 그 결과 연구팀은 공공부문의 PPP 도입에 대한 태도가 기관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어, 알제리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PPP의 잠재적 효용으로서 민간부문이 참여함으로써 인한 적기 공사 및 운영서비스 질 향상의 장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의 도입에 열정적인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PPP 사업관리를 희망하는 CNED는 알제리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PPP 활성화 및 PPP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PPP Unit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 향후 PPP 활성화가 이루어질 때 투자재원 공급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국가투자기금(National Investment Fund: FNI), 알제 시내에 노선망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 알제철도공사(Algiers Metro Company: EMA)는 PPP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진은 알제리의 PPP 도입환경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CNED의 전문가로 하여금 간략하게 'PPP 환경 자가진단'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또한 아직 알제리의 PPP 환경이 미성숙 단계임을 보여주고 있다. UNESCAP(2007)에서 개발한 'PPP-Readiness Self-Assessment'에 대한 알제리의 자체평가 결과, Part A에 대해서 전체 160점 가운데 87점을 얻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를 4점 척도로 전환하면 평균 2.2점에 해당한다. 이는 moderate(2.0)과 good(3.0) 사이에 있는 점수로서 PPP제도 도입을 위한 환경이 우수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특히 PPP가 도입될 때 시장활성화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Financial climate 영역의 경우 평균점수가 1.1점으로, 민자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금융부문에 아직 PPP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 평가표를 구성하는 'Part B: Indicators focusing on PPP issues'에는 알제리에 적용되지 않는 평가항목이 많아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또한 알제리의 PPP 환경이 아직 미숙한 단계임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표 3-1〉 알제리 PPP 준비도 자체평가표

| Category | Score | Total | Average | Range |
|----------------------------------|-------|-------|---------|---------------|
| Macroeconomic environment | 23 | 40 | 2.3 | Moderate~Good |
| Business Climate | 21 | 40 | 2.1 | Moderate~Good |
| Financial Climate | 9 | 32 | 1.1 | Fair~Moderate |
| Legal and Governance Environment | 34 | 48 | 2.8 | Moderate~Good |
| Total | 87 | 160 | 2.2 | Moderate~Good |

주: 4=very good; 3=good; 2=moderate; 1=fair; 0=poor.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는 PPP 도입을 위한 알제리의 환경에 대한 판단과 함께 향후 PPP 활성화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일반적으로 PPP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PPP에 우호적인 환경으로서, 경제적 환경, 투자환경, 금융기관의 성숙도 등의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환경 토대 위에 PPP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환경이 민간부문의 '투자' 및 투자자들에 대해 우호적으로 조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알제리는 2009년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이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제를 마련하는 등 민간부문의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제3절 PPP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제언

1. 한국의 PPP제도 정비 경험의 시사점

한국의 최초 민간투자법 제정(1994년)과 1차 개정(1999년) 당시의 경제상황과 인프라투자정책을 이해하는 것은 알제리 PPP 법률 제정 전략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1994년 PPP법이 제정될 당시 한국은 심각한 인프라 스톡의 부족(infrastructure gap) 현상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재정수입 이외에 혁신적인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었다.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은 1980년대에 유래 없이 빠르게 자동차 보유대수가 증가하였다. 1980년과 1990년 기간 동안 자동차 보유대수는 24.9만대에서 207.5만대로 8.3배 증가하였다. 1980년대 두 자릿수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면서 1인당 소득이 증가하여 구매력이 높아졌다. 1986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등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한국경제도 선진국에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와 자신감이 사회적으로 상승한 것도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에 기여하였다. 이에 비하여 도로 연장은 1.2배 증가하는 데 그쳤고, 철도 연장은 큰 변화가 없었다.

〈표 3-2〉 자동차 등록대수, 도로·철도 연장 변화

| | 1970 | 1975 | 1980 | 1985 | 1990 | 1995 | 2000 | 2005 | 2010 |
|--|--------|--------|--------|--------|--------|--------|---------|---------|---------|
| Registered Vehs(thou) | 61 | 84 | 249 | 557 | 2,075 | 6,006 | 8,084 | 11,122 | 13,632 |
| Road length (km) | 40,244 | 44,885 | 46,951 | 52,264 | 56,715 | 74,237 | 88,775 | 102,293 | 105,565 |
| Rail length (km) | 3,193 | 3,144 | 3,182 | 3,121 | 3,259 | 3,321 | 3,516 | 3,862 | 4,094 |
| Vehicle/ Lane at the Seoul-Busan Corridor | | | | 1,487 | 3,483 | 7,311 | 4,622 | 4,215 | 4,396 |
| GDPpc (10 thou in 2005 W) | 8.8 | 30.2 | 104.6 | 212.0 | 441.1 | 919.5 | 1,311.8 | 1,839.3 | 2,444.8 |

그 결과 교통혼잡이 증가하고 물류비용이 GDP의 15%를 차지하여, 물류비 절감이 국제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경쟁력 향상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인프라 개발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물로 인프라 투자를 위한 특별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통세법(1993년 12월)과 민간투자법(1994년 8월)이 각각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즉, 한국에서 PPP 법률은 이와 같이 긴급한 인프라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깔고 제정될 수 있었다.

〈표 3-3〉 교통혼잡비용과 물류비용의 변화

| Year | GDP (Current) (A) | Transport congestion costs (B) | (B)/(A) (%) | National logistics costs (D) | (D)/(A) (%) |
|------|-------------------|--------------------------------|-------------|------------------------------|-------------|
| 1993 | 277.5 | 8.6 | 3.1 | 41.2 | 14.8 |
| 1994 | 323.4 | 10.0 | 3.1 | 47.8 | 14.8 |
| 1995 | 377.3 | 11.6 | 3.1 | 57.9 | 15.3 |
| 1996 | 418.5 | 15.9 | 3.8 | 63.8 | 15.2 |
| 1997 | 453.3 | 18.5 | 4.1 | 69.6 | 15.4 |
| 1998 | 444.4 | 12.2 | 2.7 | 74.2 | 16.5 |
| 1999 | 482.7 | 17.1 | 3.5 | 78.9 | 16.3 |

자료: 건설교통부.

이에 반하여 알제리에서는 현재 PPP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확산되지 않았다는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여 PPP 입법 추진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현 상황에서 알제리의 PPP 법률 제정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과 의회의 지원을 이끌어 내기는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현존하는 입법체계 내에서 PPP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하위 규정들을 정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PPP 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PPP 사업절차를 사전에 가능한 한 정확하게 공지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업의 정책적 리스크를 줄여 준다. 이는 정부가 PPP를 재정운용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제공하는 효과가 있어서 PPP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PP에 대한 사회 전반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여야 하는 기초 작업뿐만 아니라 PPP 관련 법·제도 전반 정비를 위해서는 CNED가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알제리 PPP 추진환경의 평가

UNESCAP(2008)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알제리의 PPP 성숙도는 제1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4〉은 PPP 발전단계를 구별하여 보여주고 있다. 다음 표에 따르면 알제리는 PPP 발전단계 측면에서 1단계 또는 1단계의 이전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3-4〉 국가 PPP 발전단계

| Stage One | Stage Two | Stage Three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fine policy framework • Test legal viability • Identify project pipeline • Develop foundation concepts (PSCs etc) • Apply lessons from earliest deals to other sectors • Starts to build marketplac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troduce legislative reform • Publish policy and practice guidelines • Establish dedicated PPP units • Refine PPP delivery models • Continue to foster marketplace • Expand project pipeline and extend to new sectors • Leverage new sources of fund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ully defined comprehensive 'system' established • Legal impediments removed • PPP models refined and reproduced • Sophisticated risk allocation • Committed deal flow • Long-term political consensus • Use of full-range of funding sources • Thriving infrastructure investment market involving pension funds and private equity funds • Well-trained civil service utilises PPP experiences |

자료: UN(2008), "Guidebook on Promoting Good Governance in Public-Private Partnerships," 2008.

PPP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많은 지원자 그룹이 필요하다. PPP 입법에 대한 주요 stakeholder들의 일반적인 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민/시민들은 인프라 부족을 경험하고, 생활의 불편을 느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의 필요성을 인식할 때 PPP를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알제리의 대도시권에 존재하는 극심한 교통혼잡은 인프라 투자를 늘리라는 요구로 이어질 수 있으며, PPP가 현재의 전통적인 인프라 재원조달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기에 유리한 환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경험적으로 의회는 PPP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첫째, PPP 계약으로 인한 미래의 정부지급액이 현재의 예산심의에서 누락되는 경향을 보인다. 왜냐하면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의 재정관리방식을, 국회의 예산통제 권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PPP 사업은 기존의 정부사업에 비하여 높은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향이 있어서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을 수 있다. 만약 높은 요금을 용인할 경우 다음 선거에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치가들은 현재의 PPP 사업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보인다.

PPP 도입의 초기 단계에는 주무부처 역시 PPP 사업 추진과 입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첫째, 주무관청에서 사업을 기획·관리할 전문성을 보유한 공무원을 찾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직면하게 된다. 둘째, 전통적인 재정사업에서 소위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으로 표현되는 발주청의 우월적 지위를 향유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민간투자사업은 공공과 민간 간의 동등한 계약에 의하여 성립되는 협력(partnership)을 전제로 하는 사업 추진방식이다. 공무원들이 자신이 관장하는 예산의 범위를 늘림으로써 자신의 재량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향을 보인다면, 재정사업을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업시행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PPP 도입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PPP 도입이 공공부문 업무방식의 개혁을 통한 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된다면 주무관청의 공무원들이 개혁에 저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민간투자제도에 대한 관련 주체들의 PPP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가 알제리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앙집권적 계획경제하에서 생산비를 하회하는 전기, 수도, 대중교통 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이용자들에게 user charge principle을 적용한 concession type(한국의 BTO 또는 BOT type)의 PPP 입법을 제정하기 위한 정치적 합의 도출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concession type PPP 프로젝트는 통상적인 재정사업에 비하여 이용자 요금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첫째, 민간사업자는 사업 리스크를 정상 수익률에 프리미엄으로 반영하여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재정사업에 비하여 높은 재원조달비용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요구한다. 둘째, PPP 사업은 재정사업에 직간접적으로 포함되어있는 정부의 현금 또는 현물 보조를 민간의 재원조달을 통한 비용으로 산정하고, 이 비용을 요금수입에 반영하여 회수한다.

한편, PPP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PPP 관련 제도를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재정당국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알제리에서 재무부 장관은 CNED 청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PPP 법률 제정 단계에서 재무부의 입장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1차 출장기간 동안에 면담한 재무부 당국자는 향후 예산제약에 대처하기 위하여 PPP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을 피력하였다. 그럼에도 PPP 활성화를 위하여 별도의 PPP 법률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3. 알제리의 PPP제도 도입전략

PPP에 대한 일반적인 환경과 알제리 상황을 종합하면 PPP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PPP 법률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제정되기 용이하지 않으며, 매우 긴급한 재정환경에서 추가적인 재정조달이 필요할 때 정당화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현재 알제리의 상황을 고려한 PPP제도 정비·도입 전략은 다음과 같이 추진될 것을 제안한다.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PPP를 규율하는 별도의 PPP 법률을 제정한다. 이러한 PPP 법률의 제정은 알제리의 법제하에서 PPP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중장기적인 목표 설정을 전제로, 단기적으로는 PPP에 대한 국가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PPP 관련 행정규정들을 정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조달절차 관련 규정을 PPP제도를 포괄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정부가 향후 조달할 인프라시설에 대한 잠재적 조달방법-정부조달 또는 PPP 방식-을 상정하여 그에 맞는 조달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향후 PPP제도 활성화 시 참가 가능한 국내외 건설 및 금융 투자자들의 PPP 참가능력 함량에 대한 교육 등도 필요할 것이다.

PPP Unit이 새롭게 설립되면 이러한 단기적인 실천사항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PPP 법제를

위한 준비작업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PPP가 단순히 재정의 확장운용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PPP Unit을 재정부와 긴밀한 협력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PPP Unit의 설립을 위한 제언

PPP Unit이 설립되는 형식과 그 역할에 대한 자리매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앞에서 제시한 PPP의 잠재적인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지가 판가름 난다고 볼 수 있다. PPP Unit은 정부에 대한 조언자 역할, 민간부문과의 협상 시 정부 측 대리, PPP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제시, PPP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PPP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민간부문과의 전문가 풀 간 전문적 지식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왜냐하면 민간과 공공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간 협력뿐만 아니라 건강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PPP Unit은 정부와 민간부문간 전문성의 격차를 줄이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 OECD 국가 등 PPP제도가 활성화된 나라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PPP Unit을 설립하고 있다.

한국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PPP Unit의 역할과 소명은 제도 도입 초기와 비교해 최근 조금 달라지고 있다. PPP제도 도입 초기에는 PPP Unit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정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자문자 역할로 그 역할의 무게중심이 옮겨지고 있다. 1999년 설립된 PICKO(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Center of Korea)가 2005년 PIMAC(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으로 통합되는 과정은 PPP Unit의 역할 변화를 잘 보여준다. PIMAC의 설립으로 민간투자사업에도 재정사업의 타당성 분석 방법과 동일한 타당성 분석 방법론을 도입하여 통합화된 분석방법(unified framework)체계를 정비하였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의 Value For Money 분석 방법론을 도입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은 그 지출되는 정부부담액의 VFM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민간투자분야 및 재정지출의 통합화된 분석 방법론은 재정지출 측면에서도 제시되었다. 즉, 정부지출 측면에서 PPP 분야의 재정지출을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편입하여 국가재정의 통합적인 측면에서 PPP 관련 지출을 살펴볼 수 있게 하고, PPP 관련 재정지출에 국가 재정지출의 2% 상한을 두는 등의 통합화된 체계를 구축하였다. 앞에서 본 연구진은 알제리의 PPP 도입을 위한 단기적 목표의 PPP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PPP Unit의 역할을 제시하였고, 나아가 장기적 법제 정비 과정에서의 PPP Unit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경험과 알제리 PPP제도 도입을 위한 환경에 비추어 연구진은 알제리 PPP Unit 설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CNED는 국가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및 타당성 분석 업무를 기 수행한 경험이 있어 민간투자사업 추진과정에서의 타당성 및 Value for Money 분석 등 민간투자사업 관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PPP 정책은 재정부의 선도적 정책역할이 필요하고, 정부 재정지출의 효용성을 확보하는 통합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재정부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전문기관이 PPP Unit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CNED는 PPP Unit을 설치하는 데 가장 적합한 기관으로 판단된다. 다만, PPP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자금조달,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전문가적인 식견이 필요하다. 따라서 해수담수화 및 에너지 분야에서의 PPP 사업 추진 경험을 보유한 AEC (Algerian Energy Company)나 해외 PPP 사업 컨설팅 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 등 PPP에 적합한 인력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013」, 2013.

기획재정부 · 한국개발연구원, 『2012 경제발전경험 모듈화사업: 한국의 민간투자사업: 제도적 정비 및 정책 성과로부터의 교훈』, 2013.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13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2013.

Jay-Hyung Kim, Public-Private Partnership Infrastructure Projects: Case Studies from the Republic of Korea, KDI, 2011.

UNESCAP, A Guidebook on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Infrastructure, 2011.

World Bank and PPIAF, “Public-Private Partnerships Reference Guide, Version 1.0,” 2012..